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2021.11.16.~12.16.]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2022. 1.

주최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주관

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Manifesto Young Coop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노웅래입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전국 17개 시·도당과 함께 작년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국 시도당·지역위원회 정책담당자, 지역당원, 지방의회의원, 당직자 등 핵심청년당원을 대상으로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당의 미래세대 발굴과 투자라는 차원에서 20~30대 청년당원을 당의 자원으로 육성하고 청년당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기에 이어 2기 아카데미를 기획하였습니다.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는 다양한 현안과 국가·지방 등 현안과 공공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사회 각종 문제를 찾아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참신한 ‘청년 정책 전문가’ 육성과 최고의 ‘인재 등용문’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2기 아카데미 수강생은 전국 17개 시·도당별로 만45세 이하 청년당원 3명씩 선발·추천 절차를 거쳐 총 51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아카데미 과정은 설문조사, 현장 워크숍에서의 정책연구과제 발표(PT)와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철저한 출결관리 등 종합 평가 점수 6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강도 높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51명의 수강생 중 최종 35명(지역당원 15명, 지방의회의원 2명, 시·도당 당직자 18명)이 수료하여 ‘정책 전문가 인증서’를 취득했습니다.



발·간·사

.....

제2기 아카데미 교과 과정은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라는 대주제 아래 ‘국가 현안·비전 의제’, ‘지방 현안·비전 의제’, ‘정책 실무과정’ 등 총 11강으로 구성하여 중앙·지역의 제와 함께 정책 실무과정을 강화했습니다. 수강생들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한반도 정책, 균형 발전과 지역혁신, 정책제안과 정책사업 및 예산 등 강의와 함께,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지역균형발전 등 거대담론부터 청년, 돌봄, 고독사, 유기동물, 환경 등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의제까지 다양한 현안과 의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 연구 과제 발표 등을 통해 함께 소통하며 정책에 대한 시각을 넓혔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비전 의제’를 다루는 현장 워크숍은 각 수강생의 지역 비전과 정책 관련 연구 과제 발표, 지도교수 코멘트와 피드백 과정을 포함하는 사례연구(case study) 방식의 현장 워크숍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장 워크숍은 각 수강생이 준비한 정책연구과제를 7분씩 발표하고 네 명의 지도교수의 각각 1분 코멘트와 함께 수강생들의 표현력, 논리력, 설득력 등을 평가했습니다. 수강생들은 현장 워크숍 지도교수의 코멘트를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로 제출했는데, 이 모음집은 최종 보고서를 엮어서 담은 자료집입니다.

이 모음집은 본문 1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수강생이 제출한 36개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지역별로 분류해서 실었고, 부록에는 ‘제2기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소개’를 넣었습니다. 정책연구과제 보고서에는 주거·교육·일자리·복지·도시·교통·환경·예술, 청년·노인·소상공인 등 여러 분야와 돌봄, 지역균형 발전, 탄소중립, 에너지, 대중 교통,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지역 문제와 비전·정책에 대한 수강생들의 폭넓고 깊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음집에 담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는 다가오는 대선과 지선을 준비하는 당과 민주연구원의 소중한 정책 아이디어와 당원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수료생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이 인증하는 명실상부한 정책 전문가입니다. 수료생 여러분들은 여러 강의와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스스로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훈련하며 한층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카데미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해주신 청년당원 수료생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두관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동진 서울시 도봉구청장,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곽상욱 오산시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과 행사를 주관한 ‘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박희정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카데미 운영과 모음집 발간 작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정책네트워크실과 정책연구실 연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2.01.12.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CONTENTS

.....

■ 발간사 iii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강원

육아여성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 원주시를 중심으로 3

권아름 강원도당 당직자

고독사에 대해서 10

서종협 지역당원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 22

홍성광 지역당원

▶ 경기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계한 청소년활동 바우처 제도 실시 30

강은호 지역당원

군 공항 이전 갈등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 37

김영수 경기도당 당직자

배달특급앱을 활용한 경기도형 착한 선결제 플랫폼 47

나현덕 지역당원

기울어진 운동장(지역균형 뉴딜) 56

손성익 지역당원

자발적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정책(공간예산 지원)	65
----------------------------------	----

장민수 경기도당 당직자

» 경남

창원시와 함께 낳고,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 임신 및 출산 3無, 3公 케어 서비스	74
--------------------------------------------------------	----

이원주 경남도당 당직자

» 경북

경산의 다양한 문화권(圈) 보존을 통한 자주적 문화권(權) 실현 방안	82
----------------------------------------------	----

김기현 지역당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하이브리드 간판을 이용한 가로 경관 개선사업의 제도화	90
------------------------------------------------	----

박현준 경북도당 당직자

경북 영주시 지역의 다문화가족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 및 실천적 정책 대안	96
--------------------------------------------------	----

손창현 지역당원

주정차·교통·안전 : 구미시에 필요한 정책	103
-------------------------------	-----

이시연 경북도당 당직자

» 광주

공공임대 입주자와 청년의 달콤한 동거	108
----------------------------	-----

신정훈 지역당원

외국인 관련 범죄 지원전담기관 설치의 건	114
------------------------------	-----

정다은 지역당원

행복한 일터, 행복한 근로자	121
-----------------------	-----

채은지 지역당원



CONTENTS

.....

» 대구

4차 산업혁명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 : 대구 사례를 중심으로 131

김다예 대구시당 당직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연’특별자치도로서의 전환 - 플라스틱 및 일반 쓰레기 매립 문제 .. 142

임한결 대구시당 당직자

» 대전

대전시 청년주거환경 실태와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148

고재일 지역당원

여성의 임신과 육아에 관하여 155

박송이 지역당원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 대전을 중심으로 165

서다운 대전 서구의회 의원

» 서울

예술이 숨 쉬는 지역재생 - 홍대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175

강보훈 지역당원

햇빛 보기 프로젝트 - 건강한 사회활동 정책 186

고병준 서울시당 당직자

» 세종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 나도 마을버스 운전자 195

박정선 세종시당 당직자

» 울산

지켜지지 않는 의무고용 201

김동민 울산시당 당직자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개선 제안 210

김시은 지역당원

돌봄경제와 고령친화사업 - 돌봄경제산업화 단지 조성 222

김시현 울산시의회 의원

» 인천

인천 청년정책, 구조의 다양성이 먼저 - 인천 청년정책 활성화에 대한 제안 232

김대영 인천시당 당직자

» 전남

지방 노령화인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활용방안 - 유기동물 문제해결 및 적용 239

구민호 전남도당 당직자

전남형 특성화 교육, 대한민국 균형발전으로 245

한숙경 전남도당 당직자

» 전북

청년친화기업육성 정책제안 - 기업지원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선순환 정책 258

유충열 전북도당 당직자

상담심리체계 안정화 및 시·도 중심 심리 컨트롤센터 구축 266

조희선 전북도당 당직자



CONTENTS

.....

» 충남

탄소중립과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에 대한 고찰 276

문수기 지역당원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문제 - 기후위기가 노동위기로 되지 않으려면 284

이지운 지역당원

» 충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고찰 - 청년 고독사 290

신석우 충북도당 당직자

충북형 청년일자리 단짝지원 - 청년일자리사업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302

이윤재 충북도당 당직자

■ 부록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소개 313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육아여성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 원주시를 중심으로

권아름 강원도당 당직자

I. 현황

■ 인구 성장도시 원주

2020년 기준 강원도의 인구는 736,301명으로 그 중 원주시의 인구가 가장 많은 357,710명이다.

구 분	합 계				합 계			
	세대수	인 구			세대수	인 구		
		계	남	여		계	남	여
강원도	719,524	1,560,571	785,770	774,801	736,301	1,560,172	785,949	774,223
시지역	512,385	1,140,758	567,706	573,052	525,877	1,143,852	569,487	574,365
춘천시	123,006	285,585	140,953	144,632	126,685	286,489	41,570	144,919
원주시	154,583	352,860	175,363	177,497	160,307	357,710	177,671	180,039
강릉시	99,086	215,911	107,164	108,747	101,424	215,603	106,983	108,620
동해시	41,141	91,453	46,428	45,025	42,306	91,492	46,547	44,945
태백시	21,798	44,124	22,246	21,878	21,588	42,945	21,704	21,241
속초시	38,689	82,824	41,050	41,774	39,932	83,674	41,582	42,092
삼척시	34,082	68,001	34,502	33,499	33,635	65,939	33,430	32,509
군지역	207,139	419,813	218,064	201,749	210,424	416,320	216,462	199,858
홍천군	33,142	70,065	35,879	34,186	34,187	70,052	36,104	33,948
횡성군	22,832	47,257	24,183	23,074	23,276	47,097	24,186	22,911
영월군	21,044	39,408	20,242	19,166	21,246	38,902	20,074	18,828
평창군	21,379	42,577	21,747	20,830	21,618	42,132	21,523	20,609
정선군	19,974	37,573	19,453	18,120	20,230	37,135	19,254	17,881
철원군	21,216	46,295	24,209	22,086	21,182	45,325	23,596	21,729
화천군	12,603	25,181	13,617	11,564	12,862	25,081	13,568	11,513
양구군	10,840	23,052	12,196	10,856	10,828	22,526	11,935	10,591
인제군	15,583	31,981	17,292	14,689	15,900	31,959	17,203	14,756
고성군	14,445	28,392	14,976	13,416	14,546	27,869	14,634	13,235
양양군	14,081	28,032	14,270	13,762	14,549	28,242	14,385	13,857

2019년 강원도 인구 현황

2020년 강원도 인구현황

2011년 323,026명에서 2020년 357,710명으로 타도시의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 속에서도 원주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계	320,536	323,885	324,837	327,292	332,995	337,979	341,337	344,070	349,215	354,376	1.12
0-4세	15,162	14,963	14,506	14,378	14,361	14,004	13,342	12,754	12,564	12,153	-2.43
5-9세	16,380	16,430	16,123	16,004	16,410	16,765	16,506	16,283	16,237	16,149	-0.16
10-14세	22,257	21,251	20,140	19,090	17,978	17,219	17,342	17,183	17,194	17,637	-2.55
15-19세	24,258	23,812	23,489	23,216	23,027	22,492	21,398	20,432	19,573	18,281	-3.09
20-24세	20,424	21,574	22,000	22,582	23,131	23,504	23,601	23,390	23,175	22,934	1.30
25-29세	19,592	18,622	18,020	17,802	18,249	19,043	20,262	20,977	21,853	22,642	1.62
30-34세	23,047	23,034	23,033	22,259	21,844	21,263	20,235	19,626	20,078	20,654	-1.21
35-39세	26,491	26,023	24,539	24,157	24,608	25,109	25,352	25,687	25,198	24,669	-0.79
40-44세	29,900	30,269	29,941	29,526	29,059	28,263	27,704	26,441	26,287	26,743	-1.23
45-49세	27,948	27,737	28,662	29,516	30,173	30,756	31,210	31,226	31,114	30,472	0.97
50-54세	28,331	29,102	29,246	28,849	28,729	28,498	28,299	29,428	30,421	31,252	1.10
55-59세	19,469	20,654	22,848	24,953	26,916	28,867	29,755	29,975	29,747	29,577	4.76
60-64세	11,075	12,794	13,478	15,098	17,406	19,950	21,085	23,468	25,791	27,823	10.78
65-69세	11,182	10,984	11,052	11,068	11,186	11,207	12,880	13,620	15,380	17,770	5.28
70-74세	10,910	11,491	11,430	11,224	11,114	10,876	10,801	10,929	11,004	11,201	0.29
75-79세	7,309	7,786	8,443	9,013	9,498	9,926	10,554	10,644	10,510	10,435	4.04
80-84세	4,109	4,442	4,672	5,059	5,446	6,081	6,466	7,079	7,686	8,122	7.87
85-89세	1,885	2,034	2,229	2,430	2,686	2,850	3,145	3,338	3,671	3,940	8.54
90-94세	599	655	759	822	896	994	1,065	1,209	1,327	1,472	10.51
95-99세	162	167	166	181	209	226	242	292	299	338	8.51
100+	46	61	61	65	69	86	93	89	106	112	10.39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인구통계 / 2021년4월 검색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연령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원주시 전체 인구는 증가추세이며 19세 이하는 매년 감소하고 50세 이상은 매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II. 문제점


■ 저출산과 고령화

 파이낸셜뉴스 PICK | 7일 전 | 네이버뉴스

"저출산·고령화 속도, 사회경제시스템 존립 위협 정도로 심각"

 YTN PICK | 2021.11.29. | 네이버뉴스

심각한 저출산..."낳지도 않고 낳을 생각도 없는 상황"

 스카이데일리 | 2021.11.15.

출산 부담스럽다는 청년들의 속내..."돈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이다. 원주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연령층 별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그래프를 그리며 장기적으로 지역소멸이라는 위기감을 주고 있다.

다음과 같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전국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단위 :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26,104	329,087	327,073	322,807	305,507	302,828	281,635	264,455	257,622	239,159	213,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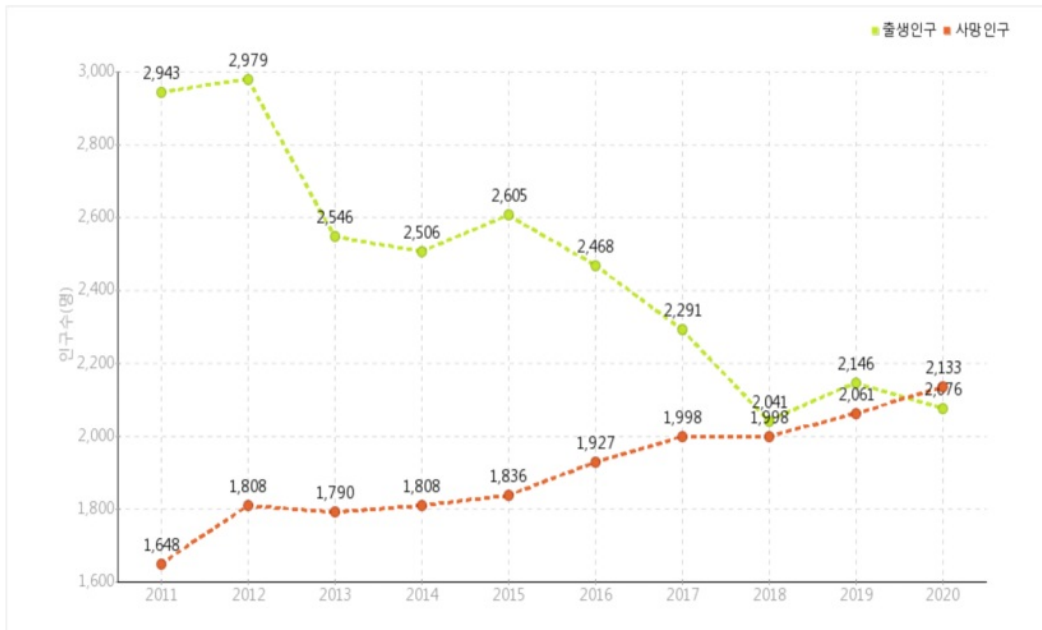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혼인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점차 늘어남으로 인해 매년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원주시는 2021년 2,076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10년 전 2,943명에 비해 매년 감소하였고 머지않아 1,900명대의 출산율로 하락할 전망이다.¹⁾

1) 원주통계정보 https://stat.wonju.go.kr/page/view.php/1sub2_2c

출생/사망 현황



원주시 출산/사망 현황

그에 비해 고령화는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며 2012년 37,620명이었던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45,246명에서 2020년 53,990명으로 늘어났고, 고령자 비율이 11.6%에서 15%까지 상승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인구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14세 이하 유년인구의 경우 2016년 17,988명에서 2020년 45,93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1.08%)하였고, 유년부양비 역시 2016년 19.4%에서 2020년 18.0%로 감소(연평균 -1.80%)하였다.

2,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016년 247,745명에서 2020년 255,047명으로 증가(연평균 0.738%)하였으나, 생산가능인구비는 2016년 73.32%에서 2020년 72.0%로 감소(연평균 -0.46%)하였다.

3,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경우 2016년 42,246명에서 2020년 53,390명으로 증가(연평균 6.03%)하였고, 노년부양비 역시 2016년 17.1%에서 2020년 20.9%로 증가(연평균 5.26%)하였다. 또한, 고령화율도 2016년 12.5%에서 2020년 15.1%로 증가(연평균 4.78%)한 것으로 나타났다.²⁾

2) 생산가능인구비 = (15-64세 인구수 ÷ 총인구) × 100
 유년부양비 = (14세 이하 인구수 ÷ 15-64세 인구수) × 100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수 ÷ 15-64세 인구수) × 100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수 ÷ 총인구) × 100

고령자 인구 현황



원주시 고령자 인구 현황

■ 육아 여성의 소속감 상실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살펴보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시대의 출산 여성은 청년의 범주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청년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생 및 창업, 농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혼부부지원만 있을 뿐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은 없기 때문이다.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원주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1. “청년”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출처)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910호, 2020. 10. 8., 일부개정]

현재 원주시의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야별	세부사업명	사업비(천원)	소관부서
5개 분야	27개 사업	10,231,218	10개부서
정책참여 (4)	원주시 청년정책 위원회 운영	2,520	복지정책과
	원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 연구용역	22,000	"
	원주 청년리더 아카데미	50,000	"
	원주시 대학생 관광서포터즈 운영	10,000	관광정책과
일자리 지원 (8)	찾아가는 청년 희망드림버스 운영	6,000	기업지원일자리과
	청년층 취업성공 아카데미	3,000	"
	대학생 직장체험활동지원	66,970	"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175,000	"
	디딤돌 청년 창업지원	280,000	"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2,736,168	"
	구인·구직 해피데이 운영	16,800	"
	스마트 청년 일드림 사업	395,000	"
창업지원 (9)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허브 건립	4,000,000	균형개발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46,286	농정과
	청년 취업농 지원	12,000	"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	22,000	"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900,000	"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20,000	농촌자원과
	미래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반구축 사업	25,000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50,000	"
	청년농업아카데미	8,000	"
주거·금융 (3)	청년희망 키움통장	82,800	생활보장과
	청년저축계좌	167,556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600,318	주택과
생활·문화·복지 (3)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150,000	자치행정과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160,000	문화예술과
	원주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사업	23,800	"

Ⅲ. 정책제안

■ 육아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지역에서 육아 여성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정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구축



현재 엄마들은 맘카페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답변을 받고 있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에서 운영 중인 문화도시 원주 <원주롭다> 홈페이지에서 더욱 전문적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제안도 받고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 받아 동참시킨다면 더 좋은 소통 창구로 활용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둘째,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 개최

실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참여하여 발언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다양한 육아여성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전문가 집단에서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이 참여하기에는 장벽이 높으므로 월 1회 혹은 분기별로 일반시민 육아여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독사에 대해서

서종협 지역당원

I. 서론

고독사라고 하면 흔히 독거노인들이 고령과 질병으로 인해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실제로 고독사라는 표현이 처음 생기게 된 이유는 노인들의 고독사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 죽는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고독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바란다. 고독사라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이 나의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하지 않는, 심지어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실로 쓸쓸하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독사는 주로 사회 활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고독사가 된다. 심지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적절하게 시체를 화장하거나 매장하지 않아서 사람의 몸이 부패하게 되면 나는 악취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발견된다.

과거에는 노인들이 자녀 세대와 함께 살면서 자녀 세대의 부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순간에도 자녀들이 그와 함께 살며 그의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고독사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즉, 혼자 사는 노인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독사의 수도 많지 않았다. 노인 고독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그만큼 혼자 사는, 그리고 자녀 세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과 인적, 물적인 교류가 적은 노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런 혼자 사는 노인들이 그들의 죽는 순간까지도 쓸쓸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고독사의 문제는 비단 어느 한 개인의 비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고독사의 문제는 이웃들 사이에 소통과 교류가 줄어든 현대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은퇴를 하게 되고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인 관계가 좁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과거에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할 때와 비교하면 노인들의 사회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혼자 사는 노인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청장년기와 비교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기 쉽다. 외로움과 고독, 소외감은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감정이고, 모든 인간이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감정이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고독사의 문제는 노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는 하지만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는 비극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노인 고독사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최근 들어서 청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해(2020년)에 100명의 청년이 고독사 했다. 그리고 청년 고독사의 절반가량은 자살이었다. 즉, 의도적으로 고독사를 택한 것이다.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고독사를 맞이하게 된 청년들의 상황은 대체로 비슷하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좌절과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고, 구직활동에 실패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최후를 맞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고독사 한 청년들은 취업 준비생이거나 공무원시험 준비생(소위 말하는 ‘공시생’)이었다. 청년 고독사의 문제는 그것이 발생한 건수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다. 2019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170만 명에 육박한다. 이들 가운데 질환별 증가율 1위는 모두 20대였다. 20대의 정신 질환 발생률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90.6% 나 증가했다. 최근에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 자살율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20-30대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고, 20대 청년 사망의 절반 이상이 자살이다. 20대나 30대는 신체 나이로 보았을 때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은 매우 적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망하였다면 그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거나, 그들의 죽음을 방임하고 방치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사망이 고독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마땅히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해야 할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족으로 부터나 친구로부터나 사회로부터나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고독사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청년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독사를 한 청년들은 부모가 없거나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독사를 하게 된 것일까. 그들의 고독과 고립은 스스로가 자초한 것일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고독사를 한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었

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좌절과 실패, 열패감, 우울감 같은 것들이 그들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몰고 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청년 고독사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비극으로 볼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청년들의 우울한 단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청년 고독사의 현장에서는 치밀한 준비의 흔적이 발견된다고 한다. 청년들은 예고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을 마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최후에 내리게 된 선택이 죽음인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청년들이 아무리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해도 죽음 이외에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 고독사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사느니 죽는 것이 나는 사회’가 된 것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처럼 고독사는 크게 노인고독사와 청년고독사, 그리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장년층의 고독사로 구분할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 고독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게 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고독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구분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고독사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발생하고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고독사가 기사에서나 접할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고독사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을 진단해 보기로 하겠다. 다른 나라의 고독사 예방 정책과 사례에 대해 참고해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II. 본론

1. 노인고독사

(1) 원인

1) 부양가족의 부재

과거에는 노인들이 자녀 세대와 함께 살면서 자녀 세대의 봉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를 모시는 경우를 찾아보기 드물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1%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27%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는 더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 세대 역시 스스로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으며 노년을 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자녀 세대와 분리되어서 살게 되는데, 대부분은 노인이 된 부부가 2인가구로 살다가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홀로 살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즉, 노인들이 고독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즉 혼자 사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노인들을 부양해 줄 사람, 주로 가족이 노인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가족 형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가족들 사이에서 ‘동거’라는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이 고독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노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면 그들이 고독사 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고, 노인들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 빈곤의 문제

그렇지만 노인들이 노인 부부만 또는 혼자 산다고 해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언제나 비참하고 슬픈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요즘은 노인 세대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 주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즉, 노인들이 자녀들의 경제적인 원조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거나 노후 대비 자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노인들이 혼자 살게 되면,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위축되

1) 중앙일보, 2018.12.13.서유진, '자식이 부모 부양해야 한다. 10년 전엔 41%, 지금은 27%

기 쉬운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되거나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더라도 과거에 그들이 청장년의 시절에 벌었던 것만큼의 소득을 벌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충분한 노후 대비를 하고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노후 대비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3분의 2가 스스로의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빈곤 노인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기대 여명이 80세였고, 80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고 노후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실제로는 90세까지 살았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10년의 기간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살아야 하는 셈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노후 생활은 행복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비율이 특히 나이가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것은 노인들의 경제력과 빈곤이 노인들이 느끼는 우울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가난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런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사회활동도 위축되기 쉽다는 점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간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수준은 체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된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가난이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사회 활동과 교류를 단절하고 스스로 고립된 삶을 택하기 쉬워진다. 빈곤 노인일수록 자살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빈곤 노인들이 그들의 빈곤한 상태에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요인이 그들의 자살에 적잖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노인들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치료를 받거나 간호를 받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이 든 상태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의 수행이 불편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기 쉽고, 죽음에도 쉽게 노출되며, 최악의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2) 서울경제, 김우보, 2021.9.25. 노인 35% 나 혼자 산다. 3분의2는 노후 준비 미흡

(2) 노인 고독사 현황

2020년에 집계된 독거노인의 수는 158만 9,371명이었다. 이들 중에 고독사의 형태로 사망한 노인의 수는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388명이었다. 이것은 상반기만의 수치이므로 하반기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고독사하는 사람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추세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는 전체 고독사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³⁾.

2. 청년 고독사

(1) 원인

1) 청년 구직자의 고독사 원인

청년 고독사는 크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소위 말하는 취업준비생인 청년들과 직업 활동을 하는 청년들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준비생들의 고독사의 경우 취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버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쉽다. 경제적인 궁핍은 노인뿐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활동도 위축시킨다.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을 꺼리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고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로 살다보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충동을 느끼기 쉽다. 이런 고립된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도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고독사하는 청년들 중에는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1인 가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족과의 소통과 교류도 차단된 상태로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들로부터도 정신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그들의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특히 청년들은 만성적으로 취업을 하기 어려워졌고, 이것은 청년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특히 기성세대의 인식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게으르다거나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취업에 실패하는 청년들이 느끼게 되는 좌절과 열패감은 점점

3) 연합뉴스, 이도연, 2020.10.1. '쓸쓸한 노년' 홀로 사는 노인 159만 명... 올해만 388명 고독사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는 위축되게 된다. 자기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말하기 어려워진다. 속으로 끓는 것이다. 그리고 그 끓았던 것이 터지게 되는 형태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청년 근로자의 고독사 원인

청년 근로자들은 취업준비생들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어쨌든 취업에 성공했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도 고독사를 하게 되는, 특히 자살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들의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더라도 적은 임금을 받거나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어서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들은 취업을 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아니다.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더라도 한 달 생활하기가 빠듯하다.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비용의 투입이 필요한 일들을 선불리 결심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소위 말하는 Normal path로 여겨졌던 일들이 오늘날의 청년들은 비범한 노력을 해야 이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를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렸다. 여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열패감은 청년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장기적인 인생을 계획하기 어려운 현실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든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독사를 하는 청년들 중에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청년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에서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경우 급여 수준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Normal path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꿈과 희망, 장기적인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들은 Normal path에 진입하기 어렵고, 사회적 계층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문제는 고용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도 급여와 고용 형태의 수준에 따라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서 청년들이 느끼게 될 열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도리 것으로 예상된다.

(2) 현황

40세 미만 청년 고독사는 최근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에 청년 고독사는 63명이었는데, 2020년이 되면 102명으로 늘어난다. 비율로는 62%나 급증한 셈이다⁴⁾.

3. 중장년 고독사

(1) 원인

중장년 고독사의 원인에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맥락에 깔려 있다. 현재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50대, 60대의 사람들은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이다. 두 차례의 국가적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가족 해체, 실직과 같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단절과 고립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대부분은 그들의 사회적 관계가 직장 생활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관계와 인간관계가 축소되고 단절되게 된다. 사회 교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대부분이 느끼는 성취감은 그들의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실직을 하게 되면 성취감이나 보람, 주관적인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중장년층은 경제적으로 흔히 ‘끼인 세대’라고 이야기한다. 자녀 세대를 부양해야 할 의무와 노인이 된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부담한다. 요즘 제 아무리 부모를 직접 모시고 살지 않거나 노인이 된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 자녀 세대가 늘어났다고 해도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진다.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부모가 아플 때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비용을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은 여전히 국가나 사회보다는 자녀들에게 남겨져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요즘 중장년층의 자녀 세대의 사교육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성인이 된 후의 자녀들도 부모 세대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은 위, 아랫세대 모두에게 치이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중장년층은 노인처럼 국가와 사회의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빈곤한 중장년층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빈곤하게 되면 완벽하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질병을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 현황

2016년에 서울복지재단이 분석한 서울시의 고독사 확실사례 자료에 따르면 162건의 고독사 가운데 50대가 35.8%로 가장 많았다. 고독사의 전형이라고 여겨지는 노인 고독사보다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더 많았던 셈이다. 부산시에서도 2017년 이후 고독사 사망자 91명 가운데 45명이 장년층이었다.⁵⁾

4) 뉴스1, 2021.9.22. 40세 미만 청년 고독사 3년간 62% 급증

5) 서울신문, 2019.9.8. 이근아, 김지예, 나 혼자 간다. 심각한 중장년 고독사

4. 강원도 고독사 현황

2020년에 발표된 지역별 고독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발생한 고독사의 수는 125건이었다. 전국 단위로 보면 적은 편에 속한다. 강원도보다 낮은 지자체는 광주(118건), 대전(119건), 울산(93건), 세종(28건) 수준이었다. 서울(790건), 경기(1072건), 인천(239건), 부산(276건)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숫자이지만 이것은 강원도가 유독 고독사와 관련된 예방과 관리를 잘 해서라기보다는 강원도의 인구가 대도시의 인구보다 적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고독사의 발생 건수가 적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고독사에 대한 또는 연령에 따른 고독사에 대한 현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선 지자체들이 아직 무연고 사망자(고독사)에 대한 데이터 수집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5. 우리나라의 고독사 예방 정책의 현실

(1) 고독사 예방 정책 현황

1) 주요 정책

A.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올해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고독사의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고독사 위험자를 분류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이나 치료,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하였다.

고독사 예방법'의 제정은 고독사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고무적인 성과라고 하겠으나, 아직까지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해서 이 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B.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지하철 역사는 무연고 노인들이 자주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이런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해서 지하역사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2) 사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사례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경남 합천군에서는 ‘국민안전서비스 앱’을 개발하였는데, 1인 가구 노인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12시간 동안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앱에 등록된 자녀나 지역의 이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노인들의 안부를 묻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가족뿐 아니라 노인들과 가까이 살면서 현실적으로 노인들에게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 주민들의 연계와 참여를 유도하는 어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합천군에서 시작된 이 어플은 경남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앱 어워드 코리아’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시의 경우 도시가스 검침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었거나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가 0이 되면 위험 신호를 발신하도록 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200가구의 시범 사업에서 출발했던 사업이 올해는 1만 세대로 확대될 정도로 반응이 좋다.

(2) 문제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와 관련된 정책적인 접근이 노인 고독사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외의 연령대, 즉 청년이나 중장년층의 고독사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문제 인식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독사 문제는 자살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노인의 경우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독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청년이나 중장년층의 경우 의도적으로 스스로 목

숨을 쉰어서 고독사의 결과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중장년들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확대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기관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이들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금액의 부담이 있어서 선뜻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이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편, 중장년층의 경우 노인복지의 수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조기 은퇴를 하거나 실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수준이 노인들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노인 복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중장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타국의 고독사 예방 사례

일본은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 정, 촌이 중심이 되어서 고립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안심생활창조사업이 대표적이다. 지역 주민, 신문배달부, 택배업자 등이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고립사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보호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서 지도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웃 주민들을 서로 돌보도록 참여를 유도한다. 그렇지만 이런 관리 위주의 방식은 대상자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어서 대상자들의 거부감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낙인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고안되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아침마다 마그넷을 현관문에 붙이게 한다. 마그넷이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을 때는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 자석이 문에 부어 있지 않을 때에도 전자제품의 가동 상황을 원격으로 확인하며, 그 후에 비로소 집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을 꺼리는 일본인들의 특성이 반영된 방법이다.

일찌감치 고령사회에 접어든 프랑스에는 국가적 차원의 활동 단체인 ‘모나리자’를 조직해서 이 단체가 독거노인들을 정기 방문하고 노인들의 사회관계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이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과 동거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인 ‘코로카시옹’ 프로그램은 청년 주거 문제와 노인 우울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다.

III. 결론

고독사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 가동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웃 주민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고독사는 누구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고독사는 청년, 중장년층, 노인에게 골고루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고독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를 형성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 고독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조조직을 결성해서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거나 이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에서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프랑스에서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이 노인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연대를 구축해서 서로의 우울과 외로움을 달래는 ‘코로카시옹’ 프로그램을 눈여겨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고독사의 문제는 주로 사회적인 단절과 고립에서 비롯되는 죽음인데, 이것이 청년 세대에게서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해야 할, 그리고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인 청년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문제이며, 특히 청년 고독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한의신문, 강환웅, 2021.10.12. 4일에 1명씩 고독사 하는 청년.. 국가가 책임져라
- 중앙일보, 2021.8.28. 손준영, [월간중앙] 늘어가는 청년 고독사, 고독생부터 돌봐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한겨레, 신지민, 2018.3.4. 고독사 예방, 다른 나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

홍성광 지역당원

1. 서론

중앙의 행정기관은 언론, 국회, 검찰, 경찰, 시민단체,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속적이고도 다각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과는 달리 감시의 주체도 다양하지 아니하고, 감시 주체의 역량도 중앙에 비해 미미하다.

중앙에 비해 감시가 약한 탓인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수의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파열음이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수의계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의계약제도의 보완점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의계약제도의 의의

1) 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무원의 임의의 특정인을 계약 대상을 지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

수의계약은 계약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요건과 사유는 법령으로 정해져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를 보면 수많은 수의계약의 사유가 있지만 이 정책제안에서 살펴볼 수의계약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인 견적서 제출로 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3) 수의계약의 장점

수의계약은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목하여 계약을 맺기 때문에 대도시의 강력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밀려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의 업체를 육성하고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이다. 또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국가유공단체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어서 정책적 효과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며, 특히 일반 경쟁계약 즉 입찰의 과정을 생략하고 빠른 시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어서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은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수의계약의 단점

계약체결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며, 경쟁이 부족해 가격파괴와 품질혁신의 유인이 낮아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편의성을 중시하여 제한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너무 빈번히 사용해 자의성이 개입하기도 하며, 계약의 상대방이 해당 행정기관에 익숙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오랜 유착으로 인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사례

일감몰아주기는 지자체내 동종 업계에 많은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만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것으로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공공기관이 그렇지 못한 처사를 행하는 것이다.

동해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동해시 관내 옥외광고업체들의 2021년도 1월에서 11월 3일까지의 계약현황을 실제로 검색해보았다.

동해시 옥외광고업체들의 검색 결과 상위 2개의 업체가 조사 결과에서 총 계약 건수 대비 계약 건수에서 약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2개 업체의 총금액 대비 계약금액은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¹⁾

비록 하나의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모난돌TV 4회 “특정업체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동해시는 자유로운가” 참고

3. 수의계약제도의 개선방향

1) 수의계약 명칭 변경

수의계약(隨意契約)은 “따르다.”는 의미의 수(隨)와 “뜻, 생각”이라는 의미의 의(意)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단어자체의 의미로는 “생각을 따르는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조금 더 의역하면 “마음대로 하는 계약”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공공의 업무를 위해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행위인 “계약”은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의 “공정”이 요구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수의계약이라는 명칭은 변경되어야 한다.

“담당자의 자유 의지에 따르는 의미”인 “수의”보다는 “자유롭지만 일정한 규칙과 기준이 있는 용어”인 “자율(自律)”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계약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계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공공”이라는 용어를 더하여 “공공자율계약”이라고 제안한다.

2) 수의계약 공시제도의 변경

“공개가 감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에 비해 감시의 주체의 양과 질에서 모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비롯한 많은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수의계약에 관련한 정보는 이미 의무적인 장치를 만들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정해진 기준이 명확치 못한 탓인지 각 지자체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다를뿐더러, 지자체는 계약정보공개가 딱딱치 않은 것인지, 검색 및 열람이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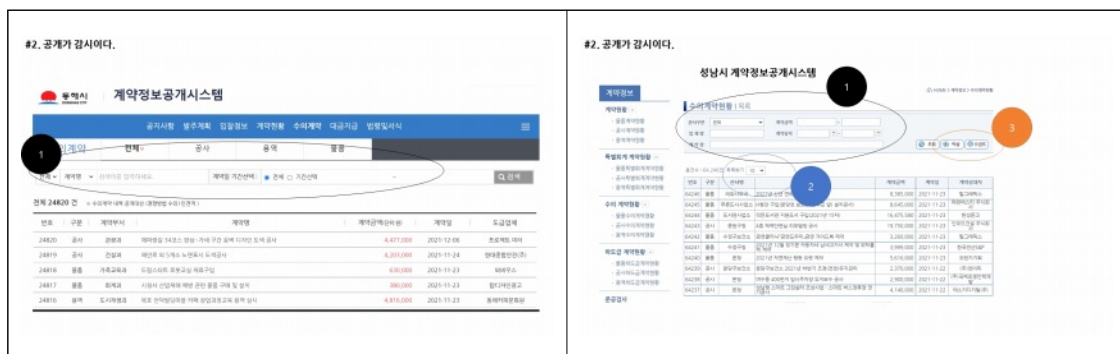


그림 1 동해시와 성남시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검색화면

지자체마다 다른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동해시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성남시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비교하면, 사진 1을 참고하면 동해시와 성남시의 ①번은 검색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동해시는 조건검색이 2가지로 제한이 되지만 성남시는 조건 검색이 5개까지 가능한 구조이어서 성남시의 시스템이 더 자세한 검색이 가능한 구조이다.

위의 사진 1에서 ②, ③은 동해시 시스템에는 없는 것으로 ②는 한 창에서 볼 수 있는 목록의 수를 설정하는 것으로 동해시 시스템은 10개로 고정이 되어 있고, 성남시 시스템은 10개, 50개, 100개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성남시의 시스템이 친시민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 1의 ③번은 시스템에 출력된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인쇄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한 눈에 계약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합계금액을 빠르게 파악하고, 분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의 특징점을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친시민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해시와 성남시의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비교를 해 본 결과 동일 규정으로 만들어진 계약정보 시스템이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담당자 또는 지자체장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감시를 위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표준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강화된 표준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제안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조건 검색과 출력 목록 수 설정, 스프레드시트 및 인쇄물 출력은 성남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표준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이다. 다만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계약부서 또는 계약 담당자만을 표시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1,000억원대 부정 공사수주의 사례를 보면 특정업체를 선정해 특혜를 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특허기술”을 이용해 공사설계단계에서 로비 또는 인맥, 권력을 이용해 공사수주를 한 경우이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는 계약단계에서는 손을 쓸 수 없게, 설계단계에서 특정 물품이나 특허 등을 적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표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는 설계부서 및 부서의 장, 팀장, 담당자를 모두 표기하도록 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담당자 및 담당부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설계단계에서의 관련자들을 볼 수 있다면 특정인과 부서의 설계에 특정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반복된다면 유착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은 단순히 감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수의계약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아래 수의계약의 순차적 배분과 수의계약금액 총량 배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3) 수의계약 참여업체모집

현재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 수의계약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어떤 업체들은 다른 이유로 일감이 많아 지자체의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수의계약에 참여할 업체를 공무원이 선정하는 것이 아닌 업체의 의지로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는 바로 “수의계약 참여업체모집”이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수의계약 참여 업체를 2021년 12월의 특정기간동안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업체들의 수의계약을 참여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도 참여 업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계약 집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4) 수의계약 순차적 분배

위의 수의계약 참여 업체 모집 공고로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계약이 나오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계약을 분배한다면 특혜 시비와 유착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어느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다음은 어느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차례인지 계약 담당자들이 알 수가 없다. 또한 계약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이 주로 회계과에만 있는 것이 아닌, 각 실과별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도 있어서 계약을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스템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화된 표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수의계약 참여 업체의 순서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해 회계담당자 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 계약 담당자들이 접속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면 순서에 따른 수의계약 분배가 가능해진다.

5) 수의계약 금액총량 배분

수의계약을 순차적으로 분배하면 어쩔 수 없이 계약금액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물리적인 순차적 분배 방법을 시행한 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예를 들면 3/4분기 이후, 업체별 수의계약 액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금액총량 배분을 위해서도 현재의 계약정보시스템으로는 어렵도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화된 표준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시민도 한 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들도 수의계약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공정한 수의계약 배분이 가능해진다.

6) 수의계약 참여 업체 제재 강화

이렇게 수의계약과 관련되어 철저한 공개가 바탕이 되어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수의계약 참여 업체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확실히 마련하여 시정이 요구하는 품질 또는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통해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6	수익계약 배제업체 알림	관리자(dq)	2021-09-01	59
35	수익계약 배제업체 알림	관리자	2021-01-27	190
34	수익계약 배제업체 알림	관리자	2021-01-27	135
33	수익계약 배제업체 알림	관리자	2021-01-27	145
32	수익계약배제업체 알림	관리자(dq)	2021-01-27	126
31	수익계약배제업체 알림	관리자	2020-11-05	159
30	수익계약배제업체 알림	관리자	2020-11-05	140

그림 2 춘천시 수익계약 제한업체 공시 시스템

춘천시의 경우에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수익계약 제한업체를 공개하는 누리집을 따로 가지고 있고, 그 누리집에는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제한기간, 제한사유를 표시하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대부분 수익계약 체결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4. 수익계약제도의 개선 후 발전

수익 계약은 양날의 검과도 같은 속성이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많은 안전장치를 통해 공정한 계약집행이 담보된다면 지역산업을 보호, 발전시키고, 신속한 행정업무집행이 가능한 수익계약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은 수익계약 가능 금액이다. 기존에는 공정성을 의심하여 수익계약금액을 낮춰 그 폐해를 물리적 방법만으로 줄이려 했지만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공정성이 담보될 수밖에 없게 한다면 수익계약의 금액을 상향하여 지역의 업체들에게 예측 가능한 연간 수익을 담보하게 할 수 있어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예측한다.

다만, 지역의 업체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또 다른 수의계약 관급자재납품계약

관급자재납품계약은 주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라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한 시스템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서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조달청3자단가계약”이 있다.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급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업체의 요청이 아닌 조달청에서 판단·결정하여 일반경쟁 또는 수의 시담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직접당사자(조달청과 업체)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인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언제든지 직접 계약업체에게 납품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단가계약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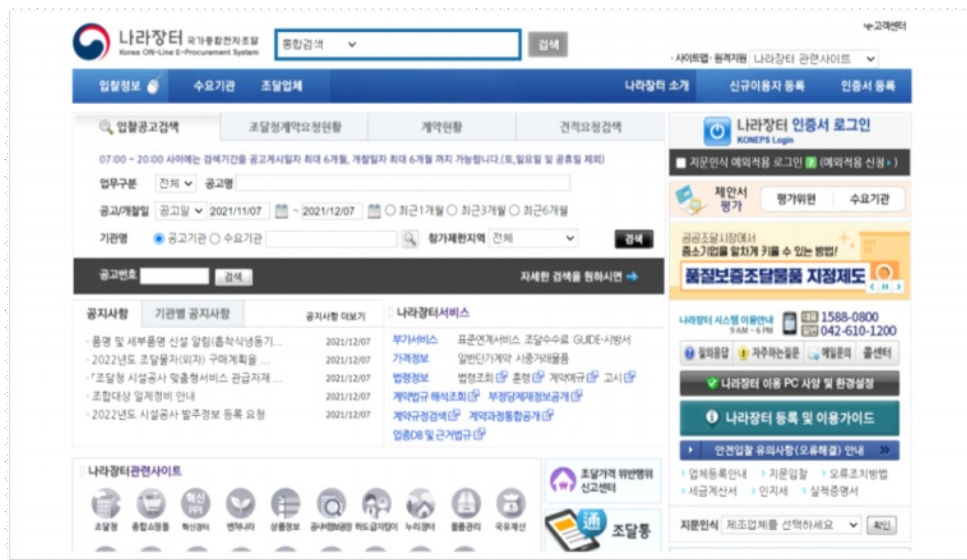


그림 3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

말은 어렵지만 단순히 풀어보면, 조달청에 업체가 생산 물품을 등록하고, 구매당사자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상의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평가이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의 방법은 “3자 단가계약”도 존재하지만 “2단계 경쟁제도”도 엄연히 존재한다. 2단계 경쟁제도는 흔히 말하는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전남교육청의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관급자재납품계약의 85%가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 평가받는 3자단가계약으로 체결되었다. 2)

전남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공무원 등과 ‘인맥’ 등이 작용해 특정 업체가 특정 품목을 납품하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전남도 교육청은 당시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 상한액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해 특혜성 시비를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수의계약에서도 말했듯이 3자단가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낮추는 것만으로 유착관계를

2) 2020-09-15 09:48 연합뉴스 : 전남교육청 관급자재 구매의 85%가 ‘사실상 수의계약’

모두 청산할 수는 없지만 공정한 계약이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일정부분 제도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수의계약제도의 개선의 정치적 기대효과

서울 도봉구와 같이 업체 당 수의계약 건수와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한, 이미 개선된 수의계약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제도에 의해 일감몰아주기 혜택을 받는 업체는 해당 업체에서 1~2개 업체이다.

동해시의 경우 옥외광고업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3일까지의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체 옥외광고업 60여개 이상의 업체 중 O업체와 T업체가 전체 옥외광고관련 수의계약에서 90%이상의 계약 건수와 계약금액을 차지했다.

따라서 이미 개선된 지자체는 차지하고 아직 개선되지 아니한 지자체에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다수의 업체가 불만이 팽배해있으며,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이 처벌받지 않고,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지자체장들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 공학적으로 정치의 승리는 명분과 유권자가 많은 곳의 지지를 선점하는 세력이 승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류에서 공정은 시대정신이며, 일감몰아주기의 대명사격이 되어버린 수의계약은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일감몰아주기는 1~2개 업체가 이득을 보고, 그 외의 다수의 업체는 소외를 받고 불만을 이야기한다. 정치가 소외받는 계층의 어려움을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본령이고, 비교적 많은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는 첩경인 수의계약 개선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7. 결론

요컨대, 수의계약은 이름부터 공정과는 거리가 먼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른 무작위 계약이 가능한 불공정한 의미가 내포된 명칭이다. 명칭의 개선이 요구되며, 수의계약의 운영방식, 공시방식, 공시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선 후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오히려 수의계약 금액을 더 상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인 수의계약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불공정 중에 극히 일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비해 감시주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불공정을 우리는 각종 제도의 보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각종 제도의 보완책을 만들어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지자체의 공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인 것이다.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계한 청소년활동 바우처 제도 실시

강은호 지역당원

I. 사회적 환경 및 필요성

1.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 제고함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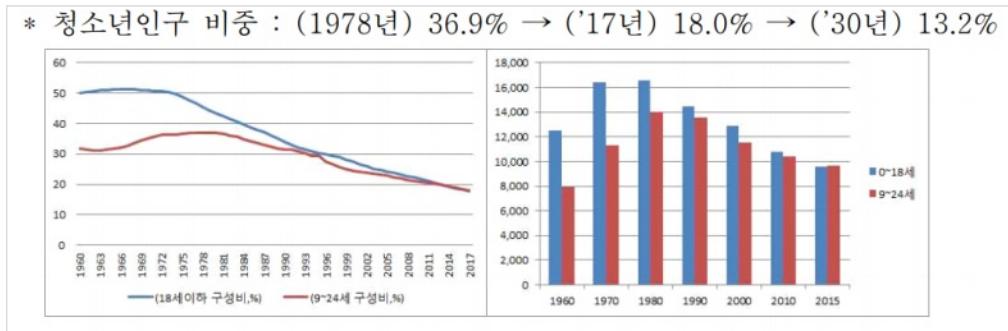
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2. 사회적 문제 발생¹⁾

가. 저출산, 고령화로 청소년 인구 수, 전체 인구 중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다.

- 1) 인구 절벽,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청소년이 짊어져야 할 미래부담 증가로 연결
- 2) 청소년 역량 제고·삶의 질 향상과 활동, 교육, 고용, 보호, 복지 등 종합적이고 범사회적인 정책이 필요

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 일부 발췌

표1. 청소년 인구 수 및 전체 인구 중 청소년 구성 비율²⁾

나. 가족 규모의 축소 및 가구 구성의 단순화, 다문화, 조손,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1)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에 따른 가족 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취약한 위기 청소년의 증가
- 2) 위기 청소년에 대한 돌봄·사회적 지지 등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필요

- 평균가구원 수 : ('90년) 3.8명 → ('10년) 2.7명 → ('16년) 2.5명
- 한부모 가구 : ('00년) 114만 가구 → ('10년) 161만 가구 → ('16년) 209만 가구

다. 청소년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청소년 정책 또한 능동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1)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경향 심화 등 정보화 역기능이 늘어남에 따른 건전한 매체 활용 능력 증진 지원 필요
- 2) 창의·융합형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전망에 따른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 시스템 필요
- 3) 청소년 활동 참여에 필요한 정보의 비대칭 및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참여의 어려움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건강 증진 활동 등의 참여에 따른 삶의 질 양극화 발생

2) 통계청e-나라지표 : 국내 인구 중 청소년 구성 비율

2018년			2016년		
구 분	N	%	구 분	N	%
시간이 없어서	6,760	35.8	시간이 없어서	6,277	34.7
어떤 활동이 있는지 몰라서	4,914	26.0	어떤 활동이 있는지 몰라서	4,463	24.7
활동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1,881	10.0	활동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1,903	10.5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1,653	8.8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1,797	9.9
공부에 방해	1,500	8.0	공부에 방해	1,211	6.7
기타	807	4.3	기타	824	4.6
비용 부담	663	3.5	비용 부담	774	4.3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587	3.1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691	3.8
가족의 반대	105	0.6	가족의 반대	162	0.9
전체	18,870	100.0	전체	18,102	100.0

표2. 청소년 활동 시 참여에 관한 장애 요인³⁾

- 4) 청소년 활동 중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적 낙인의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청소년수련시설 참가비 감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양육시설의 아동 ※ 면제 대상은 각 강좌당 1명 ※ 1인 1개 강좌까지 선착순 ※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자에 한함.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0% * (장애등급 1~3급까지는 동일 과목 동반 등록 시 보호자 1인에 한해 50% 할인 적용) * 수원시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10% * 자원봉사자 스마트 카드 소지자 (등록시 300점 차감) 10% * 가족 2인 이상, 1인 2과목 이상 등록 시 5%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장애인복지카드 (유효기간 기재必, 1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 증명서), 시설 입소 확인증 등 ※ 중복적용 불가, 서류 미비로 인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서류는 등록 시 제출만 인정)

표3. 수원시청소년재단 참가비 면제 및 할인 안내⁴⁾

3) 청소년활동진흥원 : 2018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

4) 수원시 조례 - 수원시 청소년 재단 설립·운영 조례 中 제28조 이용료 등

3.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가. 전국적으로 넓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적극적인 청소년 활동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들이 지역(마을)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전용시설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1항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해야 함
-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함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표4.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시설현황⁵⁾

5)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내

II. 선행 사례

1. 청소년 지원 사례

가. 고성군 꿈키움 바우처 카드

- 1) 고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5~7만원 상당의 포인트카드(충전 방식) 매월 1회 제공
- 2) 독서실, 서점, 문구, 대중교통 등 청소년의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연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나.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 카드

- 1)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16~18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성남시 지역상품권(월별 5만원, 3분기 최대 10만원, 4분기 최대 15만원) 지급
- 2) APP다운로드 설치 후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2. 사업 특성 및 개선 방안

- 가. 청소년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 관할 지역상품권 또는 현금성 포인트 지급을 통한 결제 지원 방식으로 운영 됨
- 나. 청소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관내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한정된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세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음
- 다. 국내 청소년 문화 지원 사업 대부분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대상의 지원이 필요함
- 라. 검증된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문화상품권과 비슷한 사용이 가능한 기존의 바우처가 아니라 오직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수강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함
- 마. 수요와 수입이 늘고 수요의 욕구가 다양해지면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청소년 시설 또한 재정안전성을 갖게 되어 선순환의 구조를 갖게 됨.

Ⅲ. 정책의 제안

1. 청소년활동 바우처

가.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다양한 문화적 신체적 체험활동에 대해 누구나 경제적 망설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마련

- 1) 전국 초등학교 1~6학년 대상 분기별 3만원의 청소년활동 바우처 카드 시범사업 운영 후 중·고등학교 확대 운영 실시

- 초등학교 인구 : ('22년) 2,767,857명 시범운영
- 중 학 생 인구 : ('22년) 1,413,312명 확대운영
- 고등학교 인구 : ('22년) 1,363,510명 보편확대

※ 2021년 기준 초등학교 만6~11세, 중학생 만12~14세, 고등학교 만15~17세

- 2) 청소년활동 바우처 카드 비용은 관할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되 사용처는 관할 지자체 소속 수련시설로 제한하여 사용

- 필요예산
 - 산출내역
 - ▶ 전국단위 2,767,857명 x 120천원 = 약3,321억(최대치 적용)
 - ▶ 시도단위(수원시) 66,551명 x 120천원 = 약80억(최대치 적용)

- 3) 바우처 사용 청소년은 분기 3만원의 참가비를 사용하되 초과 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함

- 청소년 수련활동 평균 참가비(수원시 기준)
 - 평생학습 : 월 4회 기준 3만원(재료비별도)
 - 실내 수련활동 : 1회 기준 3~5천원(재료비 포함)
 - 실외 수련활동 : 전체 예산범위 내 30~50% 수준, 평균 2~5만원 내외

- 4) 사용된 바우처 카드는 매분기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전되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나. 바우처에 등록된 청소년 대상 관할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활동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

- 1) 바우처 카드 등록 시 인근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 관심 분야 선택을 통한 관련 분야 참여 신청 알림 제공

- 청소년 수련활동 분야(9분야)
 - 자기계발, 모험개척, 직업체험, 문화예술, 건강보존, 환경보존, 과학정보 봉사활동, 교류활동 등
- 평생교육 분야(5분야)
 - 자기계발, 문화예술, 학업보조, 과학정보, 창의융합 등

2) 관할 지자체 내 수련시설 및 초·중·고등학교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온·오프라인 안내 서비스 제공

- 온라인 망
 - 지자체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 청소년활동 정보란 별도 제공
 - 관할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 청소년활동 정보란 별도 제공
 - 바우처 신청 시 등록된 인근 청소년수련시설 온라인 회원가입 연계를 통한 문자 안내 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 망
 - 관할 초·중·고등학교 학급 게시판 및 주요 게시판을 활용한 상시 정보 제공
 - 관할 지자체 주요 관공서 내 게시판을 활용한 상시 정보 제공
 - 청소년수련시설 평생교육 및 활동 리플릿 제작 및 지역사회 배포

IV. 기대효과

1.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균등한 참여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문화적인 체험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고
2. 초등 저학년의 경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에도 13시 이전에 대부분의 수업이 종료됨에 따른 사교육으로 집중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 제공
3. 청소년활동 바우처의 사용처를 청소년이 속한 관할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로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재정자립도 확대를 통한 양질의 청소년수련활동 지속제공 등의 선순환이 가능함
4. 청소년활동에 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을 해소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 확대에 따른 국민적 저항의 최소화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군 공항 이전 갈등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

김영수 경기도당 당직자

1. 군 공항이전 갈등배경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유래 없는 성과를 달성해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에 대해 국민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따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사회전반에 민주화가 확산되고 시민사회가 성숙되면서, 그동안 정부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주도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던 기존의 패러다임 변화가 생겼다. 즉 정부가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게 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등 국민의 의견과 동의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나태준·박태희, 2004).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과 동의를 반영하려는 개인 및 조직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정도나 수준이 심할 경우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 및 정책이 좌절되거나 난항을 겪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 및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완화 또는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과거 군사시설을 둘러싼 문제는 국가안보라는 절대적 가치 앞에서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개개인의 이익 중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군과 국민 간에 가치관의 충돌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정책 우선 등으로 인해 군과 갈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군사시설이 넘비시설(NIMBY, Not In My Back Yard)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과거에 체계적인 국토활용계획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전국 각지에 건설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중앙정부 차원의 국토균형 발전계획 및 지자체의 도시발전 계획과 대립현상을 겪게 되었다.

또한 군사시설의 입지 및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안전 위해, ‘군사시설 및 기지 보호법’에 의한 사유재산권 행사 규제, 지가하락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군사시설 입지활용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됨으로써 이전을 부추기는 것도 군사시설의 주둔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병인, 2009).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군용항공기 소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군 공항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주요 숙원사업이었다. 특히, 지난 2010년 11월 군 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매년 막대한 금액의 소음피해 배상금이 발생하면서 군 공항 문제는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해 12월, 국방부에서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을 고시하는 등 군 공항 이전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는 군사작전 및 공항입지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군사작전 적합성은

- ① 군 공항을 이전하기 전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항공작전운용이 가능할 것.
- ② 전방위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균형적인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
- ③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비행기준·절차·방식 등의 준수가 가능할 것.
- ④ 다른 공항의 공역(空域)과 중복되지 않을 것.
- ⑤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적용이 용이하고 장애물로 인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 ⑥ 바람, 안개, 강우 등 계절별 기상조건이 군사작전 수행 및 비행안전에 적합할 것 등 6가지 조건이다.

2) 공항입지 적합성은

- ① 소음피해 인구수와 소음보상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따른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제·변경이 가능할 것.
- ③ 시공성·토공량(土工量) 등을 고려하여 지형이 공항입지로 적합할 것.
- ④ 전력,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급이 용이할 것.

- ⑤ 철도, 도로, 항만 등과 연결이 용이할 것.
- ⑥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등의 보존이 가능할 것.
- ⑦ 향후 군 공항의 확장이 가능할 것 등 7가지 조건이다(국방부, 2013).

그런데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특히 이전부지 주민 및 지자체와 갈등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갈등관리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성패 또는 사업기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갈등 및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또한 군사시설의 갈등관리 사례에 대한 분석연구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국방부는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였다.(국무조정실, 2013; 국방부, 2010).

그러나 이는 일반적 원칙을 제시한 것이므로,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적용 시에는 이를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맞도록 갈등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갈등의 배경을 보다 심히 다루고 싶은 것은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전 지자체와 이전후보지 지자체간에 갈등을 다루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군 공항 이전 시 갈등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II. 갈등의 문제점

1. 군 공항시설로 인한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보상체계 미흡으로 인한 군 공항 이전요구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수십 년간 굉음으로 인한 전투기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청력손실 등에 국가는 보상에 대해 피해보는 주민의 피해보상에 불만족으로 군 공항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 군 공항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낙후

군 공항 시설에 대부분 비상활주로가 운영되고 있다. 비상활주로 주변에는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상활주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낙후로 인한 피해보상을 집단소송 방법으로 각 지자체에 정치적 접근이나 정책제안 및 청원의 방법으로 피해에 보상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3. 군 공항시설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개발이익 저하

비행장운영에 따른 고도제한조치로 인하여 재산권에 제한을 입었다. 주변지역 아파트 고층빌딩 등은 비행기의 이, 착륙등의 군사적인 고도의 기준이 측정되어 고도기준이상의 높이로는 건축물을 짓지 못해 다른 주변 지역에 비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4. 전투기의 주기적인 훈련으로 인해 주변지역 학교의 학업의 질 하락

군 공항시설 주변에 학교들은 전투기의 주기적인 훈련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에 질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산만함과 선생님의 육성이 아닌 스피커로 통해 수업을 받다보니 집중도가 떨어져 다른 주변 지역보다 성적하향 등 수업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5. 지자체간의 이전후보지 결정에 대한 갈등 (광주-무안, 수원-화성)

1~4번까지는 피해지역과 국가의 갈등이라면 5번은 지자체간의 지역갈등이다. 군공항의 피해로 인해 피해지역주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다방면으로 군 공항이전을 국가에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전하려는 지자체와 이전후보지의 지자체의 주민들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와 무안은 광주에 있는 11전투비행장을 무안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무안은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에 입장은 2008년 '광주 군 공항 종합발전방안' 연구 용역결과 무안공항이 최적지라고 연구결과에 대해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무안군에 입장은 군 공항 후보지 거론지역은 무안군의 지리적, 관광, 산업, 역점사업의 중심지이며, 무안군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지역이라 밝히면서 호남의 유일한 무안국제공항에 광주민항 통합의 빌미로 군사항공을 옮기려 하는 것은 광주전남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수원과 화성간의 갈등이다.

수원시에 입장은 군 공항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수원전투비행장을 옮기려는 일들이 진행되면서 수원의 국회의원들인 수원비행장이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이전후보지로 화성에 간척지인 화성호를 이전 최적지로 선택하였다.

화성시에 입장은 수원이 발표한 최적지의 이전후보지가 화성호로 결정한 부문에 대해 최적지의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천혜의 자원인 습지와 2,500만이 찾는 궁평항, 전곡항등 시민최대휴식처인 곳에 군 공항이 들어오는 것은 최적의 입지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했다.

Ⅲ. 군 공항이전 지자체간의 갈등사례 (광주-무안)



【광주=뉴스시스】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회가 18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공항 이전사업 조기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2019.11.18mdhnews@newsis.com



▲ 광주전투비행장이전추진대책위원회가 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운태 광주 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광주광역시 사례)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계획 즉각 철회하라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대위가 광주시청을 항의방문했다



지난 16일 무안군 일로움 기관사회단체장 30여명이 일로움사무소 2층에서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군 이전을 반대하는 릴레이 결의대회를 열었다./제공=무안군 일로움

(무안군 사례)

Ⅳ. 군 공항이전 지자체간의 갈등사례 (수원-화성)

[화성24시] 수원비행장이전 둘러싼 화성시와 수원시 갈등

☞ 김현태 경기본부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 승인 2021.11.03 16:51



화성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조례안 철회 논란
화성 공평항 시설개선공사 6년만에 완공



(수원시 사례)



(화성시 사례)

V. 광주와 무안, 수원과 화성간의 자치단체간의 갈등고조

뉴스 • 관련도순 • 최신순

아시아경제 7일 전 네이버뉴스

무안군 동탄면, 새마을부녀회,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결사반대

전남 무안군 동탄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임순희)가 최근 동탄면사무소 주차장에서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했다. 이번 결의는 국토부가 지...

NSP통신 7일 전

무안군,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목소리 '붐물'

무안을 이장협의회 반발 등 잇단 주민 자발적 한목소리 운현 기자, 무안을 이장 협의회 소속 마을 이장 42명도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릴레이 결의대회를 가...

아시아투데이 2021.11.25.

무안 지역 9개 읍면 기관 사회단체, '광주군공항 민간공항 연계추...

9개 읍면 700여명 자발적 참여로 릴레이 결의대회 개최 전남 무안군 이장협의회와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군 이전을 반대하는 릴레이 결의대회...

뉴스워커 2021.11.24.

무안군 윤남면 이장협의회,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결의대회

전남 무안군 윤남면 이장협의회(회장 정성현)는 지난 22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군 이전을 반대하는 릴레이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무안군 윤남면 광...

뉴스 더보기 →

(광주-무안)

뉴스 • 관련도순 • 최신순

뉴스1 4일 전 네이버뉴스

화성시, '수원군공항, 평화의길 찾아가기 시민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에는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

화성시 수원군공항 평화의길 찾아가기 시민간담회 개최 뉴스핌 4일 전

'2021 수원군공항 평화의길 찾아가기 시민간담회' 열려 NSP통신 4일 전

관련뉴스 전체보기 >

팩스경제TV 4일 전

화성시, '수원군공항, 평화의길 찾아가기 시민간담회'

간담회에는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지역주민(서부권, 병점·진안, 황계·안녕, 동탄권)...

SK브로드밴드 2021.11.08.

[B tv 수원뉴스]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부당 논란'

[화성시 관계자 (음성변조)] "수원 비행장 같은 경우는 85데를 이하는 보상금 지급을 안 할거라는 기준이... #SK브로드밴드 #Btv #경기뉴스 #화성리포트 #수원군...

인천일보 2021.11.11.

군공항 소음 반쪽보상에 '4년 이전표류' 설움 더졌다

바로 옆 동네인 화성시 병점동에 사는 이모(43)씨도 "같은 피해 지역인 수원시는 국방부의 전투기 소음 측정... 정부, 수원시, 화성시 3자가 제발 해법 좀 찾았으면..."

뉴스 더보기 →

(수원-화성)

최종 이전부지는 후보지 자치단체 주민투표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해야 결정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 지 후보지 주민동의도 없이 광주시와 수원시가 이전 사업건의서를 제출 등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전 지 자치단체와 후보 지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다.

Ⅵ. 갈등의 주요이슈 문제점

1. 경제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에서 비행장과 관련된 최대의 이슈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얼마인가에 대한 것과 비행장으로 인해 수원시의 개발이 얼마나 난항에 빠져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의 주민소송 원고승소 판결에 의한 배상액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다.

배상액은 466억원으로 유사한 소송들이 30여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배상액이 대기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서 직접적 피해액인 2조 5천억이고, 잠재적으로 4조 5천에 이른다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행장 이전 후보지를 개발하는 이슈에 정치권과 기업까지 가세하면서 국방부가 호를 관련된 부담을 질 이유가 없었다.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대한 비용부담은 국방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2. 절차적인 차원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초기의 갈등은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갈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갈등을 풀어감에 있어 주민들의 갈등표출방법은 주로 법적절차에 의하였고, 광주시와 수원시의 갈등표출방법은 건의문이나 청원 등과 같은 공식적인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행태가 나타난 이유를 다른 입지갈등 사례들과 비교하여 찾아보면, 아주 먼 과거에 비행장이 이미 있었고, 이 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활동이 펼쳐졌다는 점에 있다.

다양한 입지갈등 사례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이 입지시키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이었기에 기존에 이미 있는 것을 옮기는 것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갈등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후기의 갈등 상황에서는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과 유사한 형태의 갈등상황이 전개된다.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많은 자원을 가진 집단이 비행장 이전을 찬성하고 있고, 비행장의 입지를 막아야 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약한 힘을 가진 집단이다.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일이라는 논리로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 일개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이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양한 입지갈등 사례에서 절차적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경험이었다는 점

에서 향후에 무안군과 화성시 중심으로 하는 신규 비행장 입지 갈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의 갈등이 강하게 나타났다.

3. 환경적인 차원

전투기나 폭격기와 같은 군용 비행시설이 운용되는 비행장은 일반적인 비행장보다 더 큰 소음이 일어난다는 점과 그 소음이 특정한 시간에 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어떤 시간에 날지 모른다는 점은 주변 환경의 입장에서 매우 큰 환경적 공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음공해에 의한 인근주민 고통은 환경적 차원의 갈등이 도출되기에 당연한 이유가 된다. 특히 화성은 화옹지구의 경우에는 철새도래지가 인접하여 환경적 이슈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공존연구지 수원비행장 이전 갈등사례 이정철, 2017)

Ⅶ. 갈등해결을 위한 방향제시

1. 경제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방적인 방법이 아닌 양 자치단체 간 소통으로 협의하여 야 한다.
2. 갈등관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함으로 갈등조정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여 양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군 공항 이전에 관련하여 국방부와 종전부지 자치단체, 이전부지 자치단체, 공군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명확한 역할을 분담이 필요하다.
4. 힘의 논리가 아닌 이전부지는 자치단체 주민투표와 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해야 한다는 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5. 문재인정부의 평화공존과 종전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갈등이 향상이 되어온 전투비행장을 이전이 아닌 점진적 폐쇄와 분산배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이 아닌 자치단체의 공모사업을 통해 군 공항 유치를 원하는 자치단체에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대구 군 공항을 의성군과 군위군 사례)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배달특급앱을 활용한 경기도형 착한 선결제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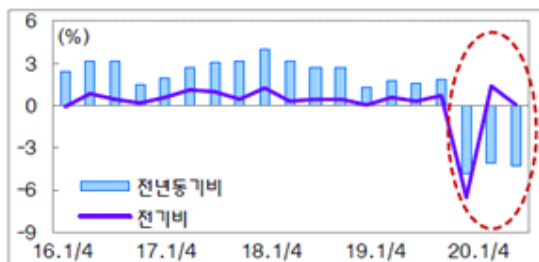
나현덕 지역당원

1. 환경 및 사업의 필요성

■ [민간소비] 서비스 소비 위축 등으로 연간 4.4%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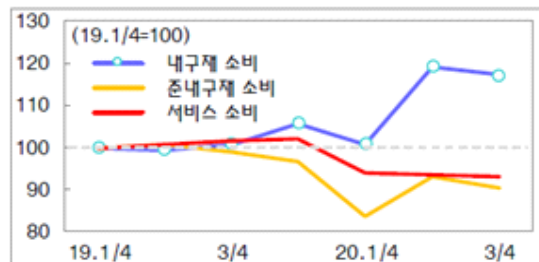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 위축과 회복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년 동기대비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재화소비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대면서비스 소비가 크게 위축

민간소비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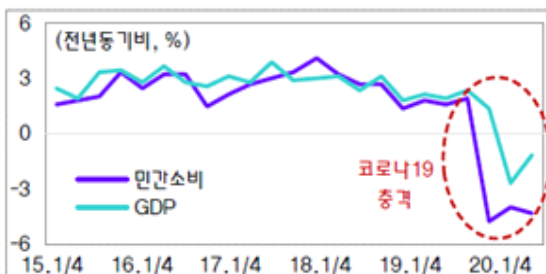
형태별 민간소비(S.A.)



* 출처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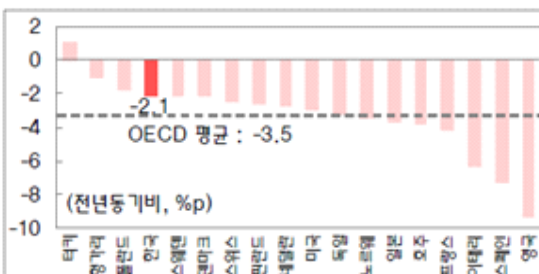
■ 최근 민간소비 부진의 특징

민간소비 증가율 및 GDP 성장률



* 출처 : 한국은행

주요국 민간소비 성장기여도('20.1/4~3/4)



* 출처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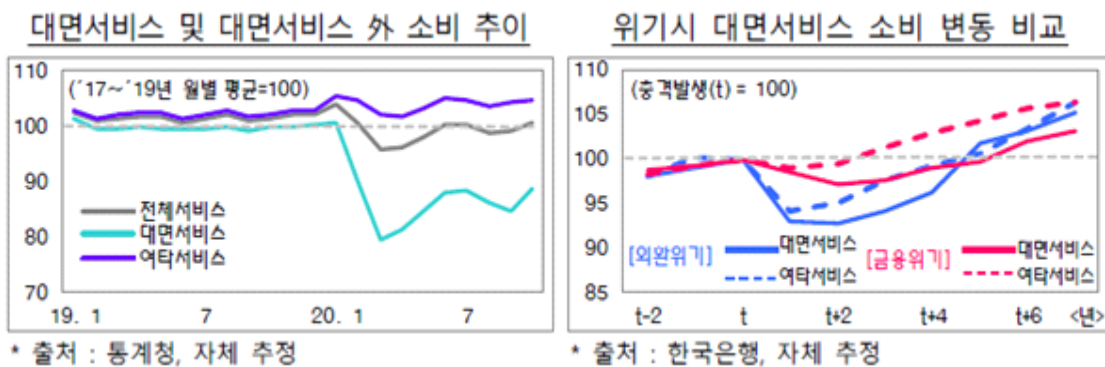
- (동향) '20년 민간소비는 초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역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

* '20. 1/4~3/4분기 평균 성장기여도(%p, 전년동기비) : [(GDP) △0.9%] (민간소비) △2.1 (정부소비) 1.0 (총고정자본) 0.9 (순수출) 0.1

- (소비 부진의 특징) 민간소비는 '11년 이후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

	'11	'12	'13	'14	'15	'16	'17	'18	'19
* 경제성장률(%)	3.7	2.4	3.2	3.2	2.8	2.9	3.2	2.9	2.0
<민간소비 기여도(%p)>	<1.5>	<0.8>	<0.9>	<1.0>	<1.1>	<1.3>	<1.3>	<1.5>	<0.8>

- (대면서비스 소비 위축) 재량적 지출 특성으로 경제위기시 여타 서비스 소비에 비해 크게 위축되고 회복 속도도 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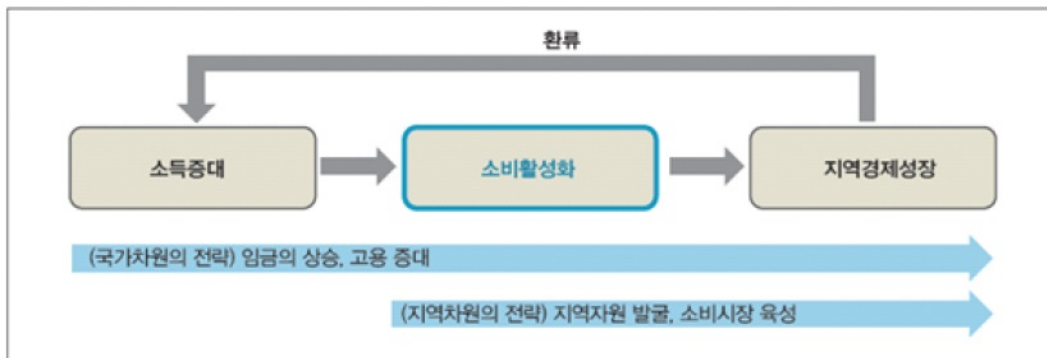
- (코로나 양극화) '승승장구' '온라인' 내리막 오프라인 지난해 오프라인 매출 전년比 3.6% ↓ 온라인 18.4%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20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자료)

■ 지역경제 순환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소비 인센티브 확대 필요

- 지역경제의 안정 성장 기제로서 소비지출을 인식할 필요

- 2000년 이후 민간소비가 지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기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역이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비할 수 있음을 의미
- 소득증대의 정책수단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소득-소비-경제성장의 순환체계에서 소득증대보다 지역차원의 '소비활성화'에 더욱 집중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남기찬외, 2017.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소득주도성장 체계에서의 국가 및 지역차원의 전략



- 소득-소비-지역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소비시장(Consumption Market)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내수 경기의 신속한 재생 및 반등을 위해 민간 소비 위축을 보완할 수 있는 소비 인센티브 확대 필요
- 아울러, 극심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소비 활력이 살아날 때까지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생존지원 정책이 필요

2. 사업의 배경

■ Pay It Forward for London

- '20년 초 영국 런던의 시민운동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런던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 극장 등에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구매



■ 정부의 착한 소비자 운동 <선결제> 캠페인

- '20년 4월초 정부는 3조3천억원 규모의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
 - 선결제 금액의 1% 소득, 법인세 공제
 - 개인사업자나 법인 1회당 최소 100만원이상 선결제 조건
- 대부분 공공 참여로 그치고, 민간 참여는 극히 저조함.
- 참여율 저조의 이유
 - '할인이 되는 지역화폐 등과 달리 선결제는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딱히 없다.'
 - 착한 선결제 캠페인의 취지는 좋았지만 선결제 참여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과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

3. 캠페인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착한 선결제 캠페인의 문제점

- (참여의 제한) 시민 한 사람이 선결제할 수 있는 금액은 대체로 소액이며, 참여 가능한 가게 역시 한정될 수밖에 없음.
- (선결제의 리스크) 선결제한 가게의 폐업 또는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 및 선결제 잔액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
- (혜택 부족) 참여 소비자의 선한 참여 동기만으로 부족.
소비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에게 충분히 강력한 참여 동기 제공 필요
- (관리의 어려움) 선결제 참여 가게 및 참여자 관리, 선결제 잔액 관리, 혜택 사용과 관리 등의 어려움 발생.

■ 해결 방안

- 착한 선결제 캠페인의 장점을 살리면서, 캠페인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아닌 '착한 선결제 플랫폼'이 필요
- 선결제 금액을 시민이 아닌 착한 선결제 플랫폼에서 지급
-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강력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가능
- 시민들은 자신들이 선결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소상공인 가게들에게는 대출이나 지원금이 아닌 매출로서 지원 가능
- 소상공인 가게들에게는 즉시적이고 명확한 실질적인 매출증대 효과 제공 가능
- 시스템을 통하여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며, 운영상 리스크 방지 및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

〈착한 선결제 캠페인과 착한 선결제 플랫폼의 비교〉

착한 선결제 캠페인과 착한 선결제 플랫폼의 비교

	착한 선결제 캠페인	착한 선결제 플랫폼
참여 범위	소수의 가게와 소수의 시민 참여	다수의 가게와 다수의 시민이 참여 가능
선결제 금액의 지급 주체	시민	착한 선결제 플랫폼
소상공인 가게	참여자수가 적어 실질적인 매출 효과 미미	즉시적이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
시민	혜택 없음	10% 적립 혹은 할인 혜택 (일반 결제시에도)
	시민이 직접 자신의 돈으로 선결제 시민입장에서 부담	시민들은 자신이 직접 선결제 하지 않고도 강력한 경제적 혜택 효과를 누림
운영상의 리스크	리스크 방지 방안 없음.	계약이행 보증보험으로 가게 폐업 등의 리스크 방지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으로 자금 운영 리스크 방지
시스템	없음.	착한 선결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유지
지속 가능성	캠페인으로 그침	선결제 금액을 마중물로 지속 운영 가능
비고		해결 과제 : 선결제 금액에 대한 금융 조달 방안 필요

4. 사업의 내용

■ 사업명 : 배달특급앱을 활용한 경기도형 착한 선결제 플랫폼

■ 선결제 플랫폼의 구조



○ 배달특급앱(플랫폼)과 가맹점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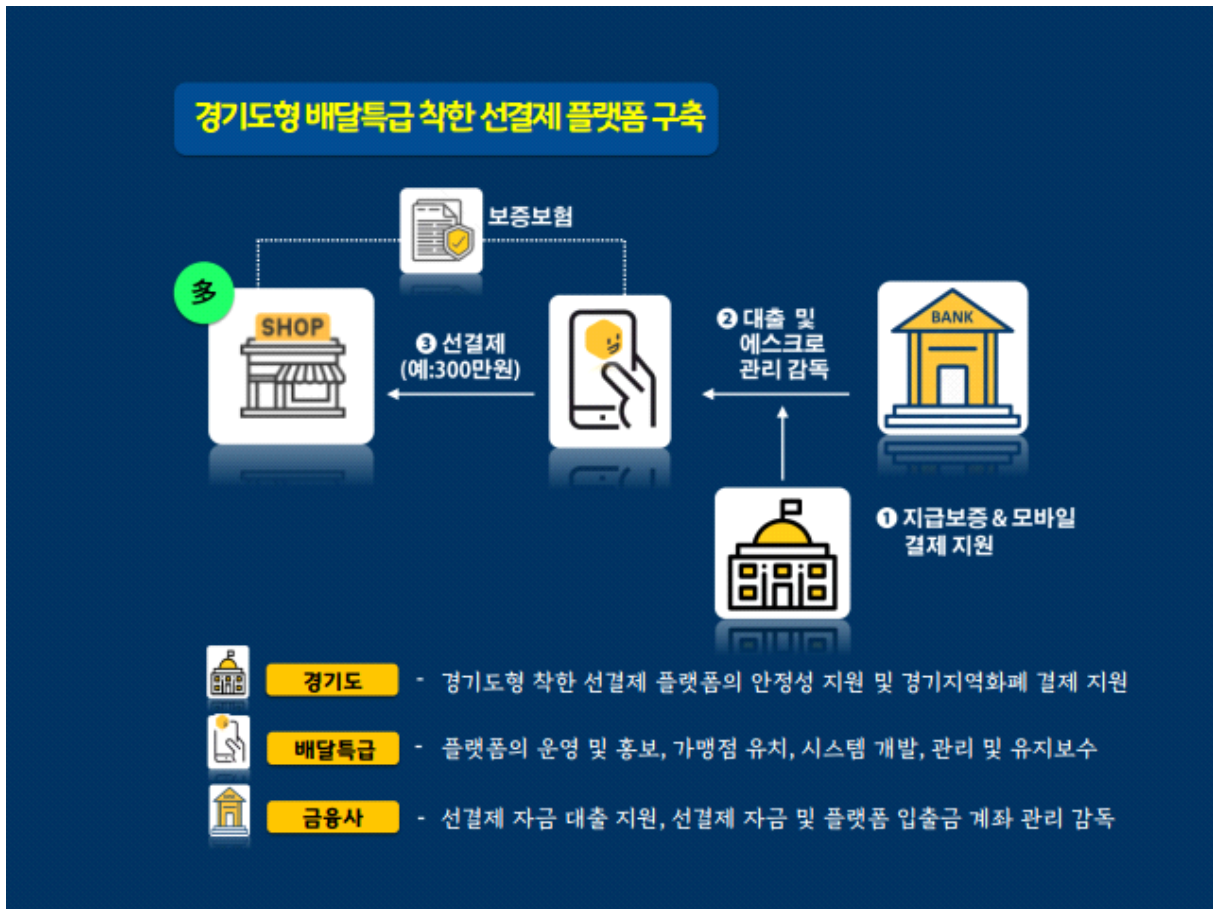
⇒ 플랫폼에서 각 가맹점 별로 선결제 금액 지급

(10%할인가로 200만원어치 선구매, 실 지급액 180만원 + 18만원(부가세)=198만원)

⇒ 이용자○ffline 현장 구매시 경기도지역화폐 앱 또는 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

일반결제, 간편결제 : 최대 10% 적립, 지역화폐 결제 : 최대 10% 적립 + 최대 10% 적립

■ 선결제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 **지자체(경기도) : 착한 선결제 플랫폼의 안정성 지원**
 - 경기도형 착한 선결제 플랫폼의 선구매 자금의 금융사 대출건에 대한 채무 보증
 -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결제 지원
- **배달특급앱 : 기존 배달특급앱에 선결제 플랫폼 시스템 추가**
 - 모바일 착한 선결제 플랫폼 사업 추진
 -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
 - 가맹점 유치 및 홍보
 - 관리 및 유지보수
- **금융사**
 - 선구매 자금의 대출 지원
 - 선구매 자금 및 플랫폼 입출금 계좌의 관리 감독(에스크로)

5. 사업 운영 방안

■ 이용자(소비자) 혜택 제공 방안

- 결제금액 기준 계단식 적립 방식
 - ⇒ 10,000원당 1,000원 적립, 최대 10% 적립
 - (가맹점에 Up Selling 효과 및 Cross Selling 효과 제공)
- 다양한 결제 방식 제공
 - 1) 일반 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기반)
 - 2)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 3) 지역화폐 결제
- 상기 모든 결제에 최대 10% 적립(10,000원당 1,000원 적립)
- 지역화폐 결제시, 최대 20% 혜택
 - (지역화폐 10%할인 + 최대 10% 적립(10,000원당 1,000원 적립))
-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액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연회비에 관계없이, 최대 20% 적립되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혜택 제공

■ 가맹점 선구매 금액 지급 운영 및 정산 방안

- 최초 선구매 금액은 가맹점당 200만원(실지급금액 : 180만원(10%할인) + 18만원(부가세) = 198만원)
- 추후, 가맹점별, 업종별 빅데이터 기반 차등 지급 운영
- 선구매 계약기간 : 선구매 금액 지급 후, 1년
- 가맹점 정산 방안 : 익월 1일~3일 세금계산서 요청,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수급 완료.
- 가맹점 선구매 금액 지급에 따른 리스크 방지 방안
 - 예상 리스크
 - 1) 가게의 폐업
 - 2) 가게의 영업중지
 - 3) 가게의 판매부진
 - 해결 방안
 - 1) 선급금 계약이행보증보험 (SGI 서울보증보험)
 - 2) 대손충당금

- 사업 초기 선급금 계약이행보증보험 없이 대손충당금 만으로 운영 후, 대손 충당금 초과 시 추후 선급금 계약이행보증보험 운영 검토. (가계의 업력, 규모, 선급금 금액의 규모 등 기준으로 보증보험 발행 운영)

6. 기대 효과

- 도민들에게 강력한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순환구조에 기여
 - 일반 민간 서비스의 적립율이 0.5~5%인 점으로 고려할 때, 최대 20% 가까운 파격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
- 최초의 착한 선결제 플랫폼의 개발을 통하여, 극심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생존 지원방안 제공
- 세금을 통한 지원금이나 대출이 아닌 선결제 플랫폼을 통한 직접적인 매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플랫폼의 운영이 직접적인 세금지원 없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함.
- '착한 선결제 캠페인'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소(많은 참여, 리스크 문제, 혜택 제공, 운영 및 관리 문제)
-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 지역기업, 금융사의 바람직한 협업 모델 제시
- 기타 지역내 장단기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카드 발급 비용 등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내 핀테크 강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기울어진 운동장(지역균형 뉴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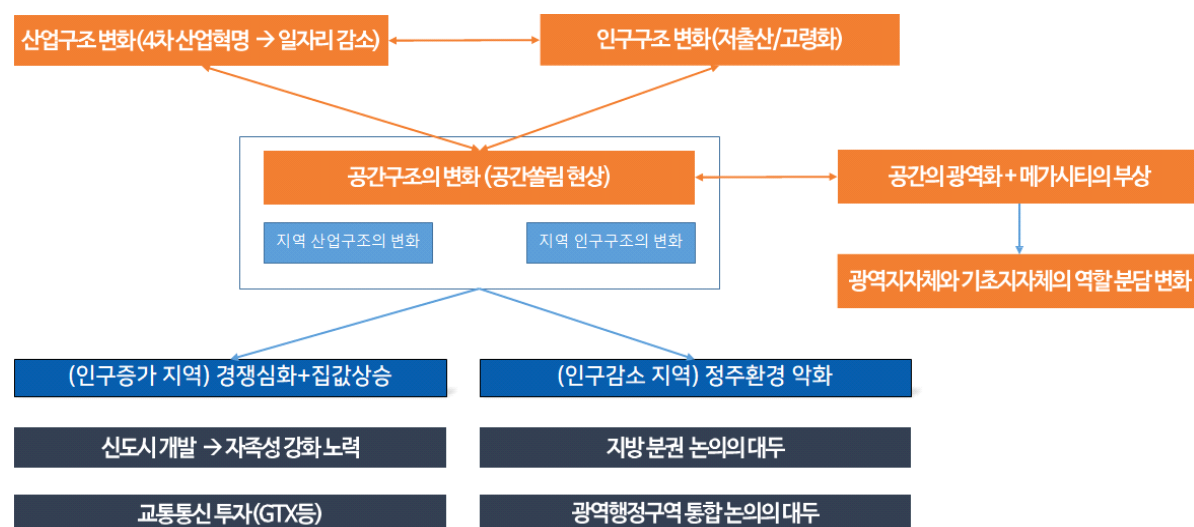
손성익 지역당원

제1장. 산업구조 변화가 촉발하는 공간 격차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은 도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노동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높아진 기계의 성능은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노동자의 임금 수준도 높아졌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높아진 임금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또 다시 산업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야말로 기술 발전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술 발전 방향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인공지능·로봇 기술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해나가고 있으며, 기술이 대체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던 창작, 예술 분야까지 대체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시대 시대의 기술은 서로 다른 부문 간의 영역을 허물어 가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 서비스, 인프라 등을 구현해 내고 있다. 이 때문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는 기술 발전 보다 ‘기술 혁신’라는 개념이 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혁신에 의한 일자리 변화는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단순노무직종 비율이 높은 지역이 있는 있는가 하면,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외의 경우 IT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인공지능·로봇 등과 기술 혁신으로 대체 될 수 있는 직종의 비율이 높아 기술 혁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 향후 지역의 성장 및 쇠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 수준에서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파악하고, 기술 혁신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술 혁신에 의한 영향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일자리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술 혁신에 따른 지역별 일자리 변화를 추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 간·지역 내 일자리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 국토 불균형에 대응하려는 노력

특단의 노력이 없다면 앞으로 국토 공간의 일극화 예상

과거: 이촌향도(60년대 중반 → 90년대 초반)

- 62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시작/ 72년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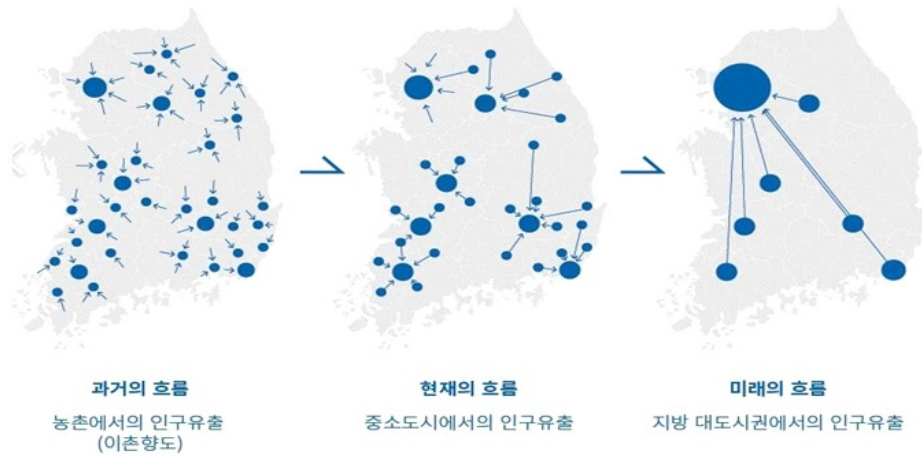
현재: 중소도시의 쇠퇴(90년대 중반 → 2040년 정도)

- 농촌에 더 이상 빠져나갈 인구가 없을 때 두드러지기 시작
-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사업
- 1997년 말 IMF구제금융 이후로 가속화(시장논리의 강화)

미래: 지방대도시권의 인구감소(2040 이후)

- 지방 중소도시에 더 이상 빠져나갈 인구가 없을 때 두드러지기 시작
- 지방도시의 붕괴/수도권 거점의 독식현상

인구유출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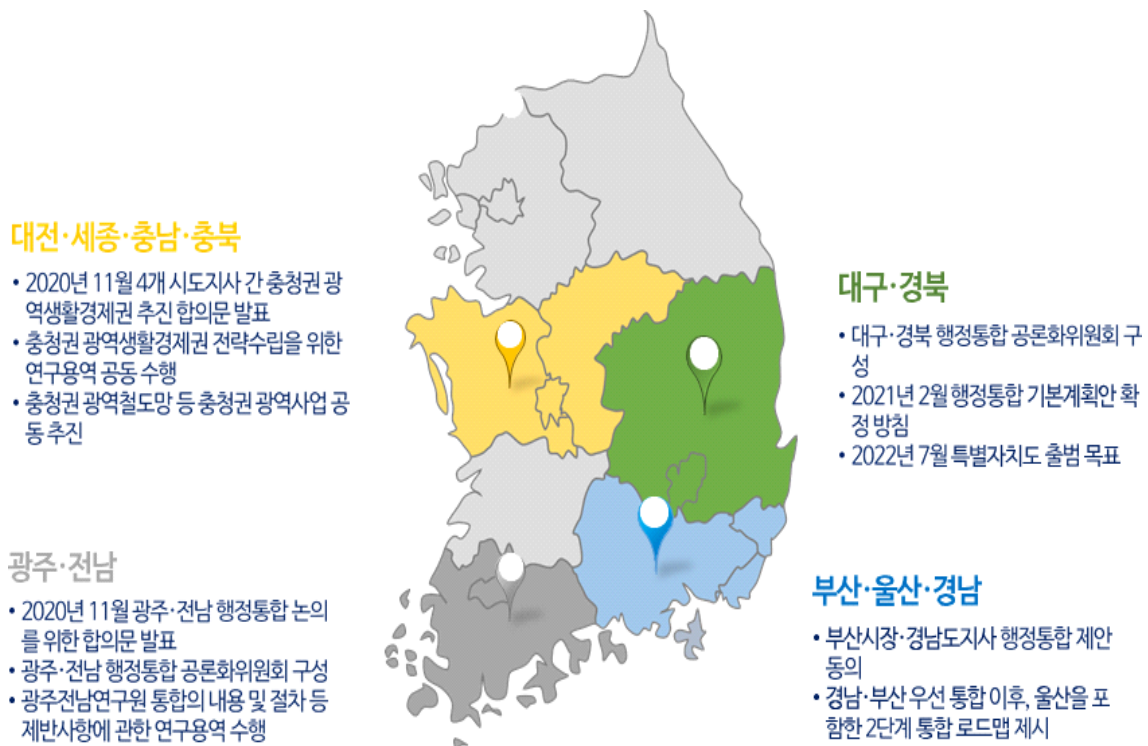
마강래(2020),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개마고원

- 주요 대도시권 주변에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권역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음
 -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인구는 점차 늘어나 전체 인구의 80%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국토연구원, 2013).
 -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과거 어느 때보다 인구감소와 경제쇠퇴로 인한 지방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함
 - 대도시권화와 지방위기 현상은 지방의 인구 고령화, 광역교통망의 발달, 성장동력 상실과 저성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트렌드의 영향이라 할 수 있음
- 먼저, 대도시권의 성장은 주변 중소도시들의 빠른 쇠퇴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전국 지자체의 30%이상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
 - 지방 중소도시에선 일자리가 감소해 젊은이들의 유출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고 있음
- 둘째로, 광역교통망의 발달은 우리 국토를 더욱 압축시키는 동시에 대도시권화 현상을 강화하고 있음
 - 경부KTX와 호남KTX의 개통은 기간거리 기준 우리 국토의 면적을 22.4%나 축소했음
 - 앞으로도 지속될 국토공간의 압축과정에서 대도시와 역세권 주변으로의 인구증가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셋째로,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현상은 저성장 추세 속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인구는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기회가 풍부한 대도시권으로 이동하고 있음

- 넷째로, 4차 산업혁명의 영향 또한 대도시권의 인구이동을 부추기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임
 -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일자리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대도시권화로 인한, 지방 중소도시의 위기가 점점 더 구체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진행될 국토공간의 경제, 사회, 인구적 변화를 고려한 공간전략이 필요함
 - ‘대도시의 성장세를 주변지역에 파급시킬 수 있는 공간전략’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제3장. 광역적 연계와 거점

상생과 협력을 위한 행정구역통합 및 메가시티 논의



- 1960년대 이후부터 추진해왔던 거점전략은 ‘불균형 성장’에 토대를 두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함이었음

- 하지만, 일부 대도시들만이 성장하여 국토공간의 분극효과가 커지기만 하는 현상이 계속되었음
 - 농어촌의 인구가 급속히 줄어든 현재는 ‘중소도시→대도시권’의 인구흐름으로 국토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공간전략이 부재하다면 앞으로의 인구흐름은 ‘지방 대도시권 → 수도권’으로 지방도시 모두가 몰락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전반에 걸친 압축&연계(Compact&Network)전략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음
- 압축&연계전략의 핵심은 ‘압축의 긍정적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점을 선정’하고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임
 - 이 전략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과거의 거점전략이 ‘압축’만을 강조했을 뿐, 연계에 대한 전략이 부재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압축된 곳들의 연계를 강화한다면, 거점전략은 도시 간 상생발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압축&연계전략은 도시의 규모별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
- 국토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권에서는 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필요
 -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음
 - 농어촌의 경우에는 인구유출 방지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압축이 필요하고, 이렇게 압축된 지역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제4장. 대도시권 활성화 전략을 통한 균형발전

- 노무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지역의 균형이 아닌 ‘분배의 균형’을 이루려 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1곳), 혁신도시(10곳), 기업도시(6곳)를 모두 합쳐 지방에 17곳의 거점을 조성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이 논밭을 매입해서 만들어진 신도시라는 점임
 - 지금까지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들은 인근 도시들의 인구를 흡수하며 성장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전광역시의 내 유휴공간을 이용했다면, 그리고 혁신도시 10곳을 기존의 지방 거점도시 내에 만들었다면 더욱 파급력이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음

-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박근혜 정부의 ‘행복생활권’도 행정구역의 한계를 경시한 이상적인 정책이었음
- 광역경제권 정책은 대도시권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함 (국지적 시각에서 광역적 시각으로의 전환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지혜를 키우는 것과 같음)
 - 문제는 시도 간, 광역경제권 내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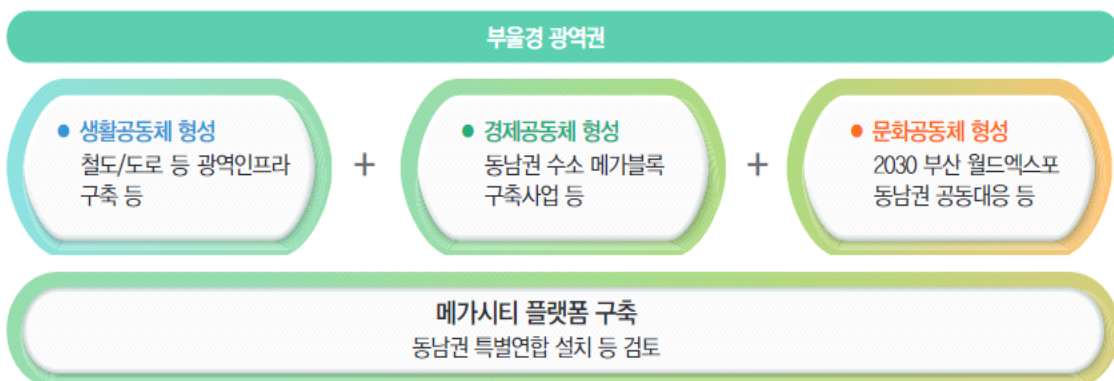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과제와 전망

〈그림1〉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기초



출처 : 김경수 경남도지사 설명자료(2020).

〈그림2〉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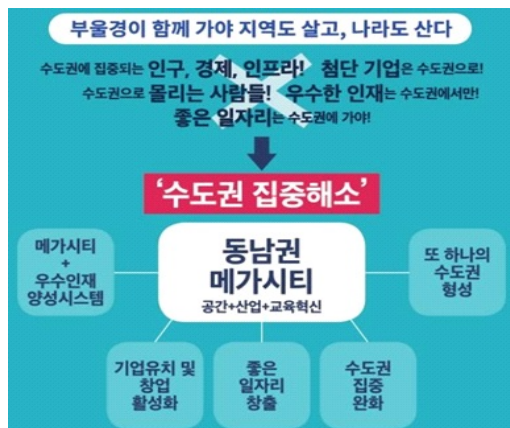
출처 : 부산·울산·경남연구원(2020). 「동남권 발전계획수립 공동연구」.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상

부울경의 메가시티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상을 토대로 검토 및 수립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을 중심으로 공간적 편중현상이 심화된 상태로, 역대 정부의 균형정책 역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수립됐으나, 긍정적인 효과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균형정책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의 권역별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축을 통해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현상을 해소해 대한민국 전체의 공간적 균형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울경의 메가시티는 지역적 차원에서는 권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이 포함돼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종래의 국가 주도의 균형발전에서 탈피해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출처: 경상남도 홈페이지(202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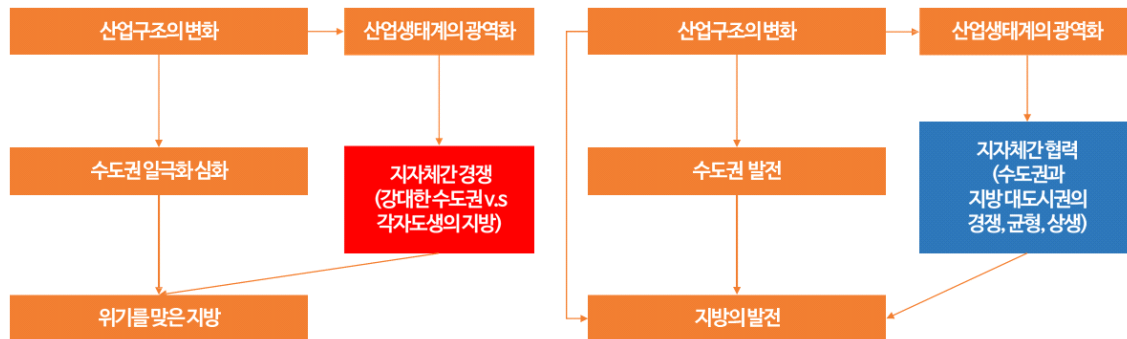


출처: 경상남도 홈페이지(2021. 11.)

상기와 같은 추진 기조에 따라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울경의 메가시티는 다음과 같은 4개 분야의 내용으로 구상돼 있다(그림2 참고). 부울경을 권역으로 하는 생활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조는 단일 권역을 중심으로 공동사업과 추진체계의 이원적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다. 메가시티의 공동사업은 철도와 도로 등의 광역인프라를 구축하는 생활공동체와 동남권 수소 메가블록을 구축하는 경제공동체 및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동남권 공동대응을 위한 문화공동체 등으로 구성되고, 이를 추진하는 공동의 거버넌스로 동남권 특별연합을 설치하는 것이다.

제5장. 정리하며

지역 활성화 노력엔 산업생태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50%를 돌파하면서 ‘고도비만’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 이탈이 가속되면서 소멸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공룡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은 부동산값 폭등 등의 부작용으로 성장 동력이 하락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00대 기업 75%가 수도권 집중되어있고, 수도권 규제 풀자 지방 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고, 비수도권엔 소득세 차등으로 지방을 떠난 청년을 지방으로 다시 유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뿐 아니라 인구도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지역의 초광역 경제, 생활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해야 합니다. 생활, 경제, 문화, 행정 등 초광역 공동체를 실현해야 하고, 원활한 초광역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반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아주 기초적인 삶의 질을 마련해주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성장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 160조 원 중 실질적인 지역사업은 전체의 약 47%인 75,3조 원 수준이며, 2021년도 국비예산 21,3조 원에서는 41.6%인 8.8조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판 뉴딜이 수도권보다 지역 중심으로 실현되어야 지역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중심의 뉴딜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의 규모와 비중을 50% 이상으로 훨씬 늘려 지역에 투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전국적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하여 지역낙후에 기반한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 생활권을 실현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초광역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들은 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뉴딜 관련 선도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역량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도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으로의 뉴딜 확산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지역균형 뉴딜, 새로운 약속은 정책의 실현에서 시작됩니다.”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자발적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정책(공간예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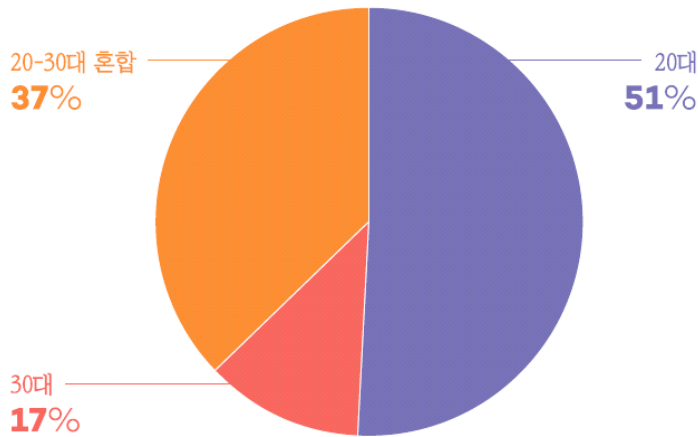
장민수 경기도당 당직자

I. 추진근거 및 배경

- 청년들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무중력지대, 오랑 등 서울시 주도의 청년공간이 생성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확대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지원사업도 청년허브의 ‘청년참’을 시작으로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 ‘관’ 주도로 청년공간의 전국적으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한적인 예산과 환경은 커뮤니티들의 공간니즈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고민이 존재함.
- 2019년에 나온 서울 청년커뮤니티 연구 자료에 보면 커뮤니티 구성원의 51%가 20대로 이뤄 졌고 37%가 20~30대 혼합인 것으로 비추어볼 때 서울시 내 20대 청년들이 커뮤니티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커뮤니티 모임 장소는 카페, 공유공간(무중력지대 등), 유료 모임 공간이 전체의 68%를 차지하여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거나 대여한 공간이며, 모임 주기가 주로 주 1회이상(54%) 이루어짐을 보면 청년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지원금 외 필요한 지원 항목에서도 30%가 공간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자금원 자체에 대한 활용도 23%가 커뮤니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장소대여에 쓰고 있는 실정임
- 청년정책의 초기 시행모델이었던 ‘일자리’, ‘창업’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 당사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으로 조금씩 다원화 되고 있음. 이에 행정 주도형 커뮤니티 환경조성을 넘어 자발적인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자료1. 커뮤니티 구성원 나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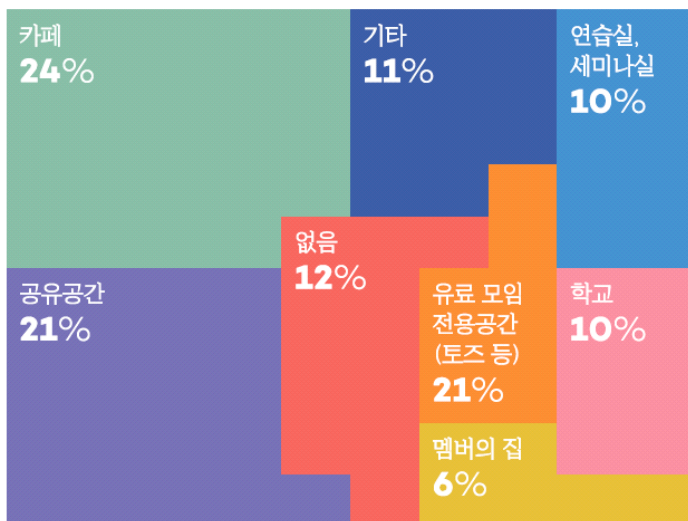
⑤ 구성원 나이 분포 (단위 : %)



구성원 나이 분포의 경우, 20대로만 이루어진 팀(51%), 20-30대 혼합으로 이루어진 팀(37%), 30대로만 이루어진 팀(12%)의 순으로 나타났다. 30대만 모인 모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부 교류 활동 중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모임을 꾸린 경향 혹은 구체적인 결과물 및 목표를 위해 활동을 추진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20대만 모인 모임들의 경우, 동창 모임(대학교) 모임이 다수였다.

자료2. 커뮤니티 모임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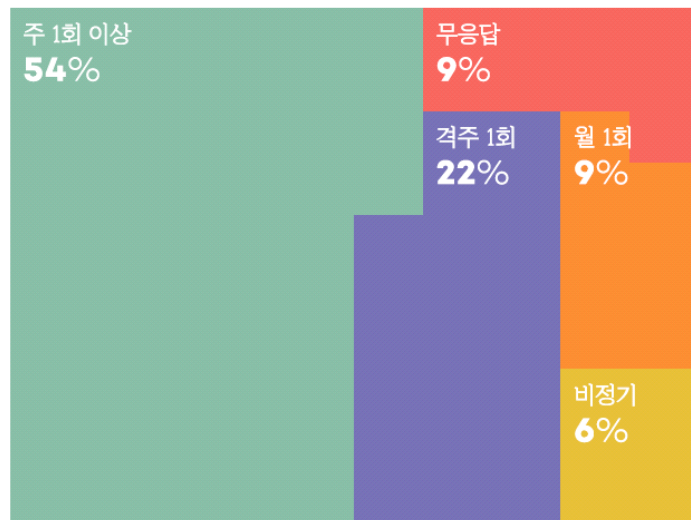
⑦ 모임 장소 (단위 : %)



모임 장소의 경우, 카페(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유 공간(21%)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공유 공간으로 언급된 곳은 마을 활력소, 동네 커뮤니티 공간, 무중력지대, 서울 혁신파크, 여성 프라자 등이 있다. 기타로 언급된 공간은 커뮤니티 구성원의 작업실, 스튜디오, 야외 공간 등이 있다.

자료3. 커뮤니티 모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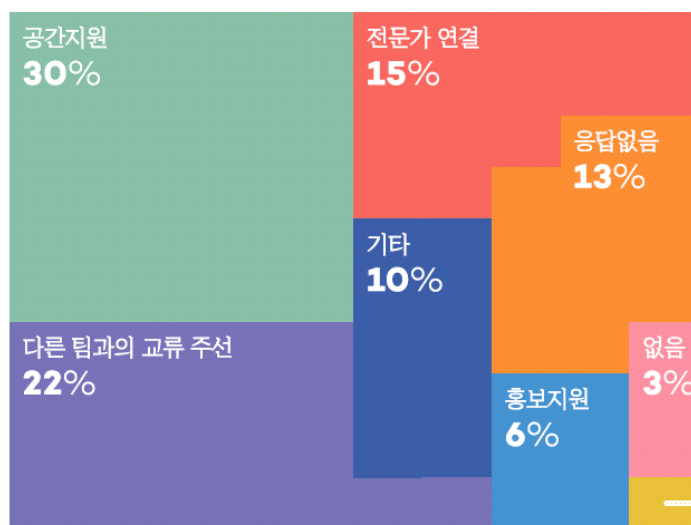
⑧ 모임 주기 (단위 : %)



모임 주기의 경우, 주 1회 이상(54%), 격주 1회(22%)로 나타났다. 모임의 주기는 커뮤니티의 활동 방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프로젝트성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팀의 경우, 프로젝트 행사일이 다가올 경우, 비정기적으로 더 자주 모이는 경향을 보인다.

자료4. 커뮤니티 지원금 외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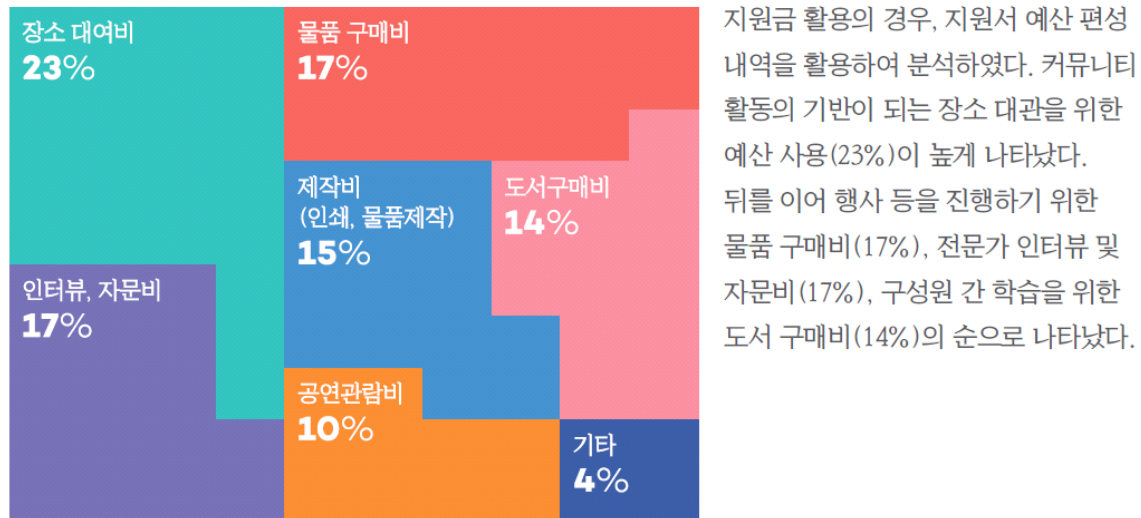
⑩ 지원금 외에 필요 지원 (단위 : %)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지원금 외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응답은 공간지원(30%), 다른 과의 교류 주선(22%), 전문가 연결(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간 지원의 경우,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물 제작 등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공간에 대한 필요가 눈에 띄었다.

자료5. 커뮤니티 지원금 활용

⑪ 지원금 활용 (단위 : %)



II. 추진방향(목표)

- 커뮤니티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하며, 자율성이 보장된 공간을 만들어주며 활동의 동력을 유지시켜 줌.
- 이미 운영 중인 청년공간의 과부화 된 공간 대여 수요를 낮춰주며, 지역의 비어있는 사무실에 대한 공실률을 줄임.

III. 제안 정책과제

- 정책대상
 - 20~30대로 구성된 청년커뮤니티, 이미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본 후 심화적인 활동을 위해 독립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느낀 커뮤니티
 - 자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여 이미 활동을 한 청년커뮤니티
- 주요내용(안)
 - 대표자(해당지역의 거주하는 20~30대) 포함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해당지역 청년인 커뮤니티에 한해 신청 자격 부여
 - 보증금 대출지원과 월세지원 중 택1 하여 선정 후 지원
 - 사무실 보증금 대출 지원(청년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참고)

- 신청대상자 : 만19~39세 이하의 청년
- 용자지원 조건 용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용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 사무실 월세 지원(청년월세지원 사업 참고)

- 지원대상 : 청년 1인 가구(만19세~39세 이하)
- ※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지원
- 지원내용: 월 20만원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생애 1회)

□ 기대효과

- 청년들의 커뮤니티 유지 가능성 향상
- 기존 청년공간의 과부화 방지
- 창업이나 문화/예술 등 특수한 목적의 집단이 아니더라도 공간을 만들 수 있기에 많은 청년들의 참여 기대

참고문헌

- 2019-서울의 청년커뮤니티 작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및 무중력지대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사모델1. 청년허브 미단이실험실

2020 청년허브 미단이실험실 입주모집 공고

하고 싶은 일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찾고계신가요?

하고 싶은 일을 선보이고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찾고계신가요?

하고 싶은 일을 다양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계신가요?

청년허브 미단이실험실에서 활동을 보여주고, 활동의 방향을 찾아갈 청년 및 청년단체를 모집합니다. 독립된 입주공간과 다수의 청년 및 시민들이 방문하는 청년허브의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하려는 단체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미단이실험실 개요

공간명	미단이실험실
위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청년허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입주공간 지원 - 청년허브 공용공간 활용 지원 - 청년허브 대관공간(다목적홀, 세미나실) 대관료 할인 - 청년허브 공유물품 및 행사집기 지원 - 청년허브 입주단체 간 네트워크 및 협업 지원 <p>※ 현재 공실은 6개실이고, 8.8~16.5㎡정도의 크기입니다. ※ 면적당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2020년의 경우 1㎡당 약 3,304원) ※ 2개 이상의 팀이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p>
사용기간	- 2020년 5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8개월) ※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협약 가능

2. 모집안내

모집기	2020년 4월 1일(수) ~ 4월 15일(수) 24:00까지 (15일간)
모집대상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개인 및 단체 ※ 정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공간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모집조건	아래 ①, ② 항목 모두를 충족하는 청년 개인 및 단체 ① 대표자 나이가 만 19~39세 사이인 팀 ②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팀
모집공간	- 총 6실 - 면적 : 8.82㎡(1실), 13.53㎡(1실), 15.6㎡(2실), 15.86㎡(1실), 16.52㎡(1실)
모집절차	서류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그룹 인터뷰 ▶ 최종 선발

모집기	2020년 4월 1일(수) ~ 4월 15일(수) 24:00까지 (15일간)
제출서류	<p>입주지원 서류 (별첨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첨1] 입주 지원서 1부(필수) · [별첨2] 단체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1부(필수) · [별첨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필수) <p>※ 입주신청 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제외되오니 참고바랍니다.</p>
접수방법	온라인 E-mail접수 : gim@youthhub.kr

3. 미달이실험실 공간 소개

공간사진	 
공간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3, 6호선 불광역 2번출구 5분거리,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에 위치 - 유동인구 다수(월 방문자 약 3,000명) - 서울혁신파크 내에 위치하여 다양한 정보 및 행사와 접할 기회 다수 - 실험실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활동을 소개하거나 소통하기 쉬운 구조 - 청년허브가 운영하는 공간(약 1,900㎡)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이 가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 복합기(※소모품은 제공하지 않음) - 기본 테이블, 의자 제공 - 공유주방에서 인덕션,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기본 시설 이용가능 - 미달이실험실 전용 창고 이용가능

유사모델2. 무중력지대 대방 사무실 임대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2020년 입주단체(팀) 모집 (재)공모

1. 모집개요

- 입주팀 수 : 3개 단체(팀)
- 위치 : 무중력지대 대방동 4층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79-1 (대방동 14-14))
- 입주기간 : 2020. 02. 15 ~ 2020. 12. 31.
 - * 금년 12월 입주기간 종료 전 연장 여부 심사 및 재협의
-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대표자 및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당사자인 단체(비영리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NGO, 개인사업자, 예비 창업자(서울시 거주) 등)
 - ※ 청년 : 만 19세~ 39세 (서울시 기준)
- 목적 : 무중력지대 대방동 청년 활동 기반 조성 및 공간 활성화
- 공간이용료
 - 공간A : 전용면적 7.37㎡ 113,964원/월 (VAT 포함, 관리비 포함 월 평균비용)
 - 공간B : 전용면적 9.95㎡ 153,861원/월 (VAT 포함, 관리비 포함 월 평균비용)
 - 공간C : 전용면적 8.98㎡ 138,865원/월 (VAT 포함, 관리비 포함 월 평균비용)
 - ※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입주 시 입주기간 공간이용료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 단, 사용료(대부료)와 관리비를 나누어 분납할 수 있음.
- 모집 및 진행일정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0. 01. 30(목) ~ 02. 11(화), 공고기간 내 입주 공간 현장 방문 가능
 - 면접 심사일 : 2020. 02. 13(목) 예정
 - 입주팀 선정 : 2020. 02. 14(금) 예정
 - 이사(입주)기간 : 2020. 02. 15(토)부터 1주일 이내
 - ※ 운영국 상황에 따라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 예정
 - ※ 입주확정시 입주기간은 2020. 12. 31까지이며, 이후 연장 사용 여부는 추후 협의
 - ※ 현재 입주단체 현황(1): 불꽃페미액션(공간D)

2. 입주 공모 참여기준

① 서울시 소재 및 거주이며 청년 이슈를 주요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고유번호증(임의단체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서울시 거소지임을 확인. 예비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②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에서 입주단체로서 공동 활동에 참여 가능한 단체

※ 공동활동

- 1) 공간 공동 책임관리로서 운영진과 함께 책임 공유
- 2)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사업 연 2회 이상진행
- 3) 정기회의(월 1회) 및 비정기모임, 건물 청소 등 관리 참여

③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운영 규정에 동의하는 청년단체

④ 상근 구성원이 3~4명 이하인 단체

3. 참여 제외대상

※ 아래 사항에서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참여 제외

- 동일 단체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청년공간 사업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입주단체 지원혜택

- ① 무중력지대 대방동 4층 사무공간 입주
- ② 사무용 기본 집기 및 공동 복합기(흑백) 사용, 팩스 및 무선 인터넷 제공
- ③ 회의실, 세미나실 등 무료 사용(대관현황에 따라 사전 일정 협의 필요)
- ④ 지하 1층 인공위성홀 대관 지원: 분기별 1회(대관현황에 따라 사전 일정 협의 필요)
- ⑤ 공용공간 활용 : 운영국 회의실, 휴게공간, 나눔부엌 등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창원시와 함께 낳고,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 임신 및 출산 3無, 3公 케어 서비스 -

이원주 경남도당 당직자

■ 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문제

1. 창원시의 일반현황 및 특징

경상남도 창원시는 기존의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된 도시로써, 2022년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며, 일반시와는 차별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급’에 걸 맞는 행·재정적 자치 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출범예정인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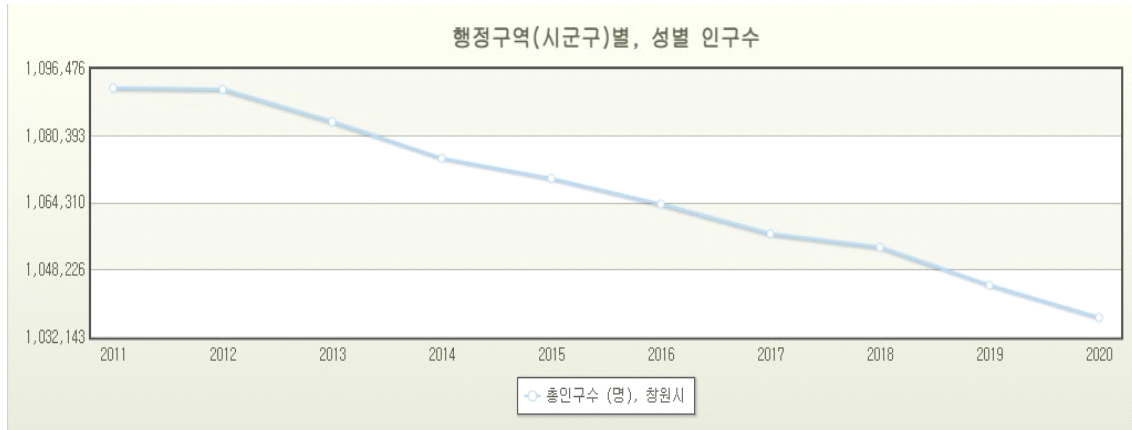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
- 면 적 : 74,377㎢
- 행정구역 : 5개 구, 2읍, 6면 49동(법정동 194개)
- 인 구 : 1,033,729명(남 : 523,629/ 여 : 510,100)
- 특 징 :
 - 기존의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
 - 동쪽으로는 김해시, 부산광역시, 북쪽으로는 밀양시,창녕군,함안군, 서쪽으로는 진주시, 고성군, 남쪽으로는 거제시를 마주봄.
 - 2022년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며, 일반시와 차별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례시’ 출범예정



2. 창원시의 인구 추이

특례시 출범예정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부터의 인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091,881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여, 2020년 1,036,738명으로 특례시로 지정되는 조건인 100만 이상의 인구수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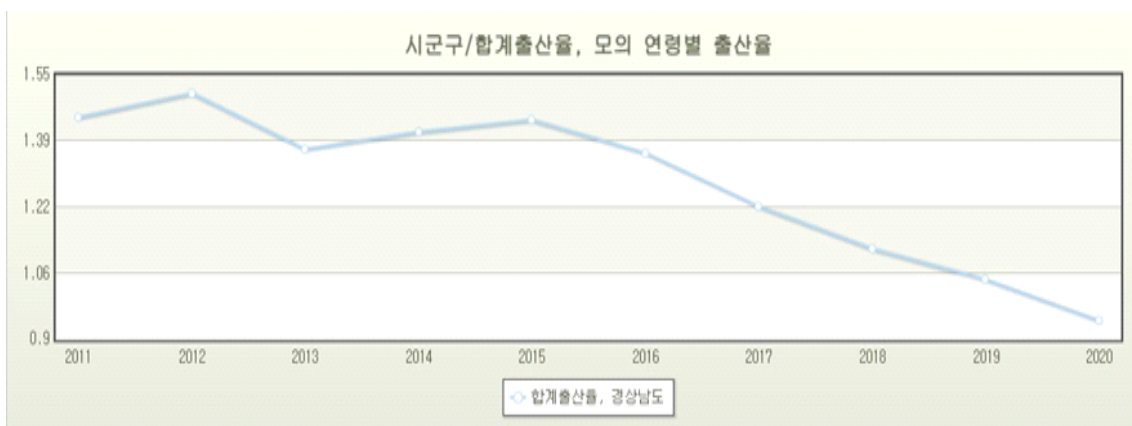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창원시 총 인구수(명)	1,091,881	1,091,471	1,083,731	1,075,168	1,070,064	1,063,907	1,057,032	1,053,601	1,044,740	1,036,738



〈표1〉 창원시 인구 추이

3. 경남 합계출산율 하락과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문제

한 여자가 가임기간(만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산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며, 2010년 1.226명에서 2020년 역대 최저인 0.837명을 기록했다. 경남의 경우 0.94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2010년 1.143명에서 크게 줄었다.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323명에서 2012년 1.462명으로 반등하였으나, 2020년 0.895명으로 하락하였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남 합계출산율(%)	1.446	1.503	1.367	1.409	1.437	1.358	1.227	1.122	1.046	0.945

〈표2〉 경상남도 합계출산율

4. 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문제

이러한 현 지역의 상황에서 본인은 예비부부, 신혼부부의 임신과 출생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부부들을 창원시로 유입시키므로 현재 10년째 떨어지고 있는 창원시의 인구수를 증가시키고, 특례시로 인구수 조건인 100만명 이상의 인구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더불어 합계출산율을 상승을 기대하고자 한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1인 가구는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은 부부와 관련된 정책에 집중하려한다.)

창원시로 유입되는 예비, 신혼부부와, 향후 태어나는 자녀의 지역 정착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와 인구 절벽, 지역 불균형에서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젊은 도시로 바꾸고자 한다.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향상된 정주여건 외에도 아이를 낳아도 공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지자체가 함께 마을의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 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비전은 아이를 걱정 없이 낳고,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창원!!

창원시와 함께 낳고,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임신 및 출생 3無, 3公케어 서비스 이다.

■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 정책

3無(예비, 신혼부부 무료 토털 건강검진 서비스, 고위험 산모 무료 의료 케어서비스, 베이비 키트 무료 제공), 3公(공공 산후조리원, 공공 가사도우미서비스, 공공 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

3무 : 3가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 예비, 신혼부부 무료 토털 건강검진 서비스
- 고위험 산모 무료 의료 케어 서비스
- 베이비 키트 무료 제공

- 3無

3.1.1	예비, 신혼부부 무료 토털 건강검진 서비스 (현)여성만 혈액 5종 검사만 무료로 진행 중 ▶▶▶부부 중 최소 한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민이면 부부 모두가 무료로 토털 건강검진 가능
3.1.2	고위험 산모 무료 의료 케어 서비스 (현)모든 지자체 300만원지원 ▶▶▶비급여, 실비처리 불가능한 약 상당히 존재 (예:조산-트랙토실(수축억제제)-> 급여, 실비처리 가능
3.1.3.	베이비 키트 무료제공 (현)모든 지자체 존재하지 않음 ▶▶▶ ‘어서와 엄마가 처음이지?’, 다른 가족이 없음, 경험부족, 인지부족 유럽국가들은 베이비박스라고 해서 출산2달 전 신생아에게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아이템 무료로 지급

1. 예비, 신혼부부 무료 토털 건강검진 서비스(현재는 창원에는 여성만 검사:혈액검사5종 검사 진행중)

부부 중 최소 한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민으로서, 첫 임신을 준비하는 결혼 예정 및 신혼부부를 남, 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토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검진의 모든 항목)

2. 고위험 산모 무료 의료 케어서비스(현재는 모든 지자체 진행중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령, 난임 임신부, 고위험 산모가 늘어났다. 그로 인한 의료비의 부담이 예전보다 많이 생겨났는데,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액을 생각하면 많이 지원해준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10년 간 1.5배 증가한 조산율에 따라 ‘조산’에 대한 병원비용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이미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며,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어 산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트랙토실(수축억제제)을 ‘조산 치료’ 사용하면, (보통37주에서 41주출산을 정산출산주수라고 보는데) 평균 2~3일에 1사이클에 5팩을 사용하며, 3사이클까지는 급여적용이 되는데 이후 비급여로 적용되어, 비급여 적용시 한 사이클당 50~70만원의 비용이 들고, 일주일을 이 약을 사용하게 될 경우, 200만원 정도 비용이 들게 된다. 만약 30주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약 2달이 안 되는 병원 입원기간동안 치료중

약값만 1,200만원(3사이클이 급여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외하고)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300만원을 지원받아, 900만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비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약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실제 임신부 카페에 산모들의 병원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상담글이 많이 올려져 있으며, 최근에 출산한 임신부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비급여 약값에 대한 비용 부담은 매우 크다고 말하며, 이 비용은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임신부와 관련된 모든 약값이 모두 급여처리가 되고, 금액적인 지원도 확대되기를 바라는 부부들이 많았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분만전 출혈,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양막의 조기파열,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해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부속기 질환

3. 베이비 키트 무료 지원

‘엄마’가 처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다른 ‘가족’이 없습니다.

본인은 실제 봉사활동을 갔을 때, 출산 산모가 필요한 필수적인 출산용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가족이 없거나 차상위 계층으로 출산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종종 발견하곤 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베이베 박스(Baby Box)’라고 해서 출산하기 2달 전 쯤, 신생 아이에게 필요한 기본 적이고 필수적인 아이템들을 무료로 지급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지원은 이뤄지지 않으므로, 창원시에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준비에 서툰 산모들의 준비를 가족처럼 도와주기를 바라본다.





〈그림1〉 베이비 키트 외국 사례

3공 : 3가지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 공공 산후조리원
- 공공 가사도우미
- 공공 돌봄서비스

3.2.1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현)창원시에 존재하지 않음 ▶▶▶산후 조리원 2주 사용료 19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다양하고, 부담스러운 비용부담.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시설도 좋고, 비용도 저렴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3.2.2	공공 가사도우미 서비스 (현)창원시에 존재하지 않음 ▶▶▶아이가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언제든지 공공 가사도우미서비스 이용가능
3.3.3.	공공 돌봄서비스(예약돌봄/긴급돌봄) (현)저렴한 비용에 평일 8시부터 16시까지 이용가능 ▶▶▶ 예약돌봄 : 미리 예약시 언제든지 이용가능:24시 이용 가능 긴급돌봄 : 갑자기 생긴 긴급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24시 이용가능

- 3공

1. 공공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의 이용비용은 2주를 기준으로 최소 19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이르기까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출산준비중인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낳기 전부터 금액적인 부담과 시설별 비교에 따른 비교부담을 주며, 산후조리원 안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선택사항이 있으므로 서

비스 선택지에 대한 비용 등을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 어렵게 임신을 한 후에 만만찮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부부들이 존재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창원시에는 공공 산후 조리원이 존재 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될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2. 공공 가사도우미

현재 창원시에서는 공공가사도우미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가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아이를 낳을 예정인 임산부 및 아이를 출생한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3. 공공 돌봄서비스

저렴한 비용에 평일 8시부터 16시까지 이용가능한 창원시에 돌봄서비스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그 이외에 시간이 더 많다. 본인은 미리 예약 시 24시 이용 가능한 예약돌봄과 긴급하게 생긴 상황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주장한다.

3공 서비스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 및 확정이 가능하게 하므로 젊은 연령층의 사용 빈도를 높이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각 동,읍, 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게 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어플리케이션은 지자체가 운영하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신상등록을 통해 사고가 나지 않게 하고 일손이 필요한 사람들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비용의 %대로 이용 금액을 지불 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에게 비용으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 횟수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일자리나 같은 시간대 일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은 단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 차상위 계층에게 무료로 제공, 소득구간에 따라 비용 적용
-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실시간 이용가능
- 동시에 단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

■ 나의 지역비전과 정책이 국가의 미래에 할 기여

1. 국가 인구수 증가 및 합계출산율 상승효과

나의 지역 비전을 통하여 예비, 신혼부부에게서 임신 및 출생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므로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느꼈던 예비, 신혼부부에게 걱정 없이 아이를 마음껏 낳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지역의 인구수를 넘어 국가의 인구수 증가와 함께 합계출산율 상승효과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2. 젊은 나라, 지속 가능한 나라

현재 우리나라 또한 인구 절벽과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합계출산율 상승은 사회의 평균 연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에 태어나 정착하며 살아가므로, 다른 나라들이 겪고 있는 인구수 감소의 벽을 넘어 젊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므로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3. 지역간 불평등 및 양극화의 해소의 근간

일자리, 주거, 문화, 예술, 교육, 교통, 의료,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각 지역 간의 문제로써 오늘날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가장 심각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나의 정책은 지역 간의 불평등 및 양극화의 해소의 근간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참고자료

- 통계청(KOSLS)
- 창원시 사이트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경산의 다양한 문화권(圈) 보존을 통한 자주적 문화권(權) 실현 방안

김기현 지역당원

I. 정책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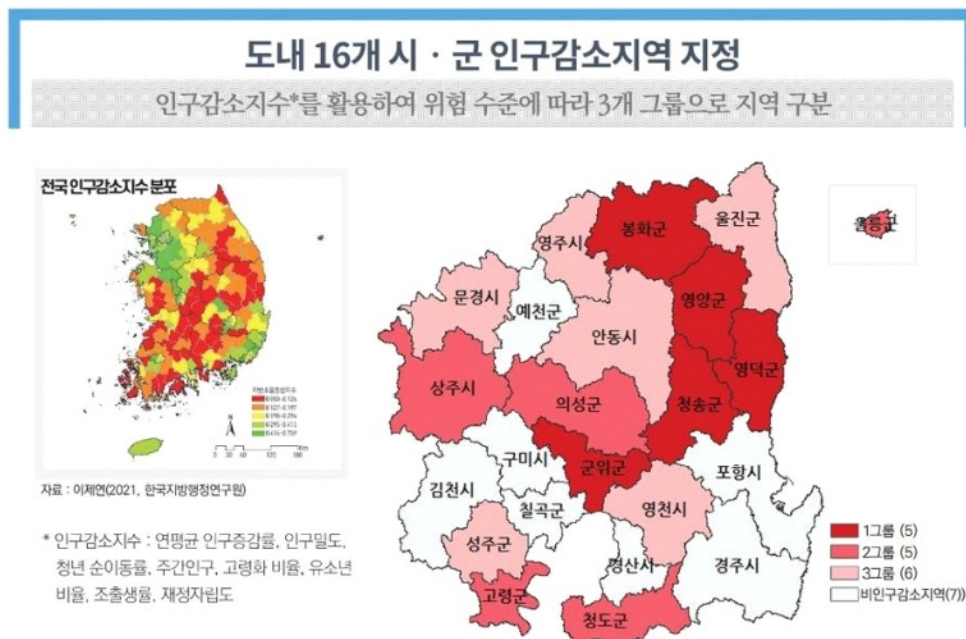


그림 1 경북 16개 시·군 인구 감소지역 지정

(출처: 「경북 인구 지난해 2만6천 명 감소...소멸 대응 6대 전략 추진」, 『매일경제』, 2021년 11월 24일)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가 전국의 화두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에 해당하는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 또한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비수도권 지역의 우려와 달리 경산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표상 인구가 꾸준히 상승하는 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 소멸 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운 듯 보인다. 2009년 23만 명에 불과했던 경산 인구는 2021년 현재 약 27만 명으로 지표상 경산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¹⁾ 경산의 인구 증가는 1)대

규모 택지 개발 및 대구도시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역세권 형성, 2)영남대, 대구대 등 10여개 대학들로 조성된 교육환경, 3)경산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증가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²⁾ 그런데 이러한 인구 증가 요인이 경산의 지역 소멸 위기를 완전히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 대구-경산 연담도시화로 인한 경산 정체성의 위기

소위 경산의 발전, 즉 경산의 도시화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구광역시의 영향 아래 도시화가 진행된 연담도시의 특징을 보여준다. 1970년대부터 대구광역시 대학들이 경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의 시내버스 노선 또한 경산으로 확장 운행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는 주거지구가 개발되면서 대구의 베드타운 역할을 담당했는데, 2012년 대구-경산 간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은 경산의 역세권 개발에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경산의 도시화는 자족적 발전에 기인한 것이 아닌 셈이다. 그러다보니 경산은 대구광역시의 위성도시로서 대구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다.³⁾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방자치분권을 지향하는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경산이 자족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대구-경산 행정구역 통합론은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2. 경산 관내 대학의 위기

지방 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지방 대학 위기론은 경산 관내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경산은 대학도시로 자부해 왔는데, 2013년 12개였던 대학 가운데 대구외국어대와 대구미래대가 폐교되어 현재 10개 대학이 남아 있으며, 이마저도 정원미달로 정원을 줄이거나, 학과 통·폐합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대학은 온라인 수업 강의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 유도되지 않는 구조로 대학 구조를 정비함에 따라 대학으로 인한 경산의 인구 유입 증가 가능성은 낙관적이라 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경산 주변 교통 인프라 구축은 지역 내 정착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통학율을 높이면서 관내 대학 주변 또한 침체되는 것도 현실이다. 말하자면 경산의 대학생들이 경산이라는 지역과 맺고 있는 관계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산의 대학생들이 졸업 후 경산에 정착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과 무관하지 않다.

1) 2021년 10월 31일 기준 경산시 인구는 278,984명이다.

2) 「경북, 인구절벽인데 느는 곳은 어쨌길래」, 『경북매일』, 2019년 11월 12일,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737> (2021년 12월 7일 검색) 참조.

3) 「‘경산-대구’ ‘안동-예천’...행정구역 통합 가능할까」, 『매일신문』, 2020년 1월 12일, <http://news.imaeil.com/page/view/2020012116230376576> (2021년 12월 7일 검색) 참조.

3. 청년을 위한 정주여건 부족

전체적으로 볼 때 경산은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청년 인구는 점차 감소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주요 “산업단지의 청년 산업인력의 이탈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경산도 예외가 아닌데, 이에 경산은 각종 청년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⁴⁾ 그러나, 최근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32곳 중 2030 인구가 증가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사업만으로 청년 이탈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⁵⁾ 또 영남대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청년 문화가 대구 도심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청년을 위한 경산의 정주여건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위 세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산은 지역 소멸위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선제적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에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써 시민들의 ‘문화권(權)’을 보장하는 문화 정책을 구축할 것은 제안한다. 문화권이란 문화 기본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향유할 권리’를 뜻한다. 이 기본법에 따르면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주요한 영역으로 문화를 언급한다.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만으로 모든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족성과 경쟁력 있는 대안이 촉구되는 가운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권(權)’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에서 사람들이 귀속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권(圈)’들을 보존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지자체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II. 지역의 비전

현재 경산의 문화 정책은 어떠한가? 현재 경산은 1)문화예술 진흥, 2)문화산업육성, 3)관광산업 진흥, 4)전통문화유산 계승 및 보존으로 구성된 총 4개의 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준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9%이다. 이 가운데 문화관광과 예산의 약 60%는 전통문화유산 계승 및 보존을 위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문화 정책 예산의 대부분은 시설 또는 문화재 유지 보수 비용에 할애되고 있고, 경산의 문화 관련 예산은 특히 과거의 문화에

4) 조성철, 「산업단지 혁신과 청년일자리 창출: 정주환경을 중심으로」, 『월간 노동리뷰』, 통권 제183호 (2020년 6월): 9.

5) 「대구경북 ‘MZ세대’ 인구 붕괴…젊은층 3년간 12만명 감소」, 『매일신문』, 2021년 11월 22일, <http://news.imaail.com/page/view/2021112216121078017> (2021년 12월 7일 검색) 참조.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역의 문화는 과거의 유산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산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통된 감각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토대, 즉 ‘경산의 동시대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지원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산시 문화 정책			
	문화예술 진흥	문화산업육성	문화산업육성	전통문화유산 계승 및 보존
문화정책 예산 대비 정책 부문별 비율	29.66%	1.53%	8.38%	60.27%

한편 대부분의 행사는 단순히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마저도 다양성이 결여되어 경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경상북도 경산시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문화예술행사 만족도’는 2019년 대비 2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충분정도에 대한 만족 비율은 18.2%에 그친 반면, 불만족 비율은 23.1%로 높게 나타나고,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 비율 역시 불만족이 24.5%로 만족 비율 16.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여가생활에서 불만족 비율 증감 부분에서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 또한 현 경산의 문화 정책의 미흡함을 보여준다.

또 대학도시로서 청년을 위한 문화 정책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경산락페스티벌’이 거의 유일한데, 이러한 행사는 일부 청년들에게 하나의 볼거리로써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를 스스로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자기실현의 기회로 삼지 못한다. 또 올해 신설된 사업인 ‘행복 경북청년웹툰 공모전(도시보조)’과 같은 경우,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은 있지만, 사업에 경산이라는 지역성을 담아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 창출 효과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현재 경산의 문화 정책은 대부분 과거의 역사 문화 보존에 집중되어 있고, 도시화된 경산의 정체성을 구축할 동시대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전무하다. 청년들의 정주 여건에 중요한 요소인 청년 문화정책 또한 매우 지엽적이며, 도시화로 유입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매우 부족하다.

부문	항목	2019년	2020년	증감
11. 여가와 문화	(문화예술행사 및 시설 만족도)			
	-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만족' (%)	74.1	51.8	▼22.3
	-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만족' (%)	72.2	53.2	▼19.0
	(여가활동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여가생활 만족도 '만족' (%) : 문화여가시설	-	18.2	-
	: 전반적인 여가활동	29.6	16.8	▼12.8
	-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 : 경제적 부담	38.7	36.2	▼2.5
	: 시간이 부족	22.5	18.6	▼3.9
	: 교통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의 불편	1.4	4.0	▲2.6
	: 여가시설의 부족	5.3	9.0	▲3.7
	: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0.4	9.0	▲8.6
	: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7.3	6.9	▼0.4
	: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19.2	14.0	▼5.2
	: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4.6	1.8	▼2.8
	: 기타	0.6	0.4	▼0.2
	(생활시간 압박)			
	- '그렇다' (%) : 평일	60.8	53.5	▼7.3
	: 주말	52.1	44.6	▼7.5

출처: 2020 경상북도 사회조사 결과 비교

따라서 경산 시민의 일상생활에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통해 경산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경산 시민의 다양한 문화권, 즉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III. 정책과제

본고에서 제안하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경산에는 문화 정책을 포괄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상위법인 「문화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 따르면,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 증진을 목표로 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문화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문화 정책은 지자체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시민의 문화권 보장 계획을 수립한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에 바탕을 둔 제도로써,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외부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유치하기보다 관내 대학 청년 예술인에게 경산의 지역 사회에 속에 스며들어가 ‘경산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IV. 결론

경산의 다양한 문화권(權) 실현을 목표로 하는 문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지자체는 다양한 문화권 형성을 통해 도시화 된 경산의 지역성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산 시민은 전환된 문화 정책을 통해 문화권을 보장받음으로써 경산에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산의 정주여건 또한 한층 개선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내 대학의 청년 예술인들은 경산이라는 지역 사회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획득함으로써 경산이라는 지역과의 관계성을 높이고, 한층 수준 높은 예술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문화 정책은 어느 지역에서나 시행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을 제외하고 많은 예술인들을 자족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도시는 거의 없다. 이러한 지역의 좋은 조건을 정책으로 잘 뒷받침한다면, 경산은 자주적 문화권을 실현하는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2021년 경산시 10월말 인구현황, 경산시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 ‘경산-대구’ ‘안동-예천’…행정구역 통합 가능할까, 매일신문, 2020년 1월 12일,
<http://news.imaeil.com/page/view/2020012116230376576>.
- 경북, 인구절벽인테 느는 곳은 어쨌길래, 경북매일, 2019. 11. 12.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737>
경산시, 대학 총장들과 청년 정주여건 개선 모색
http://m.kbsm.net/view.php?part_idx=320&idx=244085 2019. 6. 4.
- 수도권 쏠림 처방 없이…정부 “소멸위기 89곳에 연1조 지원” 2021. 10. 18.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15638.html
- 매력이 넘치는 경산, 창의문화도시로 힘찬 도약 2020년 2월 11일자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120>
- 경산시 인구수(성별, 연령별, 행정구역별 경산 인구 및 세대수)
<https://lifeandwork.tistory.com/108> 2021년 12월 2일 검색
- 인구 증가가 꾸준한 경산 인구 분석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osodo2020&logNo=222542482576&categoryNo=10&parentCategoryNo=6&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2021년 12월 2일 검색)
- 대구지하철 경산구간 10월 개통, 서울신문, 2012. 1. 31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131016015>
- [동네뉴스-시민기자 세상보기] 경산코발트광산 명령들이시여! 이제는 편히 쉬소서 2021. 11. 8.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1108010001020>
- 사설] 속도 빨라진 ‘지방 소멸’, 균형발전 대책 내놓아야, 한겨레, 2021. 10. 18.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5520.html>
- 경산시, 인구-재정에서 ‘경북 3대 도시’로 우뚝 세웠다, 서울일보, 2021. 7. 12.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078>

- ‘경산-대구’ ‘안동-예천’…행정구역 통합 가능할까, 매일신문, 2020. 1. 23.
<http://news.imaeil.com/page/view/2020012116230376576>,
- 신입생 미달 충격에 대구·경북 대학들 구조조정 활발, 연합뉴스, 2021. 4. 27.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7086600053>
- 경북 인구 지난해 2만6천 명 감소...소멸 대응 6대 전략 추진, 매일경제, 2021. 11. 24.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11/1093046/>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하이브리드 간판을 이용한 가로 경관 개선사업의 제도화

박현준 경북도당 당직자

1. 서론

작년 10월 우리 정부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과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2050년에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및 이상기후들은 현재 전 세계, 우리 전 인류가 이미 시작되었고 얼마나 더 크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큰 문제이다. 그리하여 UN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관련 부처의 단체장들을 위원으로 탄소중립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올해 9월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발의되었다.

2. 현 상황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비율

시계열조회 엑셀 증감비교

[단위 : GWh,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발전량(GWh)	501,527	532,191	543,098	546,249	560,974	561,826	577,331	593,639	587,98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GWh)	17,346	19,498	21,438	26,882	37,079	40,656	46,623	52,718	33,029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3.46	3.66	3.95	4.92	6.61	7.24	8.08	8.88	5.62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각 연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나아가 지구를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으로 기존 화력, 발전 등에 의한 전력 생산이 아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 우리는 매년 점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왔고 점점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매년 증가한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점점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진 그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화 비율을 기존 10%에서 25%까지 확대하였고 이에 따른 연도별 의무비율을 대통령령 위임으로 명시하였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의무화 비율은 2%에서 올해 9%까지 높아졌고 2022년부터는 10%로 고정되어 있다.

의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의무비율	12.5%	14.5%	17.0%	20.5%	25.0%

연도별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 비율 입법예고안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짐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기존에너지를 사용만 하여 쓰는 산업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까 생각하여 보았다.



위 사진은 부산의 국제시장의 야경과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의 야경이다. 위의 사진을 보면 형형색색의 눈부신 간판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위 사진으로 보았을 때 가장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분야는 각각의 간판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간판은 없을 수도 없으며 우리 실 생활에 매우 밀접하며 필요한 분야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간판들은 얼마나 전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간판들의 전력량은 어떠한
 까?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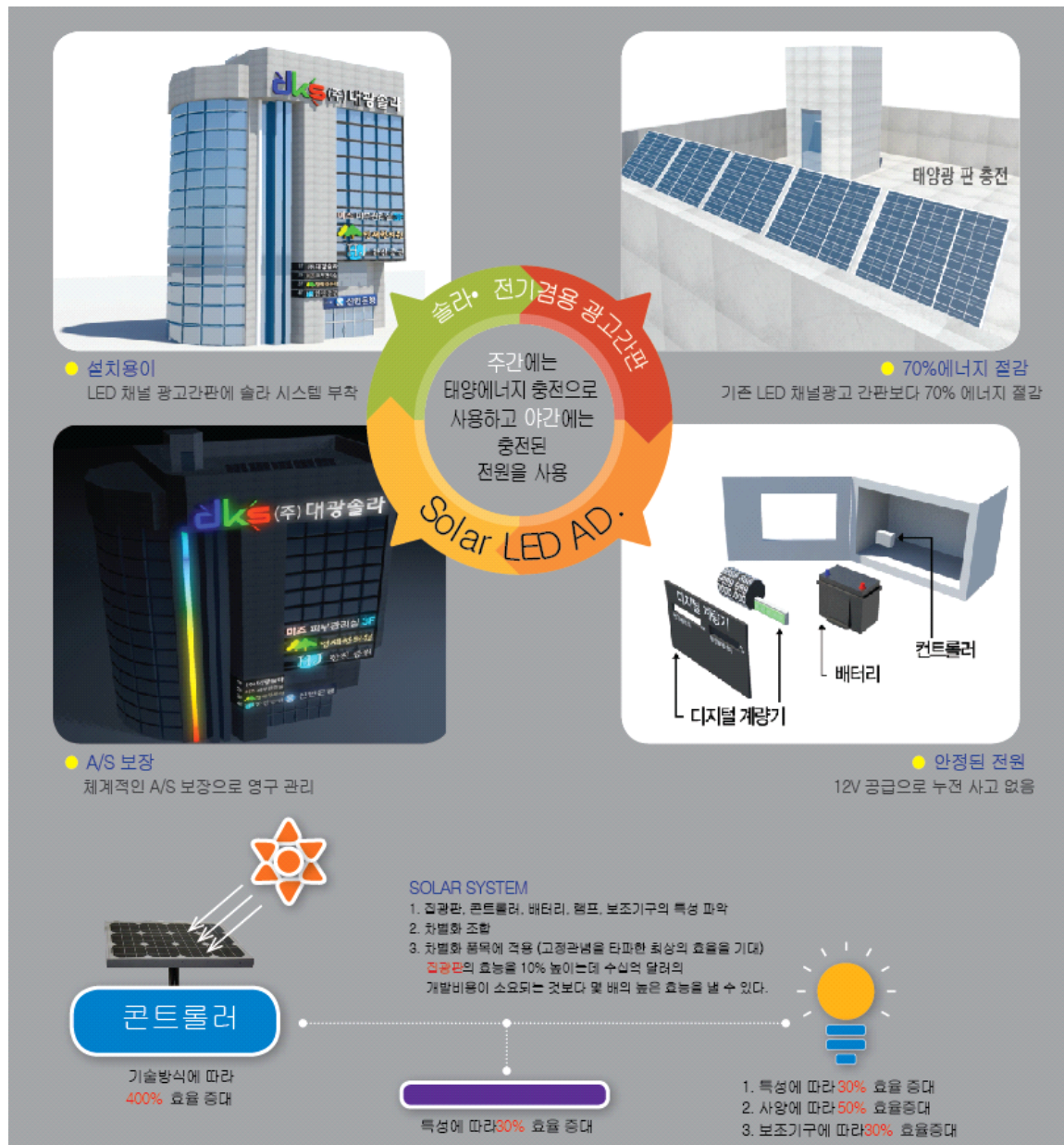
간판사용현황

구분	설치개소	단위소비전력(KW/개소)	설비용량(KW)	비중(%)
배면조명간판	3,576,125	1,920	6,866,160	89.5
네온사인	216,449	0.0480	103,896	1.3
전자식 전광판	94,021	0.048	4,513	0.05
기타	1,377,695	0.5	688,847	8.9
계	5,264,290		7,663,416	100

LED간판은 기타로 분류, 약 6%로 파악

위 표를 보면 전국에 간판의 개수는 총 520만개나 되며 이 용량은 7백만kw에 의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저 간판들 또한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고 있을 것 인데
 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없을까? 그리고 저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할 수 없을까라고 말이
 다. 그리하여 검색하여 보았다.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된 간판은 없는지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발전을 하여 간판의 에너지절약을 이루어 낸 간판은 없는가 하고 찾아보았다. 그렇게 찾아본 결
 과 아래의 그림과 같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여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제품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태양광을 사용하여 70%의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수가 많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간판들이 더욱더 사용되게 된다면 국가 에너지 소비량에 크게 기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이다.

3. 정책 목표

-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30조 항에 보면 정부는 지역별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되며 그리고 그 정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로경관 개선사업 (간판개선사업)을 하여 기존에 건물에 정신없는 간판들을 정리하여 가로경관을 깔끔하게 바꾸는 사업들이 각 지자체들 마다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 사업이 나아가 단순히 보기에 좋은 가로경관만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의해 에너지 절약을 이룬 간판들로 이루어진 가로경관이면 어떠할까 생각한다.

보기만 해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경관에서 깔끔한 경관으로 변경되었지만 에너지 소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나아가 저기 변경되는 간판들이 기존 간판에서 하이브리드 간판들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이 되며 하이브리드 간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에너지 사용량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 간판개선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간판이 사용되는 간판 개선 사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별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가로경관개선 사업의 입찰 조건에 친환경 에너지 상품을 넣게 된다면 지역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질 정책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예산이 편성되어 지자체 또한 지자체의 거리미관 정비와 함께 에너지 소비량 까지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

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리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간판의 보급률이 높으면 높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간판들도 교체됨에 따라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정체된 소상공인들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된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최종목표인 2050 탄소중립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며 나아가 세계에서 또한 이 모델을 참고하여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경북 영주시 지역의 다문화가족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 및 실천적 정책 대안

손창현 지역당원

I. 서론

우리나라의 거리에서 다양한 피부색과 외모를, 언어나 억양이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역사를 살펴볼 때, 외국인은 한국에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유입이 한국 사회에서 눈에 띄이게 증가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과 제3국에 거주하던 재외한국인들이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의 국내 유입은 한국경제와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일상과 문화,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모습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외국인의 유입 배경에는 이들의 자국 내에서 발생한 배출요인과 국내에서 작용하는 흡인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겪는 문제나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및 가족복지 정책은 아직까지 그 실체가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본문에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현상을 살펴보고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본 문제점 및 다양한 사회복지의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논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현상

1) 다문화사회의 배경과 현황

과거 우리나라는 한국과 중국의 수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선족 여성과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한창이던 때가 있었다.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외국인과 결혼한 국내 여성보다 외국인과의 결혼한 남성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과거부터 농경 국가였으며,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여겨졌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대우가 컸지만,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나 대우는 남성보다 아래였다. 그러나 급성장과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결혼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나 수도권에 정착해서 생활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농촌에 있는 남성과의 결혼을 꺼리는 현상이 증가하였다. 결국 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세계 각지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늘어난 국제결혼으로 인해 10년 2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스레 다문화가족이 늘었고, 다문화사회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제는 국제결혼을 통해서 입국하는 사람보다 고용허가제, 유학, 직업연수, 전문 인력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이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8)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수는 약 2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비율이 20% 이상인 읍·면·동 지역이 43개 지역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교육기본통계(2017)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보다 10.3%(1만 201명) 증가한 10만9천387명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75.6%(8만 2천 명)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은 14.6%(1만5천 명)이었다. 고등학생도 9.4%(1만 334명)로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학생의 2.2%에 해당된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것이다.

2) 경북 영주시의 다문화가족 현상

본인은 현재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영주시청에 따르면,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외국 국적 동포 혹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영주시에 다문화가족 현상이 늘어나면서 결혼이민자 국가의 전통 의상, 음식, 춤, 전통놀이와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는 영주시 정책도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정책 차원에서 영주시의 다문화 지원센터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연계하여 멘토, 멘티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주로 출신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동화구연, 체험 활동 등을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성격의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타문화’는 한국의 문화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한 국가의 문화가 아닌, 오락을 위한 소비성 상품에 가까운 듯한 소모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2세들을 위한 교육에서도 내용과 질은 다분히 떨어지고 있어 대부분 다른 문화를 소개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3) 경북 영주시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 정책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경우가 많으나 그 또한 실효성이 미진하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16개 사업 중 절반에 미친다. 그리고 다문화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의 경우 만 2세부터 12세 까지인 경우가 많으며, 중도 입국 청소년의 경우는 진로 관련 상담에 그친다. 대부분의 다문화정책들이 조기 결혼이주여성과 저 연령 다문화자녀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다문화 가족들은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외모가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상대가 영어권 혹은 백인이 아니면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다문화는 쉽게 영주시민과 친해질 수 있는데, 동남아시아권 다문화가족은 인종차별에 휩쓸리기도 한다. 특히나 조선시대부터 전통적인 선비의 고장인 영주시에서 학업 편차나 언어영역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 청소년들이다. 이로 인해 또래 관계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경제적인 문제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본 문제점 및 사회복지 실천적·정책적 대안

1)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언어소통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다문화가족들은 문화생활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회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어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교육은 물론이고 본인의 사회활동과 정서적인 활동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경북 영주시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있다. 회사 업무로 인해 실제 필리핀, 베트남 남성이나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한국어에 대한 교육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언어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으니, 미국이나 유럽쪽 영어권 외국인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로 인해 한국어와 자기들이 속한 나라의 이중 언어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어 교육지원에 최우선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교육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데 있다.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가정이나 일터에서의 노동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는 영주시의 다문화정책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많고,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한 수없이 많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 ‘다문화 이해’, ‘다문화 수용’ 등 많은 프로그램에서 한국어를 전

문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한국어 교육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인의 경험에서 언급했듯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어머니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같이 잘하는 이중 언어 구사자를 키우고 보듬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 참여 활성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도움을 받는 곳은 남편이고, 그 후로도 남편과 주위 지인에 국한되어, 사회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실제 본인의 형수님이 필리핀 여성으로 형님과 결혼 초기에 한국문화와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주민센터와 의료보험 관련 서류들의 행정절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형수님 혼자 힘들어 결국 본인이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렸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를 통해 더 많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한국 사회의 적응에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으로는 지역별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고, 출신국별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 군, 구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행사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법과 여러 다문화 가정들의 동호회 모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본인의 형수님 또한 영주시에 거주하고 계신데, 초기에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상담과 생활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공유해 주고 계신다. 이러한 사례가 정책화되고 프로그램화된다면 다문화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출산 및 양육 지원

다문화 가정의 임신과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 실효성이 부족하고 이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도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다. 특히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정보에 대한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본인 주위에는 노후화된 소형 주택이 많고 경사가 심한 탓에 교통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여건에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외국인 동남아시아 출신의 임신부를 쉽게 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대부분 남편 되는 사람이나 혼자 다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의 옆집 아주머니도 베트남 출신의 다문화가족인데 큰애가 3살이다. 가끔씩 아주머니에게 보건소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백신이나 예방접종 주사를 맞혔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서 건너뛴 경우가 많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동네 여건이 좋지 않아 병원을 방문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셨다. 이렇듯 산전·후 임신부들에게 실제적인 의료정보와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출산 후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예방접종, 육아 정보,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와 지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자녀교육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자녀교육 문제이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이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거나, 실업의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교육의 정기교과를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칫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자신의 어머니 혹은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잊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싫어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거 본인이 고등학생 시절에 유독 이런 친구가 있었다. 외국계 어머니로 인해 학교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언급을 꺼렸고, 특히 학교 국어 수업이나 역사 시간에는 잠만 자기 일쑤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일반 학생의 경우보다 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상적인 언어소통이나 국어 과목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은 학생도 어려운 어휘가 나오는 사회시간 또는 문화적 배경 지식이 필요한 역사 시간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학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에 노출되는 장점을 살려 다중언어 지원으로 청소년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고,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간단한 인사말 등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등 수업 지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 중에는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자녀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교사 양성과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고충 상담

다문화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중 고충에 대한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것도 들어볼 수 있다. 실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고 이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기관은 영주시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학교 상담사를 지

원해 다문화 가정 부모와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부모들을 새롭게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교사들이 조금 더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부모를 이해하고, 다가가서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사회복지 분야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역의 지원센터에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3자 통역 서비스는 베트남, 몽골, 중국어 등의 언어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방과 후나 주말 등을 이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서로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실제 이들이 겪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회 복지적 개입과 피드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6) 취업지원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특성과 희망하는 직종을 고려하여 취업 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용하면서 동시에 해당 지역의 여러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 가능한 일자리를 탐색해주고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 고교 동창 모임을 가보면, 한 번씩 외국인 어머니를 둔 동창이 참석하곤 한다. 하지만, 졸업한 지 10년이 넘도록 취업을 못 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이 친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구조와 정책, 사회복지 시스템을 고려해 봤을 때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학력이 높거나 전문적인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취업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수많은 다문화 청년을 위해 능력과 환경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로, 지역 중소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규직 전환까지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학력 결혼이민여성을 활용하여 교육청과 연합으로 원어민 강사를 양성하고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 교육청, 기업체, 학교, 다문화 지원센터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현재 우리나라는 이민자의 비중이 높지 않고, 현 단계에서 합법적인 이민자 대부분은 국제결혼을 통해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인들과 이주 외국인들의 문화나 언어 등을 배워 서로를 동등한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치관의 함양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은 이주민 여성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

고,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인과 외국인 쌍방향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다문화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내의 강력한 집행 전담 기구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세대와 후손 세대들에게까지 조화로운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을 서로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여 개 이상이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과 획일적인 지원으로 인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각 특별시, 지자체는 결혼이민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외국인 거주자 전용 원스톱 행정민원 서비스 창구를 설치하고, 이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과 연계하여 복지 서비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조원탁(2019),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 양서원.
- 벅드갈(2019), 다문화청년의 성장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이성순·이종복 외 6명(2017),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 이상용(2010),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행정안전부, www.mois.go.kr.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결과, www.moe.go.kr/boardcnts.
- 경북 영주시 홈페이지
- 경북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주정차·교통·안전 : 구미시에 필요한 정책

이시언 경북도당 당직자

■ 구미시 교통체증 개선 및 보행자 안전 구축

1. 구미시 교통체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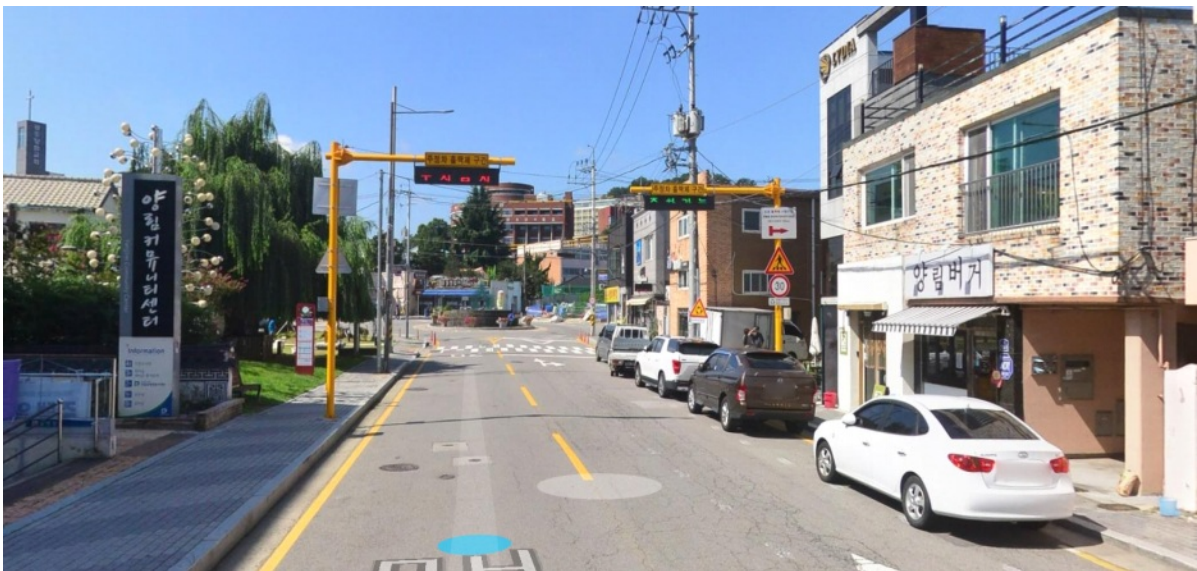
○ 장소 : 도량 1, 2동 입구



- 현 장소는 매일 출퇴근 시 양방향 불법 주정차로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출퇴근 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왕복 4차선 도로에 두 차선에 불법 주정차가 항시 있다 보니 사용 두 차선 전부인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지역 시행 중인 홀, 짝 주차 시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홀, 짝” 주차입니다.〉

- ✓ 차선 도색 및 노면 표시
- ✓ 주차 홀짝제 시행 안내 LED 전광판 설치
- ✓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 ✓ 알림 표지판 및 주차 방지용 시선 유도봉 설치

- 제안 : 현 광주시 북구에서 시행 중인 주정차 단속 구간을 현 구미시 도량 1, 2동 교통체증 심한 곳에 저희는 출퇴근 주정차 단속으로 변경하여 시범 사업을 구미시에서 실행하려 합니다. 퇴근 때에는 퇴근 양이 많은 곳은 주차 불가, 출근 시간 또한 주차 불가로 시범 사업을 시행해보려 합니다. 또 한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보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보완하였으면 합니다.

시내버스장착 불법 주정 차 단속시스템이란?

단속 카메라를 장착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차량은 즉시 단속, 불법 주정차 차량은 두 대의 버스에서 촬영되었을 때 단속



2. 보행자 안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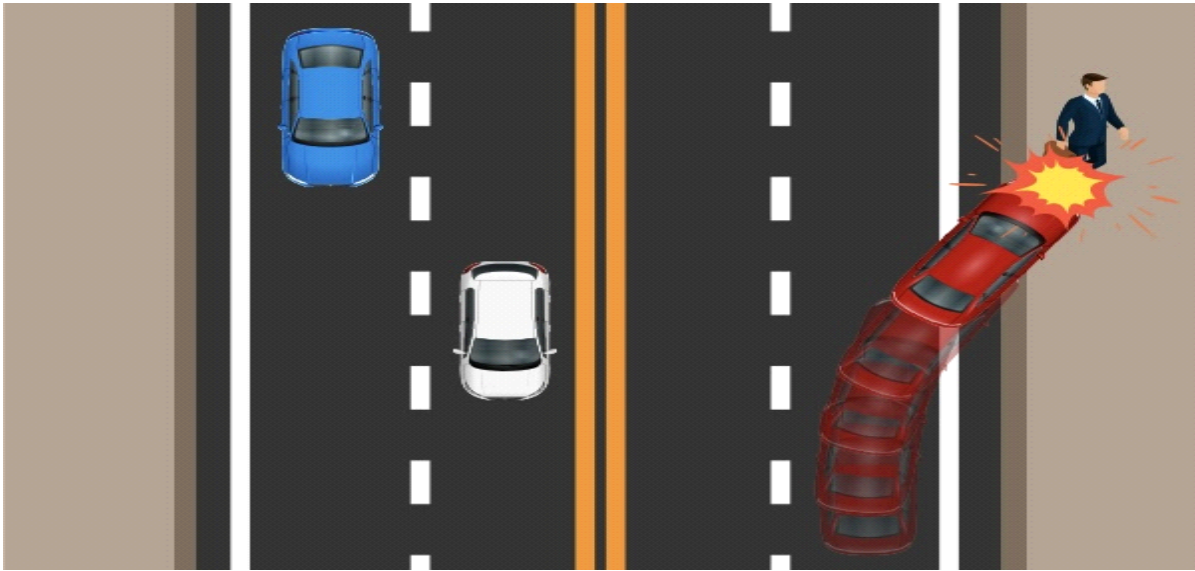


- 보도를 걸으며 교통사고를 두려워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차도가 차들만의 공간이듯, 보도는 차량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보행자만의 공간이란 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 하지만 상식을 조금 뒤집어보면 어떨까요? 보도와 차도는 한데 뒤섞여 있고, 그 경계는 드러났다 사라지길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 차량이 부주의하게 운전했다간 보도를 침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등의 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도라면 사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분석’, ‘국내외 차량 진출입로 설치기준 비교’, ‘건축물 용도별 차량 진출입로 안전 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것인데요.
- 최근 5년간(‘12년~’16년) 보행자가 보도를 통행하다 발생한 사고가 무려 4,931건이나 발생했으며, 93명이 사망하고 5,343명이 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2016년도 보행자 인도 통행 중 교통사고 통계 분석〉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평균
사고 건수	922	938	934	1,212	925	4,931	986
비율	1.8	1.9	1.9	2.4	1.9	2.0	2.0
사망자 수	30	15	12	17	19	93	19
비율	1.5	0.8	0.7	1.0	1.1	1.0	1.0
부상자 수	1,023	989	1,032	1,298	1,001	5,343	1,069
비율	2.0	2.0	2.0	2.0	2.0	2.1	2.1

※ 출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이처럼 보행자 보도 통행 중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안전 시설물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 RV차량 증가로 인해 인도를 걷는 시민들은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차량 높이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어 사고 시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급증합니다. 매년 음주 운자 보행자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 처럼 가드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걷기 안전한 도시 도로 옆 도보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공임대 입주자와 청년의 달콤한 동거

신정훈 지역당원

I. 배경

청년의 주거문제와 공공임대주택의 슬림화를 동시에 해결하고 마을공동체 구성의 실현 모델로 적용시키기 위함임.

○ 주거복지란?

-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
- 저소득층의 집세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민·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전월세와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주택금융”등을 지원하고 있음

○ 청년주거난의 원인

1. 부모세대의 자산이전 감소
 -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모세대에서 이어져 오는 자산 이전이 감소
2. 비정규직 증가 증에 따른 소득의 불안
 - 취업난과 더불어 소득의 불안정이 주거비용 등에 대한 부담 가중
3. 높은 주택가격
 - 소득의 증가에 비해 현재 주택가격이 현저히 높아 주거 마련 어려움
4. 자산으로 주거비용을 부담하는 국내 주택임차시장의 특징
 - 공공 주택의 비율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국내 주택시장에서 청년의 주거난은 심화됨

II.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① 목표

- 주거안정성 확보
- 주거의 질 향상
- 주거비 부담의 적정화

② 수단

- 현물보조 : 주택공급, 택지공급
 - 주택공급 증대
- 현금보조 : 주택수당, 임대료 보조, 임대료 규제, 임대료 용자
 - 주거비 경감

③ 유형

- 생산자 지원
 -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지원(보조금, 금융, 세제)
 - 택지의 공급
- 수요자 지원
 - 임대료 등 주거비 현금지원
 - 저리자금 용자(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등)
 - 주택개량 지원

○ 소득계층별 주요 지원 사업

1~2분위	3~4분위	5~6분위	7분위 이상
임대료 부담능력 취약계층	자가 구입능력 취약계층	정부지원시 자가구입 가능계층	자력으로 자가구입 가능계층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 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중소형주택 저가 공급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시장기능에 일임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

Ⅲ. 정부 청년주거지원

1. 행복주택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최대 30년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료 시세 60~80% 수준
-------------	-------------	------------------

특장점

- ① 젊고 활력 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②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행복주택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 활력 증진
- ③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2. 청년 전세임대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 보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하는 주택

2년 단위 3회까지 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공급면적 60㎡이하 주택 지원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외 8,500만원 지원
--------------------------------	------------------	-------------------------------------------------

- 지원 대상
 - 대학생 : 대학 소재 지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지원한도
 -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 까지 지원

3. 주거안정 월세대출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저리로 대출

대출금리 연 1.0%	매월 40만원씩 총 960만원 대출	3년 만기 일시상환
-------------	---------------------	------------

- 대출대상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자)

○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 가구 현황

지역	주거문제 가구수(1,000가구)	지역청년가구 중 비율
서울	264.0	25.2
부산	40.7	15.2
대구	21.7	11.2
인천	25.7	10.3
광주	21.1	14.5
대전	27.0	16.7
울산	8.3	8.2
세종	5.7	17.1
경기	95.1	8.7
강원	23.3	18.4
충북	23.2	16.5
충남	25.8	13.5
전북	29.0	20.1
전남	20.4	16.6
경북	23.1	10.8
경남	28.2	10.7
제주	7.8	16.1
계	합계 69만 가구, 15.2%	

4. 공공임대주택현황

○ 장기공공임대주택 기본계획(2018.4.)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명시장기공공임대주택 전국 1,359개 단지, 93만 세대
- 영구임대 246,131세대, 50년임대 115,761세대, 국민임대 549,327세대, 행복주택 18,463세대

① 연령별 가구원수 분포

- 아동 44,537명(4.3%), 학생 119,376명(11.5%), 청년 230,785(22.2%), 중장년 443,762(42.6%), 고령 202,514명(19.5%)

② 고령자, 독거노인 거주 현황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중 19.5%가 고령자, 9.6%가 독거노인임.
- 전국 인구총조사의 고령자비율 13.4%, 독거노인비율 2.7%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③ 장애인거주 현황

-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체장애인 32,564(3.1%), 중증장애인 19,194(1.8%)
- 영구임대주택 전체장애인 31,238(17.3%), 중증장애인 18,163(10.1%)
- 전국 등록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0% 수준임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5. 정책제안

- 청년이 공공임대주택에 주거하면서 입주민과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로 청년 주거난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생활복지 향상

6. 기대효과

1. 청년 주거 문제 해소

- 저렴한 임대료, 공공임대아파트의 확보된 정주여건 활용

2. 입주민 다양성

- 청년의 유입으로 단지 내 입주민 다양성 보장(연령, 성별 등)

3. 청년의 활동 보장

- 청년 간 커뮤니티 조성, 복지 등 활동 방향 제시 가능

4. 입주민의 커뮤니티 조성

- 청년과 입주민과의 유대관계 형성, 기존 거주민 간 조화로 삶의 질 향상

7. 추진사례

○ 광주광역시 우산 빛여울채

- 관리주체 : 광주 도시공사
- 대상 : 청년(활동가 및 일반 청년)
- 내용 : 입주민과 대화, 소규모 행사(플리마켓, 마을행사 동참), 태권도 교실 등 프로그램 개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참고문헌

-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8.4.)
-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외국인 관련 범죄 지원전담기관 설치의 건

정다운 지역당원

I. 정책 연구배경

1. 연구의 필요성

외국인 증가 추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외국인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음. 국적을 불문하고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전문적 지원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형사법적 실정을 고려할 때 사회의 소수자이자 약자인 외국인 보호를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외국인 관련 범죄를 전담으로 지원할 전문기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과 외국인 관련 범죄의 현황 및 외국인 지원의 이론적 토대를 확인하고자 함.

II. 주요 연구 내용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과 추이

가. 현황

법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2021년 3월호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에 따르면¹⁾, 2020. 12. 31.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90,803명[적법 체류 외국인 1,999,946명, 미등록 외국인 390,857명(추정)]으로 전체인구(51,829,136명)의 약 4.6%에 이르고, 광주광역시 거주 외국인 주민은 40,480명(이중 등록 외국인 20,928명에 불과함)으로 전체 인구(1,477,573명)의 2.7%이나, 이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는 수치임.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총 주민의 5.2%에 해당하는 22,132명에 달함.

1)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자체 외국인주민현황'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외국인 범죄의 범행시 연령은 83.2% 50세 미만이고, 전체 체류 외국인의 73.2%가 50세 미만
에 해당함.

그러나 외국인이라는 특성과 범죄발생율은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는 점은 다수의 연구에서
이미 확인되었음.

나. 피해자 현황

현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등 같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경우의 비율이 전체 범행의 12.5%에 달함.

범 죄 자 와 피 해 자 와 의 관 계

V-3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만명(피의자원표)														
범종	계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가정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
계	1,494,421	208,423	6,208	4,613	3,982	11,335	11,111	13,064	38,042	8,226	35,439	15,232	44,268	46,746	106,953	519,789
(%)	(100.0)	(14.0)	(0.4)	(0.3)	(0.3)	(0.8)	(0.7)	(0.9)	(2.5)	(0.6)	(2.4)	(1.0)	(3.0)	(3.2)	(7.2)	(34.8)

한편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 범죄에 연루되는 연령대에 속하
는 외국인이 다수인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한 범죄와 가
정폭력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내국인에 비하여 적다고 보이지 않음.

그러나 소수자인 외국인은 통상 자국민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상황에 직면할 위험이 크고, 특
히 사회적·언어적 취약성으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함.

3. 외국인 가·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이론적 배경

우리 헌법은 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외
국인도 존중받아 마땅하고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은 금지됨(헌법 제10조, 제1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적과 무관 없이 모든 인간이 가지는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외
국인에게도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함.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 제30조)은, 인간다운 생
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일정한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사
회경제질서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됨.

다만,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은 법률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임.

4. 현행 외국인 관련 범죄 지원 절차에 대하여

가. 가해자 지원

현재 외국인이 가해자인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선 경찰서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통역인을 수소문하여 조사에 참여시키고, 재판단계에 이른 뒤에야 형사국선변호사가 지정되면 해당 국선 변호사가 통역인을 별도 지정하여 대동하는 정도임. 내국인인 가해자의 경우 수사 절차의 진행에 따른 안내를 문자메시지, 전화, 문서로써 통지받지만, 외국인인 가해자의 경우 모국어로 된 절차 안내와 통지를 받는 것조차 수사관의 시혜적 조치에 의존하여야 하는 현실이고, 그러한 절차 지원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문제 제기조차 원만하게 할 수 없는 실정임.

나. 피해자 지원

외국인인 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모국과 우리나라의 상호보증에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이 지급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한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통해 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외국인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매매피해자의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기관과 법원 동행을 지원받을 수 있음. 또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주거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이 경우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하여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나, 송치사건에 한정되므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공백이 발생함.

다. 평가

언어적 한계, 한국의 수사 및 사법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체류자격 등의 문제로 피해신고조차 꺼려하는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각 단위별로 산재되어있는 지원시스템을 찾아 구조신청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현재는 각 지역 내에서 산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외국인 관련 단위에서 사례지원 요청을 받아 사건에 개입하고, 관련 단체들이 알음알음으로 사건 지원을 하는 실정임.

5. 관련 정책 현황과 평가

가.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외국인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21. 3. 31.에는 13명의 정부위원과 7인의 민간위원(내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전자여행허가제도 등 관광의 영역이나, 기술 산업 분야에 관한 정책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음.

나. 광주광역시는 2020. 8.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근로자 국가별공동체 대표자, 지역 대학 교수, 유학생, 가정주부, 통번역사 19명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협의회”를 출범시킴. 위 위원회는 네팔, 베트남, 인도, 중국, 필리핀,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태국 등 12개 국가 출신으로 구성되었고, 협의회 위원들은 외국인주민 관련 시책을 제안하고, 자문이나 불편사항들을 광주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실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다. 검찰은 2019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90일 이내의 단기여행자를 제외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경제적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여전히 미등록 외국인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음(다만 출입국관서에 통보의무를 면제하였음).

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을 가진 논의가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한 뒤, 협의체 논의를 기초로 마련된 정책을 수립하여 제도를 개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함.

Ⅲ. 정책 목표

광주광역시는 국제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고, 그를 위하여 선도적으로 소수자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음. 이 가운데 범죄의 가·피해자가 되어 전문적 조력이 절실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기관을 수립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IV. 정책 제안

가. 범죄 피해자에 관한 기본 통계 구축

현재 외국인 관련 범죄의 피해자에 관한 통계는 전무함.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국가 단위에서 외국인 피해자를 국적별로 집계하여 범죄피해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음. 피해자가 외국인인 사건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전무했음. 정부의 인식 개선과 기본 통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피해자 관점의 인권보호 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이 용이할 것임.

나. 전담기관의 설치

언어적 한계를 무력화할, 전문 통번역사들이 집중 포진된 전담기관(민간 위탁)을 지역 내에 설치하고, 현재 소단위로 활동 중인 외국인 관련 단위들의 허브역할과 후방지원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례관리, 치료, 법률지원이 유기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다. 지원대상과 범위의 단계적 확대(비 합법체류자 포함)

현재 주로 민간 영역에서 소화되고 있는 외국인 관련 범죄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여, 비전문상담과 같은 저비용의 지원은 합법적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 인도적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의료적·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자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VI. 과제

1. 민관 협의체의 구성
2. 조례 일부개정 - 현행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3. 사업자 및 사업체 발굴
4. 사회적 환경조성과 현존 소단위의 조직화
5. 관리 감독

참고문헌

- 법무부, 2021년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경찰청, 2020. 경찰범죄통계(검색일 2021. 11. 25.)
- 법무부, 2021. 3. 31.자 보도자료
- 박상민, “외국인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관한 검토”, 일감법학 제48호, 2021.
- 구로구, “구로구 외국인·다문화 관련 자원 발굴 및 연계 방안 연구”, 2020.11.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행복한 일터, 행복한 근로자

채은지 지역당원

I. 서론

ESG경영¹⁾이 화두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제 기업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등이 바꾸어 놓은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앞 다투어 경영 환경의 개선 및 개혁을 필수적인 과제로 삼고 그 해법을 찾고 있다.

이러한 경영 환경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최근 노동시장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자 등 비정형노동자 증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직장내 성희롱 금지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 다양한 노동 정책의 시행으로 뜨겁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문제 또는 노무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일함으로 두 손 놓고 있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 모든 기업에게 중요한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인사노무관리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인사노무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 분쟁의 발생은 조직 전체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고, 구성원들의 만족도 및 조직몰입을 저해할 수 있다.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문제는 결국에는 기업의 생산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노동 분쟁의 발생 현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노무 분쟁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ESG경영이란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ESG 경영 (한경 경제용어사전)

II. 정책 연구배경

1. 노동관련 분쟁 현황

가. 임금 체불 등 노동청 사건 처리 현황²⁾

노동청에서는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 진정 사건을 처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청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은 매년 40만 건에 이르며 그 중 약 80%는 행정종결, 약 20%는 사법처리 되었다.

〈표 1〉 고용노동부 연도별 근로사건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	행정종결	사법처리
2016	363,291	334,584	279,698(76.3%)	86,663(23.7%)
2017	372,330	374,006	294,525(78.7%)	79,481(21.3%)
2018	390,736	399,207	318,153(79.7%)	81,054(20.3%)
2019	403,023	417,708	335,764(80.4%)	81,944(19.6%)
2020	364,355	380,138	313,462(82.5%)	66,676(17.5%)

노동청 사건 중 임금 체불 사건을 별도로 살펴보면 2020년 체불 근로자수는 29.4만명에 이르고 체불지도 해결금액은 8,307억원이다.

〈표 2〉 고용노동부 연도별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

단위: 건,명,억원

연도	신고건수	신고 근로자수	신고 금액	지도해결			사법처리		
				건 수	인원	금액	건 수	인원	금액
2016	217,530	325,430	14,286	152,290	198,392	6,866	58,951	114,262	6,623
2017	209,714	326,661	13,811	149,464	203,902	6,751	52,751	108,436	6,139
2018	224,781	351,531	164,720	151,504	203,243	7,292	66,454	133,614	8,217
2019	227,739	344,977	17,217	150,798	203,374	8,260	71,820	132,645	8,301
2020	196,547	294,312	15,830	134,170	181,113	8,307	58,643	106,863	7,067

지역별³⁾로 보면 최근 5년간 체불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1조7000억원의 임금체불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이 1조 6000억원, 경남 6000억원, 부산 41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3)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 아시안타임즈

경북과 인천은 각각 3900억, 3600억원의 임금체불을 기록했고, 제주는 600억원으로 지역 중에는 가장 임금체불이 낮았다. 그러나 제주는 5년간 체불임금 비율이 가장 증가한 도시로 낙인 찍혔다. 제주의 임금체불 금액비율은 2016년 보다 84% 급증했고, 전북과 광주가 각각 73%, 59%로 임금체불금액 증가율 1~3위 지역을 차지했다.

한편, **규모별 임금체불액 현황**을 보면 1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보다 29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더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의 미흡한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 규모별 임금체불액 현황

단위: 억원

규모별	체불액
5인 미만	5,120
5~29인	6,560
30~99인	2,673
100~299인	829
300~499인	274
500인 이상	361

나.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⁴⁾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을 처리한다.

2020년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부당해고 등 사건은 총 13,507건이며, 그 중 지노위(초심)에서 11,669건, 중노위(재심)에서 1,838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2019년 13,119건(초심 11,442건, 재심 1,677건)보다 388건(3.0%) 증가한 수치이다.

〈표 4〉 연도별 부당해고 등 사건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처리 합계	판정					화해	취하	화해율	권리 구제율
			소계	인정	기각	각하	인정률				
2016년	전체	9,932	3,605	1,404	1,442	759	38.9	2,581	3,746	26.0	64.4
	중노위	1,429	978	418	386	174	42.7	128	323	9.0	49.4
	지노위	8,503	2,627	986	1,056	585	37.5	2,453	3,423	28.8	67.7
2017년	전체	9,783	3,383	1,223	1,461	699	36.2	2,972	3,428	30.4	66.0
	중노위	1,355	1,007	380	453	174	37.7	118	230	8.7	44.3
	지노위	8,428	2,376	843	1,008	525	35.5	2,854	3,198	33.9	70.7

4) 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

구분		처리 합계	판정					화해	취하	화해율	권리 구제율
			소계	인정	기각	각하	인정률				
2018년	전체	10,939	3,767	1,378	1,629	760	36.6	3,504	3,668	32.0	67.1
	중노위	1,322	961	333	457	171	34.7	140	221	10.6	43.0
	지노위	9,617	2,806	1,045	1,172	589	37.2	3,364	3,447	35.0	71.5
2019년	전체	13,119	4,491	1,506	2,142	843	33.5	3,846	4,782	29.3	64.2
	중노위	1,677	1,215	422	625	168	34.7	189	273	11.3	43.5
	지노위	11,442	327	1.84	1,517	675	33.1	3,657	4,509	32.8	68.4
2020년	전체	13,507	4,832	1,642	2,402	788	34.0	3,892	4,783	28.8	63.4
	중노위	1838	1389	465	766	158	33.5	18.	269	9.8	41.1
	지노위	11,669	3,443	1,177	1,636	630	34.2	3,712	4,514	31.8	68.3

다. 산업별 향후 노사관계 악화 전망⁵⁾

직종별로 노사관계 악화에 대한 전망을 보면, 공공행정(75.0%), 전기가스공급업(66.6%), 숙박음식점업(60.0%), 도소매업(57.2%)에서 높은 결과가 나왔으며, 제조업은 48.0%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건설업(0.0%), 농림어업(0%), 전문과학기술업(25.0%), 여가 관련 서비스업(33.3%) 등은 낮은 수치가 나와 이 역시 업종별로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규모별로 노사관계 악화에 대한 전망을 보면, 300~500인 미만(75.0%), 50~100인 미만(54.3%), 100~300인 미만(52.1%), 1000인 이상 기업(50.0%) 순으로 나타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노사관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5〉 산업별 향후 노사관계 악화 전망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매우 그렇다
평균	7.5%	23.0%	20.7%	22.3%	26.6%	48.9%
농림·임업·어업	0.0%	50.0%	50.0%	0.0%	0.0%	0.0%
광업	11.1%	22.2%	22.2%	44.4%	0.0%	44.4%
제조업	7.0%	26.3%	18.7%	19.9%	28.1%	48.0%
전기·가스 공급 조절업	0.0%	0.0%	33.3%	33.3%	33.3%	66.6%
수도하수폐기물처리재생업	0.0%	0.0%	0.0%	0.0%	0.0%	0.0%
건설업	0.0%	100.0%	0.0%	0.0%	0.0%	0.0%
도소매업	0.0%	14.3%	28.6%	14.3%	42.9%	57.2%
운수창고업	13.6%	13.6%	31.8%	18.2%	22.7%	40.9%

5)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현장 실태조사 (2020.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매우 그렇다
숙박음식점업	0.0%	20.0%	20.0%	60.0%	0.0%	60.0%
정보통신업	0.0%	25.0%	25.0%	50.0%	0.0%	50.0%
금융보험업	0.0%	18.2%	36.4%	9.1%	36.4%	45.5%
부동산업	0.0%	0.0%	50.0%	0.0%	50.0%	50.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5.0%	0.0%	50.0%	0.0%	25.0%	25.0%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	40.0%	0.0%	20.0%	20.0%	20.0%	40.0%
공공행정	0.0%	0.0%	25.0%	16.7%	58.3%	75.0%
교육서비스업	0.0%	0.0%	0.0%	0.0%	0.0%	0.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8.3%	25.0%	16.7%	16.7%	33.3%	50.0%
여가 관련 서비스업	33.3%	33.3%	0.0%	33.3%	0.0%	33.3%
기타	6.5%	25.8%	9.7%	38.7%	19.4%	58.1%
잘 모름	0.0%	100.0%	0.0%	0.0%	0.0%	0.0%

〈표 6〉 기업 규모별 향후 노사관계 악화 전망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매우그렇다
50인 미만	12.5%	0.0%	12.5%	37.5%	37.5%	75.0%
50 ~ 100인 미만	11.4%	14.3%	20.0%	31.4%	22.9%	54.3%
100 ~ 300인 미만	5.1%	26.5%	16.3%	18.4%	33.7%	52.1%
300 ~ 500인 미만	8.2%	28.6%	30.6%	14.3%	18.4%	32.7%
500 ~ 1000인 미만	11.6%	18.6%	23.3%	23.3%	23.3%	46.6%
1000인 이상	7.1%	21.4%	21.4%	30.0%	20.0%	50.0%

2. 검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매년 노동 분쟁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장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사관계 악화 전망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편,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통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표 3〉규모별 임금체불액 현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이 5,120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미신고 분쟁 및 잠재적 분쟁까지 포함할 경우 노동분쟁 수치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중소사업장의 노동 분쟁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쉽다. 안타까운 것은 중소기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분쟁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노동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문제와 인식 문제 등으로 인해 적법하게 노동관리를 하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노동 리스크를 예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관리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광주광역시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Ⅲ. 정책 제언 : 노동관리서비스 센터 설립

1. 광주광역시 노동 서비스 관련 센터 현황⁶⁾

가.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지역사회에서 청년·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여 온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된 후 2016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및 캠프, 노동인권 강사양성과정,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실태조사, 상담 법률지원, 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나. 광주광역시 교육청 민주인권센터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민주인권센터 및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자료 개발 및 보급,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상담 및 구제 등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다. 광주광역시 노동센터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는 광주광역시 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현재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위탁운영 중이다.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적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노동인권교육, 노동야학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나타난 활동내용에서는 찾아가는 노동인권 학교와 여성노동인권 캠프를 운영한다고 하나, 공고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6)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취약노동자 교육 및 지원방안 연구(2018.11.고용노동부)

라.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노동 상담 및 법률지원, 실태조사, 정책연구, 노동 상식 책자, 노동인권교육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으로 비정규직 노조(노사협의회)조직화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사업지원(강사, 강의실, 교재), 수련회 워크숍지원, 비정규직 의식향상지원(각 노조별 100만원 상당)이 사업에 포함된다.

마.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 지원본부

직장에서의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장인들의 고충 해결을 한 곳에서 통합 서비스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 여성 인적 자원 육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바. 노사 동반성장 지원센터 : 2023년 완공 예정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는 지역일자리 창출의 거점공간 및 노사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 사회적 대화 구심 역할 등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중이다. 각 공간에는 노사민정사무국, 노동상담실, 유해작업복 세탁실, 건강증진실, 다목적강당, 교육프로그램실, 교육생 등을 위한 단기 숙박시설 등이 조성된다.

〈표 7〉 광주광역시 노동 관련 센터 현황

센터	대상	진행사업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년·청소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 등
광주광역시 교육청 민주인권센터	청소년	청소년 노동인권 자료 개발 및 보급,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상담 구제 등
광주광역시 노동센터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적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 활동, 노동인권교육 등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비정규직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비정규직 노조 조직화 사업 등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 지원본부	직장맘	일과 가정의 조화, 여성 인적 자원 육성 지원
노사 동반성장 지원센터	-	지역일자리 창출 거점공간, 노사 산업생태계 구축, 사회적 대화 구심 역할 등

2. 노무관리 서비스 센터 설립의 필요성

조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는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외 5개의 노동 관련 센터가 있으나, 대상이 한정적이고, 인사노무관리 관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사노무관리 서비스 센터와는 그 역할이 다르다.

이밖에 광주광역시청,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등에서 간헐적으로 인사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사업장수, 예산 및 기간 등의 문제로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어려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노무관리 서비스 센터의 목적과 기능

가. 목적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분쟁 발생 비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인사제도설계 컨설팅, 법정필수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광주 지역의 노동분쟁을 감소시키는 것을 센터의 목적으로 한다.

나. 기능

1)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서비스

적법한 노무관리를 위한 직원관리 필수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및 규정(취업규칙 등)을 정비하고, 노무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인사노무관리 기초 컨설팅 서비스로서 법 위반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다.

사업장감독 적발 주요사항 중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시간 및 휴가, 근로조건 미명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은 규정정비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참고 사례로는 ‘서울시 마을노무사’사업가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전문지원단’사업이 있다.

〈표 8〉 주요사항별 사업장감독 적발건수⁷⁾

주요사항별	적발건수
금품체불	2971
근로시간 및 휴가	273
근로조건 미명시	2594
취업규칙 미신고	2240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2488
퇴직급여보장법	679
최저임금법	731
기타	3449

2) 인사제도 설계 컨설팅 서비스

인사노무관리 심화 컨설팅 서비스로서 임금관리 체계 구축, 평가체계 구축, 가족친화 프로그램 설계, 유연근무제 설계 등 사업장의 인사제도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직원 만족도 증진을 불러올 수 있다. 참고 사례로는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컨설팅’ 사업이 있다.

3)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행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의 협조를 통해 현장 점검 1개월 전 점검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하여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자율개선 대상 중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별하여 현장 점검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지시하는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장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4) 법정 의무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같은 법정 의무교육은 현재 고용노동부 인가 기관이 또는 인증을 받은 강사가 진행할 수 있는데, 교육 실시에만 급급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노무관리 서비스센터에서 이러한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한다면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교육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중고교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업주 등 대상별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특히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은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여 교육 미수료 시 패널티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노동인권의 중요성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5) 인사노무 상담

사업주 대상 인사노무관리 애로사항 상담과 근로자 대상 근로조건·직장 내 고충 등의 상담을 통해 노동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IV. 결론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노무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지자체 주관 노무관리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적절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꾸준한 노동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단순히 기업차원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에도 기여할 것임은 당연하다.

지역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은 우리 지역 근로자 및 사용자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광주 유입률을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끝.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4차 산업혁명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 : 대구 사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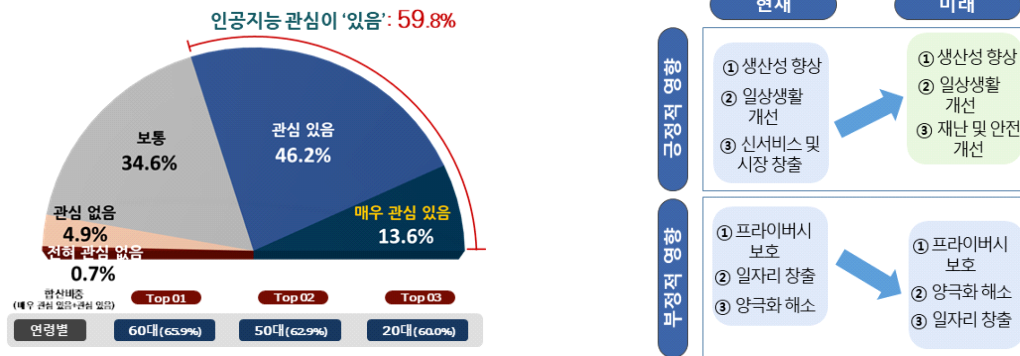
김다예 대구시당 당직자

I. 서론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범세계적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국제민간회의인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2016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2016년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처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10월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체계가 마련된 만큼 현대 사회에서 이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삶 깊숙이 들어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2021년도 인공지능 이용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99.3%는 인공지능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59.8%의 국민이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의 신뢰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이었지만 프라이버시·양극화·일자리 영역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수준 및 미래 영향도 평가



자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2021)

4차 산업혁명이 ‘알파고’, ‘인공지능 스피커(카카오 미니, 네이버 클로바 등)’ 등으로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익숙하게 다가왔지만 여전히 ‘일자리’ 분야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대항 주장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4차 산업혁명을 두고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이하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들의 말은 모두 맞는 주장으로, 세계경제포럼 미래일자리보고서(2020)에 따르면 기계의 자동화로 인해 8,500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대체되고, 신기술 적용 및 자동화로 인한 업무 재배치를 통해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동상이몽’의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이라는 도식화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구체적 분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일자리에 배치될 훈련된 사람이 있는가?
- 2) 직업교육훈련을 진행할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가?
- 3)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스마트팩토리(스마트공장)에 청년인재를 유입시킬 요인이 있는가?

위 질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기존 일자리의 감소, 증가 논의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직업교육훈련과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실질적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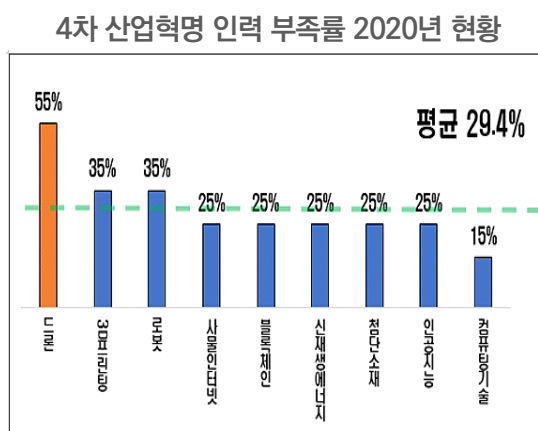
II. 4차 산업혁명과 인력: 스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1. 4차 산업혁명과 인력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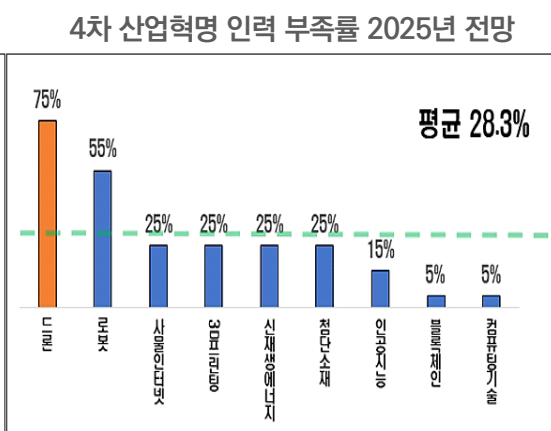
여전히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을 떠올리면 ‘일자리 감소’를 많이 생각하지만 일자리 감소와 일자리 증가는 함께 이루어진다. 우리는 감소/증가 흑백논리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증가하는 일자리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을까?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별 9곳 협회의 정책담당자¹⁾를 대상으로 ‘주요국 4차 산업혁명 인력경쟁력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20년 한국 4차 산업혁명의 인력부족률²⁾은 29.4%로 인력수요의 약 3분의 1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5년에도 28.3%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2020년 기준 한국, 미국, 독일, 중국 5개국의 4차 산업혁명 인력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5개국 중 한국이 최하위로 가장 뒤처졌다. 2025년의 전망 역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순으로 한국이 최하위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2-1〉



〈그림 2-2〉



자료: 한국경제연구원(2020)

일반 사람들이 흔히 4차 산업혁명하면 떠올리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이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8대 선도사업을 선

- 1) 한국 4차 산업혁명 분야별 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3D융합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2) 인력부족률: 업계 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은 100명이고 부족한 인원이 10명인 경우 인력부족률은 10%임.

정했다. 8대 선도사업은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이다. 2018년 8대 선도사업이 발표되었을 때 정부는 스마트공장에 가장 많은 1조 300억원을 투자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한 스마트공장의 경우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 주요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분야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스마트공장 역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인력 미충원율이 46.5%에 달했다.

왜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스마트공장 직원 채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관련 직무 역량을 갖춘 인력을 찾기 어렵다(59.4%), 관련 인력의 처우수준을 맞춰주기 어렵다(49.4%),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력 영입이 어렵다(48.6%)로 나타났다. 직무 역량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공장’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 인력 처우수준을 맞춰주기 어렵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확산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의 인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애로사항 해소와 기존 인력 중소기업의 한계를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

2. 스마트공장과 직업교육훈련

1) 대구 스마트공장 현황

정부는 전국 중소·중견기업의 생산 및 품질을 향상하고 고객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조 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50%인 3만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대구광역시도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2018년까지 650개, 2019년 270개를 구축했다. 현재 추세라면, 대구는 2022년까지 약 1,700개 정도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될 전망이다.

〈표 1〉 대구광역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현황

구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27,827	22,230	28,252	36,871	40,371
국 비	107,477	21,080	25,655	30,371	30,371
시 비	20,350	1,250	2,600	6,500	10,000
구축수	1,171	253	273	310	335

자료: 기계신문, 2021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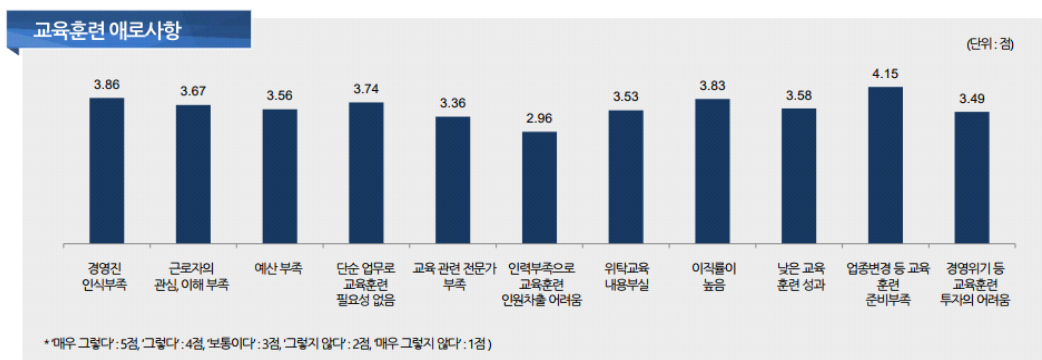
2) 대구 직업교육훈련의 어려움

전국적으로 스마트공장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직업교육훈련을 강화시켜 스마트공장에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대구지역 인적자원관리위원회 2020년 훈련수요공급조사³⁾에 따르면 업종변경 등 교육훈련 준비 부족, 경영진 인식부족, 이직률 높음, 근로자의 관심과 이해 부족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존재했다.

〈그림 3〉 대구지역 교육훈련 애로사항

교육훈련 애로사항

- 교육훈련 애로사항으로 '업종변경 등 교육훈련 준비 부족'이 4.1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영진 부족'(3.86점), '이직률이 높음'(3.8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변경 등 교육훈련 준비 부족' 애로사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4.33점)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3.84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 '업종변경 등 교육훈련 준비 부족' 애로사항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199인(4.45점)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임 대부분의 규모에서 4.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5-9인은 3.9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자료: 대구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0)

3) 2020년도 대구지역 교육훈련 수요조사 모집단은 총 7,373개사로 제조업 35.8%를 차지함.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애로사항 중 경영진 인식부족, 근로자의 관심과 이해 부족 2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① 경영진 인식부족과 새로운 인력 유입의 어려움의 상호작용


경영진이 스마트공장 인력 양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존 인력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면 경영진에게 남은 선택은 훈련된 인재를 유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훈련된 인재를 유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020년 8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합격 경험이 있는 구직자 1246명에게 입사 포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39.2%가 입사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입사를 포기한 기업은 중소기업(80.8%), 중견기업(16.2%), 대기업(6.3%), 공기업(4.9%), 외국계 기업(2%) 순이었다. 즉 구직자 10명 중 4명이 취업이 어려워도 중소기업 안 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영진 인식 부족으로 인한 직업교육훈련의 어려움은 관련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스마트공장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4〉 대구지역 자동차 기업 애로사항

1) 자동차

공통 의견



- 20~30대 인력 유입이 없어 고령화 심각한 수준
- 기존에 잘 구축된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의 홍보가 필요
- 기술 동향 또는 기본적인 R&D, 기술 관련 교육이 필요

향상훈련

- 복합기, 로봇자동화, 설비과학 등
 - 젊은 인력이 들어와야 하지만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직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첨단 기기 운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양성훈련

- 전문인력
 - 설계(CATIA), 전기차, 수소차 등 전문분야 인력이 필요
- 품질 및 생산관리
 -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품질관리 인원이 필요함
 - 생산 관리를 위해서는 원가, 공정, 제품의 특성, 생산 능력, 전산(ERP)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가 필요함

자료: 대구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0)

② 근로자의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직업교육훈련의 어려움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의 경우 관련 인력의 처우 수준을 맞춰주기 어렵기 때문에 숙련도가 높은 인력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진행을 통한 스마트공장 관련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소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 공장은 76.5%는 레벨 1~2 수준에 머물고 있고, 최고 수준 레벨 5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마트공장과 발전과 확산은 '근로자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9년 '4차 산업혁명시대 일터혁신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참가자들은 스마트공장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로서 '근로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매일노동뉴스, 2019). 하지만 현재 근로자들의 관심과 이해 부족 현상이 나타나 원활한 직업교육훈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스마트공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관련 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Ⅲ. 정책목표

스마트공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스마트공장 도입·확산을 통해 실질적인 대구지역의 제조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대구 조성 및 유인책이 필요하다.

1) 노동친화적 노사민정협의회로 탈바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스마트공장 도입 및 확산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요구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관심과 이해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노동배제적이고 디지털 전환, 자동화 도입이 있다. 2019년 '4차 산업혁명시대 일터혁신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정숙희 노사발전재단 책임컨설턴트는 정부의 노동배제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적했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의 발전과 관련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가 큰 역할을 차지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스마트공장의 발전과 인력확충, 즉 노-사 상생 스마트공장을 위해서는 노동친화적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야한다. 2018년 노사민정협의회 명단을 보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는 전체 인원 중 1

명뿐이며, 대다수 기업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스마트 공장의 발전과 관련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현장노동자 참여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5〉 대구 고용노동자민정협의회 위원 명단

대구광역시	시 장	권영진	대흥코스텍(주)	회 장	진덕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장 직무대리	배영일	에플애드벤처	대 표	장기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 장	김한식	대구경북철교협회	회 장	박중현
한국노동총대구지역본부	의 장	김위상	대구MBC	보도국장	김세화
대구경영자총협회	회 장	박상희	영남일보 편집국	부국장	장준영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 장	김영태	대구변호사회	변호사	김익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정병화	대구YWCA	사무총장	박 선
전국화학노련 대구경북지역본부	의 장	김재진	대구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정기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윤삼명	계명대 행정학과	교 수	김복규
대구상공회의소	회 장	이재하	대구대 경제학과	교 수	김용원
(사)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회 장	이성일	대구광역시의회	의 원	김태원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정준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윤석호
(사)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회 장	김창호	한국폴리텍VI대학	학 장	이권희
구영테크(주)	회 장	이희화	대구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기획관	안종곤

자료: 전북뉴스(2018)

현장노동자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대구의 노동전담 조직의 역할 강화도 함께 요구된다. 현재 대구시의 경우 노조 조직률은 5%⁴⁾로 전국 평균 12.5%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노조 조직률은 노사민정의 대화를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 노동전담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노동전담 조직과 인력 규모를 보면, 노동 분야를 맡고 있는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5명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로 비교적 열악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같이 노동전담 행정조직을 ‘노동국’으로 승격시키고, 전담인력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 상생, 노동친화적 노사민정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 일하기 좋은 대구 조성

민주노총 연구원의 ‘노동존중 시대’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비교⁵⁾에 따르면 대구는 노동 전담 행정 조직과 노동정책 기본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구에서 일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따라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스마트공장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하기 좋은 대구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2019년에 대구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4만6천명이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2019년 대구 임금근로자가 89만 명이라 하면 조직률은 5%에 불과하다.

〈그림 6〉 지역 노동정책 조사 결과 및 종합평가

구분	노동 조례	노동 전담행정	노동정책 기본계획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 임금	노조할 권리원	노동 안전	노동정책 거버넌스	노동 협약	노동자 이사	종합 평가
서울	양호	○	○	양호	양호	양호	보통	양호	○	○	양호
부산	중간	○	×	보통	미흡	중간	미흡	미흡	×	○	미흡
대구	미흡	×	×	양호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미흡	×	×	매우미흡
인천	중간	○	△	보통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간	△	○	미흡
광주	중간	○	○	양호	보통	중간	미흡	미흡	×	○	미흡
대전	미흡	×	×	미흡	보통	미흡	미흡	미흡	×	×	매우미흡
울산	미흡	○	△	미흡	매우미흡	중간	매우미흡	미흡	△	△	미흡
세종	미흡	×	×	양호	미흡	미흡	매우미흡	미흡	×	×	매우미흡
경기	양호	○	○	보통	양호	중간	보통	양호	○	○	양호
강원	미흡	×	×	보통	보통	미흡	미흡	미흡	×	×	매우미흡
충북	미흡	×	△	보통	매우미흡	중간	미흡	중간	△	×	미흡
충남	중간	○	○	미흡	보통	중간	미흡	중간	△	×	미흡
전북	미흡	×	×	양호	보통	중간	미흡	중간	△	×	미흡
전남	중간	×	△	양호	보통	중간	매우미흡	미흡	×	×	미흡
경북	미흡	×	×	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미흡	×	×	매우미흡
경남	중간	○	△	보통	보통	중간	미흡	중간	△	○	미흡
제주	미흡	×	△	보통	보통	중간	매우미흡	미흡	×	×	매우미흡

자료: 민주노총 정책연구원(2019)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핵심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년의 중장기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는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의 ‘로드맵’이다. 이 ‘로드맵’에 기초해 지자체는 1년마다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등 지자체의 노동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현재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경남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곳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관련 조례를 통해 시장·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가장 먼저 세운 서울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 비정규직 보호조례, 노동안전 조례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노동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일하고 싶은 대구를 넘어서,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임금 등으로 중소기업에 일하기 꺼려하는 청년들을 중소기업 구직을 유인하는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V. 기대효과

1) 대구의 노-사평화도시 이미지 공고화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노사상생의 장인 노사평화의 전당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개관했다. 노사평화의 전당은 사업 초기부터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구시가 노동자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반노동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노사평화의 전당 상생분위기를 조성해 알찬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노사평화의 전당을 추진하여 개관했다.

노사 평화의 전당의 설립 취지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노동의 역사에서의 환희와 힘들고 아픈 역사를 조망하고 노사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6월 발생한 한국게이츠 흑자폐업 사태⁵⁾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등 노사 평화의 전당 설립 취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게이츠의 흑자폐업으로 대구 지역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지만 한국 흑자폐업 사태에 대해 대구광역시는 수수방관하며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환경에서 도대체 누가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노동친화적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기업뿐만 아니라 현장의 노동자가 함께 주체가 되는 노-사 상생 관계가 구축된다면 전국 최초 ‘노사평화의 전당’이 개관한 명성에 맞게 노-사 평화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공고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사 평화도시의 이미지가 구축·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일하고 싶은 대구’로 자연스럽게 인력이 모여드는 도시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2) 4차 산업혁명 인력난 해소 및 경제 활성화

현재 대구시의 노동환경은 대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져있다. 대전환의 시작에는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동친화적 노사민정협의회의로의 탈바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산업전환의 과정에 놓여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 능력을 갖춘 인재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과 함께 노동자가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노-사 상생 관계를 갖추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한다면 ‘4차 산업혁명=일자리 감소’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는 스마트공장 관련 직업교육훈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의 능동적 참여는 자연스럽게 스마트공장 관련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 것이다.

5) 외국계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한국게이츠는 코로나19와 경영상의 이유로 흑자폐업을 결정함

지난 5년간 청년(25세~29세) 인구유출은 1만 8117명으로 전체 인구유출의 23.9%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구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일하고 싶은 대구’를 조성한다면 청년 인재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유출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인재 유출이 감소된다면 대구 지역 내 우수 인재 부족을 느끼는 대구지역 기업⁶⁾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친화적 노사민정협의회, 즉 노-사 상생관계를 통한 근로자의 능동적인 직업 교육훈련 참여, 일하고 싶은 대구 조성을 통한 청년 인력 유입을 통해서 인력부족현상을 해결하여 결과적으로는 대구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참고문헌

-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 “2021년도 인공지능 이용 인식조사”
- 굿뉴스365. 2018.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회의 개최”
- 국민일보. 2021. “논란 많던 대구 노사의 평화 전당 개관…앞으로 과제는”
- 기계신문. 2021. “대구시,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정부 목표 초과 달성”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18. “정부, 플랫폼 경제·8대 선도 사업에 5조원 투입”
- 대구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20. “2020년 대구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조사 결과보고서”
- 민주노총연구원. 2019.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비교”
- 매일노동뉴스. 2019. “노동자 배제된 스마트공장”
- 조선비즈. 2020. “구직자 10명 4명 취업 어려워도 중소기업 안 가”
- 중앙일보. 2021. “5년간 7만5000명 떠난 대구…기업 68% “인재(人材) 부족하다”
- 한국경제연구원. 2020. “주요국 4차 산업혁명 인력경쟁력 현황 및 전망”

6)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구지역 기업 317곳을 대상으로 ‘대구지역기업 우수인재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68.1%가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인재 채용에 관해 묻는 조사에선 10곳 중 6곳, 63.2%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연’특별자치도로서의 전환 - 플라스틱 및 일반 쓰레기 매립 문제 -

임한결 대구시당 당직자

1. 서론

제주도는 북위 33°06'~34°00'에 위치한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는 도로서 제주도 포함 9개의 유인도와 55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졌다.¹⁾ 산업은 1차 산업과 관광업이 있다. 1차 산업으로는 감귤 농사가 주를 이루고, 수산업도 활발하다. 그리고 한국의 동남아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인해 국내 관광객 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여 관광업이 발달했다.

관광업의 발달에 따라 제주도만의 도보여행 코스가 있다. 작은 길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의 ‘올레길’이다. 이는 사단법인 ‘제주 올레’에서 만든 것으로 골목길, 해안가, 산길 등을 연결해서 만들었다. 관광객들은 이곳을 걸으며 자연을 느낀다.

다음으로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까지 3관왕을 달성한 세계 유일 지역이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07.6.27.)에서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Je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²⁾ 2002년에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 되었고,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인 만큼 해녀 문화가 발달 되어있는데 많은데 유네스코에서 제주의 해녀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이렇듯 제주도는 자연경관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제주도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이 관광업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에 자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도로 확장을 위한 산림파괴, 제 2공항문제, 해군군사기지 건설 문제, 인구증가로 인한 오염 수 문제와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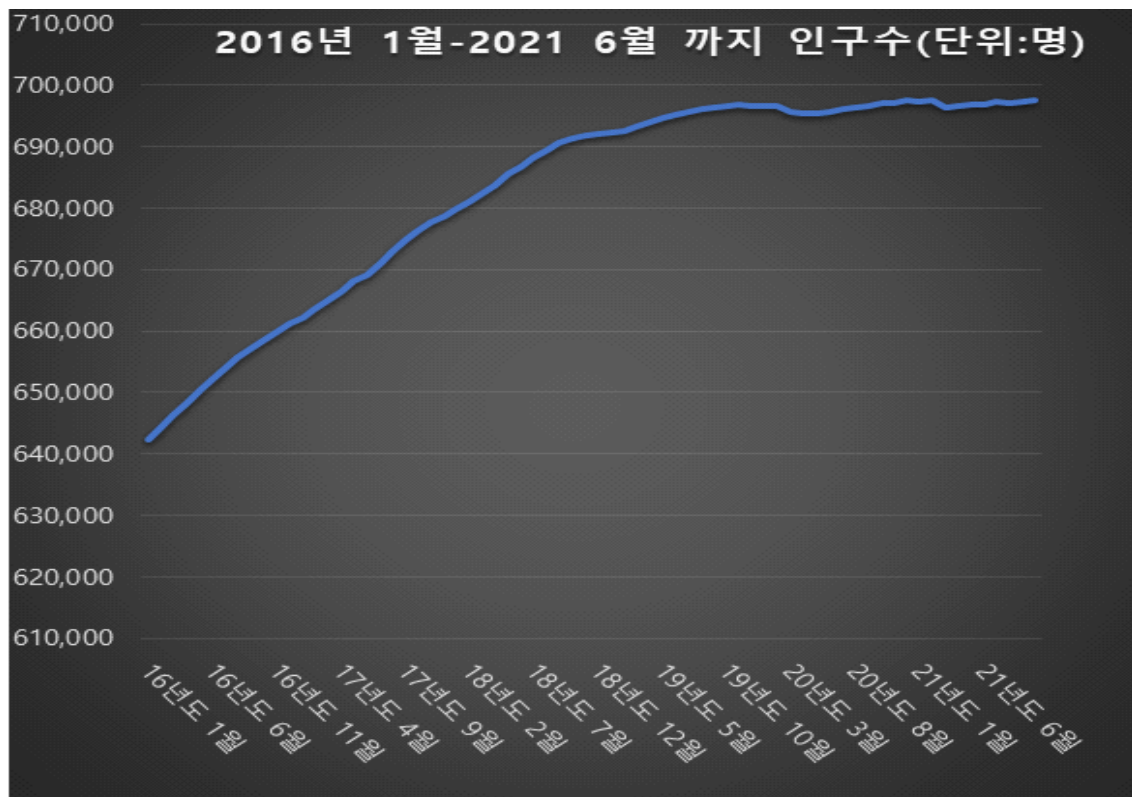
1) 네이버. 제주도 도시정보 : 2021.12.03

2) 국가문화유산포탈. 한국의 세계유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 2021.12.03

쓰레기 문제들이다. 이는 제주도 환경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주도만의 지역 색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필자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서도 제주도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일반 쓰레기 매립문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제주도 현안

1. 인구증가 현황



〈그림 1 : 2016.1 - 2021.6 까지 인구 증가 그래프〉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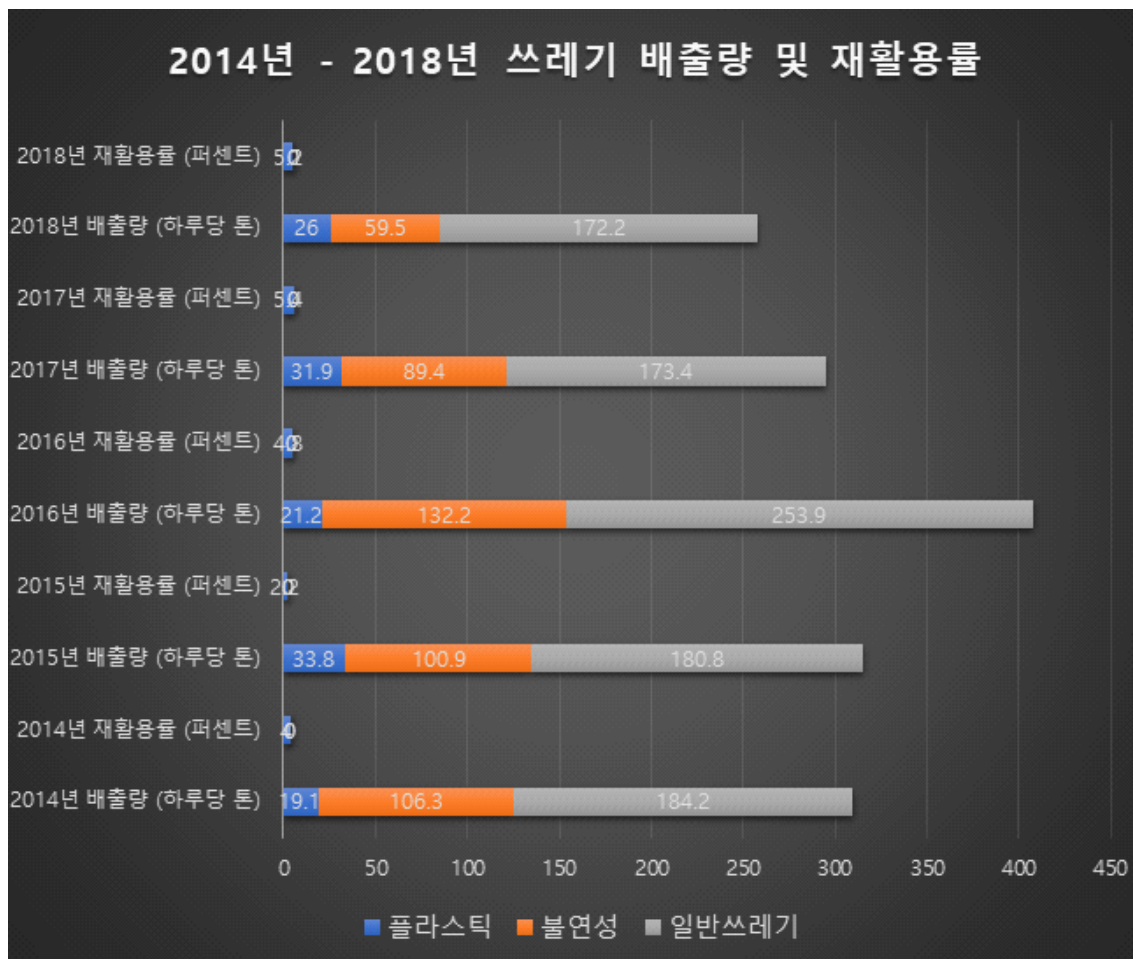
첫 번째로 인구 증가 문제가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다른 시·도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상황이 다르다. 그림 1은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제주도 거주 인구를 측정한 지표이다. 2016년부터 2018년도 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인구가 692,032명이었다. 이후 증가 추세는 줄어들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1년 4월에는 674,484명이 되었고, 2021년 6월에는 700,000명에 육박한다.

3) 제주 특별 자치도 통계 포털. 제주도 인구 증가 : 2021.11.24

이렇듯 제주도는 날이 갈수록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증가로 일회용품 소비는 늘어나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늘어난다.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한정된 토지에서 쓰레기 매립지는 포화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19.8.19.일자 JTBC 사회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관련 한 도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는 본 제안서 사례로는 적절치 않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제주도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쓰레기 배출 현황



〈 그림 2 : 제주도 쓰레기 종류별 배출 현황 및 재활용률 〉⁴⁾

두 번째로, 쓰레기 배출량이 너무 많고, 재활용률이 낮다. 그림 2는 2014년부터 2018년도 까지 제주도가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얼마나 버렸고, 재활용률이 얼마인지에 대한 하루 평균 값을

4) 공공 데이터 포털. 제주도 쓰레기 배출 현황 : 2021.11.24

구한 수치이다. 이때 조사된 쓰레기 종류는 세 가지이다. 파란색 그래프는 플라스틱, 주황색 그래프는 불연성 쓰레기 마지막으로 회색 그래프는 일반쓰레기이다.

우선 가장 많이 배출 되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이다. 다음으로는 불연성 쓰레기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이다. 2016년에 일반 쓰레기가 253.9톤으로 가장 많이 배출 되었고, 당해 연도에 불연성 쓰레기가 132,2톤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배출 되었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33.8톤으로 2015년에 가장 많은 배출을 했다.

플라스틱은 1년 평균 33톤, 불연성은 약 122톤을 배출 되었고, 마지막으로 일반쓰레기는 약 241톤이 배출 되었다. 그에 반해 재활용률은 평균적으로 5%로 쓰레기 배출량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제주도는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를 감당하기 위해 요일별 분리수거 배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거한다. 첫 번째 주민이 사는 거주지 근처에 ‘클린하우스’라는 쓰레기 수거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클린하우스’시설을 설치하되 요일 별 배출이 아닌 분류만 하면 지정 장소에 가서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체계가 구축 되어있다. 그러나 전자는 후자에 비해 비교적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가령, 쓰레기가 제대로 분류 되어있지 않거나 포화 상태로 인해 미관을 해치거나 기존 분류 목적에도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씨씨티비(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시행 했으나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후자는 요일별 배출 없이 한 번에 버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분류가 잘 되어 배출 되고 포화 상태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쓰레기 요일별 배출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제주도는 작은 의미로 두 가지의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다.

Ⅲ. 정책 내용

1. 클린하우스 인원 배치

전자와 후자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시설의 독립여부와 규모다. 그리고 상주 인원의 여부다. (이하 전자는 주택가 클린하우스, 후자를 지역 클린하우스로 정의하겠다.).

주택가 클린하우스는 접근성이 높은 대신 골목길 같은 곳에 위치 해 있어 규모가 크지 않고, 개방적 공간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만큼 접근성이 쉽다. 반대로 말하면 감시 역할이 부재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쓰레기 관리가 되지 않는다.

반면 지역 클린하우스의 경우 주택가 클린하우스에 비해 많지 않다. 또한 지리적 접근성은 높으나 하나의 폐쇄적 공간을 마련하여 독립적 공간을 갖추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상주인원이 있

어 쓰레기 배출 관리가 용이 하다는 것이다.

즉, 요일별 배출이 기존 취지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리 인원의 부재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주택가 클린하우스에도 관리 인원을 상주 시켜야한다.** 지속적이진 않지만 주택가 주변 클린하우스에도 일시적으로 관리 인원이 있었다. 그러나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관리와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1명과 사회복지요원 1명으로 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65세 이상 노인을 넣은 이유는 노인 일자리 창출 때문이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이고, 노인들 또한 일자리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 측면도 노인 2명을 고용하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요원 1명으로 인원을 대체하며 고용 예산 절감도 가능 할 것이다.

2. 쓰레기 ‘양’ 최소화

쓰레기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양과 재활용률이다. 쓰레기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활용률을 높여야한다. 우선, 쓰레기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한다. 그렇게 된다면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선행된다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 결과적으로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양 뿐만 아니라 본래의 일반 쓰레기양도 감소할 것이다.

두 가지의 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첫 번째,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인센티브 도입제이다. 두 번째, 재활용 자판기 도입이다. 첫 번째 정책의 경우 일회용품 제한을 통해 일반쓰레기 양을 감소시켜 매립지 포화 상태를 완화 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고, 두 번째 정책의 경우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여 플라스틱의 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인센티브 도입제는 제주도 환경 예산과 정부 보조 예산으로 일회용품을 사서 기업을 제외한 제주도내 식당, 카페 등에 배부하고, 일정량을 다시 반환 할 시 환경 보호 우수 지점으로 선정해 일정 포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일회용품을 개인지점이 남용할 일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의 강제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제주도만의 환경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기업을 제외한 이유는 기업에게 이런 강제성을 댄다면 제주도에 지점을 내놓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도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우선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화’와 ‘인식’의 선행이 먼저라고 판단하여 소상공인 위주로 정책을 시행한다.

재활용 자판기 도입은 플라스틱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고, 투입구에 플라스틱을 넣으면 보상
으로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적립금은 온라인상에서 계좌이체를 하여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시범 운영을 한바가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
례로 하와이 주에서도 재활용품 쓰레기를 종류별로 수거하여 영수증을 출력하면 돈을 주는 시
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카페 거리에 설치하여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 청년주거환경 실태와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고재일 지역당원

1. 정책제안 배경

- 최근 우리사회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을 꼽는다면 “3포세대”, “5포 세대”, “흙수저” 그리고 “금수저”와 같은 단어임. 이는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살아감을 반영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 내 불평등의 심화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불평등의 중심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 할 수 있는 “의, 식, 주” 중에서 “주”에 해당하는 주거의 문제가 핵심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주거의 빈곤과 이로 인한 불평등은 청년세대의 만혼을 넘어서 비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청년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며, 관련 연구도 제한적임. 청년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도 초점은 고용이었으며, 주거는 부차적인 문제였음.
- 그러나 살만하지 못한 주거환경, 그리고 과도한 주거비용의 부담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청년의 빈곤이 장년, 중년, 노년의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끊어내야 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제안 목적

- 첫째, 대전을 중심으로 청년 가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청년들이 처해있는 주거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문제점을 공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둘째,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주거정책의 발굴과 동시에 이러

한 주거 지원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세대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그러한 가치 추구로 건전한 공동체의 재건을 목표로 함.

3. 대전시의 현황

- 연령대별로 1인 가구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로는 15~39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1인가구인 비율(2020년 기준, 통계청)은 전체 약 664만명 중 220만명으로 약 34%에 달하며, 대전시의 경우 1인 가구 20만 9천여명 중 15~39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은 9만 8천여명으로 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우리나라 평균을 많이 상회하는 수치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시의 경우 대학생과 젊은 층의 직장인이 많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음.
- 특히, 대전시의 경우 20~29세에 이르는 연령층의 1인 가구수가 약 5만6천여명으로 이는 대전 전체 1인 가구수의 27%에 해당하는 수치임.
- 먼저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대학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19년도 기준 대전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수와 기숙사 수용률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사이버대학은 제외했으며, 본 수치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상기 학생 수와 다소 차이가 있음.

구분	대학명	소재지	재학생수	수용인원	기숙사 수용률
1	건양대학교	서구	3,616	808	22.3
2	대덕대학교	유성구	4,357	925	21.2
3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서구	4,604	734	15.9
4	대전대학교	동구	10,331	1,468	14.2
5	대전보건대학교	동구	5,929	743	12.5
6	대전신학대학교	대덕구	240	110	45.8
7	목원대학교	서구	9,468	1,472	15.5
8	배재대학교	서구	10,100	1,808	17.9
9	우송대학교	동구	9,529	2,315	24.3
10	우송정보대학	동구	4,866	574	11.8
11	을지대학교	중구	994	194	19.5
12	충남대학교	유성구	22,679	5,066	22.3
13	침례신학대학교	유성구	2,417	839	34.7
14	한국과학기술원	유성구	10,616	8,009	75.4
15	한국폴리텍 IV 대학 대전캠퍼스	동구	1,071	392	36.6
16	한남대학교	대덕구	13,394	1,554	11.6
17	한밭대학교	유성구	8,870	1,160	13.1
합계			123,081	28,171	22.9%

- 상기 표에 따르면 대학 전체 재학생 수는 12만 3천명에 달하나 기숙사 수용인원은 2만 8천여명에 불과해 기숙사 수용률은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결국 많은 수의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한 경우 별도의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가 인근 월세 현황(2021년)
: 대전시의 경우 스마트폰 부동산 중개 어플과 포털사이트 부동산 시세 정보를 토대로 각 동별 원룸 매물수와 보증금, 월세 평균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구	동	매물수	보증금 평균	월세 평균	인근 대학
유성구	지족동	37	500.0	42.8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유성구	원신흥동	14	340.0	39.4	목원대학교
유성구	죽동	16	420.0	39.0	충남대학교
서구	도안동	4	500.0	37.6	목원대학교
동구	용전동	57	190.0	36.0	한남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중구	용두동	27	416.7	35.7	을지대학교
유성구	덕명동	6	240.0	35.4	한밭대학교
서구	만년동	38	480.0	35.4	카이스트
유성구	궁동	20	200.0	35.2	충남대학교
중구	중촌동	9	680.0	35.2	을지대학교
동구	가양동	16	560.0	32.6	대전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서구	정림동	2	220.0	32.6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서구	도마동	23	370.0	32.4	배재대학교
서구	가수원동	12	340.0	31.4	건양대학교
대덕구	중리동	21	180.0	30.6	한남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유성구	신성동	33	200.0	29.8	대덕대학교
서구	월평동	59	320.0	29.4	카이스트
서구	복수동	8	166.7	29.0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동구	용운동	13	144.0	23.8	대전대학교
동구	홍도동	46	90.0	23.4	한남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동구	자양동	53	120.0	23.2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합계 및 평균		514	268.2	32.8	

- 대학가 인근의 지역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월세가 가장 비싼 지역은 유성구 지족동으로 42만 8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보증금은 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저렴한 지역은 동구 자양동으로 보증금은 120만원, 월세는 23만 2천원으로 조사되었음. 대학가가 있는 지역의 매물은 514개 이었으며, 평균 보증금은 268만 2천원, 평균 월세는 32만 8천원으로 서울에 비해서는 다소 저렴한 편에 속하나 청년층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님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위는 포털 사이트의 매물에 대한 평균값으로 실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약 300여 곳의 매물을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는 평균 보증금은 393만 9천원에 달했고, 평

균 월세는 약 33만원이었음.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관리비로 평균적으로 관리비는 2만 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실제 월지출 평균은 약 36만원으로 조사되었음

- 이들 원룸의 평균 면적은 8.9m²로 이는 약 2.7평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매우 협소하며, 심지어 저가형 원룸의 경우 4.0m²(1.2평)에 해당하는 방도 다수 있었음.
- 다음으로 주요 직장인 인접해 있는 지역의 원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2021년)

구	동	매물수	보증금 평균	월세 평균	인근 직장
대덕구	목상동	5	800.0	28.8	3.4공단
유성구	관평동	18	480.0	34.2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
유성구	문지동	6	666.7	48.3	LG화학, SK이노베이션
유성구	용산동	5	380.0	42.0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
동구	용전동	47	190.0	34.0	한국전력공사
유성구	전민동	66	200.0	34.0	대덕 연구 단지
유성구	탑립동	2	460.0	36.0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
서구	가수원동	12	340.0	30.4	건양대병원
유성구	신성동	33	200.0	29.8	대덕 연구 단지
서구	월평동	49	320.0	27.4	정부청사
서구	내동	5	360.0	43.6	kt인재개발원
서구	용문동	10	180.0	32.0	롯데백화점
서구	둔산동	8	380.0	37.2	대전 시청, 정부청사
합계 및 평균		266	259.8	35.2	

- 직장 인근 지역의 경우 보증금 평균은 259만 8천원 이었고, 월세 평균은 35만 2천원 이었으며, 이 중 가장 월세가 높은 지역은 유성구 문지동으로 보증금은 666만 7천원, 월세는 48만 3천원 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지역은 대덕구 목상동으로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비싼 반면 월세는 28만 8천원으로 낮게 조사되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266개 매물 중 많은 매물이 전민동에(66개) 몰려 있었으며, 전민동은 보증금 평균 200만원, 월세 평균 34만원으로 조사되었음.
- 이를 통해 대전시에 대한 인구와 주거형태 등에 대해 요약하면 대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으며, 이에 따른 1인 가구 수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많은 수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대비 대학생의 비율도 높은 도시임. 그러나 이에 반해 기숙사 수용률은 22.9%이고, 많은 수의 청년들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음. 또한 원룸의 경우 평균 보증금은 393만원이며, 평균 월세는 관리비 포함 36만원으로 수도권에 비해 결코 저렴한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음. 이에 반해 원룸의 평균 면적은 8.9m²이며 이는 약 2평 남짓한 공간으로 많은 청년들이 주거 빈곤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음.

4. 정책제안

Track 1. 대전형 한지붕 다세대하우스 지원사업

■ 롤모델: 독일 다세대 하우스

■ 정책목표

- 청년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
- 노후화된 주거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 사업개요

- 대전시 거주 고령 인구(만65세 이상) 중 독거 혹은 부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빈방을 청년(만19~39세 이하)에게 제공
- 시에서는 방을 제공하는 주택에 일정 금액 이상의 리모델링 비용을 제공하고 해당 주택의 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
- 해당 주택을 이용하는 청년의 경우 월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여, 그중 일부는 적금의 형태로 금융기관의 상품과 결합, 만기 년 한을 달성 시 대전시에서 만기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원금을 더해 제공하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목돈 마련

■ 기대효과

- 도시재생과 공동체 회복, 그리고 청년주거문제 해결이라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장기적으로는 청년 스스로 해당 다세대 하우스 거주를 통해 향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을 모으고 이를 통해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추진과제

-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 필요
- 상호 간의 신뢰와 소통을 위해 대전시가 주체가 되어 주거환경에 대한 사전조사 및 거주 희망자의 인터뷰 등 필요
- 희망자 모집, 주거 유치와 주거 희망자 간의 연결을 위한 홈페이지 및 스마트 어플 등 제작 필요

Track 2. 대전형 커넥트하우스 지원사업

■ 롤모델: 일본 커넥트하우스

■ 정책목표

- 학생, 취준생, 현업 전문가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제공
- 1인 가구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주거환경 제공

■ 사업개요

- 대전시에 있는 빈집이나 임대주택 등을 시에서 매입 혹은 임대하여 셰어하우스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청년층에게 제공
- 단순한 셰어하우스가 아닌 셰어하우스마다 테마와 주제를 정해 해당 희망자 간 매칭을 통해 공동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주선
(예) 화학연구원, 화학과 재학 중 대학생, 화학 관련 기업 취준생 매칭
- 셰어하우스 거주자는 공동의 작업실을 통해 서로 간 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강좌, 노하우 전수, 소그룹 세미나 개최 등을 시에서 지원하고 이러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공유
-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의 작업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대효과

- 주거공간을 통해 전문가 그룹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로 청년들 스스로가 성장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형성
- 주거공간을 통해 휴식과 더불어 서로 의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서로 간의 새로운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으로 함께 사는 삶의 의미부여

■ 추진과제

-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 필요
- 대전시 소재 빈집 및 셰어하우스 유치 희망 임대주택 모집 필요
- 희망자 간 상호 매칭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셰어하우스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필요

참고문헌

[인용문헌]

-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 서웅식, 2012. 독일 친환경 다세대 주택 정책
- 이희원, 2014. 국내·외 셰어하우스 사례 비교를 통한 개발특성 분석
- 훗쿄 하카루, 2015. 독일 주택단지 생활과 거주자의 일상
- 박미선, 2017.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웹사이트]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http://www.nrf.re.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world_trends/25790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여성의 임신과 육아에 관하여

박송이 지역당원

대한민국의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2019년 0.9108 명에서, 2020년에는 0.840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의 0.9108명도 최저치로 알고 있었는데, 점점 더 감소하는 추세네요.

그렇다보니,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역의 출산율 또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예산을 활용하여 출산 장려 정책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00년에 걸쳐 초래된 저출산이 우리나라는 불과 30년이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져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30년 동안의 출산 수준은 가임 여성 1인당 일생 2명도 채 안 되는 자녀를 출산하는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였을 때 더 큰 사회문제로 다가올 것이며,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저출산 못지않게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지속’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인구대 재앙이 올 것입니다.

1. 저출산 원인

1)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경제활동에 나서는 여성은 70년 368만 명에서 2020년 1200만명이 넘어섰고 여권의 신장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승되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커졌습니다. 과거의 결혼과 육아가 시작되면 직장을 그만 두는 것과 달리 자존감과 미래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증가 하였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승진이나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었고, 이는 곧 결혼 및 출산율 감소로 이어 집니다.

2)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급속하게 바뀌면서,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강제가 많이 약화된 지금,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아진 이혼율도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자녀 양육비 부담 증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양육비가 드는 가운데 50% 이상이 사교육비로 들어감에 따라 교육비 부담이 높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많이 벌어짐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용과 시간이 더 할애 되게 됩니다. 그로인해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4)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

직업이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지역아동센터 돌봄 센터 방과 후 활동들은 인력과 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경험을 쌓는 곳이 아닌 단순히 학원을 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휴게실 같은 개념이고, 이마저도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이용이 적은 편입니다.

5) 사회 전반의 개인주의화 심화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자는 개인주의가 심화 또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워킹맘(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하는 엄마)들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실행 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Q. 출산 후 직장 계속 다니시나요?

출산 후 직장 계속 다니시나요?

다니고 있다 (출산·육아 휴직 상태도 포함)

742표, 67.95%

퇴사했다

329표, 30.13%

기타 (댓글에 기재해 주세요.)

21표, 01.92%

Q. 퇴사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사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235표, 54.15%

나보다 남편 벌이가 나아서

7표, 01.61%

1번과 2번 둘 다

72표, 16.59%

너무 힘들어서

63표, 14.52%

회사 측에서 원해서

35표, 08.06%

기타 (댓글에 기재해 주세요.)

22표, 05.07%

Q. 퇴사했다면 재구직 의사가 있나요?

퇴사했다면 재구직 의사가 있나요?

가능하다면 언제든 일하고 싶다

200표, 42.74%

당분간은 육아에 전념하고 싶다

91표, 19.44%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153표, 32.69%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다

14표, 02.99%

기타 (댓글에 기재해 주세요.)

10표, 02.14%

출처 : 맘스홀릭 베이비

위 설문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육아와 병행하기를 원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게다가 문제점은 이런 의견을 조사하거나 통계적으로 나타 낸 객관적인 자료 조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실제 육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닥친 현실 상황도 반영하지 않은 채 정책을 실행하고 그 곳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현재의 저출산 정책 - 문제점

1) 산후 도우미 및 출산 장려금 지원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아이들을 두고 노부모를 보살피는 한편 복잡한 가사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시키려는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안 환자를 전문으로 돌봐주는 간병인, 출산 여성을 보살펴주는 산후도우미, 어린이 학습 도우미, 어린이 놀이 도우미 등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력과 서비스 내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버네보드센터(아동보건센터)가 있어 여성이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센터에 등록되고 산모에게 지역별 간호가사 배정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출산까지 각종 의료지원 및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출산 후 산후간병도우미를 지원 하기는 하지만 차차 스웨덴처럼 임신 중인 여성에게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입니다.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하고, 출생일로부터 부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9년 까지는 축하금 50만원에 돌 장려금 30만원으로 그 금액이 매우 작았는데,

2020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의 경우 축하금을 일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며, 10만원 씩 20개월을 지급하여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 날 전망입니다.

2) 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다르긴 하지만 정부지원금 + 지자체 지원금을 통해서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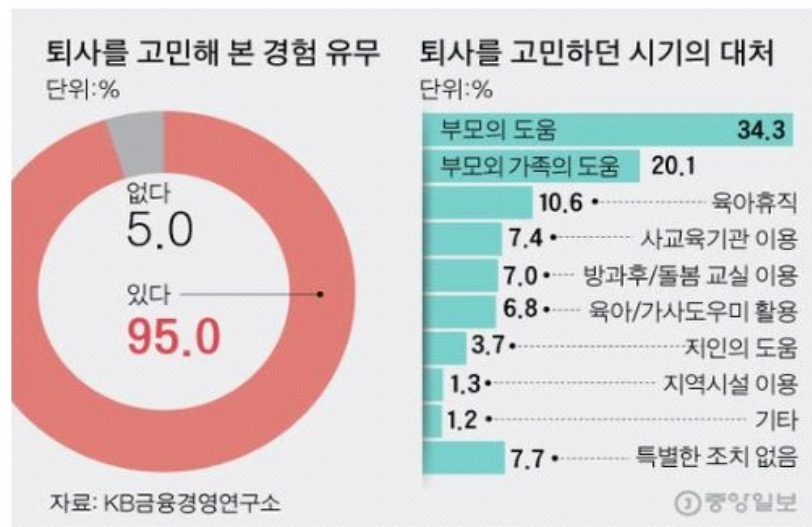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내야 할 본인부담금이 다르고, 지원일수에 따른 비용 차이도 발생합니다. 많은 산모들이 출산장려금을 제외하고, 지원받는 것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출산에만 초점이 맞춰 있고, 출산 후에 육아 과정에서의 돌봄 서비스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출산 후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고, 사설기관이나 육아/가사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에는 불안한 마음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워킹맘들의 퇴사고민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설문 조사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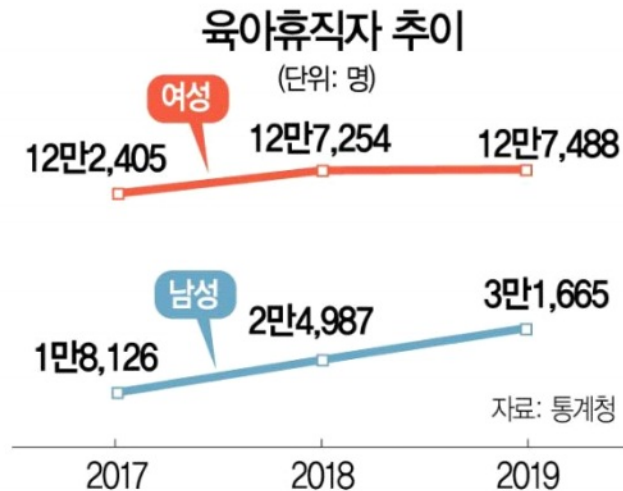
벼룩시장 구인구직 조사 결과 워킹맘 10명 가운데 9명은 퇴사를 고민하고, 이 가운데 절반은 실제로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월



3) 출산 휴가 육아 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법적인 보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휴직기간동안 일부임금만 지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직 후 복직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접근도가 낮으며,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사업체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많은 여성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어 제도정착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남성의 육아 휴직이 실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용할 때는 회사의 압박과 눈치를 보게 되어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입니다. 육아를 사회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근무 형태 유연화

저출산 사회에서 자녀양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육서비스의 증대, 모성보호정책의 강화 등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자녀양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증가에 따라 자녀양육에 대한 취업 여성 자신의 부담, 가족의 부담 및 기혼여성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적 시간근무제와 재택근무제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과 특정 임신 주차에 이용할 수 있었던 근로시간 단축의 범위를 넓혀 임신과 육아로 인한 퇴직과 경력단절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의 제도 또한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곳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공기업이나 공무원들만의 제도이고, 남성들은 이용 할 수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3. 출산 장려를 위한 방안

출산 장려 정책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를 꼽자면 ‘프랑스’일 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출산 장려 정책을 살펴보는 것 입니다.

1)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 및 의무화

- 출산휴가 : 프랑스는 아이를 낳게 될 여성에게 출산 예정일 6주전에서 출산 후 10주간 사이에 최소한 16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이 기간 동안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기구에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 임금근로자 여성이 출산휴가 이후에도 육아를 위해 추가적으로 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후부터 아이가 3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가족친화기업문화가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다양한 형태의 탁아방식 운영 : 돌봄 서비스 강화

- 다양한 형태의 탁아방식 운영 : 아이 돌보기에 있어서 프랑스는 탁아방식은 다양하고 유동적인 부모들의 노동시간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탁아방식을 운영하고 지원 합니다.
- 육아보조원 : 육아보조원(보모)을 보면, 아이를 육아보조원에게 맡기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도청이나 사회보장기구의 승인을 받은 육아보조원 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찾아오는 방식. 둘째, 육아보조원을 자신의 집에 고용하는 방식. 이때 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정당 725유로에서 525유로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탁아소 운영 : 탁아소는 2개월에서 3세까지의 아이들을 수용합니다. 탁아비용은 일정하지 않고 부모의 소득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인 액수의 분담금(요금)을 지불합니다. 시청이나 구청 등 행정기관은 대부분 탁아소를 설립, 운영합니다. 이를 집단 혹은 공영탁아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집단탁아소는 낮 동안 정기적으로 3세 미만의 아이들을 맡아 줍니다. 일을 하거나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을 받는 중이거나, 일자리를 찾는 중인 부모들의 자녀들을 맡아 주는 것입니다. 탁아환경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격, 탁아소 설비 등에 관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중심은 즉,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에 육아는 단지 여성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일과 아이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즉 여성의 노동권과 고용평등을 보장하고 또 보육서비스를 탈가족화, 공공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전략은 가족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통해 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남녀 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부담을 임신과 출산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나아가 기업 국가가 공동으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3) 육아 보조원 처우 개선 및 처벌 강화

보육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최대의 사회적 지원을 해주며, 그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며, 많은 분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부모들은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무상지원,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 평등화

사교육비와 교육의 평등이 부족으로 인해 교육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바에야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을 없앨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원 또한 필요한 현실입니다.

위에 내용 말고도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정책들을 보면, 이 정책들의 대부분은 출산시의 기간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가 단지 출산비용이 많이 들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출산비용보다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돌봐 준수 있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불편하지만 부모님 찬스를 이용가능한 분들은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또 아이를 돌보는 분을 고용 시 드는 비용은 비용의 문제보다도 아이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 문제로 발생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어린이집에 보내기전인 영유아 기간 동안 아이를 돌봐 줄 곳을 찾지 못해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생각하지 말고,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간파하

여 그에 맞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출산회복정책이 당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결혼, 출산, 자녀양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환경,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출산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회정책이 자녀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되거나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출산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출산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조절되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여나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 대전을 중심으로

서다운 대전 서구의회 의원

1. 서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모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¹⁾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²⁾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는 이동권을 명시해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실태조사와 개선사업,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 확대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단체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외침이 들린다. 어디서나 자유롭게 다닐 권리가 있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들이 한 날, 한때에 맞춰 거리에 등장하는데, 최근 한 지하철역에서 이러한 장애인단체의 시위를 막기 위해 지하철역에 진입하는 엘리베이터를 폐쇄해 논란이 일었다.³⁾ 비장애인은 너무도 쉽게 장애인의 발을 묶을 수 있는 것이다.

시위조차 하지 못하게 막을 힘이 비장애인에게 있고, 시위마저 가지 못하는 무력함이 장애인에게 존재한다. 여전히 교통·사회환경은 장애인·노약자 즉 교통약자에게 너무도 높은 장벽이 있는 것이다.

1)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매일안전신문(21.12.06.) 장애인단체 '이동권 시위'하자... 엘리베이터 운영 정지시킨 혜화역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752><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752>

II. 대전의 상황

현재 대전의 인구 약 150만 명 중 장애인 인구는 5%에 달하는 7만 2천여 명이다.

구분	합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장애인 등록수	72,699	14,640	14,023	19,923	12,171	10,942
(비율)	100%	20.10%	19.30%	28.80%	16.70%	15.10%
대전 인구수	1,456,107	223,245	232,841	474,934	349,927	175,160
(비율)	5.00%	6.60%	6.00%	4.40%	3.50%	6.20%

대전광역시 통계 자료 (2021년 6월 기준)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등이 있고 개인별 차이는 있겠으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주로 사용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은 3만 9천 명으로 전체 장애인 중 54.3%에 달한다.

유형	구분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18세 미만	18세 이상
지체	계	32,247	6,293	25,954	86	32,161
	남	19,147	4,226	14,921	40	19,107
	여	13,100	736	11,033	46	13,054
뇌병변	계	7,256	4,440	2,816	340	6,916
	남	4,048	2,326	1,722	176	3,872
	여	3,208	2,114	1,094	164	3,044
계		39,503	10,733	28,770	426	39,077

대전광역시 통계 자료 (2021년 6월 기준)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역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대전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전체 버스 1,015대 중 319대가 확보돼 전국 평균 27.8%보다 약간 상회하는 약 31% 비율을 보인다.

최근 3년간 267대에서 319대로 52대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3문 저상버스를 도입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2년도 저상버스 84대 구입예산 56억원을 세워 지속적인 비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09686622424632&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19.03.18.) 대전시, 특·광역시 최초 3분 저상버스 도입

또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리프트 차량, 슬로프 차량, 일반 차량 총 326대의 장애인 콜택시로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

Ⅲ. 문제점

많은 교통약자 지원정책이 실시·확대되고 있어 환영할 만하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는 2005년 전동보장구⁴⁾가 건강보험 급여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보장구가 빠르게 보급·정착돼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활동·경제활동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서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동보장구의 보급만큼 전동보장구 공공충전소의 상황을 살펴보고 대전광역시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전동보장구 충전소는 131개소로 주 설치장소를 보면 행정복지센터 54개소로 가장 많다. 대전의 행정동은 모두 79개로 전체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진 않았지

4)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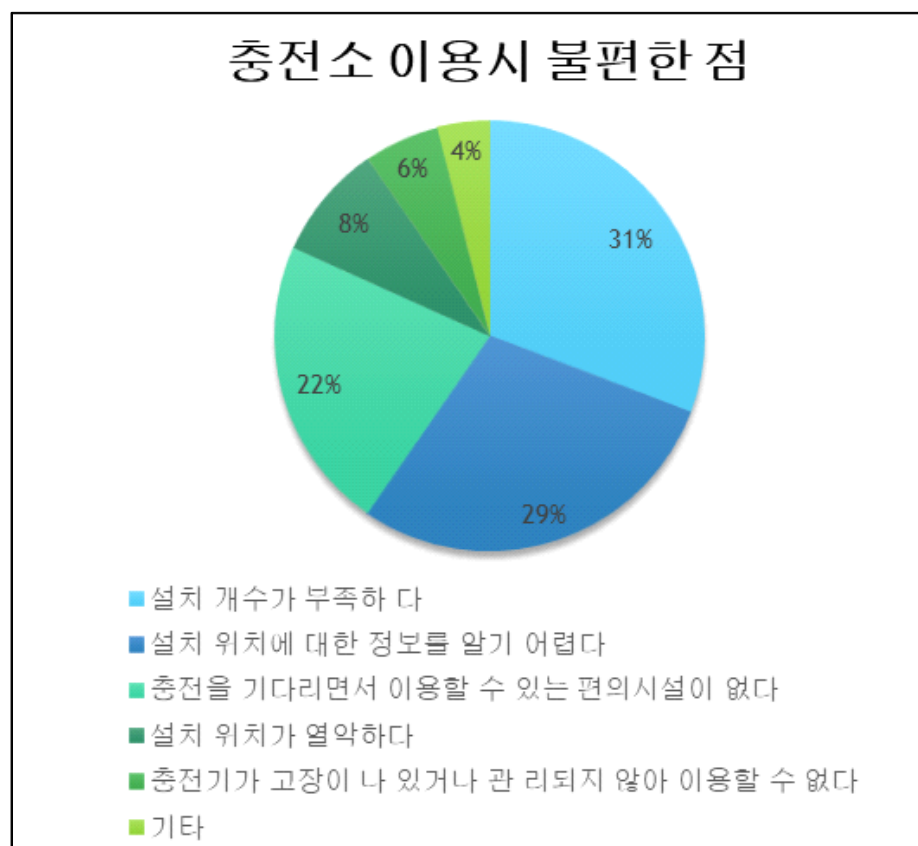
만, 확대 설치되는 추세고 서구의 경우 23개 동 전체에 설치 완료되었다.

그다음으로는 기타 공공시설이다. 시청, 구청, 터미널 등 42곳에 설치돼 있고 각 지역 복지관 13곳에 설치돼 있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계
행정복지센터	12 / 16	5 / 17	23 / 23	10 / 11	4 / 12	54 / 79
기타 공공시설(시구청 등)	7	9	12	5	9	42
복지관	4	1	4	2	2	13
지하철	4	4	7	7	0	22
계	27	19	46	24	15	131

대전광역시 자료.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 현황 (2021년 12월 현재)

위와 같은 주요 행정기관과 복지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기가 설치된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행정 서비스이다. 특히 최근 3년 전체 86개소에서 131개소로 47개소가 늘어나 약 50% 가까운 증가가 있었다. 매우 환영할 일이다.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2016, 한국장애인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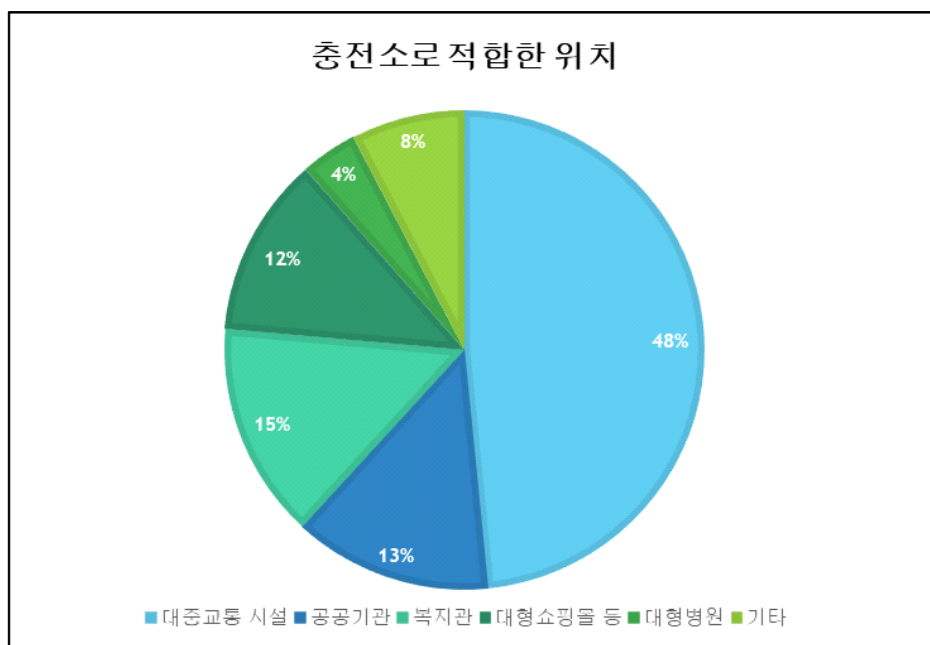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표한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현재 충전소 불편사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으로 설치 개수 부족이 꼽혔다. 때문에 지속해서 설치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설치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개수 부족과 함께 대전의 문제는 131개 소 중 106개소 즉 80%가 관공서 내에 위치해 이용 시간이 매우 제한된다는 것이다.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의 경우 대부분 주 5일제 근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시간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개방되기에 공공 충전기 사용 가능 시간이 매우 짧다.

여기에 더해 예전에 없던 코로나19 사태는 관공서의 출입을 어렵게 만들었고 많은 복지시설은 상당 기간 문을 닫아야 했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의 일상을 앗아갔지만, 특히 약자에게서는 얼마 주어지지 않았던 작은 부분까지 가져가 버린 것이다.

주말에도 연휴에도 코로나19에도 문을 여는 충전소는 25곳뿐이다. 이동 경로에 있으면서 언제나 개방되는 지하철역 22개소와 대전역, 서대전역, 복합터미널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과 같이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지하철역이 많은 곳은 지하철에만 충전소를 설치해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은 지하철이 1호선만 있어 전체 역에 충전소를 설치한 것이 22개소뿐인 상황이다.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2016, 한국장애인개발원)

같은 연구 자료 중 사용자들이 충전소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치는 48%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대중교통 시설을 꼽았다. 이동 경로면서 개방성이 확보되기에 그렇다. 대전의 경우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지만, 그 수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다. 더욱이 예정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지하철 방식이 아니라 지상(트램) 방식이어서 지하철역이 신설될 예정이 없다.

IV. 대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버스정류장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대전은 버스 노선이 발달해있다. 1,015대의 버스는 현재 급행 3, 도시노선 68, 외곽노선 29, 총 100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버스정류장은 2,300개소에 달한다.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은 31%로 3대 중에서 1대만 저상버스다. 따라서 같은 노선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장애인보다 2~3배의 대기시간이 발생한다. 버스정류장에 전동보장구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버스를 기다리면서 충전하는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로 이동 중 배터리가 부족할 때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접근 가능한 관공서가 아니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충전할 수 있다면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전 시내버스정류장 휴대전화 충전기 설치 모습



대전 시내버스 내 설치된 충전기 모습

이제는 너무도 당연히 제공되는 휴대전화 무료충전이 전동보장구도 가능해야 한다. 이미 버스정류장 심지어 시내버스 내에 휴대전화 무료충전기가 많이 설치돼 있다. 시내버스 대기시간 (평균 15분) 동안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데, 저상버스를 기다리는 45분간 전동보장구 탑승자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타 지자체에 설치된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 중인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경우 공기청정·냉난방·공공 WIFI·휴대전화 충전을 제공하고 있다. 곳은 날씨 속에서도 쾌적함을 제공해 쉼터 역할도 하는 버스정류장의 진화 속에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충전기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사업 초기 단계, 앞으로 더욱 늘어날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전동보장구 충전기가 함께 마련되길 바란다.



대전트램 홈페이지 첫 화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지상 방식 트램은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이다. 지하나 고가의 구조물이 없어 차량 자체로의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므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리프트 등 별도의 상하 이동 수단이 필요 없다.



대전트램 홈페이지에서의 트램의 장점 인포그래픽

또한,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한 것과 다르게 도로와 차량 바닥까지의 높이가 낮아 노면에서 수평으로 휠체어, 유모차 등 진입이 가능해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일반 버스보다 3배 규모로 큰 차체는 큰 전동보장구의 진입도 부담스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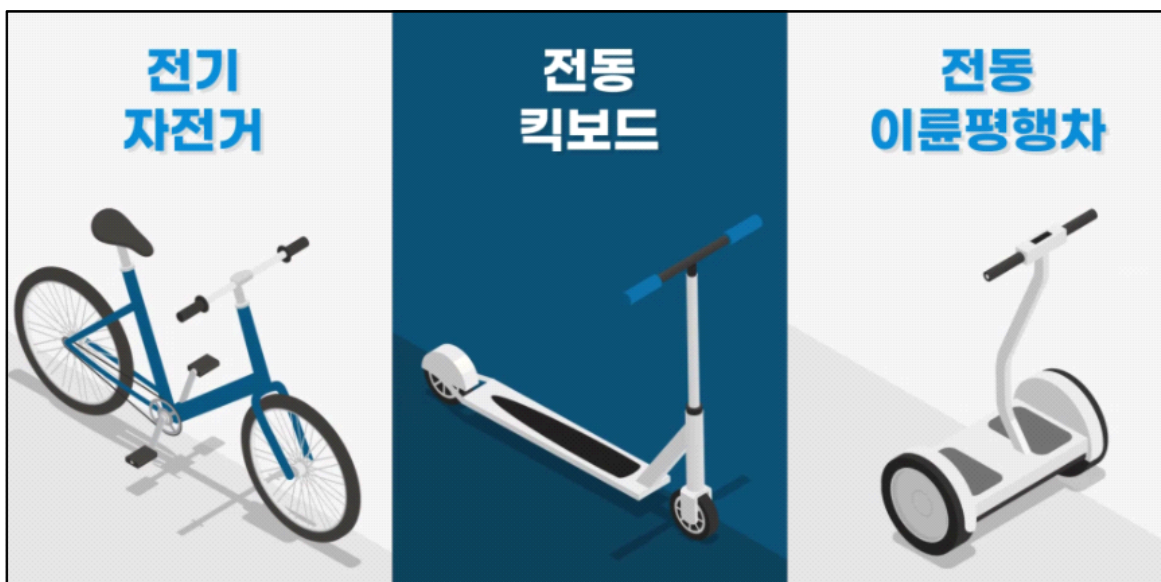
트램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기대하게 한다. 그렇다면 더욱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한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즉 버스정류장 내 설치가 필요하다.

V.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최근 소화행 공약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를 내세웠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뜻하는데 다시 말하면 약자까지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약자에게 편리한 것은 모두에게 편리하고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치로 민생, 약자를 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표현하는 좋은 공약이며 약자까지 포함한 보편적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전동보장구 충전소는 다른 의미가 있다. 현재 전동보장구는 장애인들만 사용하고 있지 않다. 현재 많은 노인이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이동을 위해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2030년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이라 예측되기에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노벨로 블로그 중 PM 소개 이미지 갈무리 (<https://blog.naver.com/motovelo/222272144206>)

또한,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 수단으로 자동차·대중교통을 대신해 짧은 거리 이동에 활용된다. 전동보장구 충전소가 다양하게 설치된다면 청년들의 PM 충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동보장구 충전소는 결코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으로 장애인의 필요를 채우고 비장애인의 충분을 더 해줄 수 있는 정책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가장 먼저 교통정책에 전면 적용되길 기대하며,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안심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충전소가 휴대전화 충전소처럼 자연스러워지길 바란다.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예술이 숨 쉬는 지역재생 - 홍대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강보훈 지역당원

젠트리피케이션이란?

한때, 홍대 앞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켰던 공간이 이제는 지나친 상업화로 물들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분위기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자구책 수립이 가속화됨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의 촉발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고,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문화·예술 분야 젠트리피케이션의 현황파악과 근본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Glass(1964)가 런던 시내의 도시사회 공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한 단어로 세계 2차 대전 이후 폐허가 된 도시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도시 재생이 시작되었지만 획일적인 재생으로 역사적/문화적 특징을 무너뜨렸다는데서 기인한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은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과 함께 이뤄진다. 도시재생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실제 거주민이 아닌 외부의 유입층(프랜차이즈, 건물주, 관광객 또는 방문객)이 그 이익을 차지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대한 도시 활성화를 이루고, 실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문화적 도시재생 지역에 대한 소비자 경험과 행동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는 신사계급 또는 지주계급이란 젠트리에서 나온 파생어이다. 루스 글래스는 런던 서부에 위치한 첼시와 햄프스테드등 하층계급 주거지역이 중산층 이상의 계층 유입으로 인하여 고급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함에 따라 기존의 하층 계급 주민은 치솟는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살던 곳에서 쫓겨남으로써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독특한 개성을 통해 예술적인 문화를 주도했던 그 자리에 대기업의 의류점이나 프랜차이즈 식

당이 들어서게 됨으로 뜨는 동네의 개성이 사라짐으로 유동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문화백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는 사이, 기존 지역색을 만들었던 소상공인은 밀려고 밀려난 자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잠식하고 그로인해 지역의 특색을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지역색, 특색을 잃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는 젠트리피케이션, 다 같이 상생 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적 원인

젠트리피케이션은 한국에서는 두 가지 말로 표현되고 있다.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등지 내몰림,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도시 재활용으로 표현되고 있다. 낙후된 지역의 좋은 주거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시자체가 발전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됨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양한 계층의 인구가 살게 됨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은 외국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금리의 변동이 이 현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화두가 된 것은 2008년 금융 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뉴타운 정책이 실패하면서 아파트 경기가 나빠졌고, 남아도는 자본이 갈 곳이 없어졌다. 결국 자본가는 아파트 대신 상가에 투자하게 됐는데, 동시에 직장에서 해고된 자영업자는 급증했다. 이렇게 ‘뜨는 동네’의 상가 임대료가 지난 5년간 빠르게 올랐고, 세입자와 건물주의 갈등이 부각된 것입니다. 2009년부터 정부는 불경기에 대비해 금리를 급격히 낮추고, 대출총액을 증가시켰다. 불경기에 대비한 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은 상가건물로 집중되고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통해서 건물을 매입했으나, 당연히 개인에게 부과된 많은 부채는 많은 이자를 발생시키고, 이 이자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에게 월세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단순히 문화현상이라기 보다는 금융 투자현상이라는 경제 정치적 영향이 더 크다는 시각도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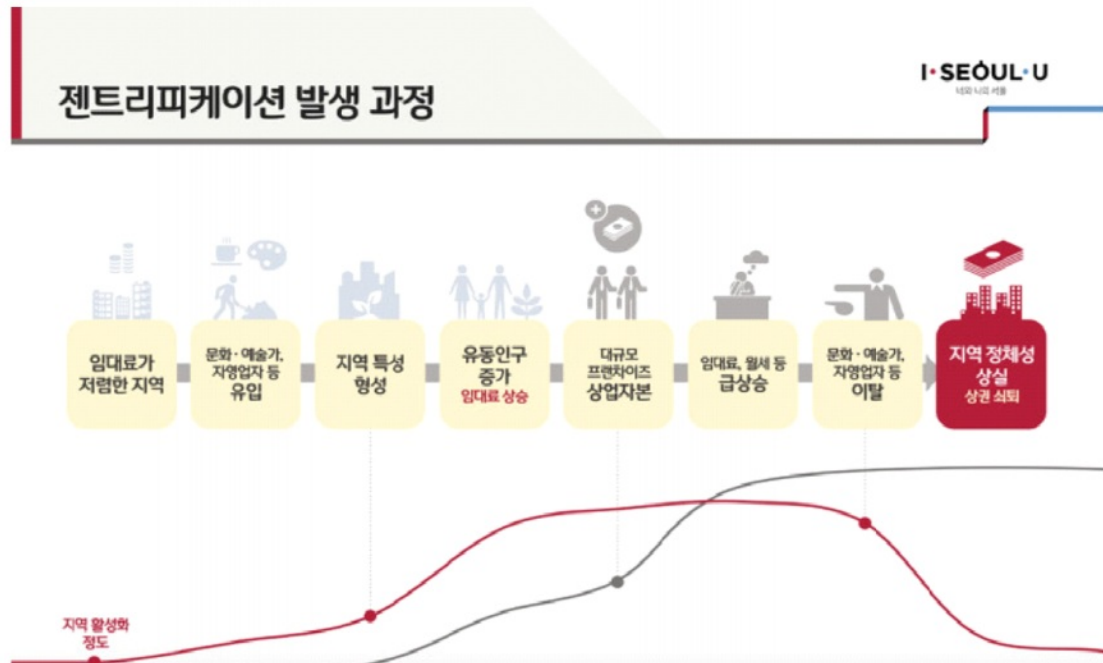
또한 홍대 앞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짧게 10년, 길게는 30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홍대 주변 일대는 불과 3~4년 만에 이루어졌다. 또한 앞서 말한 금융 정책의 여파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지역을 발표하자마자 개발하기 전에 임대료와 땅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대규모 자본이 흥망하면서, 건물매각과 권리금 게임을 시작하게 되고 임대료는 급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버텨내지 못한 프랜차이즈들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증가한 보증금과 권리금이 더욱 더 증가한 악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후 문화, 예술가, 자영업자들은 높아진 보증금과 월세, 그로인한 기반 자재들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와 경영비의 부담으로 버티지 못하고 지역을 이탈했고, 지역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홍대 앞의 거리는 프랜차이즈들로 즐비하며, 개성 없는 옷가게들과 음식점들이 넘쳐난다.

여기서 예술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유발자이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본은 예술가들이 결집하는 곳을 계속해서 추격한다. 이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로 계속해서 노마디즘적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다.



또한,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5년 동안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프랑스는 임대계약기간이 최소 9년이다. 일본이나 영국은 건물주의 전근, 요양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거나 건축물 노후화로 철거할 경우 등 신규임대계약 거절 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사실상 장기간 위치를 바꾸지 않고 장사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임대차보호관계는 단순히 건물주와 세입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예컨대, 흔히 일본에는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다. 100년, 200년 된 기업이 수천 개이고, 1000년이 넘는 기업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바탕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임차인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초기 진입 예술가와 일부 문화기업가, 원래의 주민까지 이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이 심화되고, 예술가의 자구적 대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지방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응도 시도된다. 이탈한 예술가들은 인접 지역 또는 유사한 여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또 다시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예술가 등 초기 진입 주체가 전치된 후에는, 상업화와 관광지화에 따라 지역 고유성도 급속히 소실되어, 주킨이 설명한 “정통성을 잃은 도시”의 부정적 결말로 귀결되는 것으로 우려된다. 장소가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현상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 야기되는 문화백화를 약화하고 저감시키기 위해 창작활동 주체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을 반증한다. 즉 주체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중요한

한편 문화과잉으로 변모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에 특별한 개연성이 없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기획자 등이 단기간에 밀집하여 지역의 분위기를 급격히 바꾸어 버리는 것도 문화과잉이라 할 수 있다.

문화 주도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예술가의 개입은 주로 개척자 젠트리파이어의 역할로 나타난다. 장소성의 강화는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도 장소애착을 형성하여, 전치 이후에도 떠나지 못하고 인접지역에서 머물며 공간적 분화·확장이 이루어지는 유인이 된다.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에서 예술가의 이동 동인은 주로 저렴한 임대료이며, 따라서 이면가로를 따라 블록 단위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이합집산의 경향이 강하여, 특정 지역에 정착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교적 최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소통에 제한이 없어지고, 어디든 찾아가는 것이 쉬워지면서 입지적 제한은 완화되고, 활동 여건이 오히려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 풍선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존재하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인사동과 대학로에서 발생한 개발압력에 대항하고 상업화를 억제하며, 기존 도시조직과 고유 업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지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업종과 용도를 제한하는 대신,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 및 용자지원 혜택을 주고, 운영자에 대해서도 용자와 신원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평가 결과, 문화지구 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상업화의 진행과 권장업종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로의 경우 극단의 이탈은 물론 질적 저하가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해결방안

먼저 계약갱신거절 사유의 구체화이다.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갱신거절은 차임 및 보증금 증액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이다. 현행법에서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최소 9년, 영국은 최소 7년에서 최장 14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의 실효성과 임차인의 안정성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다. 더불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보증금액 상한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법적 보호를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주거지역에 상업공간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용도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용도의 제한을 통해 혼잡, 범죄, 경관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외부불경제 예방하고, 뉴욕시처럼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현행 용도지역 외에 문화산업지역, 역사도심지역 등 새로운 용도지역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인 밀집지역에 대한 사전적 보호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파리시의 경우처럼 도시기본계획 안에 특정 가로에 대한 보호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파리시는 공공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고 있다.

자산화 전략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에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기업이 재원을 투입하여 지역자산화 혹은 지역자산관리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은 여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지연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개발신탁은 모든 주민들에게 오픈된 회원제도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사회, 경제, 환경적 재생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역할 및 권리를 보장하는 Localism Act(2010년)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발언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 지역공동체 건설권(Community Right to Build), 지역공동체 입찰권리(Community Right to Bid) 등 지역 사회에 대한 새로운 권리와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 중 지역공동체 입찰권은 지역공동체에게 민간자본보다 우선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지역적 특성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의 경우에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재정 투입 또는 펀드 조성을 통하여 주요 건물을 매입하고, 주요 활동 주체의 근거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지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확인 할 수 있는 대표 지표, 즉 상가건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거래의 실거래가 공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신규 진입하는 업주들이 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당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7차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의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만큼, 현행은 수도권으로 한정되나, 전국 범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 하겠으며, 이를 근거로 예술인 공공 임대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예술 활동가의 지역 정착은 물론, 예술공간 조성과의 지역의 임대주택 지역에서 소셜믹스(Social Mix)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있어서도, 현행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행위제한, 업종에 대한 제한 중심에서, 활동과 주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여, **문화지구제도의 운영 자체가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보호를 의미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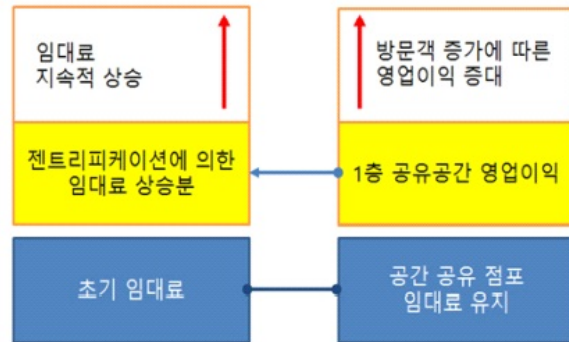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지구제도 운영평가에 있어서도, 임대료 등 부동산의 변동과 지구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및 문화기업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포함토록 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과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변화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홍대 앞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속에서도 유일하게 막아낸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2009년 말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 두리반 투쟁이다.

건물주가 바뀌고 보상금 권리금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예술가들의 저렴한 밥집이었던 두리반은 철거 위기에 처하지만 두리반의 단골이었던 홍대 앞 음악실의 예술가들이 결합해서 같이 투쟁을 했고 예술계와 지역계가 연대해 철거를 막아낸 예외적인 사건이다.

추가로, 예술가 및 소상공인의 자구적 대응의 사례로는 현재는 문을 닫았으나, 연남동 ‘어쩌다 가게’는 사이(SSAI) 건축의 임태병 소장이 카페 비하인드를 운영하며 알고 지내던 이웃들(9개의 가게)이 공간을 공유하며 장기임대를 실천하는 사례였다. 2층짜리 단독주택을 ‘공무점’이라는 이름으로 임대하고, 여기에 작은 가게들이 전대 형식으로 입주하여, 총 9개의 가게가 공생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치솟는 임대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1층의 카페라운지는 공무점에서 운영하고, 수익금으로 매년 일정 수준으로 인상되는 월세를 해결하면서, 대신 임차인들의 월세는 주택을 임대한 5년 동안 초기금액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즉 상업화의 진행에 따른 임대료의 상승을 공유하여 분배함으로써 기존 임차인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구조로 계획되었던 것이다. ‘어쩌다 가게’ 자체는 이미 문을 닫았으나, 예술가 및 소상공인의 자구적 대응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프랑스에는 ‘앵페르미땅’이라는 이름의 예술인 복지법이 있다. 한국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예술인 복지법은 이를 본 딴 것인데, ‘앵페르미땅’은 국가에 등록된 예술가가 일정 시간 이상 예술 활동을 하면,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70년대 생성된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 프랑스 예술가들은 여러 해 동안 투쟁을 이어갔다. 그 결과 그들은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을 가지게 됐다.



이외에도,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 지정 및 지원 강화,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지원,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장기저리용자 지원을 통한 자산화전략을 추진하는 방법들이 있다.

물론 지가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주체에 해당하는 예술가 포함 문화 기업가 군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제기한 논의를 발전시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 주도 젠트리피케이션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무리

이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덜 보호하는 것이 건물주의 권리를 더 보호하는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서촌은 분명히 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지는 장소이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승자와 패자,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기는 어렵다. 서촌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다. 새로 들어온 주민(신주민)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맺는 토박이가 있는가 하면 신주민을 배척하며 거리를 두는 토박이도 있다. 뒤늦게 이곳에 들어왔지만 ‘주민이 되고자’ 하는 사회운동가도 있고, 서촌에 카페·상점 등을 운영하며 공동체를 꾸려가는 창의적 자영업자도 있다. 다른 처지에서 각자 다른 경험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젠트리피케이션을 겪는 당사자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이 거대한 도시 변화의 불가피한 현상인지, 아니면 주민의 자생적 노력과 정책적 개입으로 막을 수 있는 현상인지 한번 고민해볼 문제이다.

가장 먼저 법적인 제도적 장치도 보완되어야 하지만, 법이 완벽할 수는 없다. 건물 소유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하는 이상 자본가들은 어떻게든 이익을 늘리는 수단을 찾아낼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소유의 관념’을 바꾸고 ‘공공성의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적인 상식으로 통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90년대는 이른바 문화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던 시대였다. 문화 엘리트주의, 권위주의에서 탈피한 이후의 시대에서 문화의 진입장벽은 한없이 낮아졌다. 아주 재능 있는 이들의 전유물이었던 문화와 예술은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설일 뿐이다. 불과 30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시작된 일인데 2010년대의 젊은 세대에게 그 시절의 홍대란 고전 낭만의 흔적처럼 멀고 낯설기만 하다. 과거와 현재가 연속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저는 요청 드리고 싶다. 예술가이기 때문에 순수해야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속되어진 예술지상주의로 한국사회는 이러한 것을 계속 경제와 정치와 분리시켜왔다. 정치적인 무관심과 인식의 부재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와 현재 홍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그 결과이며 그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예술가들이다 예술가들은 예술이 정치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있지 않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홍대 앞에서 일어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처럼 예술가들이 경제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예술 지상주의적 태도로 일관했을 때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냉소한 군중이 된다면 활동 영역의 제반들이 더욱 열악해질 뿐이다.

우리 사회는 예술가에게 오로지 예술만을 요구하는 예술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 여건,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현상에 현실적으로 발 맞춰 대응하기에, 예술가에게는 오직 예술의 자유만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예술가가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문제와 불가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연대를 통해 성숙한 공동체적 자유로 나아가야한다.

그동안 예술가가 존재하는 실제 삶을 계속 분리시켜왔지만 예술가에게는 예술가의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다. 생활인이기도. 시민이며 노동자이고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다. 흥대 앞의 예술가들의 경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 김경애(2007), 「서울시 문화지구정책의 효과성 연구: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지구의 비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토연구원(2016), 한국형 경제기반 도시재생 추진전략개발(2)
- 김수아(2013), 서울시 문화공간의 담론적 구성: 흥대 공간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 김연진(2015),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맹다미(2015), 해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사례와 시사점, 「서울연구원」
- 반정화 외 2인(2013),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 연구: 파리, 「서울연구원」
- 서울특별시(2016),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
- 서울특별시(2015), 서울특별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 종로구(2014),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 종로구(2014), 대학로 문화직 관리계획 변경(안)
- 김동효(2015. 1. 23.), 북촌, 서촌, 대학로 등 뜨는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이투데이」
- 김정유(2015. 11. 19.), 중기청, 문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이투데이」
- 162 문화·예술분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기초 연구
- 김태희(2016. 05. 03.) 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 에비뉴’ 개장, 「시민일보」
- 노지현(2016. 07. 22). 정릉예술인공공주택 18채 8월입주, 「동아일보」

- 심기성(2016. 06. 14.), 마포구,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 나서, 「산경일보」
- 염희진(2008. 01. 30.), “[新 문화지도]Off 홍대앞”, 「동아일보」
- 윤승민(2015. 08. 19), [대한민국은 ‘건물주 천국’]외국에선 세입자가 ‘슈퍼갑’, 「경향신문」
- 김연진(2015), 문화적 도시재생 정책으로서의 창작공간 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서울문화재단 젠트리피케이션 포럼」
- Andrea Ellmeier(2003), Cultural Entrepreneurialism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the Arts, Culture and Employ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 David Ley(2003), Artist, Aestheticisation and the Field of Gentrification, Urban Studies
- Davidson, M., &Lees, L. (2010), New-build gentrification: its histories, trajectories, and critical geographi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 Ley, D. (1986). Alternative explanations for inner-city gentrification: a Canadian assess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햇빛 보기 프로젝트 - 건강한 사회활동 정책

고병준 서울시당 당직자

서론

서울시 마포구는 甲 지역과 乙 지역으로 나뉘고 이 두 지역을 하나로 흐르는 한강이 존재한다. 마포구 지역의 한강은 최근 지어진 월드컵대교를 시작해서 성산대교→양화대교→서강대교→마포대교를 가지고 있는 다리의 규모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마포에는 서강대, 홍익대를 포함해 접경지역에 이화여대, 연세대, 추계예술대를 끼고 있는 청년들의 캠퍼스 요충지다. 특히 홍대 앞 상권은 다양한 곳에서 모여드는 젊은 청년들의 놀이터다. 최근까지 코로나-블루¹⁾로 힘들었으나 워드 코로나가 시작되며 부진했던 홍대 상권도 활기차게 움직인다. 그만큼 청년들도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청년 벤처 사업가들은 사통팔달 마포 공덕을 중심으로 인천과 서울 중심가로 뻗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포는 어느새 청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아토포스²⁾’로서 랜드마크가 되었다.

마포는 노인들이 건강을 챙기며 활동하기 좋은 곳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종주할 수 있는 한강 길부터 대교 밑 곳곳에 포진된 운동기구들이 존재한다. 또 용산을 시작으로 문산까지 가는 경의선 열차를 마포구는 다 지하화 했다. 그리고 그 철길을 다 ‘경의선숲길로 만들었다.’ 이렇게 공원과 산책로, 자전거 코스가 준비된 곳에서 노인 분들은 충분히 건강을 챙기기 위해 밖으로 나선다.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모여드는 지역,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 이면에는 실패, 우울, 무기력, 고독, 자살 등의 오명을 쓰게 되는 마포만의 지역적 특징이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실업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어 1인 가구 노인들이 많아졌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활기, 젊음,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긍정성을 앞세우기 이전에 청년자살과 노인 고독사, 세대갈등의 문제를 들

1)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우울증

2) ‘비장소성’ 어떤 장소에 고정되지 않은 것, 어디든 공간이 되는 현상,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장소성을 뜻하는 그리스어 토포스(topos)에 부정의 접두사 a가 붙은 단어로 비장소성이라는 뜻을 지닌다. 프랑스 평론가이자 철학자인 롤랑 바르트의 저서 〈사랑의 단상〉에 등장한 개념이다.

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청년과 노인에게 맞춤형 정책사업을 만들려고 한다. 청년의 자살을 예방하고, 노인의 고독사 문제와 고립감, 건강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햇빛보기 프로젝트 건강한 사회활동 정책3)’을 실행한다.

본론

공통의 문제(청년세대와 노인세대)



위의 표에서도 보이듯 30대 청년들의 자살률과 70대, 80대의 노인들의 자살률의 추이가 한국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OECD 평균 추세보다 월등히 높은 포인트를 보인다는 것이 두 세대의 공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위 서론에 언급했던 자살의 성지라는 오명을 쓰게 만드는 마포만의 지역적 특징이 있다. 바로 마포대교다. 마포대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잇는 길이 1,390m, 너비 45.5m의 왕복 10차선 다리이다.

마포대교는 서강대교와 더불어 여의도를 지나 인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요충지다. 그런데 마포대교는 2010년 이후⁴⁾ 서울 시내 주요 한강 다리 중 투신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자살에 대한 대처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마포구청에 전화를 걸었고, 여러 부서를 돌고 돌아 보건소 건강증진과 자살 예방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지도에서 보이듯(빨간 네모박스) 명칭은 마포대교이지만 영등포

3) 지역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정책 이름에 대한 공모사업도 진행한다.

4) 2010년 이전에는 한강대교가 자살 1위

구에서 마포대교의 80%를 관리하고 나머지 20%만 마포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명칭이 마포대교로 쓰이다 보니 청년들이 뛰어내렸다는 기사가 나면 지역에서 구민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마포구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웅성거림이 돌곤 했다. 특히 자살률 1위 다리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면서 자살예방책이라고는 심리학자들과 논의도 없이 공모사업을 통한 다리난간에 쓰인 문구가 전부였다. 문구를 보면 “수영 잘해요?”와 같은 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 도발하듯 적혀 있는 문구들에 “과연 자살 예방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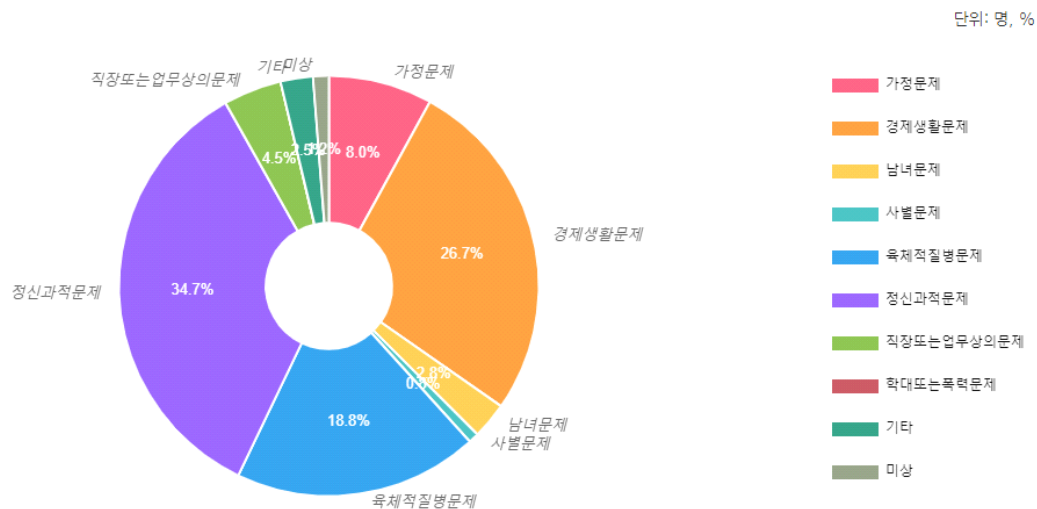


그림- 마포대교 난간에 쓰인 문구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청년자살의 문제를 진단하고, 노인들의 고독사와 건강악화 이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나왔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 청년자살과 노인 고독사의 전반적인 자살 동기를 파악해보았다.

청년자살과 노인 고독사의 자살 동기

2019년 자살원인(동기)별 자살 현황



자살원인(동기)	자살사망자 수	비율
가정문제	1,069	8.0
경제생활문제	3,564	26.7
남녀문제	373	2.8
사별문제	113	0.8
육체적질병문제	2,518	18.8
정신과적문제	4,638	34.7
직장또는업무상의문제	598	4.5
학대또는폭력문제	4	0.0
기타	330	2.5
미상	160	1.2
전체	13,367	100.0

위의 데이터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⁵⁾’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한 것이며, 자살 동기 분석에 대한 데이터다. 1위는 34.7%를 차지한 정신과적 문제다. 2위는 26.7%를 차지한 경제생활 문제다. 3위는 18.8%를 차지한 육체적 질병 문제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경제생활이 무려 50%를 넘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청년자살⁶⁾의 이면에는 취업과 돈, 경제생활이 주를 이루었다. 노

5) <https://spckorea-stat.or.kr/userlogin.do>

6)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65>

인 고독사⁷⁾의 이면에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노인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독사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정신과적 문제는 주로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인 DSM⁸⁾-5를 가지고 우울증과 우울감을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날씨가 좋지 않아 느끼는 기분저하, 무기력, 우울은 주로 우울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우울감이 4주 이상 지속 되면, DSM-5의 진단기준에 따라 우울증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다.⁹⁾ 흔히 주변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 내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DSM-5의 기준에 따라 진단하면, 우울증이 아니고 무기력을 호소하거나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우울감이 지속 되어 실제로 우울증 초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우울증인지 우울감인지 구분할 수 없어 우리는 이를 다 우울증이라고 일반화시켜 이야기하고 있다. 정책연구과 제발표¹⁰⁾가 있었던 날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의 지도교수 코멘트¹¹⁾에 대한 보완할 점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고위험군(자살시도자) 청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 신체활동을 시키거나, 걷기를 진행하거나 노인들에게 키오스크 활용법을 알려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위험군의 청년들과 노인들은 그에 맞는 정책설계가 되어야 한다.

햇빛보기 프로젝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일반인은 고위험군이 아닌 초기우울감, 초기무기력, 사회성 부족, 약한 고립감 정도의 가벼운 수준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실제 건강한 청년과 노인을 말한다. 고위험군의 청년들은 실제 약물치료와 병행하며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 급하다. 그렇다고 건강과 취업, 스펙이 필요한 일반 청년들에게도 고위험군의 문제 때문에 정책을 막을 순 없다. 일반 청년, 일반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은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리 예방을 통해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햇빛 백신을 놓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햇빛보기 프로젝트 건강한 사회활동 정책의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

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08000036>

8) DSM-5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약칭 DSM)의 2013년에 나온 다섯 번째 개정판으로 미국정신의학협회(APA)에서 발행한 분류 및 진단 절차이다.

9) <https://brunch.co.kr/@mentalconsultin/61>

10) 11월 27일 (토) 13시~18시 서대문 위드 스페이스 정책보고서발표 A조 A-12 발표자 고병준

11) 이동진 도봉구청장: “청년 문제와 노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너무 좋았고, 특히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어주는 지점은 좋았다. 걷기도 좋고, 키오스크도 다 좋았다. 과연 청년의 고위험군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낼 것인가?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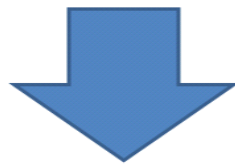
햇빛보기 프로젝트 건강한 사회활동 정책

햇빛보기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무기력과 우울증 및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정책을 이야기한다. 또 노인 건강증진에 효과적이며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 위에 언급했듯이 대상을 구체화했다. 정신적 문제가 없는 청년들과 노인의 일상적인 건강증진을 통해 백신을 맞듯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 근육 만들기¹²⁾’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햇빛은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면이 있고, 햇빛을 보기 위해 움직이는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정신적인 측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의 우울증 및 자살을 예방

노인의 건강증진과 고독사를 예방



햇빛

햇빛은 건강에 탁월하다. 특히 햇빛에 사람의 신체를 20분 이상 노출 시키면 사람의 몸속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생성된다. 이 신경전달물질이 생성되면 암세포를 죽이고, 면역력을 활성화하며,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엔도르핀이 생성된다. 특히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도파민이 활성화되어 엔도르핀이 억제되고 세로토닌의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낮아진다. 이는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고 엔도르핀을 활성화해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밖에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혈류를 자극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살균작용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청년

12) 마음 근육 만들기는 신체 건강을 위해 밖에서 걷기, 조깅 등을 하듯 마음도 근육을 만들어 무기력과 우울증을 예방한다.

들의 건강과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햇빛보기 프로젝트 건강한 사회활동 정책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면, 지방자치 선에서 청년들과 노인들의 건강한 사회활동으로 환원할 수 있다.



햇빛보기 프로젝트 건강한 사회활동 정책

1. **한강길 걷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한강길을 시작으로 마포나루 종점까지 산책코스가 이미 구축되어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¹³⁾가 가능하다. 특히 정책예산이 크게 들지 않고, 당장 준비를 통해 시작할 수 있는 실행력이 높고 사람들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정책이다.
2. **외부활동 인식**- 청년들과 노인들이 햇빛보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부활동을 인식한다. 즉 햇빛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와야 하고, 나와서 걷기 프로젝트 임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가벼운 임무를 성취할 수 있게 돕는다.
3. **마을 공동체 상호작용**- 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보니 작은 단위에서는 자신의 동네, 골목과 구 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자신의 동네에 필요한 일,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필요한 지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한다.
4. **청년취업 및 노인 활동**- 청년과 노인을 이어주는 쌍방의 활동이 가능하다. 청년들은 스펙 한 줄을 쓰기 위해 토익부터 봉사활동까지 다양한 이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을 지자체 햇빛보기 프로젝트에서 청년들이 잘하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을 노

13) 정책발표회에서 정책아카데미 2기 동료들에게 받은 포스트잇 아이디어- 걷기 캠페인, 연예인 홍보, 걷기 챌린지 등

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일한 이력을 만들어준다. 더불어 몇 개월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수준의 금액을 산정해 금전적인 어려움도 소량 해결해준다. 노인들은 외부활동을 인식하며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난을 겪지 않는다. 키오스크 활용과 적극적인 스마트폰 활용을 배우며, 청년들과 소통한다. 노인들이 교육생 역할을 해줌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키 역할을 한다. 이런 시너지 작용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부재 및 갈등을 지자체에서 모니터링 요원¹⁴⁾을 통해 보완하고 해결한다.

5. **고위험군 관리**- 청년과 노인 중에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및 자살 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햇빛보기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 약물치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우울증 완화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고위험군은 따로 청년과 노인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안에서도 공동체, 사회활동,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위의 다섯 가지 햇빛보기 프로젝트 건강한 사회활동 정책을 통해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공공기관 이력을 활용할 기회를 주고, 노인에게는 고립을 해소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정책의 큰 장점이 있다.

지자체의 역할

1. **청년 일자리 제공**- 노인교육생을 통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교육¹⁵⁾
(취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2. **공공기관 경력 사항 인정**- 실제 3개월 이상 일할 기회를 주며, 공공기관에서 일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만들어준다.
3. **프로그램**- 청년과 노인의 세대 간 격차를 줄일 집단상담 프로그램 제공
4. **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꾸준한 연계서비스**- 순간 생겼다 사라지는 일회성 이벤트 형식의 정책제안이 아닌 가장 시작하기 좋고 실행력 빠른 지방자치부터 탄탄한 구조를 만든다. 특히 청년취업에 대한 조건으로 나가는 급여 명목의 예산편성 이외에 걷기, 햇빛보기, 마을 공동체는 큰 규모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자체 정착된 순환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14) 심리전문가, 코칭 전문가, 소통전문가 등의 멘토 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여

15) 청년들이 이 교육을 하고 싶어 따로 무언가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정책의 주요 장점이다.

결론

서울시 마포구는 자살 명소 1위라는 오명을 가진 마포대교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청년과 노인 고독사의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부터 정책을 통해 청년 문제와 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규모로 청년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한 개인의 서사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지자체에서 실행이 빠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내가 제안한 햇빛보기 프로젝트 건강한 사회활동 정책은 큰 규모의 예산이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도 필요 없다. 마포대교 밑 산책코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포대교는 자살 명소라는 오명을 벗어난다. 걷기 행사와 캠페인을 제공하고, 햇빛보기를 통해 건강증진을 바로 실천할 수 있다. 특히 밖으로 나와 활동한다는 인식을 통해 노인과 청년 간의 세대 간 소통이라는 주제를 다룰 수 있고, 청년은 노인에게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을 교육하고 노인은 청년 일자리의 키가 되며 서로에게 상호작용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나는 햇빛보기 프로젝트 건강한 사회활동 정책을 통해 고립되지 않는 청년과 노인, 활기찬 청년, 스마트폰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노인의 이상을 그린다. 그 노인들의 청년세대일 때의 비결 전수 등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책으로서 청년과 노인들의 자살 예방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함을 꿈꾼다. 가족 중 누군가 우울함을 겪고 있으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같이 산책하러 나가고, 작은 성취를 할 수 있게 돕는다. 지자체의 정책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움직이면, 개인의 서사로부터 가족으로 가족으로부터 마을로 마을로부터 사회로 좋은 효과가 뻗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햇빛보기 프로젝트 건강한 사회활동 정책을 강력히 만들어 보고 싶다.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 나도 마을버스 운전자

박정선 세종시당 당직자

1. 정책연구 배경 및 목적

- 지금까지 도로의 건설 및 투자는 국가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라 도로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여 도로환경 측면에서 질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므로 종래의 이동성 위주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을 중시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미래도로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미래도로 관점에서 녹색교통, 지속가능 교통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가 한정된 도로 위를 통행함으로써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도로의 공급, 상습 정체구간 운영 효율화, 교통수요관리 등 여러 교통정책 추진 시 계획·분석 등을 토대로 본 정책연구가 세종시 교통그린뉴딜 효과와 인구 38만 작은 도시이지만 문화-행정도시로의 자급자족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예측가능 하다.
- 우리나라도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요구와 도로경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존도로에 대한 도로환경의 개선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교통’, ‘ESG를 겸비한 도시뉴딜정책’ 그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로가 국민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친근한 SOC시설로써 이용자들에게 인식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지속가능한 녹색뉴딜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제안은 행정수도로 계획된 도시위상에 걸맞게 Smart & Beautiful City로 추진해 특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좁은 도로의 경관과 이용자편의, 온 마을이 축제처럼 관광개발을 위한 대중교통을 선보임으로서 환경지향적인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보편적복지가 세종시민들과 세종을 찾아올 많은 관광객들에게 이동수단과 문화체험을 맞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행복도시의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아파트촌에 사

는 아이들의 감성을 함께 자극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형성을 마련하고자 본 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스마트 관광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 미래형 도로설계

- 세종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행정구역상 중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래형 도로설계기법으로 계획된 도시이다. ‘미래도시도로’는 자동차와 사물간 통신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차량이 도로 위를 움직이게 되는 융복합기술이 도입된 스마트한 도로이다.

Comfortable	Competitive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첨단기술 중심의 경쟁력 있는 도로 - 자율주행 - 첨단기술
Clean	Cooperative
깨끗한 도로 - 유지관리 - 환경·에너지	상생의 도로 - 초국경, 통일 시대 - 투자자원

○ 미래도로의 구성요소는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하여 부상되는 관련기술로 구성되고 있음



미래도로의 구성요소

○ 미래형 도로설계 정책방향(국토교통부, 2016) -> 세종시 마을버스 관광도시로 육성가능

- 자율주행 100%를 넘어 인공지능도로 실현

(1)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 '35년까지 도시부 도로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 C-ITS 확대구축
- 자율주행 기반 교통관리
- 실시간 교통정보, 통행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을 예측하는 기술을 고도화하여 전국 도로로 확대
-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라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혼재된 상황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능한 교통 운영·관리체계 마련

◆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도로분야 핵심이슈를 발굴하여
「트랜스로드(TransRoad) 7대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방안 마련

【 미래 트렌드 】

- ▶ 자율주행, AI, 신교통
- ▶ 고령화, 메가시티, 삶의 질 향상
- ▶ 저성장, 쪼그라들, 통일
- ▶ 新기후변화 체제, 에너지 문제

【 도로분야 핵심이슈 】

- ▶ 자율주행 상용화
- ▶ 환경·에너지 중시
- ▶ 공간·투자제약 극복
- ▶ 유지관리 중심
- ▶ 슬림화·개방화
- ▶ 안전강화
- ▶ 시공간 확대

【 트랜스로드(TransRoad) 7대 비전 】

- | | |
|-----------------------------|-------------|
| ① 자율주행 100%를 넘어, 인공지능 도로 실현 | (자율주행) |
| ② 에너지 소비 0% 지향, 에너지 생산 도로 | (환경, 에너지) |
| ③ 공간활용을 2배로, 가치를 창출하는 도로 | (도시화, 투자자원) |
| ④ 1초 만에 진단·관리, 살아있는 도로 | (유지관리) |
| ⑤ 1g, 1mm, 더 가볍고 가까운 도로 | (첨단기술) |
| ⑥ 교통사고 0, 믿고 가는 도로 | (도로안전) |
| ⑦ 유라시아 1일 생활권, 세계로 뻗어가는 도로 | (초국경, 통일) |

3. 세종시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 2006년 세종시를 계획할 때 대중교통분담률 60%의 계획으로 도시와 도로가 구성이 되었음
- 2021년 현재 대중교통분담률은 16%, 모두 개인자동차로 출퇴근과 개별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80%넘게 나옴
-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본 결과 대중교통 노선 불편, 주차장불편, 어떻게 이용하지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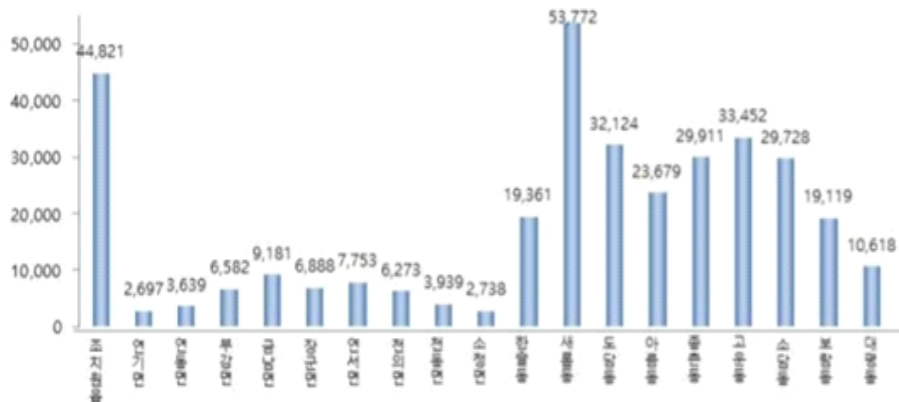
[표 2-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단위 : 명, 세대)

구 분	세대수	인구		
		합 계	남	여
2019	135,408	346,275	173,432	172,843
조치원읍	19,472	44,821	23,169	21,652
연기면	1,445	2,697	1,515	1,182
연동면	1,680	3,639	2,056	1,583
부강면	3,249	6,582	3,670	2,912
금남면	4,509	9,181	4,913	4,268
장군면	3,453	6,888	3,959	2,929
연서면	3,834	7,753	4,204	3,549
전의면	3,045	6,273	3,398	2,875
전동면	2,130	3,939	2,181	1,758
소정면	1,231	2,738	1,500	1,238
한솔동	6,333	19,361	9,537	9,824
새롬동	20,495	53,772	26,077	27,695
도담동	13,136	32,124	15,531	16,593
아름동	7,560	23,679	11,664	12,015
종촌동	10,691	29,911	14,485	15,426
고운동	11,436	33,452	16,278	17,174
소담동	10,973	29,728	14,636	15,092
보람동	6,810	19,119	9,396	9,723
대평동	3,926	10,618	5,263	5,355

자료 : 2020 세종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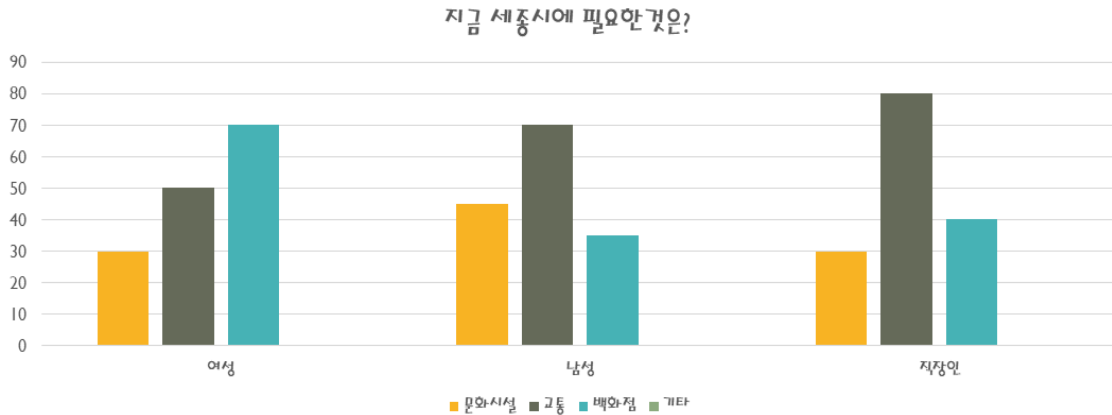
주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외국인 제외 / 한솔동(가람동), 새롬동(나성동, 다정동), 도담동(어진동), 보람동(반곡동)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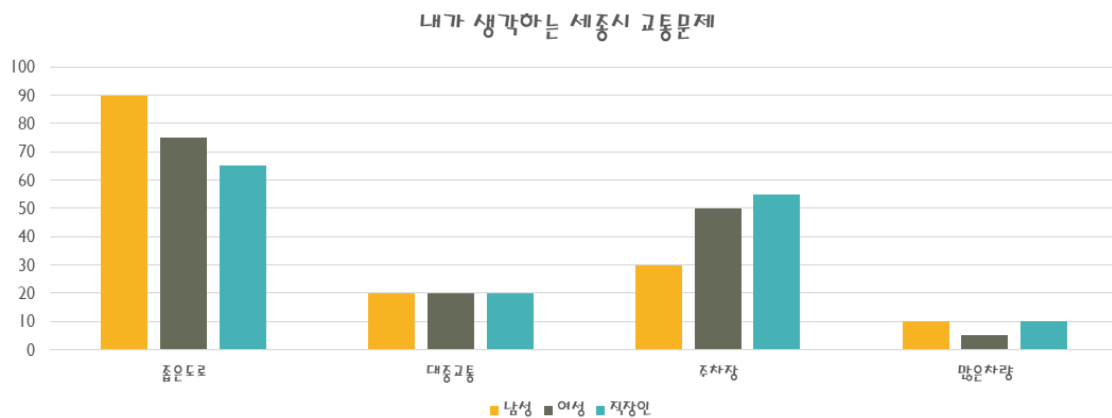
[그림 2-8]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4. 세종시민의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한 사전설문조사 실시 (세종시 2년이상 거주자 150명 설문)

4-1) 세종시 지금 필요한 정주여건은?



4-2) 세종시 교통불만 이유는?



5.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한 정책제안

○ 예산은 가능한지?

세종시 도시교통공사 1년 운수수입비&인건비 170억 -> 세종시 1년예산 1조 965억원 1%투자시 그린뉴딜 지속가능한 Smart & Beautiful 도시로 성장가능

○ 시민주도형 마을버스 운영

세종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신도심에는 경력단절여성, 시니어등 일자리를 구하는 인구가 많고,

농촌은 마을기업, 사회적농장체험등 세종시를 방문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한 콘텐츠가 많이 있음. 주민자치가 활발한 세종시에서 마을별로 관광테마를 구성해서 세종을 찾은 외부인 또는 관광객들이 무료버스를 타고 여행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낼 수 있는 세종형 스마스 관광 사업가능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도시재생 콜라보레이션)

○ 달리는 미술관

최근 애경에서는 추석선물세트에 고희작품등 유명한 외국작가의 디자인을 포장지에 입혀서 상품을 출시한 결과 전년대비 매출이 35%급등했고, 그 매출에 대한 이유는 같은 상품이어도 유명한 미술작품을 보는듯한 문화만족감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함.

○ 세종형 일자리구축가능 - 나도 마을버스 기사

세종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계획된 도로, 준비된 자동차등 어느 도시보다 먼저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선보일 수 있으며, 기존버스의 인건비해소를 위해 시간제일자리 제공으로 많은 분들이 본 정책에 긍정적으로 참여하여 대중교통 무료화에 걸맞은 즐거운 일자리를 시민주도형으로 만들어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함.

시니어,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자, 청년들이 하루 4시간 마을버스 기사가 되어 마을도 소개하는 드라이버-마을해설사 친근한 세종시 여행이 가능함

5. 결론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한 정책제안은 어느 도시든 추진하고자 하는 보편적복지 교통정책이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하고 또한 좁은 도로와 앞으로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대중교통 이용캠페인이 시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본 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을주민들이 만드는 마을버스, 우리 엄마가 운전하는 마을버스, 유럽이나 미술관에서 만나는 멋진 그림들이 마을버스에 랩핑이 되어 학교를 오가거나 걸어 다니며 미술관에 온 듯한 문화체험으로 온 마을이 온 시민이 마음 따뜻한 그런 세종시가 되기를 바라며 본 정책을 제안합니다. Smart & Beautiful 세종시로 놀러오세요 !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지켜지지 않는 의무고용

김동민 울산시당 당직자

I. 서론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정책으로 항상 높은 순위에 꼽히는 것은 일자리 정책입니다. 국민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 선거에서 또한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 정책입니다.

오랜 시간 계속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정책으로 채택되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계속 해결되지 않았다고 요구합니다. 취업자 현황, 고용률, 실업자, 휴직자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보더라도 국민의 요구는 타당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취임 당시 일자리 상황판을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할 정도로 큰 해결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해결의 단계라기보다 다른 이슈에 가려져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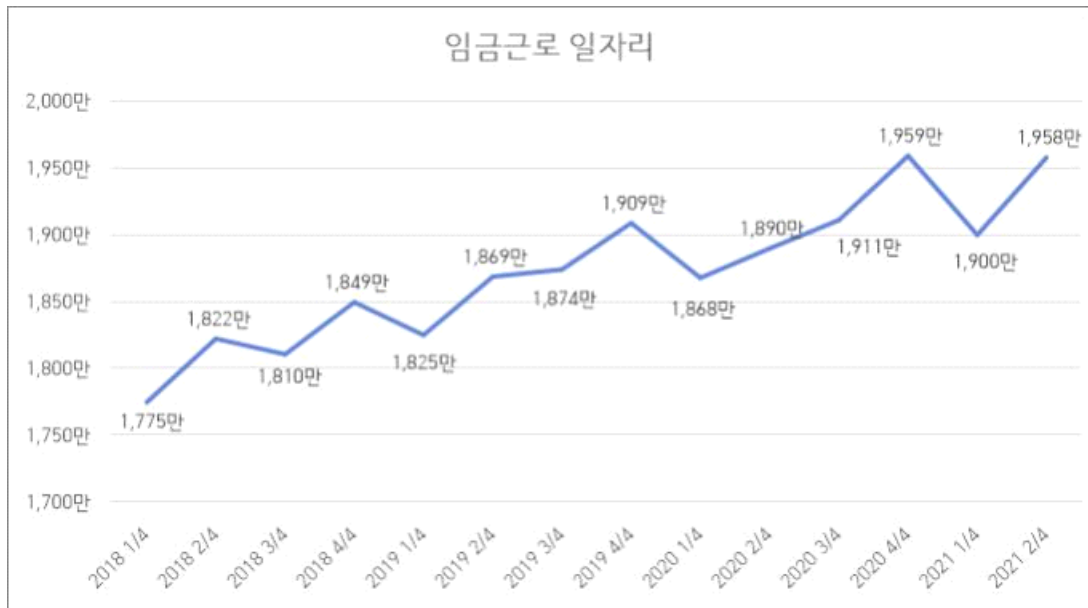
이번 정책연구과제에서는 고용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비롯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II. 본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여 그 효과가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제 전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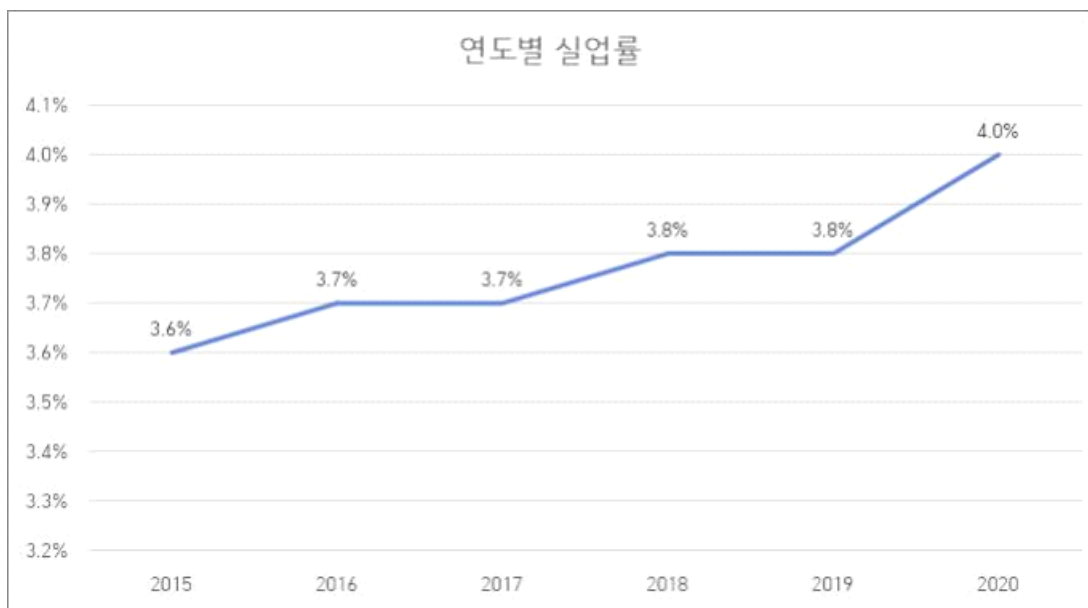
2017년 5월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습니다.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경제’부문의 국정전략 맨 앞에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내세우며 ‘일자리 정부’를 공식화했습니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코로나 범유행 속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표1]과 같이 꾸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표1 - 임금근로 일자리]

그러나 연도별 실업률은 [표2]와 같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2 - 연도별 실업률]

끊임없는 일자리 정책과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점은 그런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증가하는 점에 비추어 실업률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산업간 또는 업종 간의 계층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증가하는 일자리는 정책적 산업의 정보선점계층 또는, AI, 탄소제로, 수소산업 등 산업 전환 정책에서 준비된 소수만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정 집단의 일자리를 불특정 다수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중에는 법으로 제정되어 강제성을 띤 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먼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제2장 제5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한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436개의 대상기관 중 369개소 84.6%가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67개소 15.4%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의 3%도 청년을 고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20년 정원 387,574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22,798명으로 5.9%입니다. 청년고용의무 국정과제 목표를 5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과제 목표 5년 연속 달성 뒤에 청년고용의 현실이 숨어있습니다. 더는 청년은 신규고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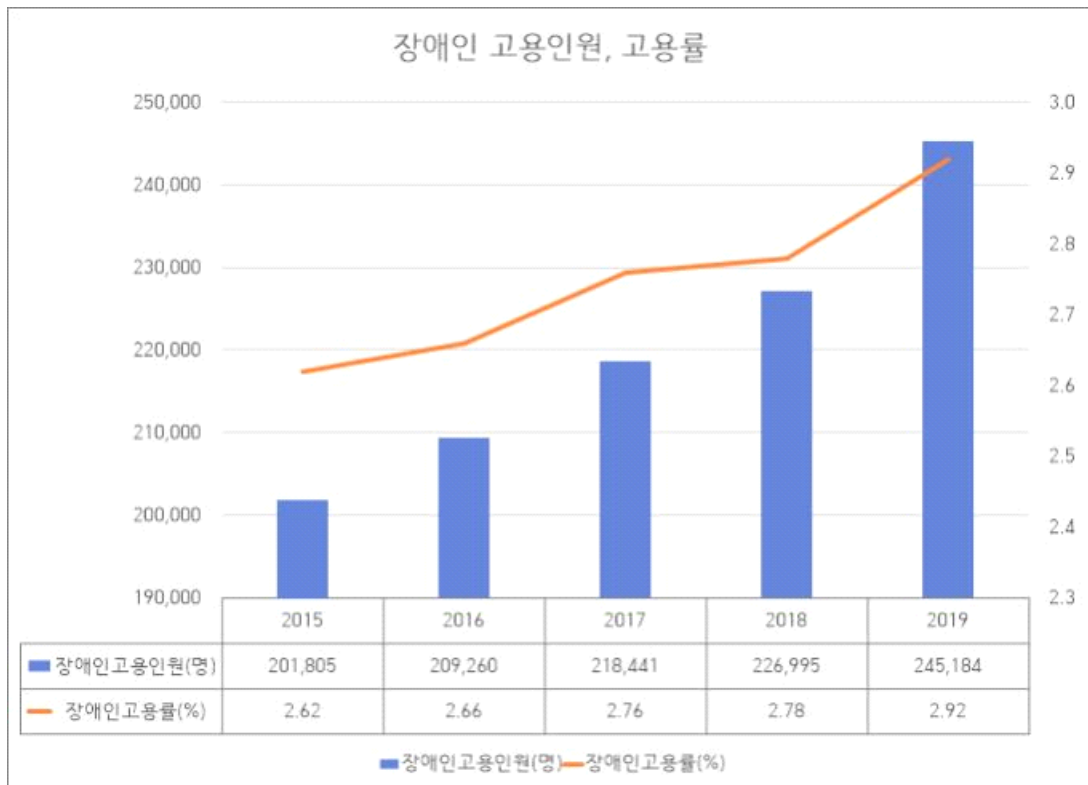
전체 신규고용에서 청년은 5.9%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에게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선택의 일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신규고용에서 청년 채용이 이처럼 5%대에 그치는 이유는 단순히 청년의 지원이 적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다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제28조 1항에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발표하는데, 2019년부터 변화 없이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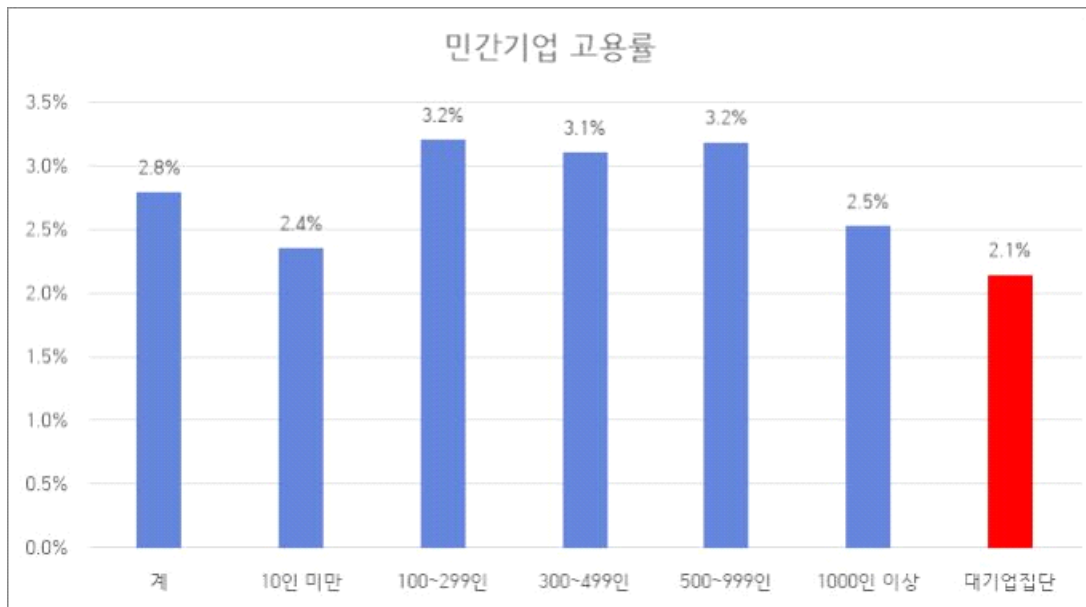
이런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을 달성한 사업체는 월 30만~80만 원가량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미이행 또는 미달한 경우 미충족 인원 1인당 109만~182만 원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52주, 209시간으로 계산한 최저 월급은 182만 원가량입니다. 고용장려금을 최소로 받았을 경우 최저 월급의 16.5%를 보전 받습니다. 고용부담금을 부가 받았을 경우 최저 월급보다 작거나 비슷합니다.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전혀 체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은 [표3]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3 -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고용인원과 고용률 모두 상승 추세이지만 장애인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민간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표4]와 같이 낮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12월 기준으로는 2.79%로 3.1%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의무고용률은 2.29%로 가장 낮습니다.



[표4 - 민간기업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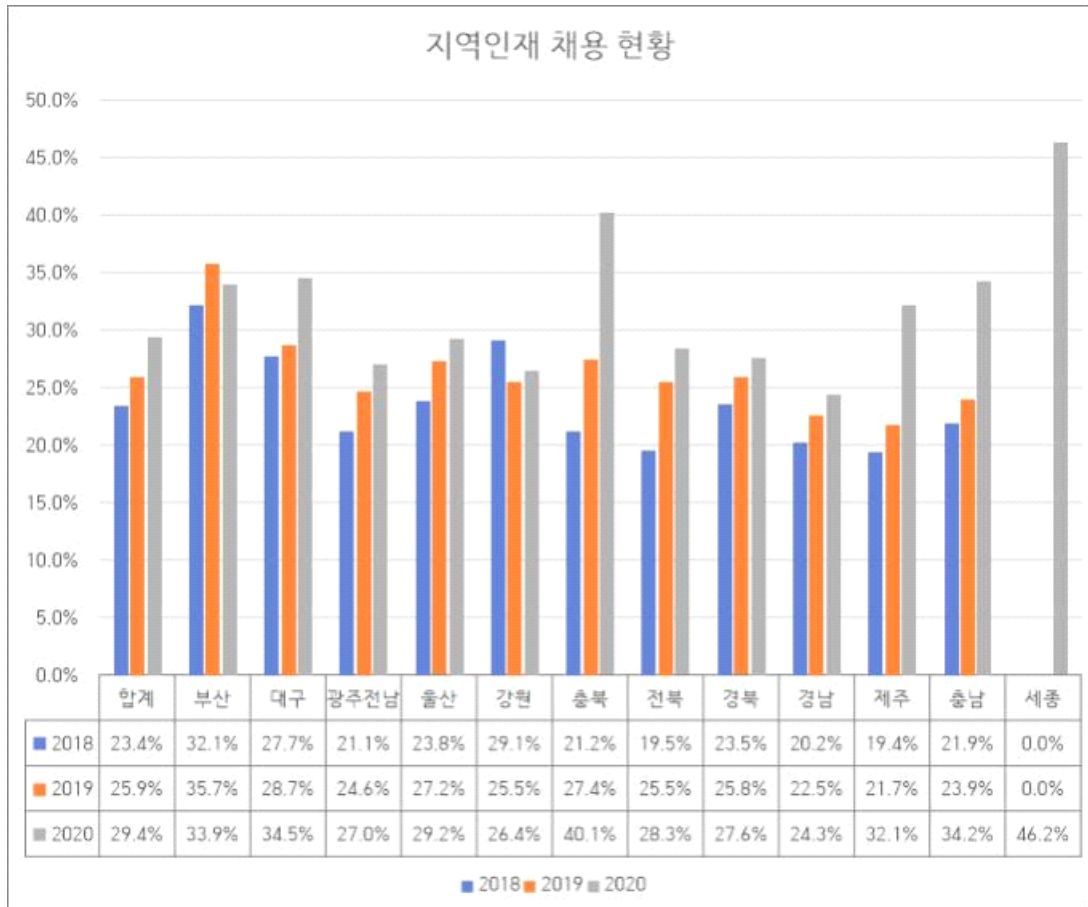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의무를 다하는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7,956개사에서 2020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6,904억 9,54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부 사업체는 10년 연속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택한 사례까지 다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한 기업 중 반도체, IT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업무 특성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법률의 의무와 사회 기여의 책무보다 기업 이윤의 논리가 최우선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S(사회책임경영) 부분에 장애인의무고용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에서는 관리 요소가 되어 장애인의무고용 목표를 갖게 됩니다. 역시 기업의 이윤 논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업 이윤의 논리에 기대서 사회적 기여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제29조 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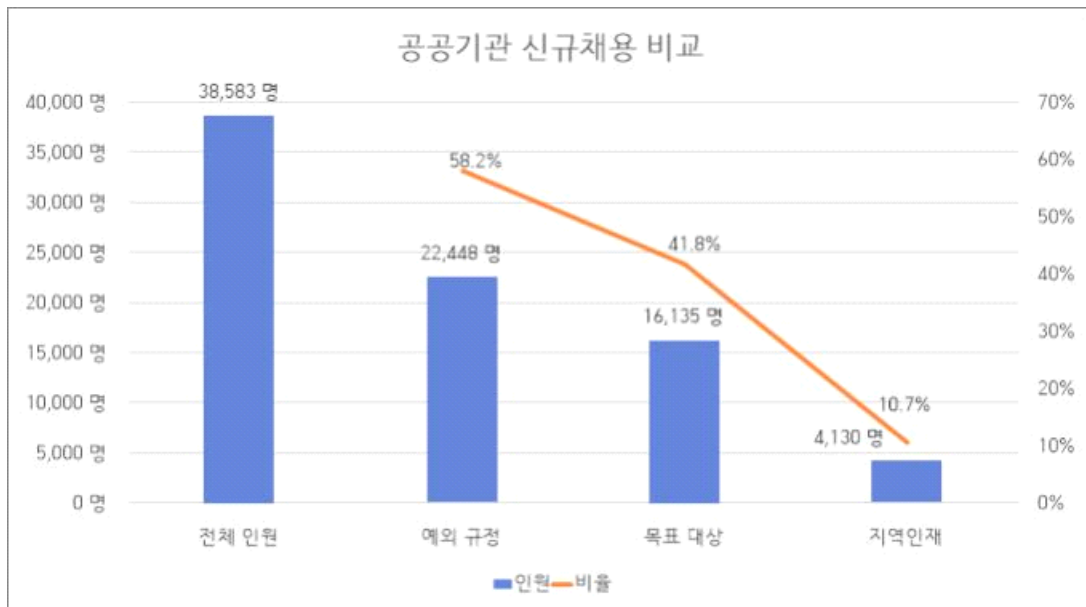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무채용 비율은 2018년 18%에서 해마다 3%씩 올려 2022년 30%까지 점차 확대될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은 [표5]와 같습니다.



[표5 - 지역인재 채용 현황]

목표치와 채용 현황의 그래프는 지역인재 채용 현황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인 5명 이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지역본부 채용, 합격 하한선 미달 등의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제외한 채용목표제 대상 인원입니다. 이런 예외 규정을 적용한 인원을 대상으로만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체 신규채용 대상과의 비교는 [표6]과 같습니다.



[표6 - 공공기관 신규채용 비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전체 인원은 38,583명입니다. 그중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입사자는 4,130명 10.7%에 불과합니다. 채용목표제 대상 인원으로 밝힌 3년 평균 26.2%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통한 입사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2,448명 58.2%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전체 신규채용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역인재 채용 전형 통계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인원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대상의 감소로 인해 더 적은 인원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전체 채용 인원의 결과를 수치로 보았을 때 공공기관의 예외 규정을 인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가장 많은 예외 조건으로 사용되는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 조건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뽑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주말이면 수도권 즉, 거주지로 이동하는 혁신 도시 관계자들의 이동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동 수단을 기관에서 따로 제공하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지역에서 근무를 오래 한다는 것만으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인재 배려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예외 규정을 부적절한 이유로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III. 결론

우리는 법률로 채용에 관련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 탈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감시와 지적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경영에 따른 논리로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무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발전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이행 장려금 범위를 넓혀야 하고, 불이행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고용의무는 고용문화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법률로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 감독과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고용문화 개선 정책에 고용의무에 대한 교육을 추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공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기업까지 ESG 경영평가에서 S(사회책임경영)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기업에서 앞장서는 사회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당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법 이행이 되도록 관리와 감독을 집중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의 책임소재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국정조사와 현안질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벤트성 관심이 아닌 정치권의 계속된 이행 감시와 촉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청년은 신규고용의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고용법의 청년의무고용조차 3%입니다. 청년이 아닌 87%와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3%의 청년만이 청년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기회가 보장됩니다. 청년이 부족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3%의 공간에서 청년끼리의 다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오로지 청년만을 위한 공간을 키워야 합니다. 청년 스스로 목적의식과 뚜렷한 목표 속에서 역량을 키울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울어진 기준으로 경쟁하는 청년을 방치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직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 조직의 연령구성은 역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입니다. 청년의 기회가 폭넓어지고 기회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 조직의 선순환 과정에서 지역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과 안정된 청년 일자리가 조성될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고 정확한 답을 찾기보다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면 발굴되고 개발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외하더라도 긴 고민과 호흡으로 적용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세 가지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에 그쳤지만 더욱 많은 사례를 연구하고 고민한다면 우리가 추구했던 방향성을 고치고 다듬어서 누군가에게 새롭게 던져줄 새로운 정책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개선 제언

김시은 지역당원

1. 서론(노인일자리 담당자의〈구 전담인력〉 처우개선 이유 및 목적)

2007년 처음 도입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 기관에 근무하는 상근 사회복지인력으로서 참여자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인력에 요구되는 실무경험이나 자격증 기준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자격이 열려있다.

1) 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운영

지자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배치되는 상근인력으로 17개 시·도당 각 1명씩 배정하며 12개월, 월 1,893천원 이내에서 시·도별 탄력 운영한다.

주요 업무내용으로는 시·도별 사업량 예산 배분 및 사업 계획 심사 지원, 시·도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보고현황 관리 지원, 시·도별 사업부진, 미 시행 사업 파악 및 관리 지원, 시·도별 사업 성과관리(평가) 지원, 시·도 내 신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발굴,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지원 등이다.

2)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운영

지자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배치되는 상근인력으로 시·도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배정현황 별도 통보하며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수행기관(시·군·구 포함)의 사업량과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2개월, 월 1,877천원 지원(근로자본인부담분 4대 보험료 포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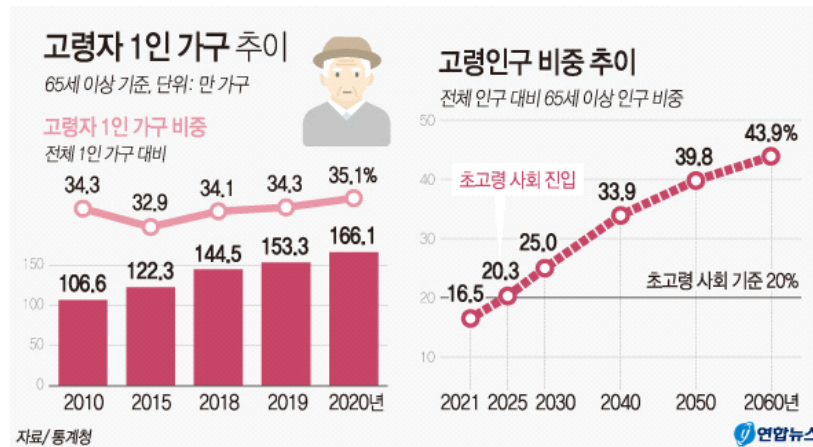
며 수행기관 판단에 의해 예산 범위 내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활용 기간 탄력운영이 가능하다. 주요 업무내용으로는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 및 활동관리 지원, 매 월별 참여자 활동비(또는 임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관련 업무, 권역 내 신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기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 등이다.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업 운영안내, 사업 및 직무이해 관련 기초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온라인교육(기초과정)등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외 타 업무지원 불가이다. 사회복지 상근인력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 기준은 호봉제가 아닌 최저임금제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와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급여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의 전담인력 배치기준 현실화 및 처우개선에서 ‘급여증액을 통한 처우개선’, ‘근로기간 연장으로 업무 연속성 및 근로 안정성 보장’을 가장 개선이 시급한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하였다. 전담인력의 항목별 직무만족도 문항에서 ‘임금 및 소득’, ‘직업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제 전담인력의 현 기관 계속 고용기간은 1.9년으로 평균 2년에 미치지 못하고, 월 보수도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187.7만원 수준이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월 1,822,480원보다 겨우 5만 원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는 참여노인을 직접 대면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수행하는 만큼 노인참여자의 만족감은 물론 동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담보하는데 그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 고려할 때,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장기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점차적인 증액을 통한 급여수준 현실화, 근로기간 연장이나 전담인력 경력자 우선 채용 등을 통한 고용안전성 강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I. 정책연구

1. 울산광역시 노인 인구 및 고령화 예측

□ 고령 인구 추이¹⁾



올해 울산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2.9%로 10년 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고령자 비중은 2030년 22.9%까지 치솟아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 이상)에 진입 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진행된 고령화 속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빠른 만큼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좀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1.9.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울산의 고령인구는 14만 7000명으로(12.9%) 11년 전인 2010년보다 6.2%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국의 고령자 비율은 10.8%에서 16.5%로 5.7%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재 울산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세종 다음으로 낮아 전국 1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47년이 되면 지역 고령인구가 35만 8000명까지 치솟고, 고령비율은 37%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고령인구 비율 순위 역시 11위로 크게 올라가게 된다. 현재 울산보다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은 서울, 광주, 대전, 제주 보다 더 고령화 도시가 되는 셈이다.

2. 2021년 울산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2021년 울산은 27개 기관 전체 사업량 13,130개(공익형 10,983, 사회서비스형 1,137 시장형 600, 취업 알선형 410)이며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는 전체 89명이다.

1) 경상일보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량 및 예산배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1) 노인일자리 사업량 및 예산배정 현황²⁾

(단위 : 명/백만원)

구분 (기관수)	예산배정			사업량					전담인력
	계	국비	시비	계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총계(27개)	46,013	23,007	23,006	13,130	10,983	1,137	600	410	89
시직속계(1개)	388	194	194	100	100				2
시	26	13	13						1
시노인복지관	340	170	170	100	100				1
내일설계센터	22	11	11						
구군계(26개)	45,625	22,813	22,812	13,030	10,883	1,137	600	410	87
중구(5개)	10,535	5,268	5,267	3,045	2,519	244	182	100	21
남구(6개)	11,605	5,802	5,803	3,257	2,822	258	177		22
동구(6개)	6,365	3,183	3,182	1,791	1,506	178	57	50	11
북구(4개)	6,518	3,259	3,259	1,917	1,464	189	104	160	13
울주군(5개)	10,602	5,301	5,301	3,020	2,572	268	80	100	20

2) 2021년 울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수행기관 현황

울산은 북구, 중구, 동구, 남구, 울주군 총 5개 구군 28개 수행기관이 있으며 기관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북구시니어클럽에 종사 중이다.

북구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남구	(사)대한노인회 울산남구지회
	울산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도산노인복지관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문수실버복지관
	울산북구시니어클럽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중구	대한노인회울산중구지회	울주군	울산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울산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울산남구시니어클럽
	울산중구시니어클럽		남부노인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함월노인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
직속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울산 울주군청
동구	남목노인복지관		울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울산동구지회		주식회사 코끼리 공장
	방어진노인복지관		
	울산동구노인복지관		
	울산동구시니어클럽		
	울산 동구청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2) 2021년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 울산광역시 노인복지시설

[표 3-34] 울산광역시 노인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합 계		요양·양로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시설수	인원수	시설수	인원수	시설수	인원수	시설수	인원수	시설수	인원수	시설수	인원수
923	51,073	53	1,887	13	8,097	828	32,630	23	2,056	6	6,403

3)

※ 2020. 9. 30. 기준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세부내용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배경 및 목적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며,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063년)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비 핵심 정책이다.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재능 나눔,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에 목적이 있다.

2)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표 2-1-7〉 민간기관 유형별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규직원수		비정규직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니어클럽	6.3	2.1	9.0	4.4
대한노인회	4.8	3.3	3.6	2.8
노인복지관	16.8	11.8	11.8	14.5
종합사회복지관	16.9	7.4	5.8	5.8
노인일자리전담기관	6.4	7.1	7.2	6.9
기타	13.4	44.8	5.6	12.9
전체	12.0	21.6	7.4	10.3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보유 여부는 전체 기관 중 87.4%가 전담인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관유형별로는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3)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21~2025)

은 90%이상이 전담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복지관이 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기관의 정규직원 수는 평균 12명, 비정규직원 수는 7.4명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관의 인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정규직 평균 16.8명, 비정규 평균 11.8명), 종합사회복지관과 기타 유형의 기관은 비정규직원의 비중보다 정규직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시니어클럽은 비정규직원 수 평균이 9.0명으로 정규직원수 평균(6.3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지자체	29.3	26.1
시니어클럽	92.7	11.3
대한노인회	53.0	24.5
노인복지관	33.7	24.6
종합사회복지관	29.3	25.0
노인일자리전담기관	67.0	35.2
기타	39.9	28.2
지자체	29.3	26.1
민간기관	47.0	31.9
전체	45.2	31.8

〈표 2-1-9〉 기관유형별 노인 일자리 업무비중⁴⁾

기관 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표 2-1-9〉, 전체 기관 평균은 45.2%이며, 지자체(29.3%)에 비해 민간기관(47.0%)에서 업무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히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이 기관 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92.7%로 가장 높으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67.0%, 대한노인회 5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17〉 사업유형별 담당 담당 참여노인 수 및 적정 참여노인 수

(단위 : 명)

	현재 맡고 있는 참여노인 수		종사자 1인이 담당하기 적절한 참여노인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익활동	253.0	261.6	124.9	130.3
사회서비스형	41.2	39.5	42.3	36.7
시장형	77.0	106.7	41.9	43.7

4)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현재 맡고 있는 참여노인 수를 파악한 결과, 공익활동형의 경우 종사자 1인 평균 253.0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1인이 담당하기 적절한 참여노인 수에 대해 공익활동형은 평균 12.9명으로 현재 담당하는 참여노인 수의 절반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사회서비스형은 현재 담당하는 참여노인 수와 적정 참여노인 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사업유형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추계〉⁵⁾

구분	'04년	'08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일자리 창출 목표 (천개)	25	117	240	310	370	419	467	513	640	740	821
수요충족률(%)	3.4	13.0	22.1	27.1	31.1	34.0	29.5	31.1	37.2	40.7	41.8
노인 인구수(천명)	4,130	4,989	6,023	6,277	6,541	6,763	7,066	7,372	7,685	8,125	8,537
일자리 희망 노인* (천명)	743	898	1,084	1,142	1,190	1,231	1,583	1,651	1,721	1,820	1,912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추계〉

구분	합계	지자체	시니어 클럽	대한 노인회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센터	지역 문화원	기타
누적참여인원	762,142	112,998	262,442	115,274	117,436	43,290	33,201	1,275	74,226

3)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2021년 80만개에서 2022년 84만 5천 개로 확대 실시예정이며 추진체계는 지자체 보조(서울30%, 지방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와, 각 지자체 및 수행기관(약 1,300만개)로 운영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2022년 참여자 모집안내는 2021.11.29. ~ 12.17.로 안내 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는 2021.12.06. ~ 12.17.로 안내 후 현재 모집중이다. 또한 울산시 북구는 2022년 사업 규모 35개 사업에 1,914명 모집, 올해보다 52명이 늘었다. 참여자 신청은 각 행정복지지원센터(공익형 접수만 가능) 및 수행기관에 직접 참여자가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 시에는 신분증, 등본 1통, 예방접종 확인서(접종확인 어플 또는 문자)를 노인일자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6조 9,377억 원 편성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2021년 80만 명에서 2022년 84.5만 명으로 4.5만 개 확대 예정이다.

5) 연도별 노인인구(장래 인구추계, 2019.3, 통계청)

과 제	2021년	2022년	주요 내용
노인 일자리	80만 명	84.5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활동(1.8만 개), 사회서비스형(2.5만 개) 등 노인 일자리 4.5만 개 확대

4.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급여 기준

	2021년	2022년																				
사도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1,893천원 / 성과급 1,257천원 ※ 사·도는 1년 이상(12개월 근로계약자 포함)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퇴직금을 부담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1,893천원 / 성과급 1,261천원 ※ 사·도는 1년 이상(12개월 근로계약자 포함)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퇴직금을 <u>적립·지급</u>하여야 함(퇴직적립금 포함 13개월 인건비 지원)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1,850천원 / 성과급 1,257천원 • (배치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구분</th> <th>배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공익활동</td> <td>참여노인 150명당 1명</td> </tr> <tr> <td>사회서비스형</td> <td>참여노인 130명당 1명</td> </tr> <tr> <td>시장형</td> <td></td> </tr> <tr> <td>취업알선형</td> <td>(지자체보조) 참여노인 100명당 1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공개모집) 	사업구분	배치기준	공익활동	참여노인 150명당 1명	사회서비스형	참여노인 130명당 1명	시장형		취업알선형	(지자체보조) 참여노인 100명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1,877천원 / 성과급 1,261천원 • (배치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구분</th> <th>배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공익활동</td> <td>참여노인 150명당 1명</td> </tr> <tr> <td>사회서비스형</td> <td>참여노인 120명당 1명</td> </tr> <tr> <td>시장형</td> <td>참여노인 130명당 1명</td> </tr> <tr> <td>취업알선형</td> <td>(지자체보조) 참여노인 100명당 1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공개모집) ※ 수행기관 내 정년 등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u>지침에 따름</u> 	사업구분	배치기준	공익활동	참여노인 150명당 1명	사회서비스형	참여노인 120명당 1명	시장형	참여노인 130명당 1명	취업알선형	(지자체보조) 참여노인 100명당 1명
사업구분	배치기준																					
공익활동	참여노인 150명당 1명																					
사회서비스형	참여노인 130명당 1명																					
시장형																						
취업알선형	(지자체보조) 참여노인 100명당 1명																					
사업구분	배치기준																					
공익활동	참여노인 150명당 1명																					
사회서비스형	참여노인 120명당 1명																					
시장형	참여노인 130명당 1명																					
취업알선형	(지자체보조) 참여노인 100명당 1명																					
사업단 팀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업무) 노인일자리 실무자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현장업무 지원·보조 (참여자 중 팀장 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실무자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현장업무 지원·보조(참여자 중 팀장 지정 운영) - 활동 전 안전사고 예방 안내, 스트레칭 및 참여자 건강상태 체크, 활동 중 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 지원 등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는 사회복지사 급여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다. 기본급(1,877,000원)은 2021년 기준 최저임금 1,822,480원과 비교해 겨우 54,520원이 많은 수준이며, 전담인력으로 3년, 5년을 근무해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 3조, 시행령 제 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의 사회복지사 1호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사회/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직위(호봉)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호봉	2,614,000	2,343,700	2,138,300	2,009,900	1,910,300
2호봉	2,708,400	2,424,100	2,208,800	2,073,500	1,940,600
3호봉	2,811,400	2,517,400	2,280,900	2,145,000	1,991,500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시간 외 근무수당, 가족 수당 등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나오는 성과급(명절수당) 1,261,000원은 겨우 봉급액의 67.18% 수준에 불과하다.

5.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 1) 해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에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이 늘고 있다.
- 2) 노인일자리 담당자 대다수가 계약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며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3)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명당 참여 노인 약 150명 관리(공익형 기준)하고 있다.
- 4) 노인일자리사업이 매년 이어지는 지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1년마다 바뀌는 현실이다 보니 수행기관 관리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다.
- 5) 신규채용자는 참여자들과의 신뢰를 쌓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기관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부족 현상을 느낀다.
- 6) 노인일자리 담당자 1인이 관리하는 인원이 실제 운영규정의 인원보다 초과하여 관리하며 1인당 2개 이상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며,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 7) 보통 근무기간이(1/1~12/31) 연초 시작 연말 종료로 되기 때문에 다음 채용자에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 8) 퇴사자는 퇴사일 전(12/31)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 한 후 퇴사 후 신규채용자가 입사 후 이전 사업담당자의 사업종결보고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종결 확인을 한다.
- 9) 1년 계약직으로 인한 근무 경력을 쌓기가 어렵고 중도 퇴사자가 발생 할 경우 남은 직원들이 신규채용자가 채용되기 전까지 본인 사업 이외의 추가로 사업 운영을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Ⅲ. 처우개선 해결방안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급여를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전혀 필요 없는 단순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1.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급여인상 및 보수 차별금지

노인일자리 담당자 2022년 급여가 1,976,000원으로 최저임금 1,914,440원에 비해 겨우 61,560원 높은 수준이다.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에 준하는 현실화 된 급여 지급
- 2) 근무 년 수에 따른 차등화된 급여 지급 (체계적인 호봉제 도입)
- 3) 종사자 수당 지급
- 4) 업무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 차별금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추석, 설)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 임금(보수월액)X1/209X1.5)	연장 근로를 한 다음 달의 보수 지급일
가족 수당	부양 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1만원 (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2.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비정규직 완화 및 근무환경 개선

1) 법률·조례 제정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만 10년이 지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7월에 도입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법령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 법’ 등을 포괄하여 통상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칭

한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불합리한 차별금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은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규직 고용보호도 완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 창출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해마다 늘고 있는 노인 인구수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수도 늘 것으로 판단되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업증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담당자 비정규직 완화의 제도가 필요하다.

2021년 10월말 기준 전국 노인일자리 담당자 전국 누적은 4,980명으로 추정된다. 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당장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무기한 계약직 또는 최초 계약이 1년이 아닌 2년으로 되기를 제안한다.

2) 노인일자리 담당자 근무환경 개선 및 갑질 예방

수행기관별 근무시간(출근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적용되어 일찍 출근하는 경우, 본인 사업(업무)과 관련 없는 기관장 또는 실무자의 지시에 의한 허드렛일과 이동업무 등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일에 근무시간을 낭비 하지 않도록 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3.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배치기준 인원 변경

기존 사업유형별 배치 인원은 실제 사업유형별 관리 인원에 적합한 기준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업유형별(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인원)을 수정이 필요하다.

4.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전산시스템 게시판 치우개선 문의글 수용

전국에 수많은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현장 소리에 귀 기울여서 반드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22년에 추가적으로 치우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20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반드시 이번 정책이 채택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참고자료

-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 노인일자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수행기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연도별 노인인구(장래 인구추계, 2019.3, 통계청)
- 노인의 사회보장과 시장참여형 일자리 개선방안
- 박경하. 노인일자리의 진단과 개선과제
- 노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 치우개선 문의글
- 김유리. 기호일보
- 석현주. 경상일보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돌봄경제와 고령친화사업 - 돌봄경제산업화 단지 조성

김시현 울산시의회 의원

I. 문제의 제시

1) 탈울산 청년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광역시·도 중에서도 청년들의 유입이 가장 많은 1위 젊은 도시였다. 그러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탈울산을 선택하는 시민을 비롯하여 청년 유출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는 점차 감소했다. 현재 울산시 인구는 112만여 명으로 수원시보다 적은 인구로 광역시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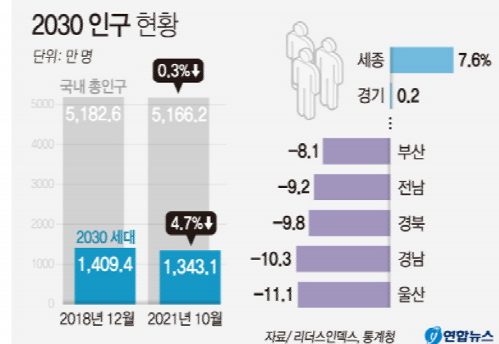
하지만 젊은 도시를 유지할 때에도 울산을 떠나는 청년이 있었다. 그 결과는 현재 울산의 인구 유출과 함께 심하게 두드러진다. 그 대상은 바로 울산을 떠나는 여성청년이었다. [그림2]의 울산광역시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15세부터 34세 청년 부분에서 여성청년과 남성청년의 인구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울산 여성 대부분은 부산과 경기도로 떠났다.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형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업이 뒤를 이었다. 즉, 울산을 떠나는 여성청년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울산의 제조업 기반의 남성 중심의 일자리였다. 과거와는 다르게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와 교육수준이 높아졌다는 통계는 오래전의 일이지만 울산의 변화는 더디기만 했다. 현재 울산을 지탱했던 산업구조의 변화가 전체인구를 뒤흔들었다면 울산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일자리의 다양성 부족을 지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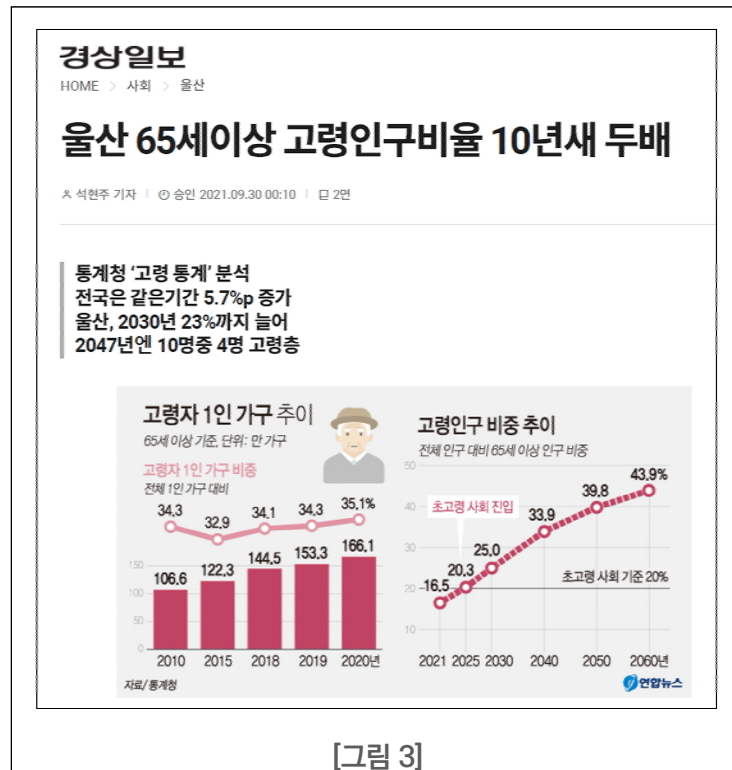
탈울산 7년째...2030 인구 감소 속도 최고

※ 식원주 기자 | 승인 2021.11.23 00:10 | 3면

올해 울산지역 청년세대 인구 28만여명...3년새 11% 줄어
17개 시도중 감소 속도 최고
70대 이상 증가도 최고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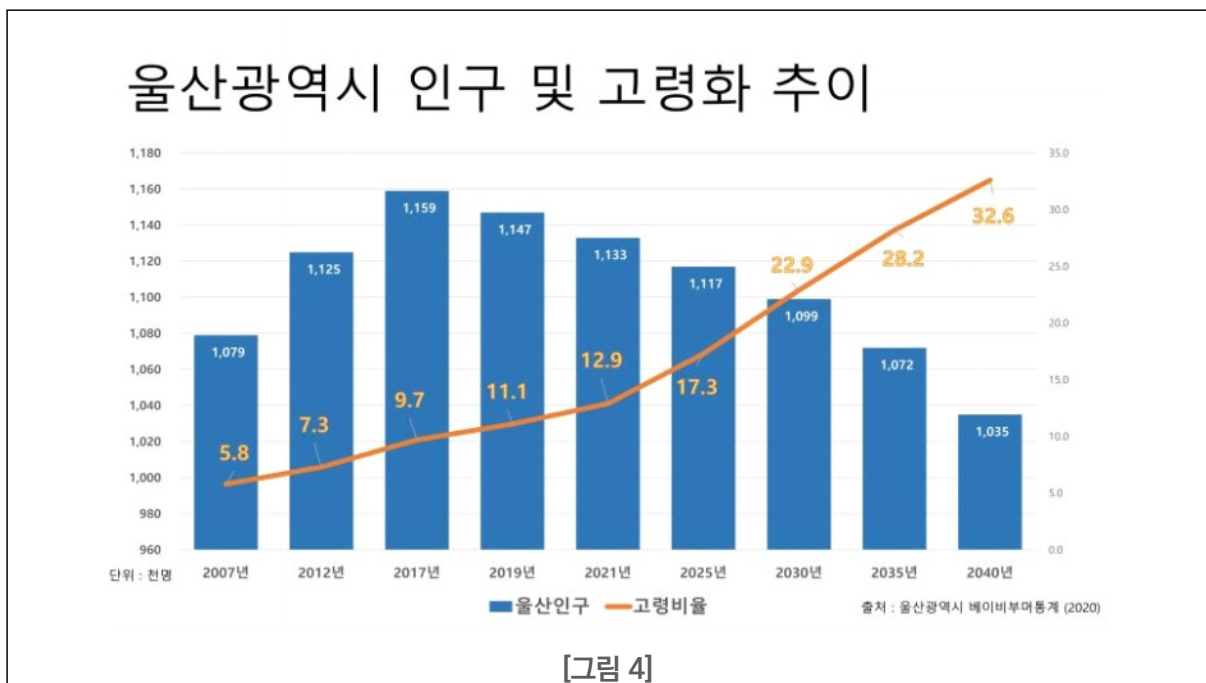
[그림 1]



2) 고령화

현재 울산은 [그림3]과 같이 17개 시·도 중 청년 인구 감소 속도 최고, 70대 이상 증가도 최고 수준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가 15% 이상이면 고령 도시, 20% 이상이면 초고령 도시라고 한다. 울산은 초고령 도시진입이 눈앞에 다가왔다.

2021년 9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전국 같은 기간 고령 인구는 5.7%p 증가했다면 울산은 6.2%p 증가했다. 또한, 2020년 울산광역시 베이비부머통계에 따르면 2021년의 고령 인구를 12.9%로 예측했지만 2021년 8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고령 비율은 13.12%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3) 고령화 문제 인식



우리가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도시를 문제라 지적하는 핵심을 짚어본다면 첫 번째로 세대 간의 갈등이다. 65세를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이후의 고령자는 더는 노동력에 따른 생산력과 소득이 매우 감소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대상이다. 그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복지비용의 지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지원금은 청년들의 젊어져야 한다는 청년층의 인식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

두 번째, 노인 자살률 증가이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빈곤층 노인은 대부분 1인 가구로서 고독사가 많은 대상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 1위 국가이다. 10대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률도 함께 증가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는 고령화의 문제 핵심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즉, 노동력과 생산력을 늘려 그에 따른 소득이 늘어나 경제의 주체가 된다면 달라질 것이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이 웨어러블 로봇이다. 현재 웨어러블 로봇 ‘엑사-W’는 무게를 12kg까지 줄여주는 로봇으로서 노동자가 무거운 짐을 들 때 힘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력은 보스턴다이믹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에서 이를 1조 원에 흡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량을 만들어내고 있다.

울산이 웨어러블 로봇의 시작점이 되어 제조업, 농업 기반사업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에게 지원이 된다면 그것은 경제활동의 연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기업과 돌봄산업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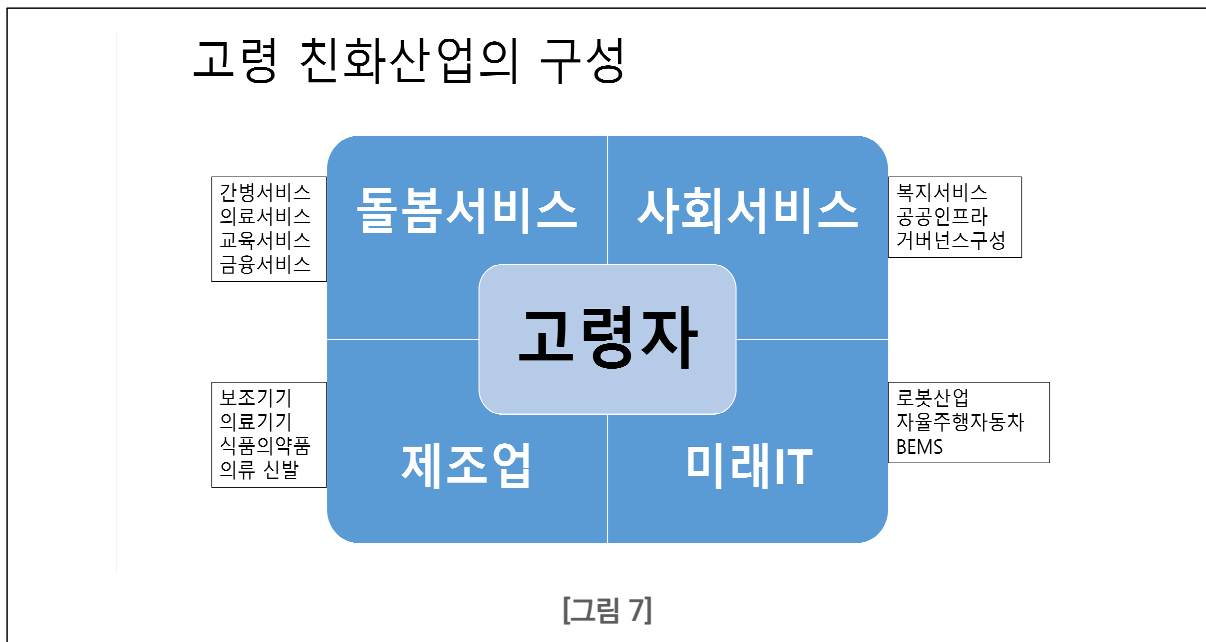
II. 돌봄경제산업화단지 구성

울산광역시 돌봄경제산업화단지는 울산지역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한다. 지역 내 돌봄 경제 플랫폼을 구축하여 돌봄서비스와 고령 친화 제품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선도기업과 고령 친화 제품 선도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돌봄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역할을 한다.

주요기능으로는

- 지역돌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돌봄인력양성
- 고령 친화 제품 고도화를 위한 R&D 기술지원
-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 돌봄 수요자 및 공급자 심사체계 확립
-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 훈련, 정보시스템구축
- 금융기관 및 지원기관 연계가 있다.

1) 고령 친화산업의 구성



[그림 7]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네 가지의 구성표이다.

먼저 돌봄서비스에 포함된 간병서비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가 있다.

교육서비스는 고령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전공과 개편부터 대학교,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고도화된 숙련기술교육까지를 의미한다.

울산은 현재 4년제 일반대학교는 울산대학교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울산산업구조에 따라 전공과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두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고령 친화 산업 단지로서 대학을 위해 탈울산을 결정하는 대학생에게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이다. 이에 포함된 복지서비스는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고령자를 위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있다. 민·관·의료계의 거버넌스 구성 그리고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공공인프라 구성을 의미한다.

미래 IT산업은 웨어러블 로봇, 돌봄 로봇과 같은 로봇산업과 자율주행 자동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있다.

제조업으로는 보조기기, 의료기기, 식품의약품, 의류 신발이 있다.

이런 사업 중에서 특히 현재 일본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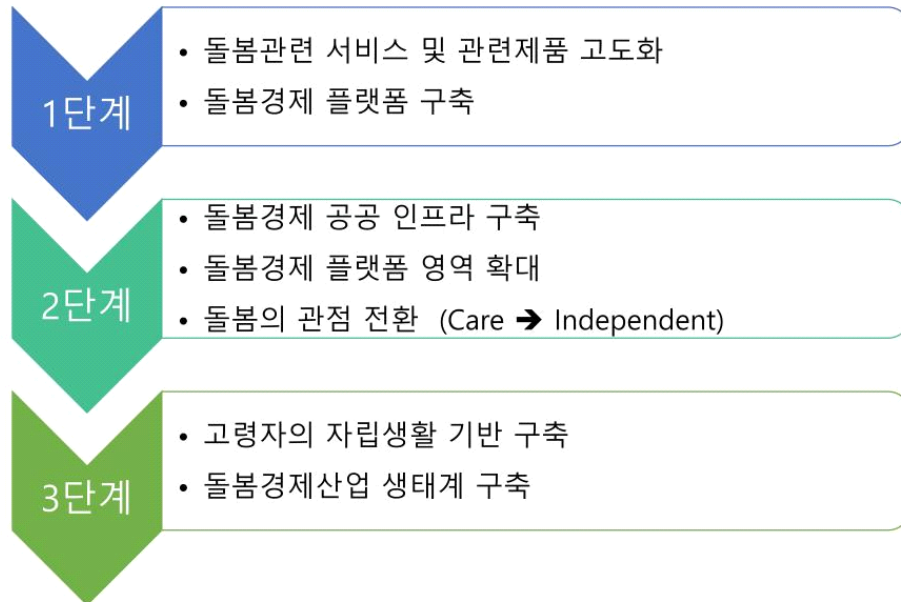
- 1단계 쉽게 씹을 수 있음
- 2단계 잇몸으로 부술 수 있음
- 3단계 혀로 부술 수 있음
- 4단계 씹지 않고 먹을 수 있음

이와 같이 네 단계를 구성하여 고령자 음식을 제조하고 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음식의 재료를 선별하여 초고령자도 이를 섭취할 수 있도록 기술력이 포함된 식품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류와 신발 또한 보온과 패션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노인에게 필요한 보호장비 기능까지 연구한 제조기술을 의미한다.

2) 돌봄경제산업화 단지 단계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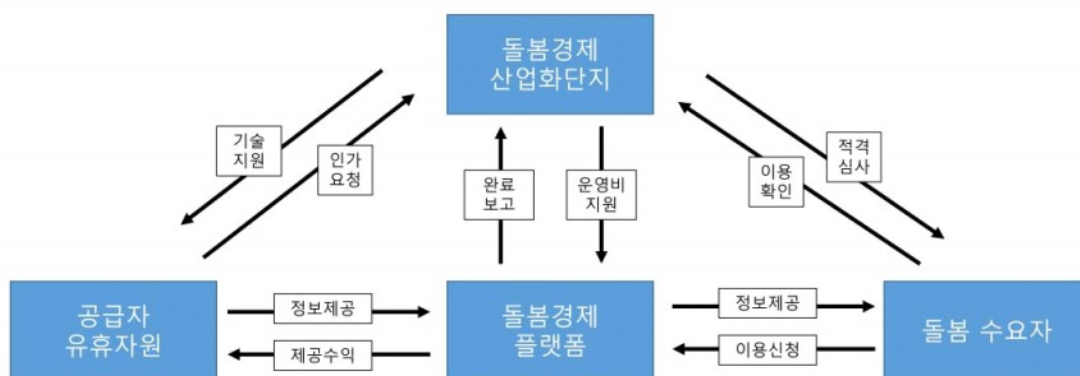
돌봄경제산업화단지 단계별 로드맵



[그림 8]

3) 돌봄경제 플랫폼

돌봄경제 플랫폼



[그림 9]

돌봄경제산업화단지는 공급자와 돌봄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된다.

공급자 유희자원 즉, 개인이 소유하는 장비 및 공간이나 기업이 보유하는 기계와 같이 현대차에서 보유한 자동차와 같은 자원을 돌봄경제 산업화단지에 사용 인가요청을 하게 되면 적합성을 검토한 뒤 기술력을 지원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의 정보를 돌봄경제 플랫폼에서 돌봄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돌봄수요자는 돌봄경제 플랫폼에게 이용신청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료는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구조이다.

만약돌봄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 대상이 아닐 때에는 돌봄경제 산업화단지에서 돌봄수요자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지원하게 되는 구조를 설명한다.

4) 돌봄경제 구성을 위한 기본요소

사회적기반, 돌봄서비스 및 관련기기 수요, 제조서비스는 돌봄경제가 구성되기 위한 기본요소로서 고령자가 필요로 한 요소와 이를 충족해주는 사항을 규정하였다.

돌봄경제 구성을 위한 기본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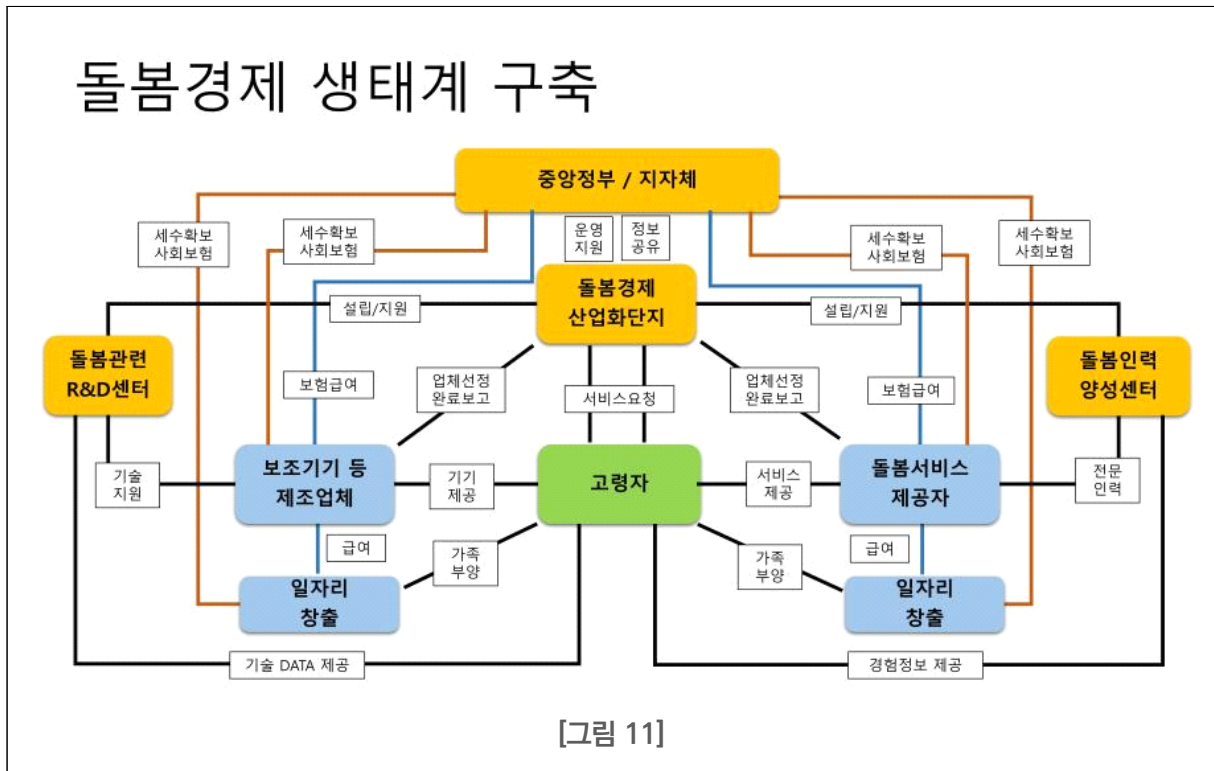
사회적 기반		
정책	시장	일자리
돌봄서비스 건강보험 법령 정비, 표준화 공공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구축 수요확보/소비활성화 진입장벽 축소	전문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고도화 기술개발

돌봄 서비스 및 관련 기기 수요		
일상생활	질병관리	안전관리
가사도움, 식사, 수면 이동성 확보, 언어적소통 금융지원, 사회적 관계	만성질환 관리 재활 치료 정서안정 치료	돌발사고 방지, 고독사 방지 치매, 자살예방, 응급구조 자립형 생활용품

제조 서비스		
건강증진 및 일상생활	질병관리	고령친화산업
가사관리, 이동서비스, 금융서비스 일상생활 돌봄 (식사, 배변) 생체정보 수집 모니터링	방문간호 가정간호 병동간호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IoT 안전관리장비, 주거, 식품

[그림 10]

5) 돌봄경제 생태계 구축



돌봄경제 생태계의 주체는 고령자로부터 시작한다. 돌봄경제 생태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돌봄경제산업화단지에 운영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받는다.

운영을 지원받은 돌봄경제 산업화단지는 돌봄관련 R&D센터와 돌봄인력양성센터에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두 센터는 성격에 맞는 기술을 생산하고 인력을 양성한다.

지원으로부터 완성된 기기는 고령자에게 제공되고 전문인력 또한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형태는 그 자녀가 될 수도 있으며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것처럼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 가족이 고령자를 케어하게 되면 돌봄인력 양성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해주어 돌봄의 무급노동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조를 만든다.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령자의 데이터들은 다시 각 센터로 제공되어 백데이터로 사용되는 구조이다.

돌봄산업의 주체가 되는 고령자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가 확보되며 이에 보험의 사각지대로 분류되었던 고령자의 의료구축 또한 보완하게 되는 것이다.

Ⅲ. 효과

돌봄경제 산업화단지의 조성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1. 사회적 효과

인구 유입, 노인 인식변화, 지역 인프라 확대이다. 울산의 여성 경제활동 순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다. 돌봄경제는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꿈을 꾸는 여성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울산을 떠나지 않아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일터를 보장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갈등의 한 축을 담당하던 세대 간의 갈등 면에서도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돌봄산업의 주체는 바로 고령자이다. 고령자 1명이 청년의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고 더 이상 복지만의 대상이 아닌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서로 공존할 수 있음으로써 세대갈등의 격차를 줄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프라 확대이다. 울산은 차량 중심 신호체계 등을 포함하여 성인 남성에게 맞춰진 공공인프라들이 고령자에 맞춰진다면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줄 것이다.

2. 경제적 효과

고용증대 효과, 산업구조 개편, 지역경제 성장이다. 울산광역시 중구는 울산의 중심에 있는 기초단체이다. 이곳에 있는 가장 큰 기업은 홈플러스**이라는 마트 수준에 그치어 광역시 중에서도 열악하다. 또한, 울산은 더는 제조업의 도시가 아닌 일자리의 다양성을 가지게 됨으로서 산업 구조적 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Ⅳ. 마무리

최근 울산은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과 부산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다양성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인 사업의 성격은 복지사업이 대부분이며 노인과 청년이 갈등의 핵심인 경제적 측면을 풀 수 있는 과제는 찾기 힘들다.

대한민국은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노인 산업의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행하는 곳이 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연구와 같이 돌봄산업의 구조를 고민하여 생태계를 구축한 면은 찾아보지 못했다. 울산이 더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해야 하는 면에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인천 청년정책, 구조의 다양성이 먼저 - 인천 청년정책 활성화에 대한 제안

김대영 인천시당 당직자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의 현황

- 인천광역시는 현재 293만여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전체 인구의 30%에 가까운 약 83만여 명의 청년이 모여 있는 대도시이다.¹⁾

하지만 청년들은 인천에서 계속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출근 또는 통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점, 여러 가지 문화와 여가생활을 인천이 아닌 외지에서 소비하고 있는 점 등이 인천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²⁾ 그래서 대부분 서울에 정착하거나, 지원과 혜택이 많은 경기도로 이사 가고 싶어 한다. 인천에서 벌어써, 인천에서 쓰고, 인천에서 살고 싶어 하는 청년은 정말 손에 꼽힐 정도다. 이제는 청년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 대한 구조 자체가 다양하게 변화해야 할 때이다.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의 문제점 분석

- 인천은 수도권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청년정책이 미흡하다. 정책의 기획을 모두 행정기관이 주도하면서, 획일화 되어있기 때문에 정작 정책의 대상인 청년들은 그에 대한 효능감은 느끼기 어렵다.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일자리경제본부 산하의 청년정책과이다. 서울의 미래청년기획단, 경기도의 청년정책관, 청년비서관 등과 달리 인천은 시청의 본부 산하에 속한 과에서만 담당하며 광역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굉장히

1) “2021년도 힘내라~ 청년~!” 젊은 도시 인천, 청년 氣살리기 박차,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1. 01. 08)

2) 경기도 인천 아니야? 서울에 가려진 인천의 서러움 [0:04:53~0:05:25], (유튜브 채널 <14F>, 2020.08.27)

소규모의 인력으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는 결국 인천광역시의 청년인구와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정책이 결국 일자리 중심³⁾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가 취약하게 대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즉, 현재 인천광역시의 청년정책이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관청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인천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

I. 비전

-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제 정책은 행정이 주도하여 이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 특히, 문제와 수요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청년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혜대상이 직접 자신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은 다양한 수요가 산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관청이 관리하고 발굴할 수 없는 곳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동시에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청년이 직접 문제를 직접 탐색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서 입안한다면,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도 삼을 수 있다.

II. 청년참여에 대한 관청의 역할

- 물론, 민간이 정책의 모든 것을 전담하고 운영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관청이 관련된 업무로 보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관청의 보조란 사무적,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 그에 대한 체계를 견고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한 권한을 어느 선까지 확대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민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행정의 지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하다.
- 또한, 관청의 역할에 따라 청년과 청년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이에

3)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창업 등 중점 지원해 청년1위 도시로,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1. 10. 28)

대하여 지원과 투자를 쏟는지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로도 삼을 수 있다. 만약 청년정책을 전담하고 총괄하는 자리가 인천광역시장이라면, 그를 바라보는 인천의 청년들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은 ‘**인천은 청년을 위해 많은 것을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인천 청년정책에 대한 구체적 과제

1. 청년정책관 및 청년정책특보 신설

-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청년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 시청에 **청년정책관**이나 **정무부시장 직속 청년정책특보**를 신설하여 시청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청년들이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성공한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 특히, 청년정책관이나 청년정책특보는 직위를 **개방형으로** 구성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오로지 ‘**정책제안능력, 비전**’ 등 전문성을 1순위로 하여 뽑는 것이 **시의 청년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른바 ‘낙하산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미 경기도가 시행한 바가 있다.⁴⁾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모경중 경기도 청년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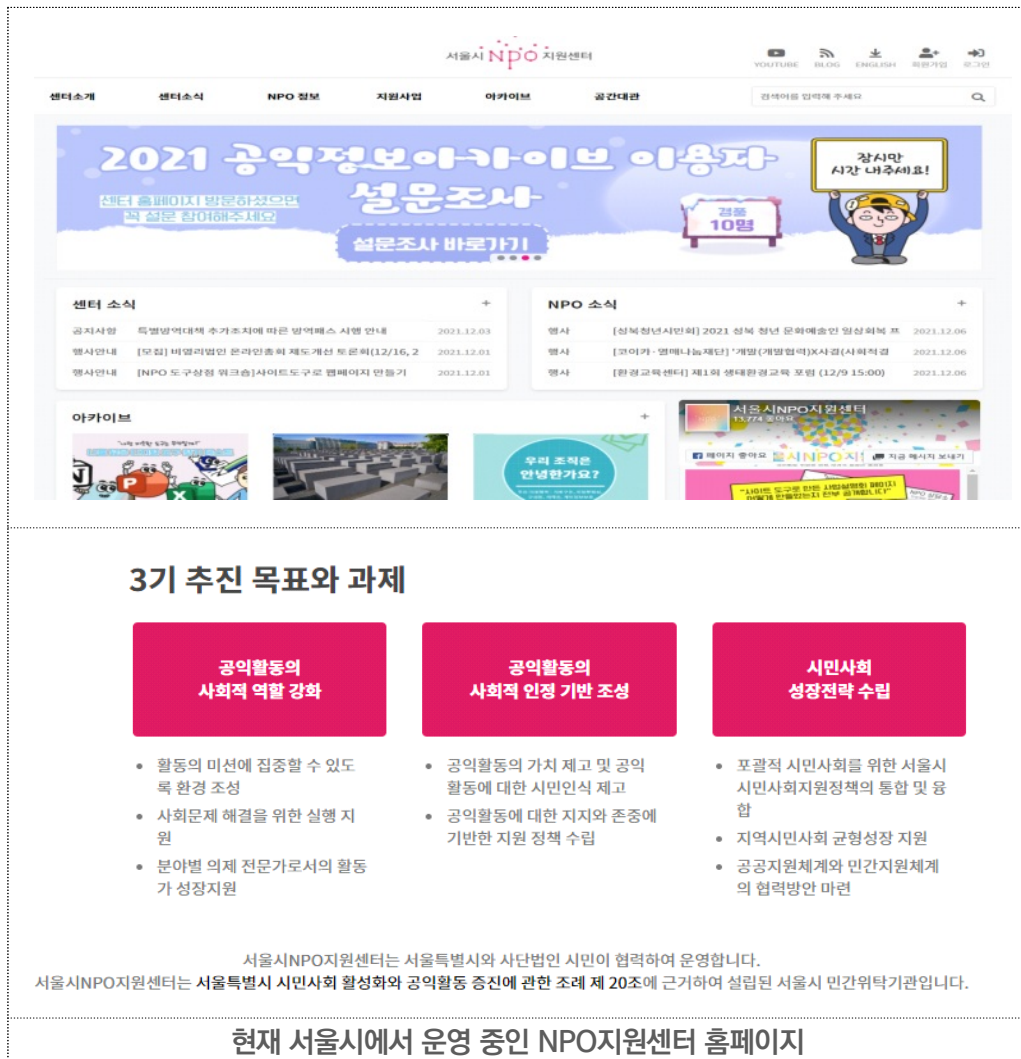
4) ‘NO스펙 공개채용’으로 선발돼 1년8개월 현장 누비는 ‘청년 비서관’ 있다 (프레시안, 2021.06.26.)

II. 청년민간단체 거버넌스 구축

- 청년들은 관청을 통한 수직적인 정책제안 구조에 부정적이다. 이는 그동안 관청주도로 이루어진 청년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현상이며 얼마나 청년들과 소통이 부재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는 협의체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인천광역시가 운영 중인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시청과 청년단체가 수평적인 구조로서 정책을 공유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가며 정책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단순 청년정책이 아닌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색이 맞춰진 청년정책이 새로 시행될 수 있으며 이는 청년인구의 지원을 넘어서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경제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년’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이다.

III. 인천광역시 NPO지원센터 설치

- 위에서 언급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단체가 활성화 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청년단체는 유명무실하며 특정분야만 다루는 청년단체가 있을 뿐 전방위적으로 청년문제를 다루는 청년단체를 극히 드물며 그마저도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 이는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단체를 구성하여도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하여 세금신고를 비롯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설립을 지원하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민간단체의 자립을 도와주는 동시에 관청과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 신설이 필요하다.



IV. 인천광역시 청년종합공간 설치

- 청년단체가 설립과정에서 제일 고민하는 것이 바로 **공간문제**다. 일반 상가건물에 월세로 들어가기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며 매번 다른 공간에서 모이기에는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 청년들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사무공간, 교육공간, 소통공간**을 구축하여 청년단체가 편하게 입주하여 청년정책의 질을 더 높이는 동시에 상호간의 의견교환으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
- 또한,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같은 청년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공간**을 구성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좌측부터 제물포, 부평, 동구)
21년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위의 내용이 담긴 공간은 현재 전무하다.

■ 기 대 효 과

I. 청년인구의 신규 유입

- 최근 청년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 대한 애정인 '애향심'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신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대부분 통학과 출퇴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가 많다.
- 이에 발맞춰 서울과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청년정책을 신설하여 새로 유입된 청년인구를 정착하도록 도와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인천광역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인천에 정착하는 청년인구를 늘려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통한 인천광역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II. 정책 대상자인 청년인구의 만족도 증가

- 청년들은 본인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기 전까지는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청에서 주도하는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른바 '청년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정책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영입 및 청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책 만족도가 증가하며 이는 곧 시정운영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Ⅲ. 청년의 정책제안 참여를 통한 자체 전문성 증가

- 그동안 청년들이 관청의 수직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년정책에 참여하여 개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조차 없던 것이 현실이다.
- 하지만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구조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며 청년 개개인의 정책 연구력을 비롯한 전문성을 스스로 키워나가며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청년정책의 질도 점점 상승하며 청년들이 더 좋은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청년들의 정책참여도 향상

- 청년들이 정책제안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수직적인 구조를 비롯한 이른바 ‘꼰대’ 문화가 있다. 자신들이 의견을 제시하여도 기성세대로 이루어진 관청과 유관기관이 오히려 청년들을 가르치려는 태도가 불만스러워 자체적인 정책참여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 하지만, 위와 같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관청과 유관기관의 ‘청년감수성’ 향상을 통해 수평적인 구조를 통해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것은 관청과 청년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
- 특히,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성공사례를 통해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에 나서게 되며 이는 청년정책의 실효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지방 노령화인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활용방안 - 유기동물 문제해결 및 적용

구민호 전남도당 당직자

■ 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문제

① 수도권지역과 지방의 양극화의 심화 및 지역사회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독거노인, 고독사 등 노인관련 문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2013년 613만7702명, 2014년 638만5559명, 지난해 662만412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와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은 144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가추세라면 독거노인 수가 2035년에는 343만여 명으로 전체 가구 중 15.4%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 노인들 대부분은 보통 자신의 존재가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4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43.7%가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우울증 환자의 41%에 달하는 수준으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노인들의 참담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 우울증의 원인으로 경제적 빈곤, 질병, 소외감 등을 꼽았다.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떨어져 여러 질병이 생기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35년에는 전체 가구 중 15.4%가 1인 노인 가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병으로 커져나간다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1만279

명 중 33.1%가 우울증상을 경험해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43.7%가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통계청이 65세 이상 노인 1,1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9%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중 12.5%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 2014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한노인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노인 정신의학’ 19권 제2호에 실린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우울 증상 분포’(2015, 하운식 외 5명)에 따르면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제적 어려움과 지인들과의 사별, 가족·세대 간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울증에 노출된다.

우울증상을 겪는 노인들은 수면 장애, 활동 저하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우울 증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나 노인 우울증은 발견과 치료가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증상이 나타나도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사회적 관심도 적어 치료가 쉽지 않다.

출처 : 한겨레신문 ‘독거노인’ 130만명 시대... “외로움에 더 서럽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672392.html>

이처럼 지역사회의 노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②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제

애견산업 시장 규모 및 애견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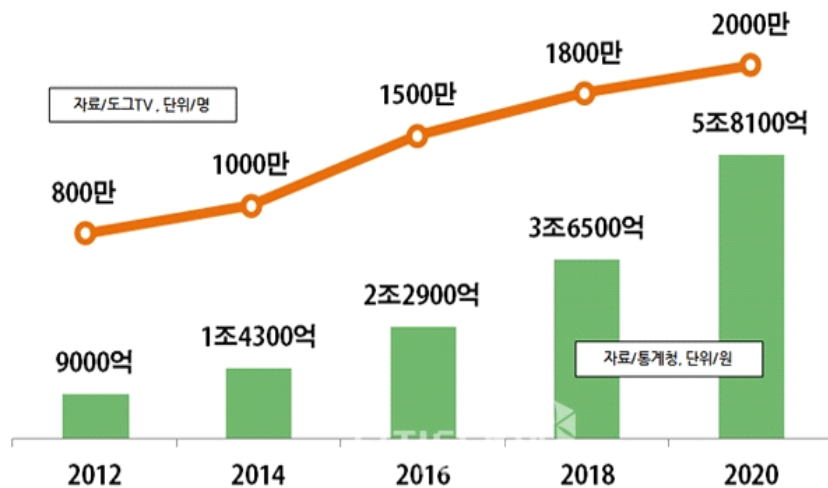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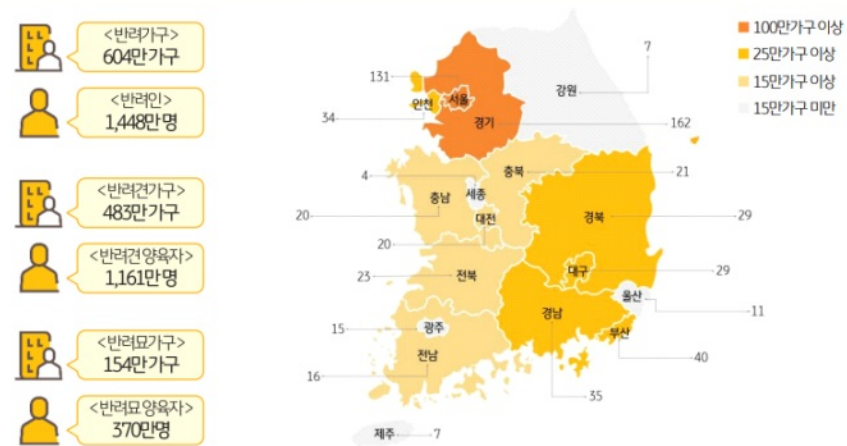


그림 1-1 | 한국의 지역별 반려가구 현황

(단위: 만가구)



※통계청 <2019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정보 데이터를 가공한 요약정보(2019년 말 기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20년 말 기준)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추정. 데이터 속성과 조사방법 관련 세부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조

2020년 말 현재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반려인 1500만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통계청 <2019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정보 현황 그리고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추정한 수치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인구에 따라서 ‘유기동물’ 문제도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유기동물’ 문제는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 유기동물의 배설물 처리문제
- 유기동물의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문제
- 유기동물의 재산물 손괴문제
- 기타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적인 문제

■ 문제에 대한 현실대응

① 수도권지역과 지방의 양극화의 심화 및 지역사회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독거노인, 고독사 등 노인관련 문제 대응

노년층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어르신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먼저 ‘노인 안부확인 사업’(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고용하는 노인돌봄미(생활관리사)가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다. 또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들이 기초생활수급제 등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로 파악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도 생활관리사 몫이다. 지난해 131만여명의 독거노인 가운데 20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다만 생활관리사 한명이 너무 많은 어르신을 맡다 보니 체계적 관리나 깊은 관

계 맺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한계로 꼽힌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 등에 속한 생활관리사 1명은 평균 25명을 보호 및 관리한다. 주 1회 방문하거나, 직접 방문 대신 주 2~3회 전화로 안부를 묻는 식이다. 폭염이나 한파가 찾아올 때도 안전확인을 한다. 각 지자체의 예산 형편이 빠듯해 생활관리사의 급여가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에는 전국 200여개 시·군·구에서 8,000명의 생활관리사가 활동했다. 평균 급여는 67만원 선이었다. 직업 만족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독거노인 안전확인 사업'(응급안전돌봄서비스)도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가스누출이나 화재감지,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위기상황이 빚어지면 곧바로 생활관리사나 관할 소방서로 연락이 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놓는 내용이다. 65살 이상 독거노인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건강취약자 등이 대상이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 형식으로 시행됐다.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을 수 있게 정부가 외로운 노인끼리 친구맺기를 주선해준다는 취지다. 지난해 25억원을 들여 전국 56개 도시지역의 60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룹별 심리치료나 건강·여가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기회 등을 제공했다. 올해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80곳으로 늘어난다.

출처 : KB금융그룹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이처럼 다양한 정부정책 시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한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문제로 인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이러한 사후대책 위주의 대응보다는 선제적이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②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제 대응

· 유기동물의 중성화 사업

- 유기동물의 개체 수를 적절하게 유기하기 위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 후 원래 포획한 장소에 풀어주는 사업

· 반려동물 등록제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 유기동물 입소전 검사 및 치료사업

- 유기동물 입양시 검사 및 입양비 지원사업

위처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인력과 관련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여수지역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수용능력이 60마리인 80제곱미터 공간에 150여 마리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밀집된 환경에서는 전염병 등 질병감염은 물론 인력문제로 인한 밀도 있는 케어가 힘든 상황으로 이러한 관리능력 초과문제는 안락사 등 유기동물 처리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비용지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정책제안 - 독거노인 반려동물 지원 사업

○ 지역사회 고령화 문제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연계사업 실시

어느덧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다. ‘1500만’이라는 숫자 안에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이들은 반려동물 덕분에 긍정적인 사고를 얻게 됐고(86.9%),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86.3%)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83.0%)를 누렸다.(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 2019) 취약계층에게 있어 반려동물은 ‘함께 사는 동물’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노인에게 있어 반려동물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반려동물 복지를 챙겨야 한다. 취약계층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병원비(23.8%), 사료 및 간식비(15.8%), 미용 및 관리용품비(14.2%) 등 경제적 어려움인 만큼 검진·진료비를 지원하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기초적인 필수 동물의료비를 제공해야 한다. 반려동물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한다.

나이트 독거노인과 나이트 반려동물이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홀로 남은 반려동물을 걱정해 입원을 하지 않고 버티다 병세가 악화되거나, 죽은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장묘업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지원사업도 펼쳐야 한다.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시 기초수습키트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출처 : BRAVO-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2924

위의 기사처럼 늘어나는 고령층 노인문제를 위하여 “사람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반려동물을 통하여 독거노인들의 정신적인 케어와 함께 유기동물 문제도 해결하는 1석 2조의 효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내 유기동물보호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유기동물을 케어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킨 후 공공기관, 주민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독거노인 또는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다면 지역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 정책제안 프로세스 및 기대효과

○ 프로세스

- 노인 고령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문제를 지역 내 유기동물을 통하여 해결
- 반려동물을 통한 노인 정신건강 및 정서적 문제 해결
- 지자체의 경제적인(병원비, 간식비 등)지원, 지역 내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장례식장 등 협력
- 지역내 유기동물 보호소와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 및 훈련시설 확충

■ 기대효과

- 노인복지에 사용되는 사후관리비용 절감 및 사전예방 가능
- 포화상태인 유기동물 보호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가능
- 유기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
- 지역 내 연계된 동물병원 및 장례활동 서비스 관련 소상공인계층의 경제 활성화 우리지역 내의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해결하고 서로의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로 만들어 윈윈할 수 있는 우리지역 정책을 제안함.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전남형 특성화 교육, 대한민국 균형발전으로

한숙경 전남도당 당직자

1. 소멸 위기...

소멸 위기 전남

전남은 점차 인구 감소가 되고있고 그 현상으로 인하여 **소멸지역**까지 나타나며 앞으로도 소멸 지역이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한민국의 극심한 양극화로 인하여 **국가의 위기** 상태까지 초래되고 있다

원인

대도시의 과밀화로 지방의 인구는 매우 감소되고 있고 **대도시 인구집중**
 사회 구조상 청장년층 감소, 교육, 일자리, 의료, 복지, 기초 조건 차별
 지역 사회의 서비스 조건 차별화는 극심한 양극화
 저 출산 고령화 문제로 **전남의 노령화** 극대화



지역 소멸 위기

인구감소지역 지정

1) 전남, 경북의 경우 각각 16개 지역으로 가장 높은 현상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은 3곳이며 대구와 인천, 경기도는 2곳씩 89곳이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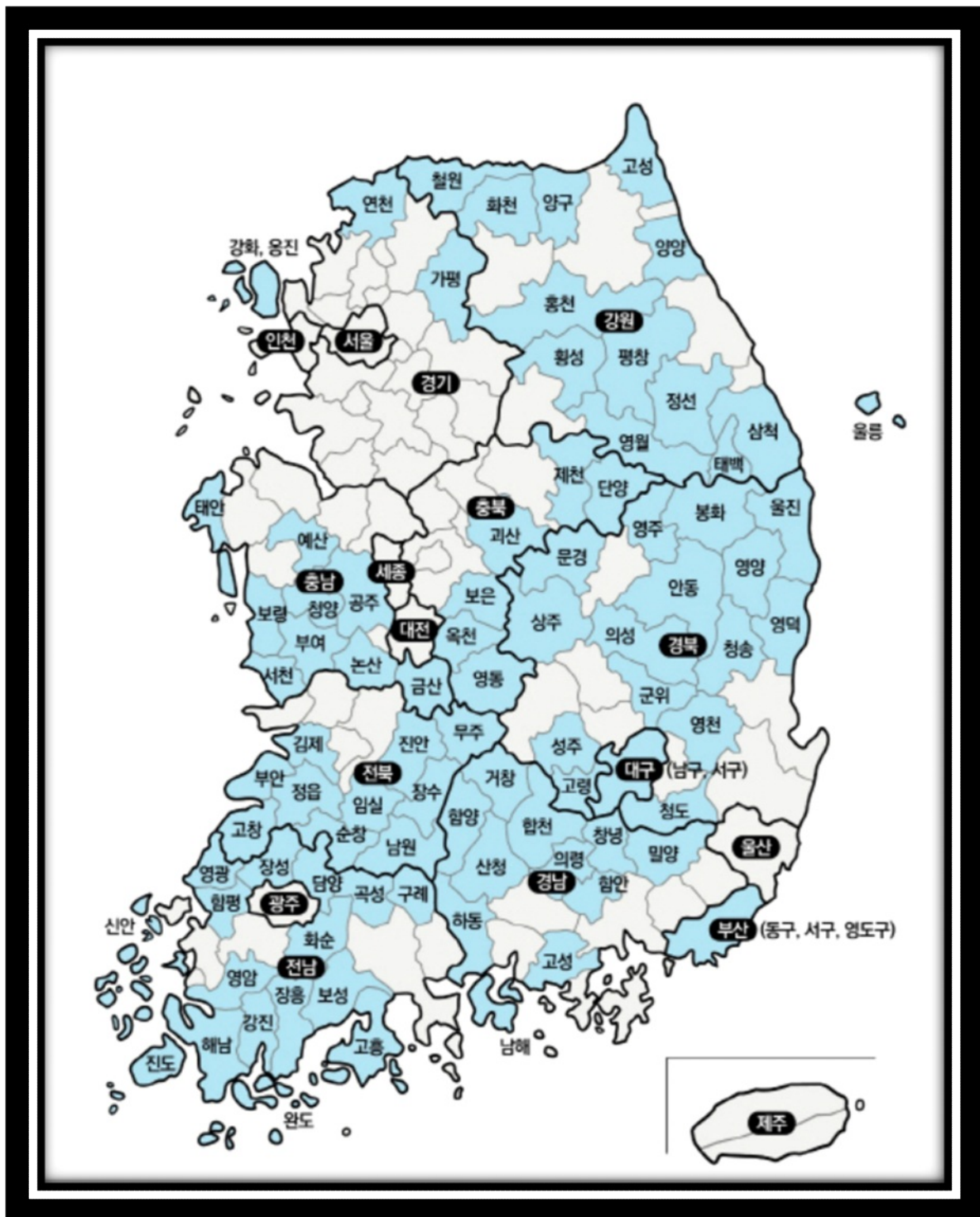


양극화를 감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인구감소지역 지정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

전해철 행안부 장관

지수를 활용해 89개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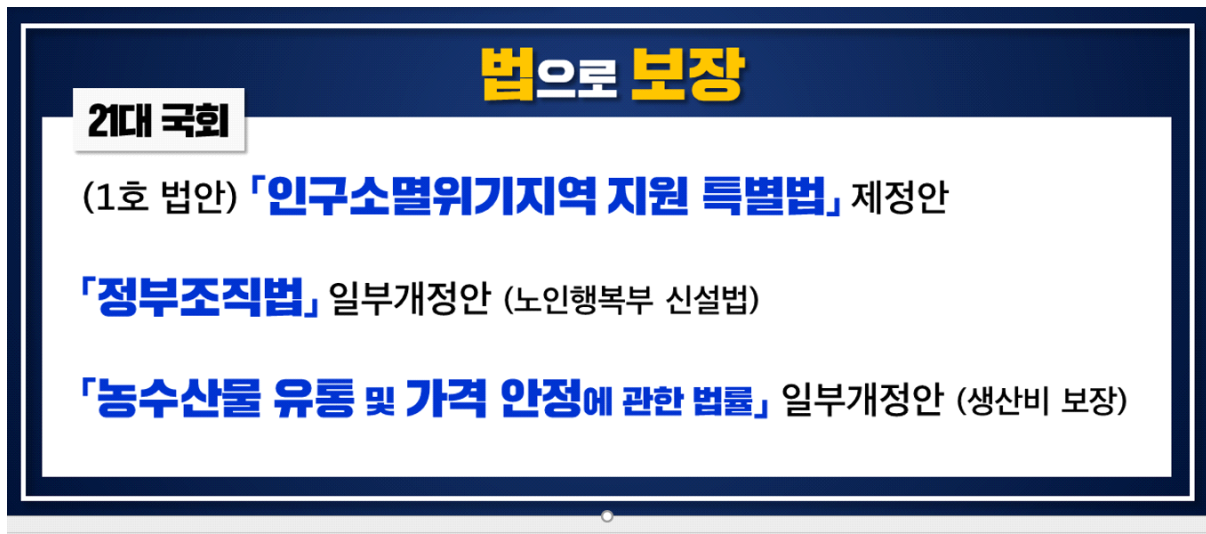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은 최초 지정 시점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년 후 지수를 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멸 위기 대상 중 전남 현황 (군 단위 소멸)

고흥, 보성, 장흥, 완도, 강진, 해남, 진도, 영암, 화순, 구례, 곡성, 담양, 장성, 함평, 영광, 신안, 전남 소멸 제외지역 (시 단위) :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나주, 무안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18일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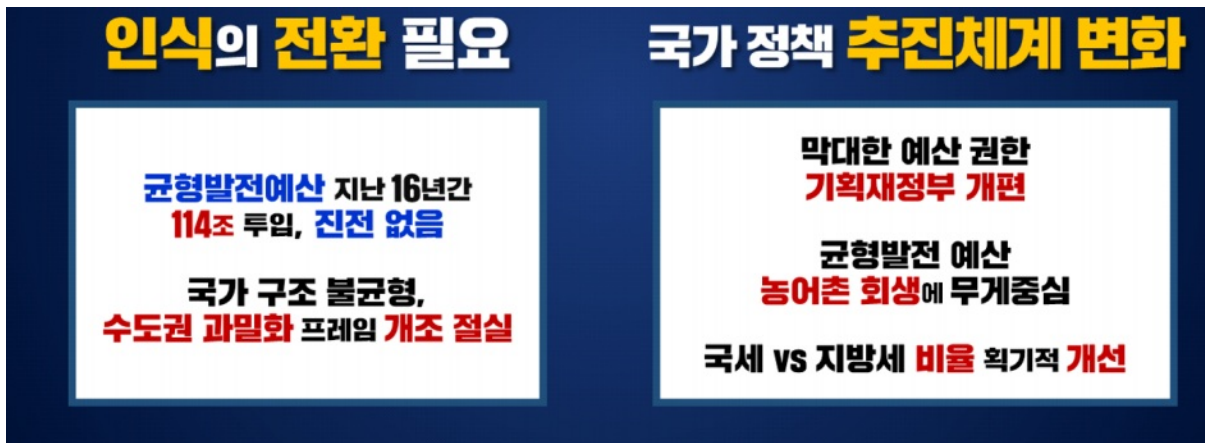
제도적 기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지방의 경우 노령화로 인하여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생활 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 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 감소의 위기를 제도적 기반 마련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
- 청장년층의 지역 정주, 지역과의 주기적인 교류를 촉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
- 지자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 수립
-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최근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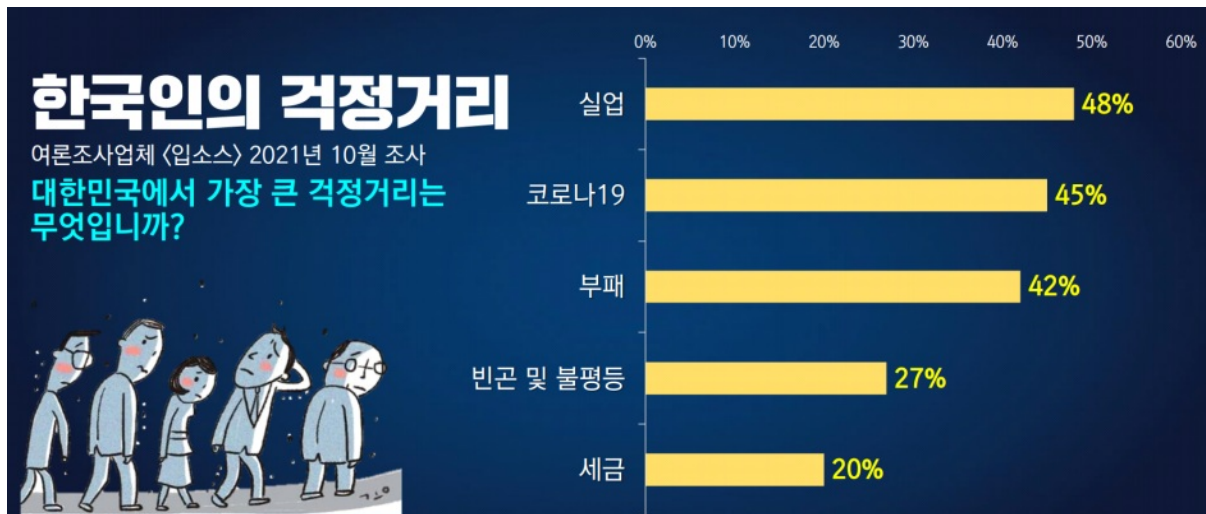


2. 양극화 해소

걱정거리를 해소하면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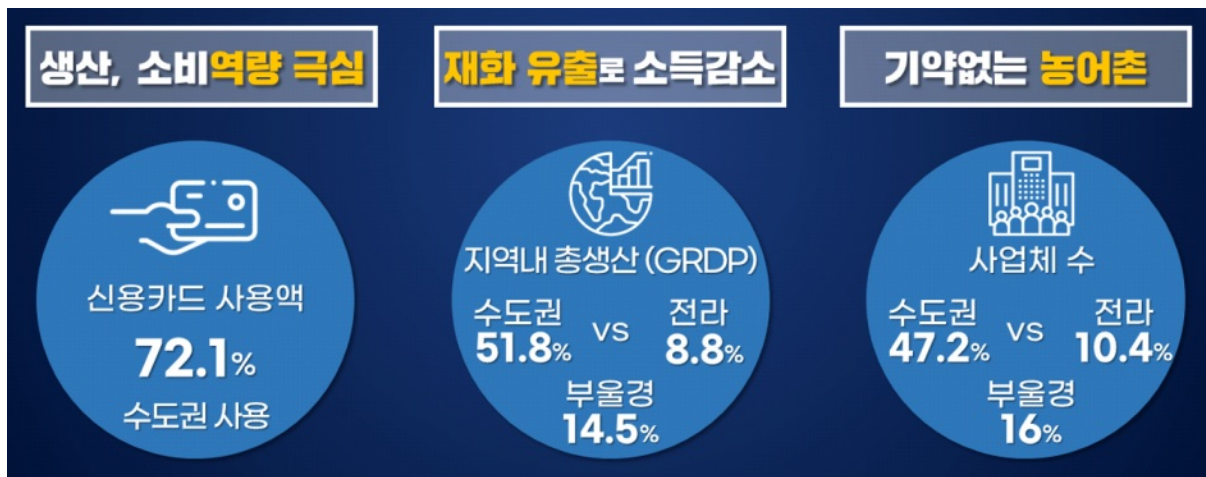
- 인간의 기본적인 부분 빈곤이 해결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 일할 곳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더 행복할수 있다면...
- 질병과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고 불평등 해소와 안정과 평화로울수 있다면...





전남의 자생력

- 일자리, 주거, 의료, 복지, 육아, 교육의 문제점이 해결 된다면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기본적인 행복의 요건
- 전남의 자생력을 강화 시키고 사회 구조가 순환 되도록 제안
- 전남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에 개선점 파악과 이해



전남 자생력 향상을 위한 전남 특성화 교육

- 뿌리부터 근본의 기본 전남 **특성화 교육**
- 전남형 교육의 현재 보강, 활성화 필요
- 특성화 교육을 통한 교육연계에서 **사회 순환교육**

자생력 없는 전남 교육, 실업계고등학교 현실태

- 현재 전남 교육재정 자립도는 23.97 (20년 재정공시 기준)
- 학생의 사고사로실습은 제안 2022년에는 실습을 국가에서 규제하게 된다는 문제점
- 이러한 형태로는 학생도 학교도 전남도 위험
- 벚꽃 피는 순서로 점차 사라지는 대학
- 현장실습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몇몇의 취업을 목적이었던 학생들은 취업의 어려움과 한계점으로 대학진학
- 교육청제도는 실업계학교 현장실습과 도제학습에 관심과 대안점 낮음
- 교육계는 임문계에 비중을두며 현실적으로도 특성화 교육의 발전 한계
- 지방자치는 전문고 전문대에 연구하고 연계학습 발전 필요
- 전남에 인구감소와 저출산에 문제로 점점 자립도는 낮아지며 전남 교육 자생력 상실

소멸되는 전남지역 및 지방대학 현황

- 지방 대학의 형태 또한 열악하며 입학시기가 되면 학생 모집을위한 교수님들의 할당제 까지 있고 입학생의 문제점으로 지방대학은 소멸
-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의 보장 또한 매우 낮고 지역사회 취업을 희망자들도 취업할 곳이 적다
- 학사과정 이후 취업생은 고등학교 졸업생과 차등이 없어 불만을 호소
- 대학 졸업 후에도 특별히 취업의 조건을 갖추기 어려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남 분포도 현황



전남 특성화 고등학교 (46개 학교)

고흥(3), 광양(1), 영암(1), 나주(3), 보성(1), 담양(1), 목포(4), 보성(1), 영광(3), 장성(1), 해남(2), 순천(4), 신안(2), 여수(4), 영광(3), 영암(2), 장성(1), 화순(1), 나주(3), 함평(1), 구례(1), 곡성(1), 장흥(2), 진도(1)

전남 마이스터 고등학교 (5개 학교)

호남원예고등학교(나주),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여수), 완도수산고등학교(완도)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강진),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광양)

→ 국립 8개 학교, 사립 43개 학교

전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별 분류 현황

공업계열: 전기, 전자, 통신 (24), 건축, 토목(8), 기계, 금속, 금형, 조선, 자동차(22), 화공(5),

상업계열: 상업(30), 정보(6),

농업계열: 농생명(8), 식품(5), 농기계(1),

가사, 실업계열: 보건(2), 미용(1) 조리, 관광(4)

수산, 해운계열: 수산(4), 해운(2)

전남지역 대학교 현황

4년제10개소, 전문대9개소

- 여수 한영대학교100% 0명 , 여수대학교 83.7% 136명
- 순천 순천대학89.9% 168명 , 제일대학교94.7% 56명, 청암대학교 75.3% 260명
- 광양 한례대학교32.6% 120명, 광양보건대학교11.7% 408명
- 목포 목포대학교87.1% 204명, 목포해양대학교95.2% 33명, 목포과학대학교100% 0명,
목포카톨릭대학교100% 0명
- 나주 동신대학교92.3% 120명, 고구려대학교88% 102명
- 영암 동아보건대학교87.2% 71명, 세한대학교 100% 0명
- 영광 영산선학대학교 12% 44명
- 무안 초당대학교98.7% 10명
- 곡성 전남과학대학교84.7% 182명
- 담양 전남도립대학교 83% 120명

3. 전남형 특성화 교육 균형발전

수도권 : 명문고 명문대

전남지역 : 특성화고, 특성화대학



전남형 특성화 교육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 교육
- 취업을 목적으로 하여 입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취업을 위한 자격 취득 및 취업의 준비

특성화 교육 도제학습의 필요성

- 실업계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등학교 방향성
- 지방대학의 재적립을 통한 사회 순환제도
- 사회정착 교육과 일자리 동시에 안정화
- 대한민국 청년 5포 시대로 청년들은 연애, 결혼, 육아, 주택, 일자리 문제 완화

전남형 특성화 교육의 예시

1) 광양시

- 포스코, 광양항만, 광양기업, 시집가는날미용실, 매화축제
- **광양하이텍고** 제철기계과, 스마트팜과, 반려동물과, 시품가공과
(포스코, 여수울촌산단, 스마트팜취.창업, 드론방역, 정비회사, 농업직공무원)
-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물류장비기술과, 물류시스템운영과
(항만터미널시스템운영, 물류센타, 복합물류단지, 항만공사, 국제화물주선업관련)
- **광양보건대학교** (간호학) 11.7% 408명 미달
- **광양한려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사회복지과) 32.6% 120명 (폐교)

2) 여수시

- 여수GS 칼텍스, 여수LG화학,울촌공단, 돌산대교, 여수엑스포, 관광
-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공정운전과, 공정설비과, 공전계전과
(석유 및 화학물제조, 화학 공학 시험원, 기계장비, 용접, 전기기계설치, 정비원)
- **여수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전기과, 드론공간정보과, 기계자동차과
(용접,기계,밀링 ,건축,전기 기술자,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처리 시스템, 자동차관련업)
-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관광조리학과, 디자인과, 호텔서비스업, 금융정보과
(조리공무원, 호텔조리사, 영양사, 관공서 기업 디자이너, 항공서비스, 공무원 금융기관)
-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자연수산과, 해양레저관광과
(마리나전문가, 해양레저지도사, 레저선박운항사)
- **한영대학교** (간호학과, 치위생과, 국가산단트성화계열, 자율복합선택계열) 100% 0명
- **여수대학교** (문화관광과, 화공생명공학과) 83.7% 136명 미달

3) 순천시

- 순천정원박람회,순천만갈대, 와온해변
- **순천 효산고** 관광조리학과, 관광외식서비스과, 사무행정과, 금융정보과
(관광호텔, 조리강사, 호텔외식사업부, 공기업,대기업,중소기업,회계금융)
- **순천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자동차과1급, 전기과2, 화공과2,토목과2,건축과2급
(기술직공무원, 독일차정비업체,GS칼텍스,LG화학, LH공사, 광양제철소, 토지공사)
- **순천전자고등학교** 바이오향장과2급,해킹보완과2,기술직공무원,전기관련직
- 석유화학관련, 환경,화장품 관련, 전자.보완직공무원, 기술직공무원,전자.전기관련업
- **순천청암고등학교** 라이프케어과, 금융서비스과, 그래픽디자인과, 보건경영, 간호학
- 미용교육자, 병원.화장품회사,공기관,무역회사,광고디자인,병원코디네이터,마케팅
- **순천대학교**(경영학과, 원예과, 원예과) 89.9% 168명 미달
- **순천청암대학교**(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 뷰티미용과) 75.3% 260명 미달
- **순천제일대학교**(유아교육학과, 체육학과, 산업안전과) 94.7% 56명 미달
- 지역사회와 산업 맞춤형 교육 사회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교육연계** 시스템
- 전남의 비전 **블루이코노미**와 연계되는 기업 육성과 동시에 **연계학습**
- 전남의 농,어촌 **바이오팜** 특성화 교육

(현재 농촌 관련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 귀촌, 귀농을 희망하고 정부관련 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희망 한다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대학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하여 국고 낭비 없이 탄탄한 교육을 받을수 있는 실습형 대학 필수 요건 **장기적 대안과 실효성**)

전남형 특성화 교육의 실현 방향

- **도제교육**을 학생별 수준에 맞추어 직업의교육 인성, 교육, 윤리, 교육이 우선되고 실습의 시간과 범위를 고등교육, 대학교육까지 학년별 **세분화**하여 점차 **실습범위**를 넓혀야 취업시 학생과 현장에 격차를 줄일수있다
-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상업과 연계하여 특성화교육 후 졸업후 역량 강화로 자연스러운 취업연계는 지역의 분의기와 경제력 활성화
- **중소기업**의 꾸준한 실습은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업의 원활한 인력채용은 기업으로 발전하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와 연관성
- **기술인 육성**을 위한 유학생을 유입 실습을 통한 세계화의 돌입 한국 사회의 기술 습득과 적응 정착을 동시에 **사회적응** 언어적 부분까지 해결할수있는 도제학습 일학습병행제 지방자치는 지자체별 특성화 교육을 지속 노력 발전 연구를 해야한다
- 특성화고등학교 지역내 **실습기회**가 함께 이루어질수있는 학과 선택후 기술습득과 지방 자치와의 친화력에 주력을 해야한다

전남형 특성화 교육의 효과

- 지역사회 연계 실습 기회 확대 **지역 사회 진출** 적응
- 사회초년생 사회생활및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
-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고용확대**
- **지역사회** 안정된 일자리 제공
- **국가균형** 발전 영향력
- **외국인 학생**들 유입하여도 확대
- **중도국자녀**의 사회진출
- 특성화 교육을 통한 고등,대학 교육연계에서 **사회 순환교육**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이다.
- 니체 -

감 사 합 니 다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청년친화기업육성 정책제안 - 기업지원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선순환 정책

유충열 전북도당 당직자

2021 청년기업 현황 조사-청년과 기업 간 상관관계 중심으로

■ 대한민국 청년기업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이 100%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했음에도 청년이 아닌 다른 동업자가 각각 대표로 취임할 경우, 세액감면 및 청년기업 관련 혜택 대상이 아님¹⁾
- 일자리와 창업이 별도 운용됨에 따라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이 부족
-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 대상자들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추천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가 선정된 기업들의 실제 근무여건이 추천 내용과 상이한 곳이 많아 본(本)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²⁾
- 19년 이후 기술 창업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 창업 성공률이 5% 미만임³⁾
- 또한 전체 창업기업의 생존율(19년도 기준)은 28.5%로 OECD 평균 생존율 41.7%보다 크게 낮음⁴⁾
- 청년 창업 실패 요인으로는 「준비 부족 35%, 경영 미숙 23%, 직원 관리 소홀 13%, 기타 29%」로 나타남
- 국내 5인 미만 사업자의 근로자 수는 약 350만 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사업장의 65%임에도 각 종 노동 관련 기본법에서 예외 집단에 포함되어 연차 휴가, 연장 및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부당해고 및 구제 신청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⁵⁾

1)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가 모두 34세 이하여야 하며, 지배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여야 함

2) 고용노동부: '16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부문에서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도입하여 시행 중

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 / 기술 창업 중 사업지원서비스업 19.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8%

4) 서울시: 청년창업 실패 원인 조사 결과

5) 2021년 근로기준법 기준

2021 청년기업 지원정책-중앙정부 중심으로

■ 중앙정부 추진 창업지원정책

- 고용노동부 외 9개의 시행처에서 총 62건의 창업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시행처	건수(개)	중앙정부 추진 창업지원 정책 내용
고용노동부	4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소셜벤처 경연대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탐색 지원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교육부	2	대학창업펀드 조성 / 대학창업펀드 조성
국토교통부	4	LH 희망상가 /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내 희망상가 제공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청년창업, 푸드트럭, 나이트카페 등) 고속도로 청년휴게소 (청년창업, 푸드트럭)
금융위원회	4	청년창업기업 대상 우대보증(청년희망드림보증) 제공 /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마포 청년혁신타운 (대규모 청년창업공간 조성) / 온라인 쇼핑몰 카드 수수료율 인하
농림축산식품부	9	청년키움식당 /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Lab / 외식창업인큐베이팅(청년키움식당)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Lab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1	관광두레 청년 참여 지원
여성가족부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31	청년전용창업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사업 창업성공패키지(구.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2021년도 글로벌 투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스톱서비스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청년창업기업 대상 세무·회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스톱서비스존 초기창업패키지(구. 창업선도대학 육성) / 실전창업교육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을 통한 청년상인 육성 민간투자주도형 TIPS과제(TIPS 프로그램) /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 / 재도전 성공패키지 도전! K-스타트업 / 글로벌액셀러레이팅(본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 재도전 성공패키지 /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
해양수산부	4	수산모태펀드 운용 /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수산모태펀드 운용 /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2021 청년기업 지원정책-전라북도 중심으로

■ 전라북도 추진 창업지원 정책

- 전라북도청 외 13개의 지자체에서 총 219건의 창업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시 행 주 체	건수 (개)	전라북도 추진 창업지원 정책 내용
전라북도청	56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 찾아가는 청년창업스타트업 / 전라북도청년사장 육성프로젝트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 창업기업 e-커머스 판로지원 / 스타트업 청년인재 매칭지원 전북 청년창업 드림스퀘어 구축 / 전북 미래산업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글로벌 벤처창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자체 전체	163	
고창군	2	청년어촌정착지원
군산시	14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등
김제시	3	청년창업 지원사업아리(All-Re)
무주군	9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 무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사업
부안군	13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생동하는 부안청년 창업지원사업)
순창군	27	청년창업 지원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청년 창업보육 지원사업)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 순창 청년형 팹플랫폼 구축사업 등
완주군	6	청년창업공동체 육성 / 삼례시장 청년몰 운영 등
익산시	23	수산모청년 창업 페스티벌 /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임실군	6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능보강사업 /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장수군	29	스타트 청년창업 지원 / 창업 식품기업 지원 / 청년희망(간편형)스마트팜 확산사업
전주시	13	전주신진예술가 지원사업 / 온두레 공동체 사업(청년 공동체 참여) 전주형 청년창업센터 운영 등
정읍시	10	정읍쌍화차거리 “청년창업몰” 조성사업 / 창업챌린지샵 청년매니저 양성 지원 사업 2020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공모
진안군	8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자체지원) 등

- 전라북도는 취업지원 사업에서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발달하여 있으며, 일자리 개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경상북도보다 구체적인 소재, 접근 방향을 명확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청은 취업지원과 마찬가지로 구체화되고 다양한 차원에서 창업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반 지자체의 대부분 사업은 농업 영역에 한정되어 있음.

2021 청년기업 지원정책-해외사례 중심으로

■ 예비청년 창업프로그램 해외 사례

- OECD 지역 청년 창업 정책 우수 사례
- OECD 에서는 전세계의 지역 청년창업 사례 중 우수 정책을 모아 발표한 적이 있음⁶⁾
- 각 사례의 성공 요인들을 정리

프로그램	국 가	성 공 요 인
Y4-기업 과정	핀란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유지 지방정부가 사전에 정책과 규제 제정등을 통해 청년창업에 적극 참여
FIPIN		학제간 역량을 갖춘 학생 양성 공, 사기업을 포함한 포괄적인 프로그램 협업 네트워크
Gruender-Mv.De	독일	최신 맞춤형 정책 서비스 제공 / 비관료주의를 추구하여 정책지원의 유연성 확보 지역 청년창업 관련 네트워크를 유지, 확대
Sachsen Anhalt		기업적 사고와 행동을 위한 청년들의 참여 동기부여 강화 교육기관 및 청년 기업 지원 단체와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지역기업과 학교, 학생)환경 조성
BPW (Business Plan Competition Berlin-Brandenburg)		창업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참여가능 정책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를 지원대상으로 여기며 적극적인 소통 및 홍보 / 전문적 지원과함께 특수화 진행
ENTERPRISE		청년 개인 맞춤형 전문 지원 /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보장 금융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NFTE	미국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 및 학습법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청년친화적인 교육문화 형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실용성 향상 및 경험 제공
Youth Entrepreneurship	캐나다	청년들에게 주체적 삶을 설계하는데 있어 창업이 하나의 커리어 선택이 될 수 있음을 홍보 청년 개발 활동에서 공공기관, 공기업 활동뿐 아니라 사기업 등의 활동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참여
Quebec 지역 창업 지원 프로그램		13살부터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등으로 예비 창업가 양성 주체적인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재정적, 전문 지원 / 지역 청년들에게 적극적 홍보 진행
Charlmers School of Entrepreneurship	스웨덴	청년(학생)과 최신기술 프로젝트와의 매칭 및 채용 시스템 구축 / 실습 위주의 벤처 교육 시스템
YBU (Youth Business Ukraine Programme)	우크라이나	청년창업가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환경 조성 / 회전 자금 시스템 도입 지역 활동가들이 멘토이자 창업 과정에 함께 참여

6) Hofer, A. and A. Delaney (2010), "Shooting for the Moon: Good Practices in Local Youth Entrepreneurship Support", OEC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LEED) Working Papers, 2010/11, OECD Publishing

■ 예비청년 조기 창업 프로그램 - 웨일즈의 YES 프로그램

- 웨일즈 정부는 청년 창업가 전략(YES: Youth Entrepreneurship Strategy)을 수립하여(5~25세를 대상으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
- 기업가 교육을 진행하여 청년층이 웨일즈에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쌓아가는 프로그램
- 웨일즈 지역 다양한 로컬 파트너와 네트워크 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창업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고 방향성을 확대하고 있음
- 세부 프로그램으로 창업문화 확산, 기술 및 정보제공, 후속 지원 사업 추진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내용
창업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컨소시엄 구성 - 고등교육 기관과 창업교육 홍보프로그램 도입 - 고용센터와 정부간 협력으로 실업 청년층에 대한 창업정보 확산 네트워크 구축
기술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일즈 개발청 주관 교육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창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진행
후속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시작 청년층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 - 정부 주도 Technology Commercialisation Centre를 운영하여 R&D 사업을 통해 기술적 협력체계 구축

■ 예비청년 조기 창업 프로그램 - 포르투갈 리스본(Lisboa) 청년 창업 프로젝트

- 리스본 청년창업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스타트업 형태로 13~15세, 15~21세까지의 젊은 (예비) 청년들이 소기업 운영을 실습해가며 창업 역량을 높이는 것

■ 청년들의 주체적 일자리 삶 설계 - 아일랜드 발리문 지역

- 아일랜드의 발리문은 청년보장제 시범사업(Ballymun Youth Guarantee)을 진행
- 청년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지 않고 그들 내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여러 집단으로 구분한 후 맞춤형 역량강화,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청년실업의 사회적 맥락에 맞춘 정책을 진행하며,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을 들으며 주체적 일자리 설계를 진행
- 교육뿐 아니라 최종 단계로 지역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종합적이고 공고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함
- 장기간 지원 정책으로 스타트업의 시작뿐 아니라 자립 성장(Incubation) 과정까지 지원
- 또 다른 특징은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 국가차원의 정책과 지역 내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등과 지방 차원에서 지원체계와 세부 정책을 모색

■ 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 - 프랑스 푸아투사랑트 지역

- 중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 내 지역고용직업훈련협력위원회를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
- 청년층 고용을 위해 미래계약, 세대계약 등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선정
- 미래계약은 학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지원
- 미래계약 청년층과 기업을 직접 연결하며 이들간의 계약을 중재
- 고용주에게는 최저임금의 75% 수준의 임금 보조금을 집행하며 청년지원단체인 지역 임무단으로부터 훈련과 고용과정에 대한 피드백과 자문, 상담 등을 받으며 지역 문제 해결 시스템을 갖추
- 정책의 시간적 기한을 일회적 취업 연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들의 직업 동기 등을 지역사회와 고용주가 함께 판단하여 프로그램 종료 시점을 설정하게 됨
- 세대 계약은 청년층에 대한 안정적인 무한기간 계약을 통해 고용 안정화를 추구하며 기업 대상으로 청년층에 대한 신규 고용이 있는 조건에서 지원이 이뤄짐
- 5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조건없이 지원이 이뤄지게 되며 이는 몇 인 이상인 사업체만 지원이 되는 한국과는 상반된 부분
- 오히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경우, 정밀한 고용 실태조사 이후 지원사업이 이뤄지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이 먼저 지역 고용지원센터, 청년지원단체 등에 의뢰하여 인력풀을 모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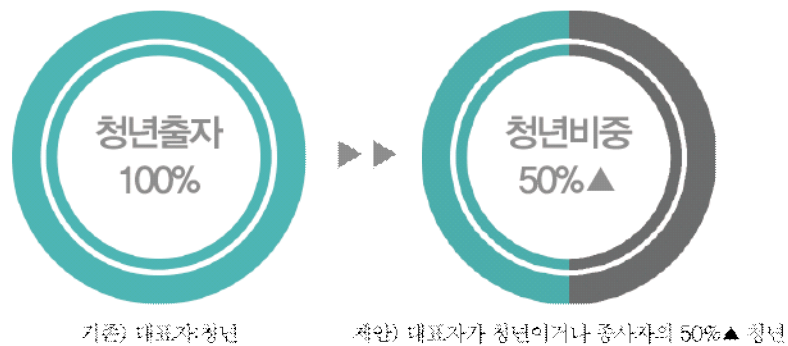
■ 청년창업 해외사례 - 이탈리아 토스카나, GiovaniSi

- 이탈리아의 Giovanisi(Youth Yes) 프로젝트는 3가지 금융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제조, 상업, 관광, 서비스 영역의 스타트업 사업을 위한 무담보 대출
- 신규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무담보 대출
- 전문 영역 특히 농업 관련 전문 창업을 위한 보증금 지원
- 이 청년창업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유는 아래와 같음
 - 1) 지방정책과 법률적 기반 아래 시작하여 그 효과성을 지속시킴
 - 2) 청년층의 경제적 측면과 함께 다양한 삶 영역을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함
 - 3)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청년 대표층 형성

청년친화기업육성 정책과제-정책 적용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 대한민국 청년친화기업육성 정책과제

- 청년친화기업의 제도적 기준 개정



- 일자리와 창업을 합친 선순환정책 시스템 구축



-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대상 및 월급 체계 개선

- #. 인센티브 및 추가 근무 관련 청년 지원·보호 법안 마련
- #. 포괄임금제 폐지

- 新 성장 동력 창업 지원 확대
 - #. 과학기술 #. 바이오 #. IOT
- 예비청년창업패키지 도입
- 청년친화기업 혜택부여
 - #. 의무구매비율 3% #. 수의계약 5천만원 #. 입찰가산점 부여

■ 대한민국 청년친화기업육성 기대효과

- 청년의 일자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 창출
- 「창업-일자리」의 선순환 정책을 통해 청년기업의 폐업률 저감 및 발전도모
- 성장 동력 관련 창업 지원 확대 및 후불제 창업 지원금 등을 통한 청년 창업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청년 활동 혜택으로 인한 다양한 기회 제공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상담심리체계 안정화 및 시·도 중심 심리 컨트롤센터 구축

조희선 전북도당 당직자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아동 및 청소년 심리지원 필요성 확대

- 급변하는 교육 상황에 따라 가정적 위기뿐만 아니라 학생의 개인적 위기(범죄, 가출, 성, 폭력 등)·교육적 위기(학습부진, 학업중단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학생 위기상담·지원사업>이 필요하게 되어 지난 2020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이 선정 및 추진되고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
-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생 상담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위(Wee) 클래스가 각 학교에 구축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해, 자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상담, 검사, 치료에 있어서 피해 지역의 대응 및 회복역량차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주도의 심리지원이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붙임 1) 위(Wee) 클래스 및 위(Wee) 센터 구축 현황('21. 4월 기준)

(단위: 개, %)

시도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학교 수	설치 수	구축률	교육청, 교육지원청 수	설치 수
서울	1,368	938	68.6	12	26
부산	635	550	86.6	5	5
대구	463	451	97.4	5	12
인천	537	439	81.8	6	14
광주	322	213	66.1	2	4
대전	307	255	83.1	3	5
울산	248	223	89.9	3	4
세종	99	95	96.0	1	3
경기	2,474	1,840	74.4	25	31
강원	638	410	64.3	17	22
충북	485	285	58.8	10	12
충남	726	396	54.5	14	17
전북	774	328	42.4	14	18
전남	836	426	51.0	22	24
경북	935	504	53.9	23	23
경남	981	578	58.9	18	18
제주	191	128	67.0	2	2
총계	12,019	8,059	67.1	182	240

※ 학교수: 교육통계 및 학교정보공시('20.10.) 기준

※ 구축률 = (지역 내 위(Wee) 클래스 설치학교 수 / 지역 내 학교 수) × 100

그림 1-1. 위클래스 및 위센터 구축 현황

나. 아동 및 청소년 문제 현황

○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 현황을 교육부 및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정신치료 현황에서 2015년 22만587명의 환자 수가 2020년 27만1천557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환자 수	220,587	226,761	250,375	272,862	271,557
0세~9세 환자 수	73,823	74,557	74,495	81,542	80,441
10세~19세 환자 수	150,720	156,770	180,735	196,603	196,972

주: 환자 연령은 진료시점 만(滿)나이 기준으로, 다른 연령대와 단순 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2021. 4. 16.)를 재구성함

그림 1-2.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 현황

○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자해와 자살 시도자 수 역시 2015년 2천318명에서 2019년 4천620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자살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살자 수	245	273	255	301	300
자살률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	2.3	2.7	2.6	3.1	3.2

주: 환자 연령은 진료시점 만(滿)나이 기준으로, 다른 연령대와 단순 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출자료(2021. 4. 15.)를 재구성함

전체 자해·자살 시도자 수 대비 아동·청소년 자해·자살 시도자 수 비중

(단위: 명, %)

연도	전체 자해·자살 시도자 수	아동·청소년 자해·자살 시도자 수	전체 자해·자살 시도자 수 대비 아동·청소년 자해·자살 시도자 수 비중
2015	26,728	2,318	8.7
2016	27,074	2,246	8.3
2017	28,278	2,667	9.4
2018	33,451	4,164	12.4
2019	36,336	4,620	12.7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자료 제출일: 2021. 4. 19.

그림 1-3.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 현황

2. 정책연구 목적 및 내용

가. 정책연구 목적

- 본 정책연구는 시·도 중심의 아동·청소년 상담심리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심리 컨트롤센터 구축을 위한 모델을 마련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담심리지원의 수요에 맞추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클래스 및 위센터 상담 관련 기관들의 운영방식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상담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첫째, 전국 위클래스와 위센터들의 운영 및 협력 현황을 분석하여 협력적 운영체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둘째, 전국 위클래스와 위센터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협력적 운영체계 필요성의 근거와 시·도 중심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문헌연구와 질적연구, 위기상담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전국 위클래스와 위센터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에 따른 위기상담 심리지원체계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시와 비상시 협력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한 최적의 위클래스와 위센터들의 협력 운영모델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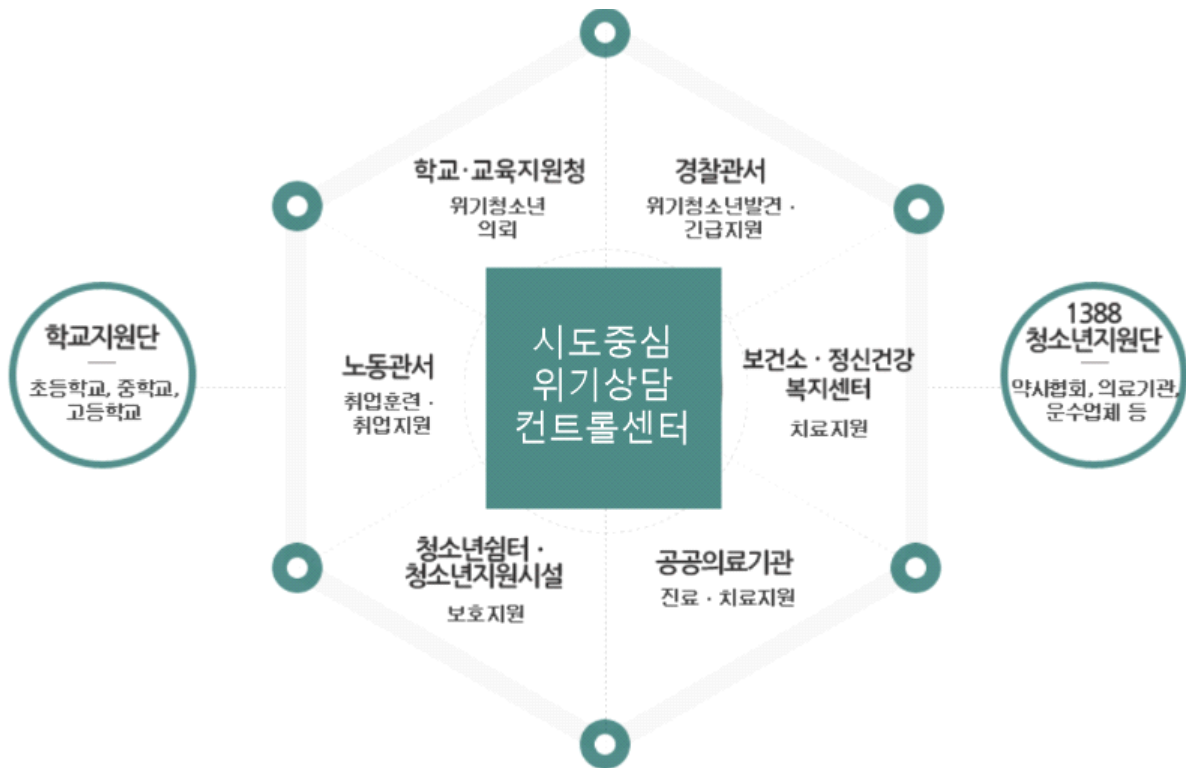


그림 2-1. 연구 세부주제 내용 요약

나. 정책연구 내용

1) 전국 위클래스 및 위센터 운영 현황 검토

○ 시·도 중심의 심리 컨트롤센터 상시 운영 특징과 위기상담 심리지원 시 역할과 기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트라우마센터 간 협력체계 현황 및 협업의 모범사례 검토하여 기존의 운영방식의 한계와 협력적 운영체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 시·도 중심의 심리 컨트롤센터 운영에 대한 인터뷰 및 전문가 의견조사

○ 위기상담 전문가·실무자들의 관련 자료들을 통해 시·도 중심의 심리 컨트롤센터 협력적 운영방안 및 필요성을 조사하고 시·도 중심의 심리 컨트롤센터 협력적 운영체계 마련의 근거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도 중심의 심리 컨트롤센터에서 기관별 역할 및 운영방안에 관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고, 시·도를 중심으로 하여 협력적 운영방안 및 필요성 모색하고자 했다.

3) 국내 대규모 재난 심리지원 협력운영 사례와 시사점 - 강원산불 통합심리지원단 사례로 본 협력 운영의 한계

가) 재난 심리지원 관련 관계부처 간의 문제

- (재난 심리지원의 이원화)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두 부처는 각각의 운영근거를 기준으로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총괄로 한 강원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필두로 한 재난 심리지원을 수행했다.
 -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2
 - *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 제5항,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3
- (협업체계 미비)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재난 심리지원의 총괄 및 운영흐름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으며, 효율적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불명확한 업무분담) 2019년 4월 5일 국가트라우마센터 주관의 심리지원 대책회의의 실시 되었으나 재난 심리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입지가 부족하고 관계부처가 달라 기관별 역할 및 업무분담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
- (중복서비스 제공) 관계부처 및 기관 간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서비스가 지속되었고, 이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투입된 인력 및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

나) 인력 관련 문제

-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 재난 심리지원에 투입 된 모든 인력이 상시 사업을 겸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들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상시 사업 운영 및 재난 대응 두 가지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 (보상체계 미비) 재난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업무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보상할 만한 체계가 없어 재난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인력들의 소진을 가속화시켰다.
- 반면, 행정안전부 등 재난과 관련된 다수의 경험이 있는 부처 및 기관의 경우 위와 같은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현장에서 재난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인력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했다.
- (실무자 소진관리 체계 부재) 실무자 소진관리 프로그램, 위기대응 후 업무변경, 휴가 사용 등 재난 심리지원에 투입되는 실무자들의 소진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기 상황이 끝난 후에도 일상으로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4) 시·도 중심 심리 컨트롤센터 협력운영체계 (안) 제시

- 기존 운영되고 있는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들의 역할들을 기반으로 위클래스 및 위센터 운영현황 검토, 시·도 중심 심리 컨트롤센터 협력운영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향후 시·도 중심 심리 컨트롤센터에 요구되는 역할들을 도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전국 위클래스와 위센터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는 위기상담 심리지원 운영체계안을 구성하였다.
- 구체적으로 시·도 중심 심리 컨트롤센터 협력운영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고, 기존 운영 중인 재난심리지원 운영체계안을 기반으로 「재난 정신건강 실무자를 위한 표준 매뉴얼」상에 명시된 기존의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의 역할들과 비교하여 새롭게 도출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역할들을 선별하였다. 이후 협력운영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협력운영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시와 위기상황 시로 구분하여 시·도 중심 심리 컨트롤센터 기관별 역할 및 사업내용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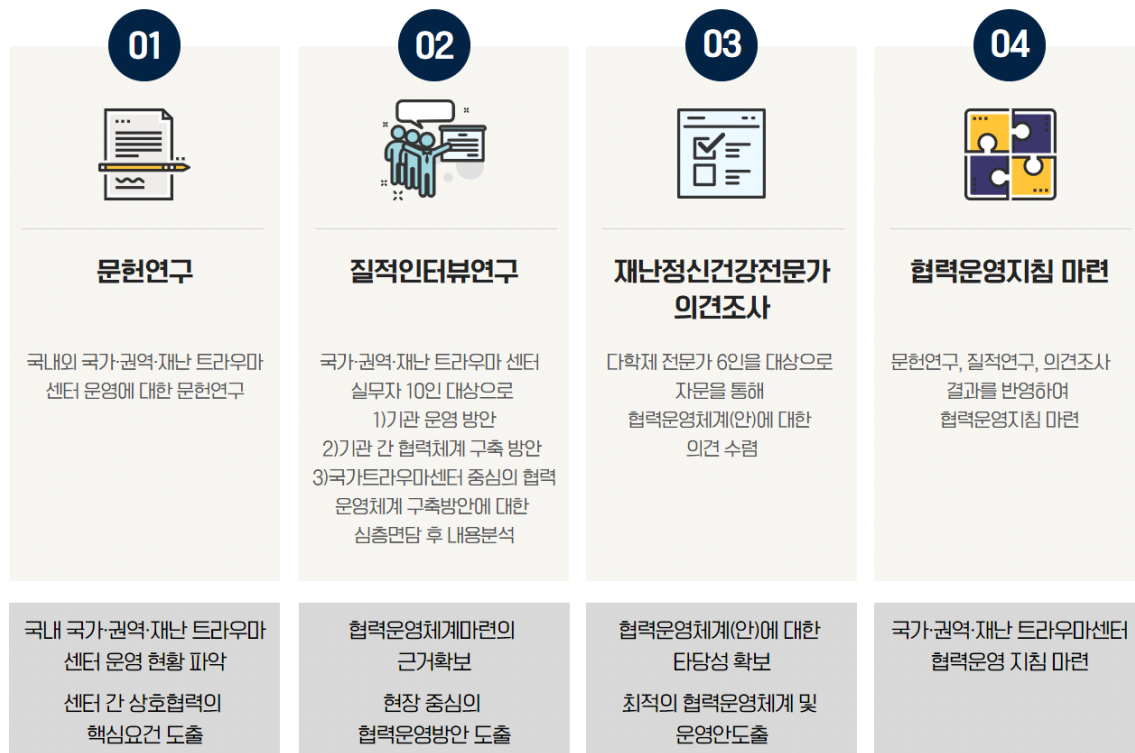


그림 2-2. (국가트라우마센터 모델) 연구 수행 절차

II. 시·도 중심 심리 컨트롤센터 운영에 대한 국내 사례분석

1. 청소년안전망 운영 사례분석

가. 청소년안전망이란?

- 청소년안전망이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자살, 인터넷 과의존 등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청소년(만9세 ~ 만24t)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국 23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2021년 6월 기준)를 기반으로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며, 위기청소년 및 양육자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심화된 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나.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

- 지역주민, 기관, 단체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원 즉, 경찰청, 교육청, 학교, 쉼터 및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자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상담, 보호,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

III. 정책과제

1. 시·도 중심의 아동 및 청소년 상담심리체계 구축

- 앞선 조사들을 통해 심리지원체계의 문제점들을 확인하였고 향후 시·도 중심의 아동 및 청소년 상담심리체계 구축에 대해 롤모델이 제시되며 요구되는 역할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체계를 근거로 학교와 위클래스, 위센터가 분리되어 상담이 진행되는 협력관계가 아닌 한 사례를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처를 두는 것으로 협력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심리 상담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심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2. 시·도 중심의 아동 및 청소년 심리컨트롤센터 구축

가. 협력운영의 기본방향

- 시·도 중심의 심리 컨트롤센터 협력운영을 위한 기본체계는 시·도의 중심 심리센터가 총괄하고 타부처, 기관등과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심리지원체계 구축 기능을 하는 심리 컨트롤센터 중심의 협력구조를 기본으로 하지만, 위기심리지원서비스의 효율성, 전문성, 확장성을 위해 지역 내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인 ‘위기 상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운영체계의 수직적 결정구조를 강화하는 것과 수평적 협력구조를 강화하는 전략 두 가지가 모두 요구된다.

가) 국가·권역·포항 및 안산트라우마센터 협력운영체계의 수직적 결정구조 강화

- 위기상담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집권화된 계층적 거버넌스 유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Newman, 2001). 때문에 기능적으로 계층적이고 중앙집권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수직적 결정구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직적 결정구조는 운영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그 총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 수직적 결정구조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결정권한을 가지는 기관들이 재난심리지원 대응에 있어서 모범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협력운영체계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총괄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어야 한다.!

나) 시·도 중심의 심리 컨트롤센터 협력운영체계의 수평적 협력구조 강화

- 시·도 중심의 심리 컨트롤센터 협력운영체계의 수평적 협력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구조를 강화하는 전략과 관련 사업을 제안한다.
-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 역시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위기심리지원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주요 위기상당 시 국가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들과 협업 경험이 있었던 주요 학회(예.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한국심리학회, 대한정신의학회 등) 및 민간기관들과 MOU를 맺고 권역 내 거주하는 이들을 해당 권역의 전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필요 시 상시 사업, 재난 현장에서의 심리지원 활동에 대한 자문이나 재난피해자 사례관리에 대한 수퍼비전 등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심리 컨트롤센터의 역할

- 위기상당 대응
 - 위기상당 현장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대응 매뉴얼 표준화, 학교상담 직간접 지원
- 위기상당 트라우마 회복지원
 - 고위험군 선별 체계 구축,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 사회적 트라우마 교육 훈련
 - 근거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정신건강 지원인력 양성
- 기획관리
 - 운영총괄, 위기상당 전산시스템 구축, 아동 및 청소년 인식 개선

3. 효과

- 아동 및 청소년 중심의 심리 컨트롤센터를 주축으로 위기 청소년을 보호·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을 기대효과로 본다.
-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의 핵심은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체계를 기존 시설에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는 일이지만 이를 개편하여 심리컨트롤센터를 주축으로 시가 주축이 되어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망 구성이 용이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수월해질 수 있다.

참고자료

- 채정호.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 및 역할 정립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 임영근. 군포시 청소년 안전망 운영 1년, 기호일보
- 김재현. 합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수기관 선정, 이뉴스투데이
- 김진희. 여가부, 1인가구·청소년부모 지원 확대...“정책 사각지대 해소”, 뉴스1
- 양산시 청소년광장. 청소년 안전망이란?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탄소중립과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에 대한 고찰

문수기 지역당원

너에게 묻는다(부제-연탄재)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매년 찬바람이 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려운 이웃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연탄 배달 등의 이름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곤 한다. 아마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각 봉사단체의 이름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나 또한 위 그림처럼 예외는 아니었으며, 연탄을 나르며 나 또한 누군가에게 연탄 한 장의 소중함처럼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봉사에 임하곤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연탄 봉사하는 분들 대다수는 환경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신 깨어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석탄발전소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원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까? 연탄은 석탄 발전소에 비하면 대기 오염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다. 지난 겨울 마지막 연탄 배달 봉사까지도 나의 의문은 떠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한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이었다.

사회 현상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보는 시각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예전에는 부지런한 거북이 즉,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지금은 동료들 깨우지 않고 혼자 가는 이기적인 거북이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에서 지금은 스톡킹이나 형사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따르는 시각으로 해석되어 지듯이 사랑의 연탄 나눔도 지금의 시대에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방식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이다.

II. 본론

1. 제안 배경

연탄 배달 봉사를 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늘 의문부호였던 과연 사랑의 연탄 나눔은 끝까지 사랑일 수 있을까. 연탄가스의 대기오염은 누구에게 어떤 말로 오직 사랑의 부유물이니 그 정도는 괜찮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된 의문은 2050탄소 중립 선언과 이후 민주연구원 정책전문가 양성과정을 계기로 정리를 해보게 되었다.

이제는 연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고, 더 나아가 전기의 에너지를 태양열 등으로 바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대신 사랑의 보일러 교체 수리 봉사 등으

로 바꾸고 그리하여 내가 살고 있는 서산부터 연탄 없는 도시 서산,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연탄 없는 나라, 연탄이 소외계층의 대명사가 되지 않는 나라, 그리하여 탄소 중립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제대로 실천하는 나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정책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의 시대 상황과 전국 연탄보일러 현황, 빈곤층 지원 대책 등을 차례로 알아보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순서로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한다.

2. 탄소중립의 시대 상황과 연탄보일러 현황

1) 탄소 중립의 시대 상황

한번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그 발원지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100여년 가량 지구 대기권에 머무르며 지구 온난화를 부추긴다. 몇몇 국가의 감축 노력만으로는 다른 국가의 배출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제기된 이래 국제 협력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가. 파리협정(2015.12.12.)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 후속 신기후체제로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억제하고 나아가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도 목표란 1850년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것으로, 2도 상승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임계점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즉, 2도로 정하되 1.5까지 낮추려고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당사국들은 각자 목표를 정하여 5년마다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점검은 2023년 처음 실시되고, 우리나라도 2022년까지 2040년의 감축 목표를 정하여 국제 연합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1.5도 특별보고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 과학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여기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1.5도 특별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195개 회원국)

1.5도 특별 보고서는 파리협약 2조에 명시된 지구 온도 상승을 2도까지, 나아가 1.5도까지 제한한다는 목표와 관련하여 온도가 1.5도 상승한다면 겪게 될 영향과, 온도를 1.5도 미만으로 묶고자 인류가 선택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분석해 달라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들의 요청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보고서에는 2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첫째 온도가 2도 상승할 때와 1.5도 상승할 때의 기후 시스템의 변화를 비교 설명한다. 2도 상승할 때와 비교하여 1.5도 상승할 때에는 기후 변화로 생물 다양성, 해수면 상승, 기반시설등의 피해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

구분	1.5도	2도
고유생태계 및 인간계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산호소멸	70~90%	99%이상
기후변화 빈곤 취약 인구	2도 온난화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억명 증가	
물부족인구	2도에서 최대 50% 증가	
육상생태계	중간위험	매우위험
서식지 절반이상이 감소될 비율	곤충6%, 식물8%, 척추동물4%	곤충18%, 식물16%, 척추동물8%
북극해빙 완전 소멸 빈도	100년에 한번(복원가능)	10년에 한번(복원 어려움)

둘째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언제까지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다.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45%까지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자연 흡수가 서로 상쇄되는 이른바 넷제로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2050년까지 배출제로로 전환하려면 석탄발전 중단, 재생 에너지가 전기의 70-85%를 공급, 산업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 대비 2050년까지 75-90%를 감축해야 한다.

그래서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토지, 도시와 기반시설, 산업 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류는 지금까지 인터넷 시대로의 진입 등 일부 분야에서 빠른 전환을 이뤄낸 바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면 이런 종류의 전환이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인류의 빠르고 획기적인 변화, 뜨거워지는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

다. 여기서 나는 다시 한 번 사랑의 연탄을 나르며 가졌던 의구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정책을 제안할 정도의 위치에 있고 문제의식을 갖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고 사진을 찍고 뿌듯해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으로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2) 연탄보일러 현황

2017년 전국연탄사용가구조사 결과 2017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과 에너지빈곤층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4개월간 전국연탄가구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130,464가구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2,808가구, 부산1,421가구, 대전2,221가구, 대구5,698가구, 광주3,304가구, 울산171가구, 인천1,796가구, 세종134가구, 경기9,164가구, 강원27,843가구, 충남9,166가구, 충북9,477가구, 전남14,232가구, 전북8,227가구, 경남2,675가구, 경북31,510가구, 제주617가구로 조사되었다.

감소원인으로는 ①도시재개발에 따른 철거와 이사 ②질병과 고령화로 인한 사망 ③주거환경 변화 등으로 나타나, ‘연탄사용 에너지빈곤층의 삶과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알 수 있다.

연탄보일러 사용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으로서 가구당 연탄사용 기간 및 사용량을 보면 연탄 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다. 연탄 1장당 가격은 2009년 500원이었는데, 한 동안 이 가격이 유지되더니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올라 지난해 800원까지 뛰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탄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왔는데, 이 지원금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연탄 가격은 점점 오르게 되었고,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연탄 기부와 봉사가 급감하면서 연탄 지원을 받기도 어려워진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상 출처-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연탄 사용기간과 비용을 보면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 하루 4~5장을 쓰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84만원에 이른다.

3. 제안 목적

그렇다면 전국 각 지역의 연탄 지원 봉사와 정부의 연탄가구 사용에 대한 지원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위와 같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이 대두될뿐더러 어느 곳 사소한 곳 하나도 그 대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지는 탄소 중립 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연탄의 원료인 석탄 소비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부터라도 저소득 빈곤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역 봉사단체를 통하여 감정에 호소하고 마음을 자극하여 단순히 연탄을 지원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즉, 에너지 전환을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1970년대, 우리네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연탄. 하지만 기름보일러, 도시가스 등이 보급되면서 이젠 자취를 감춘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국 가구 중 0.4%가 아직도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고층빌딩과 고급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강남구에서조차 여전히 320가구가 연탄불로 난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중략 -

■ 연탄 지원의 딜레마...에너지 전환 지원 필요

연탄값 상승이 문제라면, 정부가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연탄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탄소 중립 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연탄의 원료인 석탄 소비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임재민 /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총장

“단순히 연탄을 지원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연탄 보급을 통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상 2021. 11. 27. KBS뉴스----

4. 정책 제안

1) 연탄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

연탄 없는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일단 연탄보일러의 전기보일러로의 교체가 시급하다.

더 나아가 유휴부지나 옥상 태양광 설치 후 전기보일러로 교체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 본다.

태양광 설치비용을 살펴보면 3KW주택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비용은 250~300만원 정도 예상 되어 지고, 위 태양광을 설치하고 난 후 전기 비용은 월 1만원 이내의 비용으로 가능하다.

2) 조례의 제정

그렇다면 연탄 없는 서산시를 만들기 위한 서산시 연탄보일러 교체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법률적 뒷받침 까지 하기를 제안한다.

-----타 시 사례에 대한 기사-----

【청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시사,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 청주YWCA, (사)사람과 경제 등 5개 기관·단체는 지난 7월 14일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2050탄소중립-연탄 없는 청주시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 연탄 사용 가구 현 실태조사

이번 사업은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가구당 2~3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료

로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35가구의 지원을 예상하며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㉞청주YWCA는 이를 위해 청주시, (사)사람과경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시사,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 등 여러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㉞청주YWCA는 그동안의 에너지전환운동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해 주택, 상가, 주차장, 공공부지 등 생활 속 곳곳에 태양광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타당성, 효율 및 경제성 등을 상담해 햇빛발전소가 설치되기까지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ATOZ시민센터의 아토저 상담사들이 ‘연탄 없는 청주시’ 사업에 동참했다.]

---출처 : 중부매일(<http://www.jbnews.com>) ----

III. 결론

나부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연탄보일러 사용자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아니다. 지금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탄소중립의 실현이 시급하고 나부터, 지금부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현하는 것이 2050 탄소 중립에 달성하는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얼마 남지 않은 노령 빈곤층(연탄보일러 사용인구)도 사람답게 살 권리, 여생을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은 에너지 전환, 나아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연탄의 사랑을 더 크게 실천하는 길이라 본다.

한편으로, 일반인들은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삶도 돌이켜 보고, 연탄의 의미도 깨닫고 사랑도 실천하고 좋지만, 위정자들은 사랑의 연탄 나눔이라는 미명아래 나를 홍보하는 홍보의 장으로 사진찍기 바쁜 연탄 나눔 보다, 그 소외 계층들을 위한 더 좋은 정책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며 제안을 마친다.

미래세대에게도 푸른 지구를 물려주기 위에 나부터 우리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자.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문제 - 기후위기가 노동위기로 되지 않으려면

이지윤 지역당원

0. 들어가며

지구온난화 1.5도와 2도 상승의 차이

	1.5도 상승	2도 상승
산호초 멸종률	70~90%	99%
연안 홍수 위험	보통	매우 높음
여름철 평균온도	3도 상승	4.5도 상승
2100년 해수면 상승	0.26~0.77m	0.36~0.87m
생물종 절반 절멸률 (특정 생물종이 절반 이상 사라지는 비율)	곤충 6%	곤충 18%
	식물 8%	식물 16%
	척추동물 4%	척추동물 8%
육지 생태계 변화율	약 6.5%	약 13%
어획량	150만t 감소	300만t 감소

〈자료: IPCC〉

출처: 서울신문

기후변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로 꼽힌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약체(IPCC)가 지난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대응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기에 충분치 않으며,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류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1.5도 상승하면 산호초의 70~90%가 사라지고 2100년에 해수면이 0.26~0.77m 높아진다. 0.5도가 더 올라 지구 평균 온도가 현재보다 2도 높아지면 산호초의 99%가 멸종하고 2100년 기준 해수면도 0.36~0.87m 상승하게 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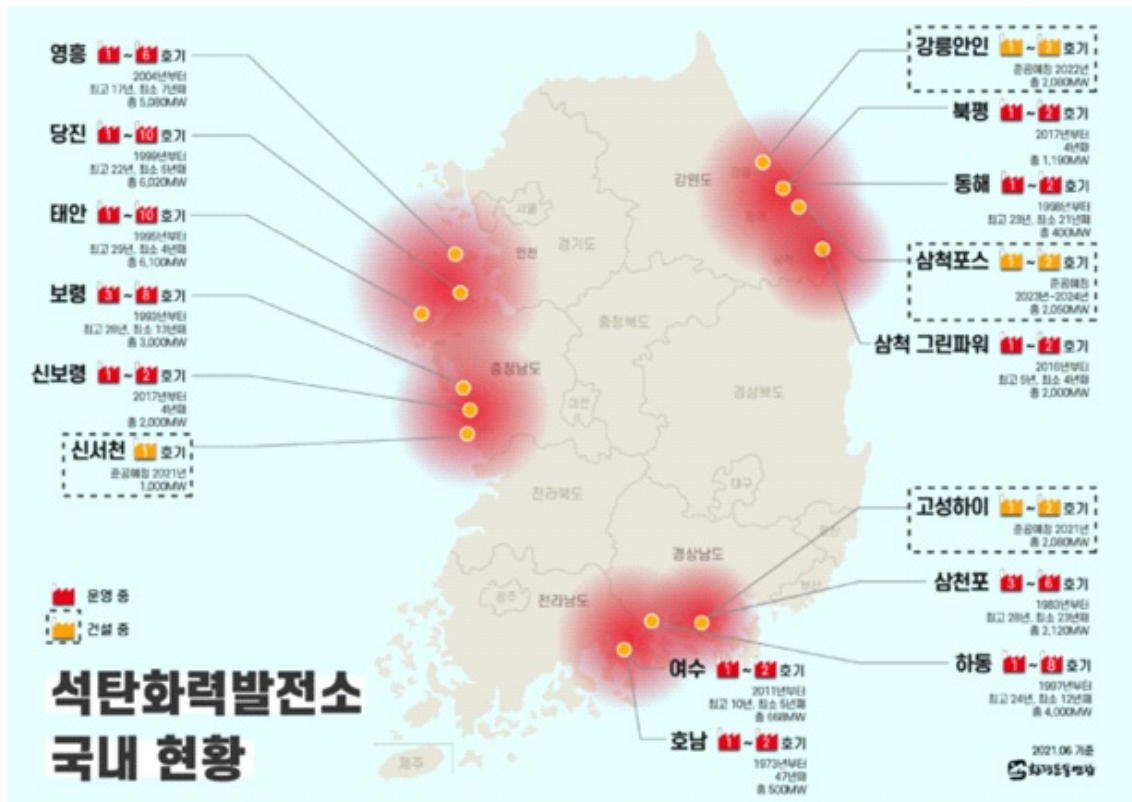
이에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중립 달성이 필수적이라는 목표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 지난 11월 열린 COP26도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시키는 자리였다. 다만 국제 사회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속도는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P26에서 국제 사회는 이미 탄소감축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지를 두고 구체적인 역할을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해 이제 막 첫발을 떤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지난해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후속 대응으로 지난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1) 서울신문 〈지구 온도 2도 오르면 산호 99%·생물 절반 이상 사라진다〉, 2018.10.08.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09002007#csidxaa0b3ccc2721ea2b359f0d4bdeff1ab>

1. 우리 지역의 현안

1-1. 석탄화력발전소와 탄소중립 정책



출처: 환경운동연합. 2021년 6월 기준

국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주목을 크게 받는 분야는 바로 석탄화력발전이다.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배출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총 60호기 중 절반이 충청남도에 몰려있다.²⁾

충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대기오염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충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국의 25%인 1억7,700만톤. 이중 9,000만톤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 중 약 10분의 1이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충남도 지난 9월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탄소 절감에 나섰다.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를 2032년까지 14기, 2050년까지 전부 폐쇄하기로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2040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실가스 배출 1위 충남...‘탈석탄 정책’으로 탄소 중립 선도>, 2020.12.1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1300>

년까지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1-2. 탄소중립, 기울어진 운동장?

이 같은 탈석탄 정책으로 현장에서는 발전소 폐쇄와 관련한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화력 발전 지역의 피해 문제가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의 고용 불안은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줄면 상권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 불가피한 전환이자 변환이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다.³⁾

보령시의 인구 사례는 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1980년만 해도 16만 명이었던 보령시 인구는 올해 초 10만 명 선 아래로 내려갔다. 충남 도내 7개 시 단위 지자체 중 인구 수 10만 명이 무너진 것은 보령이 처음이다. 보령 인구수는 지난 4월 9만9,100명까지 떨어졌고 최근 9만 8,000명 선까지 줄어들었다.⁴⁾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 1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 중장기 인구 정책 등을 전개해왔지만 보령 화력발전소 폐쇄로 체감하는 위기감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이로 인한 관광 수입 감소까지 지역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보령 화력의 조기 폐쇄로 근로자들이 이직을 하는 등 인구 감소가 지역 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⁵⁾

2. 내가 만들고 싶은 지역의 비전

강원도 정선 사례를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1980년대 국내 석탄산업의 중심지였던 정선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다수 광산을 폐광했다. 일 자리를 찾아 이 지역에 정착했던 노동자들이 떠나면서 도시는 급속하게 쇠락했다.⁶⁾

관련 개발 법에 따라 지역에 카지노가 잇따라 들어섰지만 평가는 엇갈렸다. 지역 원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을 유치했다는 지적과 이 산업마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역은 존폐에 기로에

3) 동아일보,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우려와 희망 교차〉, 2020.12.3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30/104707704/1>

4) 경향신문, 〈전환기의 노동, 길을 묻다(상)~“사업장 폐쇄도 닥쳐야 알아...탈석탄 맞지만 고용 불안 헤아려야”〉 2021.05.19.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5192110005#c2b>

5) 연합뉴스, 〈탄소와의 싸움, 일자리는 안전할까〉, 2021.10.30.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9115900501>

6)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태백과 정선, 꽃피우지 못한 정의로운 전환〉, 2013.03.30.

http://enerpol.net/epbrd/bbs/board.php?bo_table=bbs8&wr_id=495&page=3



1980년대 정선 모습. 출처: 국가기록원

섰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분명한 점은 지역 산업 전환 이후 인구 감소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당시 떠나간 인구 중 다수가 해당 지역을 떠났다는 점이다.

2021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은 그때의 정선과 어떻게 다를까.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

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시행,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력발전을 대체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관련한 일자리가 새로 생기더라도 일자리를 잃은 기존 산업종사자들이 재배치되기까지는 시간적, 물리적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담당 업무가 크게 달라진다면 재취업조차 쉽지 않다. 결국 30년 전 정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충남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탄소중립에 따른 화력발전 산업의 전환이 환경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수히 논의됐지만 이는 일차원적인 대안에 불과하다. 대부분 에너지 전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산업 노동자에 대한 논의와 지역 피해와 지원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다.

이에 선제적인 일자리 지원책과 지역의 신규 성장 동력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구 산업과 신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탈석탄으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지역에 지역균형뉴딜이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3. 구체적 정책과제

3-1. 해외에서는...⁷⁾

주요 선진국에서는 석탄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종사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전환을 실시 중이다. 한순간에 기후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사람들에 사회적 포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EU의 사례를 살펴보면, 석탄 광산 및 발전소 노동자가 23만8,000명에 달한다. EU의 탈석탄 계획에 따라 노동자 23만8,000명 중 16만 명이 2030년 직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⁸⁾

7)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의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 추진성과>, 2019 <http://dl.kotra.or.kr/#/search/detail/364175>

8) 이투스뉴스, <그린뉴딜, 공정한 전환으로 지역주민과 공생해야>, 2020.09.29. <https://www.e2news.com/news/article>

이에 EU는 기존 석탄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재훈련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EU 공동체 장기 예산을 활용해 사회 자금으로 근로자 재교육 지원과 구직 활동을 돕는다.

독일의 경우 과거 독일 석탄 및 철강산업을 대표했던 루르 지역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독일 정부의 단계적 석탄 폐지에 따라 루르지역은 일방적인 결정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선상에서 토론하기 시작했고 기존 산업 종사자 지원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캐나다의 대표 산업지역인 앨버타 주의 경우 석탄공동체 전환기금(CCTF)과 석탄노동자 전환 프로그램(CWTP)을 설치해 기금 4,500만 캐나다 달러를 조성했다. CCTF는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목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전환 전략을 개발하고 석탄산업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를 지원하는데 사용했다. CWTP는 국가 고용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석탄 근로자에게 소득지원, 이주지원, 기술 재훈련 및 구직활동을 지원했다.

3-2. 정책 제언 - ‘그린 상생 프로그램’

기후위기 대응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선제적인 고용 안정, 재교육, 생활 안정 등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해당 산업이 막을 내리면 산업 종사자도 쫓겨나는 선형 경제가 아닌 순환경제 일자리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다.

#. 그린 상생 워킹 프로그램 가동

- 개요 : 기존 산업종사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전개. 기존 산업 기술과 가장 유사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술을 연계해 교육 진행.
- 대상 : 기존 석탄발전소 종사자 및 유관 기관 종사자
- 참여주체 : 지자체, 지역 대학, 기존 산업 노동조합, 시민 대표
- 교육 기관 : 도내 22개 대학, 8개 전문대학, 1개 사이버대학
- 내용 : 지자체와 도내 대학, 기존 산업 노조, 시민 대표 등이 참석해 기존 산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기술 교육 진행. 에너지 전환이 중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선제적으로 재취업 교육 전개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기존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 교육은 도내 대학을 활용해 필요 기술 및 지식 이수.
- 교육과정 이수한 기존 산업 종사자에게 신산업 발전소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 연계.

이와 함께 ①해당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내 산업 관계로 구성된 협의체인 ‘그린 상생 협의체’(가칭)가 조직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종사자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를 통해 각 조직이 산업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미래 일자리 창출, 변화에 따른 지역 결속 유지, 피해 예상 지역의 경제 투자 환경 조성 등에 관한 논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발전소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와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인 ‘그린 상생 워킹 프로그램’(가칭)

을 구축한다. 화력 발전소 근로자가 신재생 에너지 부문으로 자리를 옮길 시 적절한 보수와 근무 조건을 갖춘 미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도내 대학과 기업체와 연계해 신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도 이와 함께 운영해 기존 종사자가 원할 시 신규 에너지 발전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수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③‘에너지 구조 전환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탈석탄에 따른 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보령의 석탄발전소 완전 폐쇄 시점인 2050년까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석탄 도시에 관광특구인 ④그린 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 석탄이 문을 닫은 자리에 풍력, 태양광 등의 시설물이 들어서면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기존 종사자가 원할 시 관광특구의 종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그린 상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한다.

4. 나가며 - 나의 정책이 국가의 미래에 할 기여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피해 사례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 위기 지정, 협의체 구성,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단기적인 연착륙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선제적인 일자리 정책을 전개한다면 충남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대표 지역으로 거듭날 것임에 틀림없다. 기존 산업이 문을 닫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신산업의 안정적인 안착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가 마련된다면 다른 석탄발전 도시들도 충남의 사례를 보고 탈석탄 대열에 기꺼이 합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충남의 적극적인 기존 산업 일자리 지원 정책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선봉에 선다면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막막할 수 있지만 선발대의 사례가 있다면 일을 추진하는 데 보다 수월하게 전개할 수 있어서다.

일자리와 함께 석탄이 빠져나간 자리에 들어선 신재생 에너지를 타운 조성 등 관광 산업으로 풀어낸다면 충남은 석탄발전의 도시가 아닌 신흥 에너지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고찰 - 청년 고독사

신석우 충북도당 당직자

1. 문제 제기

최근 들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뀐 결혼관과 사회로 첫발을 내디딜 기회도 쉽게 얻지 못하는 취업난, 그리고 고시원, 원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거난은 청년 1인 가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혼밥, 혼술 등 혼자 영위하는 활동들이 청년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요 매개체였던 행위들이 혼자 하는 문화가 된 것은 우리 삶의 양태 또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MBC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혼자 사는 삶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혼자 살 자유, 합리적 개인주의로 포장되는 1인 가구의 이면에는 어두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의 연령대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2030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이라고 나와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세와 맞물려 청년 고독사 수치도 증가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부재로 연령대별 자살률,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통계로 유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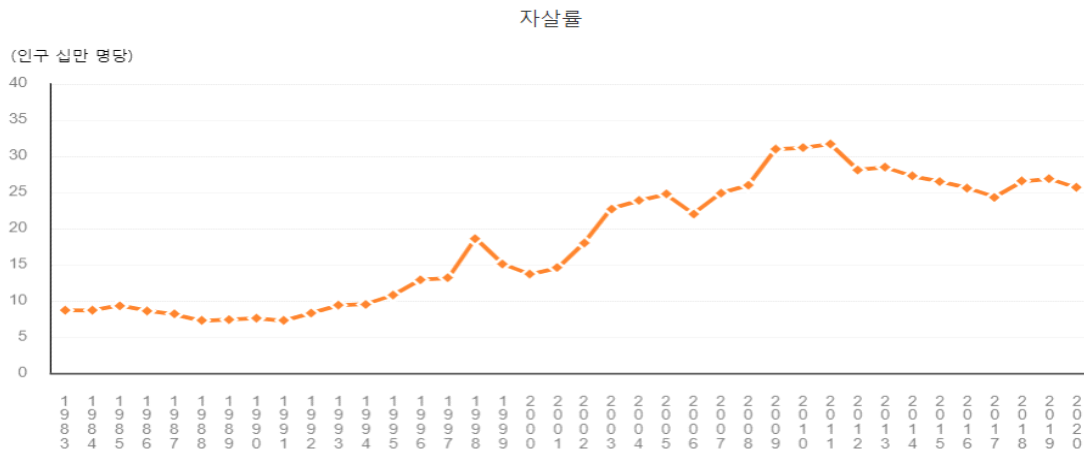
청주시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청주지역 1인 가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11만 6천872가구로 청주시 전체 34만 8천328가구 중 33.6%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1인 가구 평균인 31.7%보다 1.9% 높은 수치이다. 눈에 띄는 점은 20대 1인 가구의 급증세이다. 2020년 기준 20대 1인 가구는 2만 8천660가구로 2015년보다 93.3% 급증하였다.

지역의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에서 청년들이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보고 사회적 문제로 현실화된 청년 고독사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II. 현황

1. 자살률



[출처: 통계청, 1983~2020년 자살률통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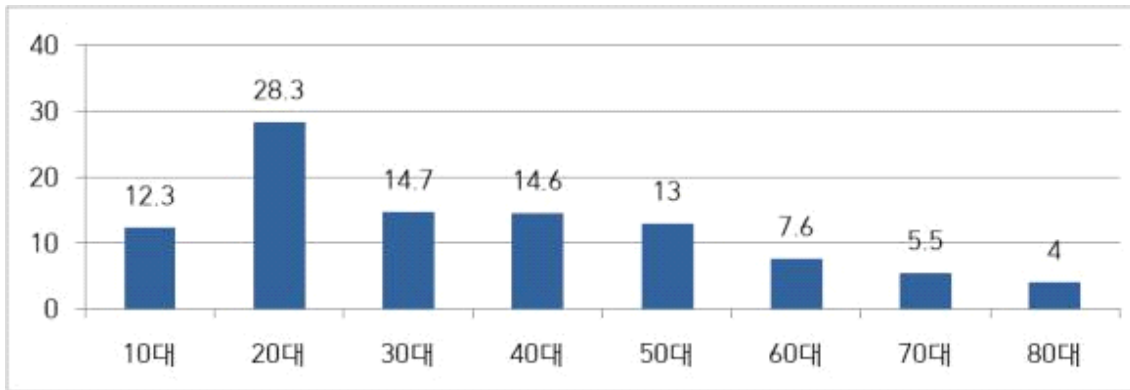
대체로 자살률은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 자살률은 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 크게 늘었고,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우상향 곡선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7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OECD국가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2. 연령대별 사망원인

	0세	1-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1위	출생후에 기원한 특정병	악성신생물	고의적 자해(자살)	고의적 자해(자살)	고의적 자해(자살)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116.7 (48.5%)	1.6 (18.0%)	6.5 (41.1%)	21.7 (54.4%)	27.1 (39.4%)	39.8 (28.3%)	113.0 (36.6%)	270.6 (42.4%)	677.5 (35.7%)	1375.6 (17.6%)
2위	선천기형 변형 및 영부제 이상	운수사고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고의적 자해(자살)	고의적 자해(자살)	심장 질환	심장 질환	심장 질환
	41.1 (17.1%)	0.7 (8.0%)	2.2 (14.0%)	4.1 (10.2%)	13.2 (19.1%)	29.2 (20.8%)	30.5 (9.9%)	55.9 (8.8%)	186.8 (9.9%)	971.5 (12.4%)

[출처: 통계청, 2020년 사망원인통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연령대별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백분율은 20대 54.4%, 30대 39.4%이다, 전년 대비 20대는 3.8% 증가한 수치이고, 30대는 0.4%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30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응급실66개기준], [단위:%]

3.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자살시도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20대 청년층이다. 전체 자살시도자 2만2572명 중 20대 남성 자살시도자는 전년 대비 19% 늘어난 1,788명이며, 20대 여성 자살시도자는 전년 대비 무려 33.5% 늘어난 4,607명으로 나타났다. 저성장 시대 속 낭떠러지까지 몰린 청년세대의 우울감이 코로나19로 증폭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다른 연령대보다 더욱 강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Ⅲ. 원인

1. 고용불안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따르면 올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 경제 고통지수는 27.2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연체자의 경우 2020년에만 14만여 명에 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도 급증하고 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의 우울 현상은 자살률 증가로도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직업별 자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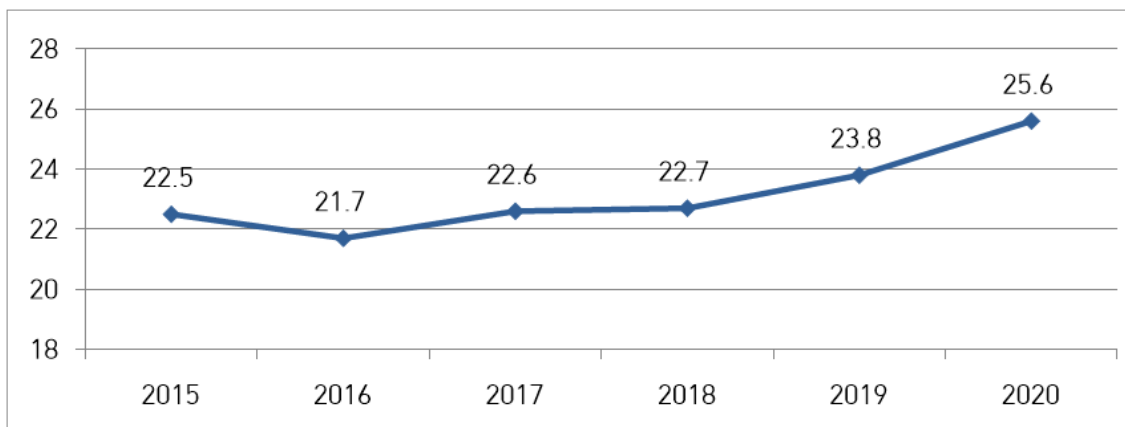
	자살자 수	백분율
관리자	122	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63	4.1
사무 종사자	1,242	9.0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	1,112	8.1

	자살자 수	백분율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82	2.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8	0.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15	3.0
단순노무 종사자	1,294	9.4
학생, 가사, 무직	8,318	60.3
미상, 군인(사병제외)	233	1.7
전체	13,799	100.0

[출처: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계]

직업별 자살 통계를 살펴보면 학생, 가사, 무직일 때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자원이 필요하고, 인간은 그 자원을 구하는데 돈이 없으면 생존에 위험을 느낀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 확장실업률〉



[출처: 통계청, 고용동향, %]

*확장실업률 : 실업자 외에 취업을 원하는 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한 실업률

청년 확장실업률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고용 보조지표로써, 청년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2020년 25.6%의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청년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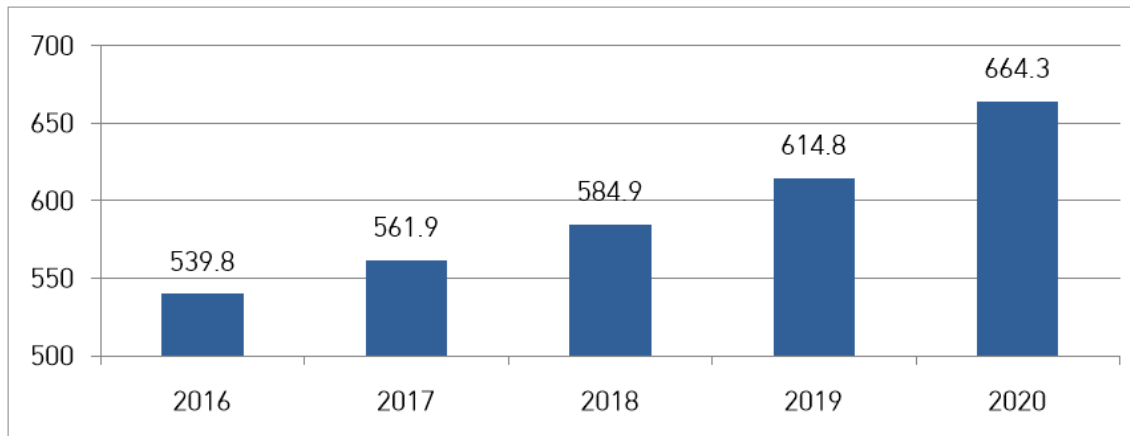
2. 주거불안

대한민국 국토 면적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중 50.28%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려있으니 인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공간이라는 자원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많으니 부동산값은 오르고, 청년들은 아파트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고시촌이나 원룸촌으로 밀려 나가고 있다.

1) 주거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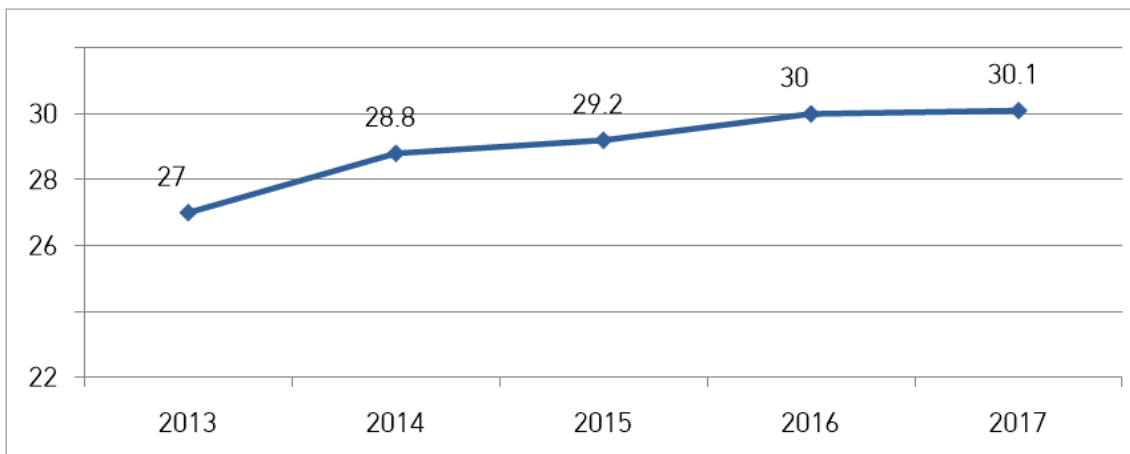
한정된 공간에 청년들의 수요를 감당하려다 보니 극도로 효율적인 주거형태인 원룸 및 고시원이 대중화되었고, 이는 곧 주거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원룸과 고시원은 1인 가구로 대표되는 주거형태인데, 원룸과 고시원에 주거하는 가구가 많을수록 고립의 시간이 길어져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다.

〈1인 가구 규모 추이〉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만 가구]

〈1인 가구 자살비율〉



[출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보건복지부, 5개년 자살사망 분석보고서, %] - 5년 자살사망자 6만4124명 특성 및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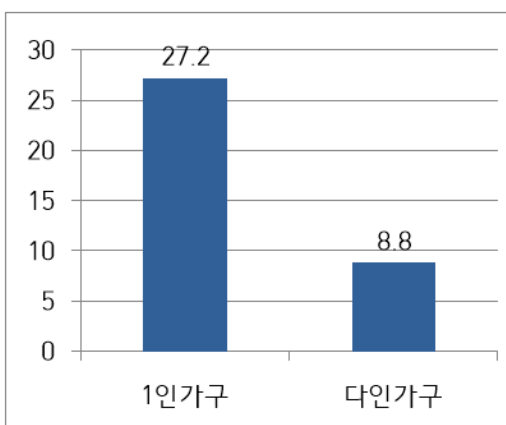
국내 1인 가구 수는 2020년 기준 664만 3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1.7%를 차지한다. 1인 가구 자살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가 전체의 36.1%, 경제문제가 19.5%를 차지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이다. 청년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238만 3000가구로 1인 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과 주거불안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붕괴는 정서적 불안감을 생기게 할 수 있고 청년들의 고립감을 폭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 가족관계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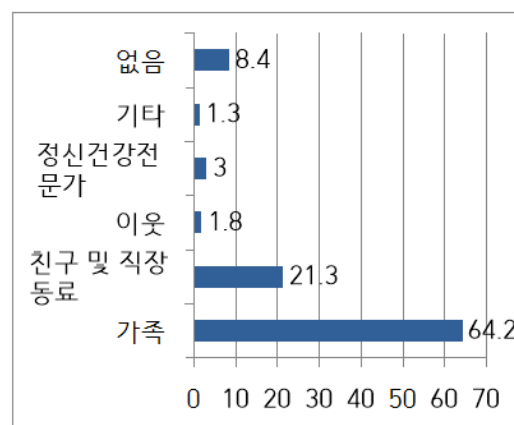
청년들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가정의 형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가정의 형태는 연애, 결혼,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위 세 가지 모두를 포기하는 3포세대로 불리고 있다. 모든 관계의 근간인 가족과의 유대가 느슨해지는 것은 심리적으로 미치는 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1인 가구는 마음이 무너지면 이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다. 고독 사라지는 것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1인 가구, 다인 가구 우울감 비교>



[출처: 통계청, %]

<심리적 지지 제공자>



[출처: 보건복지부, %]

가족은 자살을 막는 가장 큰 인간관계이다. 우울한 생각을 하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죽음을 선택하기 쉽다. 위 표에서 보듯 1인 가구의 우울감은 다인 가구에 비하여 3배 이상 높다.

심리적 지지선인 가족이 없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

IV.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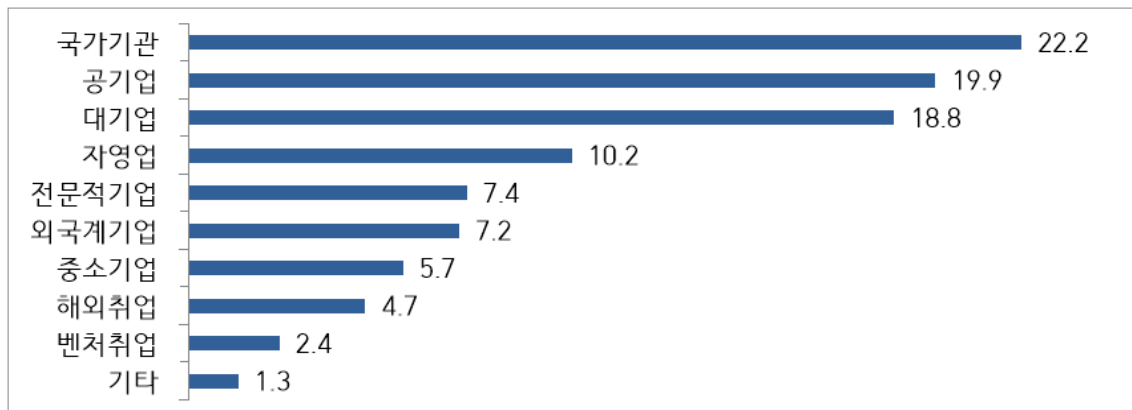
다음의 해결 방안은 국가 차원과 지자체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국가 차원에서의 방안은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루었고, 지자체 차원의 방안은 현실에서 우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중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행될만한 정책들을 선별해 보았다.

1.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

1) 교육과정의 다변화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히 미래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종 국가 성장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결국 노동인구당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인재육성 방법의 변화이다.

〈청소년 선호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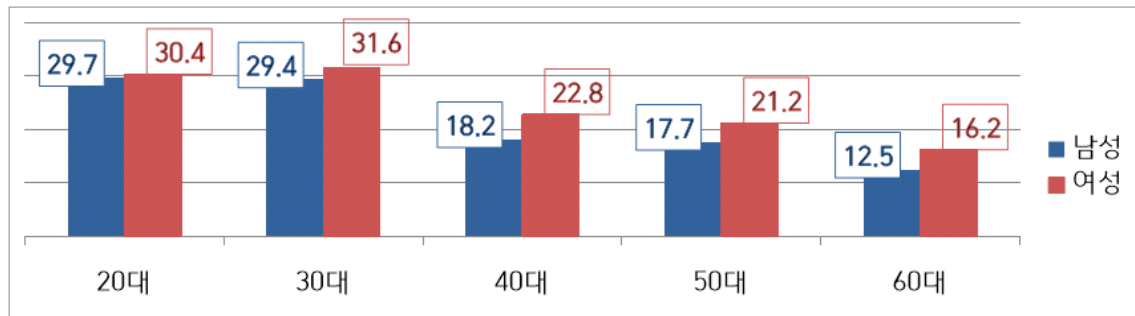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 2019 13~24세 청소년대상]

현재의 교육과정과 인재육성 방법에서 위의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교육과정을 다변화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도를 높여야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2) 청년 고독사 예방정책 강화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여러 가지 고독사 예방정책들은 중장년층과 노년층 1인 가구에 맞춰져 있다.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립을 돕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젊다는 이유로 복지 시스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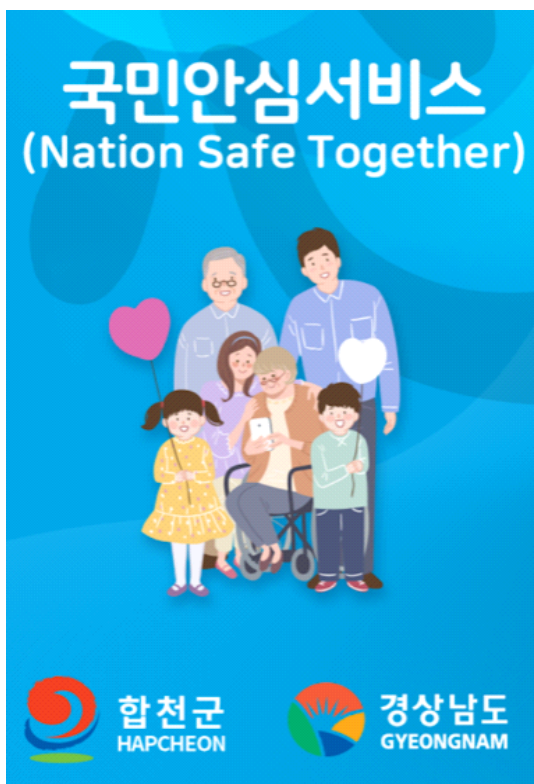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 비교〉



출처: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울한 연령대가 2030 청년층이다. 청년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정신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30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기 주관이 확고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고립의 상황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연령층이다. 일반적인 정신건강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의 경우 청년층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거부감을 들게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정신과 진료 등의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필요하다.

2. 지자체 차원의 해결방안



국민안심서비스 앱 소개

1. 이 앱은 합천군(경남)에서 **고독사 예방**과 **거동불편자의 미거동, 실종, 납치** 등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구호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2. **지정시간(최소 12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 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예측하고, 휴대폰에 미리 등록해 놓은 **다수의 구호자에게 구호문자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여 빠른 구호가 가능합니다.
※ 구호문자 발송 전 알람 음을 통해 30분간 본인의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3. 별도의 서버가 필요없어, 휴대폰으로 운영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4. 휴대폰이 **꺼져 있거나 절전모드**일 경우 앱은 작동하지 않으며, **항상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취침하는 동안 알람 거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우수사례

(1) 합천에서 서울까지

경남 합천군이 개발하고 무상 배포하는 ‘국민안심서비스앱’이 서울특별시와 공유되었다. 이 앱은 2019년 합천군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한 앱이다. 최소 12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호 문자가 발송되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하여 빠른 구호를 가능하게 한다. ‘국민안심서비스앱’은 모든 연령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자체별 고독사 예방정책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2) 청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경기도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35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춘나래’라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정신건강 상담으로 끝나게 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또래 청년들과의 소모임을 통하여 고립감을 해소하고, 비슷한 문제를 겪는 가족들의 모임을 통하여 여러 교육 및 정보제공도 이루어진다. 토닥토닥 버스를 이용하여 대학캠퍼스를 방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도 지원한다.

(3) 가족 돌봄에서 지역 돌봄으로

서울시 동대문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이 약화된 오늘, 지역 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모임을 구성하였다. 주로 지역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동네 상점 등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로 구성을 하고, 복지 전문가들과 회의 및 교육을 통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한다. 고립 가구 정기방문 및 안부 확인 활동을 한다.

2) 정책제안

(1) 1인 가구 보호 드림팀 프로젝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건물주, 택배대리점, 배달대행업체 등 주민들과 직접 접촉이 가능한 직업군을 선별하여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주민자치위원 및 지역 봉사단체는 정기적으로 1인 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건강상태 파악을 한다. 거부하는 1인 가구는 관리가 필요한 가구로 선정하여 더욱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지게 한다.

지역 택배대리점, 배달대행업체와 연합하여 주문 물품 배달을 위해 방문하는 주택의 이상징

후, 예를 들면 택배 물품이 장기간 방치된 경우나, 주기적으로 배달음식을 시키는 가정이 배달 주문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취하게 한다.

고독사는 대부분 거주 건물의 건물주가 발견한다. 월세,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생활요금의 미납으로 생활신호를 예측하는데, 고독사를 예방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므로 대면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1인 가구 신고제

1인 가구 자진 신고제는 해당 주민센터, 복지센터에 1인 가구임을 자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신의 안전과 건강상태에 대하여 지자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제도로,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인과 공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자발적인 신고로 관할 담당자의 주기적인 방문을 요청하고, 삶의 고립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상 1인 가구는 아니나, 실질적인 1인 가구를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단점은 복지 대상자들이 사생활 침해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인 가구 신고제도는 자신의 의지로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므로 복지서비스의 효율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3) 마음 건강검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시 마음 건강검진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검진 안내서를 고지할 때 자신의 우울감이나 고립감에 대한 문답지를 동봉하여 검진 시 제출하게 한다. 전문가의 분석 후 검진 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가 진료를 제안하고, 상담을 통하여 여러 예측 가능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앞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여 고독사뿐 아니라 국민들의 외로운 감정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 외로움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고독생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1인 가구의 급증과 관련한 사회문제로 간간이 언론에서만 다루고 있을 뿐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그에 맞는 예방 대책과 해결 방법이 나올 텐데, 정확한 고독사 수치에 대한 부재와 1인 가구에 대한 적은 관심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게 한다. 더욱 우려할 점은 정책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고독사 연령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지난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법률 시행을 기점으로 각 지자체는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마련할 것이고, 체계적인 1인 가구 관리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 생각한다.

소외된 고독생들을 위한 대책이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청년 고독사에 대하여 다루었지만 청년들이 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원인을 살펴보는데 끝이 없었다. 매우 많은 사회문제들이 얹여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경험들이 증명해 주듯 청년 고독사, 더 나아가 청년 문제는 개인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국가 어젠다로 청년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해결 방법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1. 논문

-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 복지재단
-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연락망의 효과성 연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고독사 예방 정책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지연

2. 간행물

- 2021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 2020 사망원인 통계 결과, 통계청
- 사회조사 보고서, 통계청
- 한국 생명존중 희망재단, 자살사망통계
- 청주복지재단, 복지DB

3. 언론 및 영상매체

- 왜 우리나라 자살예방은 효과가 없을까?, 이데일리 2021.07.10.
- [자치구 1인가구 사업] 동대문구, ‘고위험군 발굴’로 고독사 예방...청년정책·공간 지원, 데일리 팝, 2020.07.21.
- [기자수첩]청소해드립니다...짙어진 고독사의 그늘, 머니투데이, 2021.08.06.
- “살고 싶지 않았다”...청년들의 사연, 쿠키뉴스, 2021.09.09.
-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받을수록 자살위험도 감소, 김해뉴스, 2021.08.24.
- KBS 시사직격,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충북형 청년일자리 단짠지원 - 청년일자리사업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윤재 충북도당 당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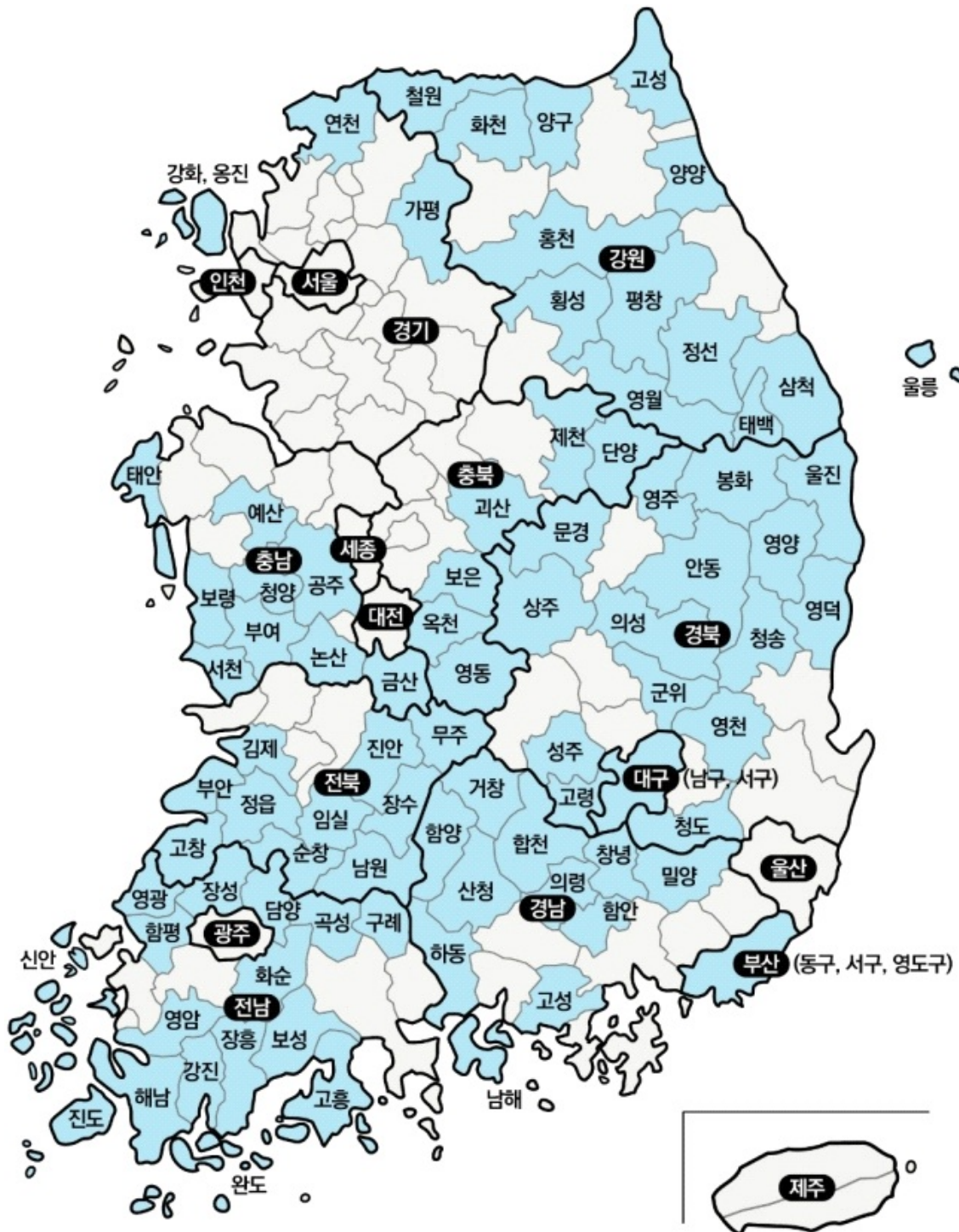
충청북도 경제구조에 맞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의 수도권 이동을 감소시키고 삶의 터전을 충청북도로 삼는 청년을 증가시키기 위해 청년정책을 개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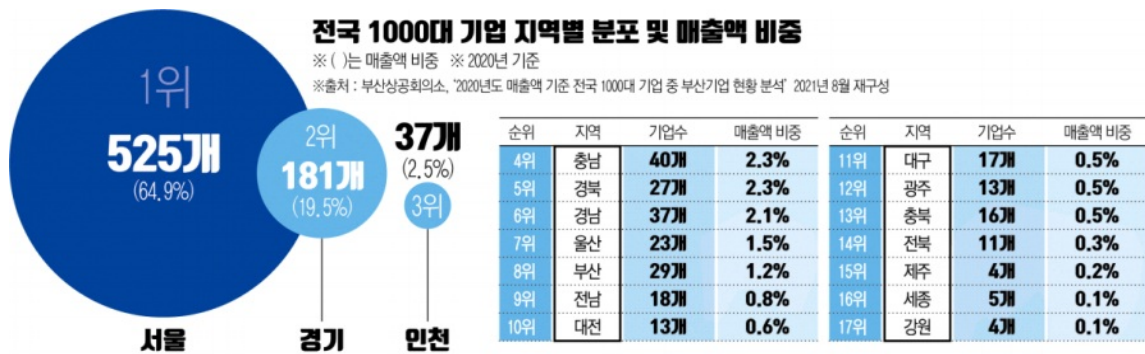
- 지난해 충북의 청년인구(15~39세)는 47만341명(29.4%)으로 2011년 54만1445명(34.6%)과 비교하면 10년 새 7만1104명(13.1%) 감소함.
 -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일터·쉼터·놀터'가 부족하며, 양질의 일자리나 주거문제, 학업 등을 이유로 청년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전체 11개 시·군 중 진천을 제외하고 모두 청년인구가 감소함.
 - 진천은 충북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2011년 2만347명에서 2020년 2만4598명으로 유일하게 증가함.
- 청주는 2011년 25만9057명에서 2020년 28만2196명으로 증가함.
 -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증가로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39.1%에서 33.4%로 감소함.
 - 충주 6만8774명→5만7486명, 제천 4만3456명→3만3933명, 음성 2만8730명→2만3163명, 보은 8248명→5730명 등으로 나타남.
 - 옥천 1만4864명→1만291명, 영동 1만3479명→9581명, 증평 1만2002명→1만896명, 괴산 8569명→7112명, 단양 8179명→5355명 등으로 나타남.
-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보은 17.7%, 괴산 18.1%, 단양 18.4% 순으로 나타남.

- 타 시·군보다 도시화가 낮은 괴산(33.4%)과 영동(31.8%), 단양(31.0%), 옥천(29.8%), 제천(22.0%), 음성(21.4%)도 초고령화가 시작되는 등 도시와 농촌의 고령화율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 2021년 기준 대기업 71곳 중 62곳의 본사는 수도권(서울 52개, 경기 8개, 인천 2개)으로 집계됨.

-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전국 1000대 기업 중 743개 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며, 총매출액의 86.9%를 차지함.
-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잔류에 따른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에 기인함.



-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중된 국내외 경기침체로 청년의 사회진입 지연 등 청년 생활 전반에 위기가 고조됨.
- 인구 자연감소,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인구는 지속적 감소하는 반면, 그 역할은 증대되는 상황임.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미래인재 육성이 필요함.

■ 추진경과

-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활성
 - 충북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지원 등 직접일자리 창출(1,000명)
 - 직무교육 및 일 경험을 통한 일자리 연계 지원(137명)
 -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지원(49개 기업, 181명)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농업인 1,015명)
 - 우수중소기업 취업탐방(107명),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3,175명)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예비·초기 창업자 16팀)
 - 창업 우수기업 육성 지원(6개 기업), 청년 창업아이템 발굴(10팀)
 - 청년창업지원자금 융자 지원(10개 기업, 6억원)

-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기업 지원(창작 299건, 교육 1,470명, 10개 기업 입주)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82명)·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40명) 지원
- 진로탐색과 사회적응을 위한 청년 능력개발 및 맞춤형 교육
 - 청년연구자 역량강화 지원(13명, 정책연구과제 발굴)
 - 산학 프로젝트 Lab 지원(186명) 및 웹툰창작자 역량강화(38명)
 - 일자리지원센터(750명) 및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 청년이 만드는 청년키움 스쿨 운영(6개 학과 406명)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충북 청년 인구 46만 명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크게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0가지로 나눠 시행하고 있음.
 - 지역 정착 지원 등 '취업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자립 지원을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에 두 번째 많은 예산을 사용함.
- 충북의 경우 제조업 기반의 경제구조(충북 49.1%, 전국평균보다 27.5% 높음)를 가지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의 경제구조로 인한 청년일자리 시장 경직성이 증가함.
 - 2차 산업(농림어업) 49.6%, 3차 산업(광업, 제조업) 47.3%, 1차 산업(건설업, 서비스업) 2.1%* 2019년 기준 통계청
- 구인배율(해당 기간의 신규 구인인원수 ÷ 해당 기간의 신규 구직자 수)은 금년 4월 기준으로 본 결과, 충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충북이 1.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도내 11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음성 3.79, 청주시 흥덕구, 2.69, 진천이 2.65로 나타남.
 - 즉 구인자가 379명인데 반해 구직자는 100명이라는 뜻임.
 - 일할 곳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여, 우리 지역을 찾아왔던 기업들로 하여금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려하게 하는 변수가 되고 있음.
- 2018년 기준 충북의 1인 이상 사업체수는 129,920개소로 전국의 3.2%, 종사자수는 713,339명으로 전국의 3.2% 차지하고 있음.

■ 문제점

- 현재 도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이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모두 집중돼 있고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은 정부 사업과 연계돼 추진됨.
 - 다양한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나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는 좀처럼 상승하지 않음.
- 수도권보다 낮은 임금, 긴 근로시간,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미스매치 문제 발생함.
 - 지난해 수도권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295만 원으로 비수도권 266만 원보다 29만 원 많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평균 명목임금 상대 격차도 2013년 12.1%에서 2015년에 8.5%까지 축소됐으나, 최근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마찰적 미스매치 문제(일자리는 있지만 구직자 측면에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희망하는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미스매치), 구조적 미스매치 문제(숙련도 및 직군 간 불균형에 의한 실업)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일자리 인력 부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
 - 실적위주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임금

· 시도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및 증감률

2021.4월 기준



근로시간

· 시도별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및 증감

2021.4월 기준



3. 추진방향

- 견고한 제조업 기반과 폭넓은 신성장동력 산업 등 지역 기반이 갖춰진 일자리와 미래산업 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고자 함.
-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중소기업 성장 견인을 위해 재직자 근속지원 확대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기술창업·농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으로 청년세대가 주역이 되는 분위기 조성하고자 함.

4. 추진과제

① 수도권 부럽지 않은 일자리를 만드는 ‘괜찮은 일자리 지원 사업’

- 중소기업 이미지 전환을 위한 청년 채용 근무환경 개선 지원금
- 사내복지 개선을 위한 휴가비, 자기개발비, 건강 검진비, 복지포인트 지원
- 원·하청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복리후생비 지원
 - 일자리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한 지원과 근로환경 등에 대한 지원

② 위험의 외주화, 비합리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상생노사교육지원’

- 소속이 무의미한 원·하청 인식개선 교육, 성평등 교육
 -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일생활문화개선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일생활균형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교육, 책임경영 교육
- 장기근속 유도, 숙련도 및 직군 간 불균형 해결을 위한 능력개발교육

③ 지역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고 살고 싶게 만드는 ‘지역학교연계수업지원’

- 중·고·대학교 내 수업개설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 사회 이해, 지역 사회에 다양한 일자리 경험
 - 지역·역사 문화, 창업,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교육 진행
 - 지역 대학 특화분야, 지역 특성분야 맞춤형 교육 진행
- 민관학협력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자립능력 함양
 - 지역문제를 청년과 지역민이 함께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

- 지역, 대학, 기업, 지자체가 함께 어울 어질 수 있는 소통협력체계 구성
- 지역학교연계수업 이수 후 지역중소기업 입사시 가산점 부여

4.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창업하고 싶은 ‘청년기업자립지원’

- 청년인증기업을 통한 입찰 우선권 부여, 청년고용률에 따른 세금 감면
 - 청년기업자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 내일채움 공채 대상자가 아닌 청년에 대한 기업부담금 지원
- 기술분야 창업지원만이 아닌 지역 특성별 특화 창업지원
 - 오송 바이오·헬스·화장품 등, 제천 한방·바이오, 단양 휴양·레저, 괴산 유기농·바이오, 충주 기업도시, 진천·음성 혁신도시 특화로 관련하여 서비스업, 제조업, 관광업 창업지원 등

5. 향후 추진계획

■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과 함께 세부계획 마련 및 추진

- 지역 대학 및 중소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 지역별 특성사업 창업 관련 시·군 청년네트워크 구축 등

참고문헌

- 충청북도(www.chungbuk.go.kr)
- 충북연구원(www.cri.re.kr)
- 김지영·김대한,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1000대 기업 743곳 수도권에… 청년도 기업도 서울로, 이투데이, 2021.12.02.
- 김민재, 코로나 4차 유행에도…사업체 종사자 6개월 연속 증가, CBS노컷뉴스, 2021.09.30.

부록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소개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소개

□ 목적

- 만45세 이하 청년당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과 국가·지방 등 공공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사회 각종 문제를 찾아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 전문가 양성

□ 운영 개요

- 시기 : 2021년 11월 16일 ~ 12월 16일(총 11강의)
- 장소 : 온라인 화상강의(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현장 워크숍(위드스페이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
- 행사명(강좌명) :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 대주제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주최 : 민주연구원 x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 공동
- 주관 : 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매청협)

□ 신청(모집) 개요

- 모집대상 : 만45세 이하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지방의원, 지역당원, 당직자 등)
- 모집인원 : 51명 (※각 시도당별 수강생 3명 선발·추천)
- 선발절차 : 각 시·도당별 수강생 모집 → 각 시·도당별 3명 선발·추천(남녀 각 최소 1명 이상 포함) → 수강생 직접 온라인 신청·등록
- 추천기간 : 2021년 10월 11일(월) ~ 11월 1일(월) 오후 2시, 총 22일
- 등록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 11월 1일(월) 오후 2시, 총 15일
- 등록방법 : 아카데미 신청서 온라인 등록
- 수 강 료 : 20만원

□ 수강(강의) 개요

○ 수강 인원 : 51명 (※각 시·도당별 수강생 3명 선발·추천)

구분	계(51명)			계(51명)		계(51명)		
	지역당원	지방의원	당직자	남	여	20대	30대	40대
인원	20명	4명	27명	33명	18명	10명	29명	12명

○ 수강기간 : 2021.11.16.(화) ~ 12.16.(목)

- 수강생 오리엔테이션(OT) : 2021.11.04.(목) 오후 7시 (※온라인 화상진행)
- 입학식 : 11.16.(화) 19:00 ~ 19:10 (※온라인 화상진행)
- 화상수강(7강의) : 11.16.(화) ~ 12.16.(목) 19:00 ~ 20:30 (※온라인 화상진행)
- 현장 워크숍(4강의) : (1일차) 11.27.(토), 13:00~17:50 / (2일차) 12.04.(토), 13:00~17:50
-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 12.08.(수) 10:00까지
- 최종보고서 심사·평가 : 12.08.(수) ~ 12.09.(목) (#수강생 평가 방법 참조)
- 수료식 : 12.16.(목) 20:30 ~ 21:00 (※현장 및 온라인 화상 동시 진행)

○ 수강방법 : 화상수강(7강의) + 현장 워크숍(4강의)을 결합한 온·오프 방식

- 화상수강 : 1강 90분(60~70분 강의, 20~30분 질의응답), 10분 휴식
- 현장 워크숍 : 1강 120분(수강생 7분 주제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 수료기준 :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강생 평가 방법 참조)

○ 수료자 특전

- 아카데미 수료자 '정책 전문가 인증서' 수여
- 우수 수료자 특별포상(당대표 등)
- 민주연구원 '정책 전문가 클럽' 등록(동기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 당내 교육연수 최대 10시간 인정(민주당 당원'교육이수시스템'등록)

□ 커리큘럼

구분	일시	주제 및 내용	강사
국가 현안·비전 의제 : 국가 비전과 전략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입학식	11.16.(화) 19:00~ 19:10	• 환영사 -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제1강	11.16.(화) 19:10~20:40	• 4차 산업혁명시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대응 전략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前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제2강	11.17.(수)	• 동북아 정세 전망과 한반도정책 과제	이종석

구분	일시	주제 및 내용	강사
	19:00~20:30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前통일부장관)
지역 현안·비전 의제 :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제3강	11.28.(목) 19:00 ~ 20:30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개혁과제 -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김두관 국회의원 (前 행정자치부장관)
제4강	11.23.(화) 19:00 ~ 20:30	• 지역혁신 사례와 지역발전 과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 전략	염태영 수원시장 (前 경기도 수원시장, 수원대학교 총장)
정책 실무과정 : 정책과정 이해와 사례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제5강	11.24.(수) 19:00 ~ 20:30	• 어떻게 좋은 정책을 제안·형성·추진할 것인가? - 문제인식 및 정책방안(정책제안서) 마련 등	윤대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제6강	11.25.(목) 19:00 ~ 20:30	• 정책은 어떻게 사업과 예산이 되는가? - 정부 예산편성과 지역정책예산 등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책연구제 발표회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현장 워크숍 : 위드스페이스 P홀)	
제7-1강	11.27.(토) 13:00 ~ 15:1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A조>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이동진 서울시 도봉구청장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제7-2강	11.27.(토) 15:20 ~ 17:2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B조>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김우영 前 서울시 정부부시장
제7-3강	12.04.(토) 13:00 ~ 15:1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C조>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하승창 前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제7-4강	12.04.(토) 15:20 ~ 17:20	• 수강생(12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D조>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곽상욱 오산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특강 및 수료식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제8강	12.16.(목) 19:00 ~ 20:30	<특강> • 선진국의 조건과 우리의 과제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눈 떠보니 선진국」 저자)
수료식	12.16.(목) 20:30 ~ 21:00	• 수료사 :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 정책전문가 인증서 수여식, 우수 수료자 표창	

□ 현장 워크숍

- 개요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대주제 아래 수강생 각자 지역 비전 관련 정책연구과제 발표, 지도교수 코멘트(심사평), 수강생간 피드백 과정
- 일시 : (1일차) 2021.11.27.(토) 12:30~17:50 / (2일차) 2021.12.04.(토) 12:30~17:50
- 장소 : 위드스페이스 P홀(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4층)
- 대상 :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수강생 전원(51명)
- 주관 :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매청협 대표 : 박희정)

○ 프로그램 (진행사회 : 박희정 매칭협 대표)

구분	일시	주제 및 내용	강사
1일차 INTRO	11.27.(토) 12:30 ~ 13:00	• 현장 등록 • 수강생 지역 현안 정책연구과제 훑어보기	
개회식	13:00~13:10	• 인사말, 진행 안내, 강사 소개, 사진촬영 등	
제7-1강	11.27.(토) 13:10~15:1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주제 발표 <A조> - 지역 현안·문제, 지역 비전·정책과제 등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이동진 서울시 도봉구청장 (민주당기초자치 단체장협의회회장)
Break Time	15:10 ~ 15:20	• 발표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코멘트 달기	
제7-2강	11.27.(토) 15:20~17:2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주제 발표 <B조> - 지역 현안·문제, 지역 비전·정책과제 등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김우영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
ENDING	17:20~17:50	• 정책연구과제 코멘트 서로 나누기	
2일차 INTRO	12.04.(토) 12:30 ~ 13:00	• 현장 등록 • 수강생 지역 현안 정책연구과제 훑어보기	
개회식	13:00~13:10	• 인사말, 진행 안내, 강사 소개, 사진촬영 등	
제7-3강	12.04.(토) 13:10~15:1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주제 발표 <C조> - 지역 현안·문제, 지역 비전·정책과제 등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하승창 前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Break Time	15:10~15:20	• 정책연구과제 코멘트 서로 나누기	
제7-4강	12.04.(토) 15:20~17:20	• 수강생(12명) 정책연구과제 주제 발표 <D조> - 지역 현안·문제, 지역 비전·정책과제 등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곽상욱 오산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ENDING	17:20~17:50	• 정책연구과제 코멘트 서로 나누기	

□ 수강생 평가 방법

○ 수료 기준 : 9강의 이상 출석,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득점(60점미만 과락)

○ 평가 방법 : 종합 평가 100점 만점 + 가산점

① 출석(개근) 가산점	② 수업 참여도 가산점	③ 현장 워크숍 정책연구과제 발표	④ 정책연구과제 최종 보고서	합계
(+2점)	(+2점×횟수)	(20점)	(80점)	(100점 만점 + 가산점)

① 출석 가산점 : +2 가점 부여(10강의 올 출석)

② 수업 참여도 가산점 : +2 가점 부여(매회 강사가 우수 수강생 3인 추천)

③ 현장 워크숍 정책연구과제 발표(PT) 평가 : 20점 만점

· 평가방식 : 수강생 각자 7분 주제 발표(PT) → 지도교수 1분 코멘트(심사평)

· 평가기준

발표 주제	(대주제)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소주제) 수강생 각자 선정					
평가 항목	주요 내용	평가 척도				
표현력	표정, 자신감, 열의, 적절한 언어 사용	수(5)	우(4)	미(3)	양(2)	가(1)
논리력	발표의 기승전결 흐름	수(5)	우(4)	미(3)	양(2)	가(1)
이해도	주제·내용 이해 정도	수(5)	우(4)	미(3)	양(2)	가(1)
설득력	논리 전개 타당성	수(5)	우(4)	미(3)	양(2)	가(1)
합계(20점 만점)						

④ 정책연구과제 최종 보고서 평가 : 80점 만점

- 평가대상 : 현장 워크숍 발표(PT) 및 최종 보고서 제출자(수료 필수요건)
- 평가기간 : 2021.12.08.(수) ~ 12.09.(목)
- 평가방식 : 내부 전문가 5인 평가(최고·최저 점수 제외한 3명 합산 평균)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고
논리정합성	20	글의 체계와 짜임새
시의성	20	시대상황, 주민요구 등 반영
창의성	20	독창적 아이디어
정체성	10	당 이념과 노선 부합성 여부
실행가능성	10	추진방식, 예산 등의 타당성

※ 정책연구과제 최종 보고서 작성 방법

- 대주제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소주제 : 수강생 각자 정책연구과제 소주제 선정
- 보고서 내용
 - 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문제
 - 내가 만들 지역의 비전
 -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 정책과제
 - 나의 지역 비전과 정책이 국가의 미래에 할 기여
- 보고서 작성 형식
 - 서술형식 : 자유(개조식 또는 서술식)
 - 작성분량 : 12 포인트 기준, A4용지 10페이지 내외(그림, 표 등 포함)
 - 파일형식 : 한글(*.hwp) 또는 워드(*.docx)

□ 아카데미 결과

○ 수료 인원 : 총 수강 인원 51명 중 35명 수료(정책 전문가 인증서 수여)

구분	지역당원	지방의원	시도당 당직자	계
수강 인원	20명	4명	27명	51명
수료 인원	15명	2명	18명	35명
수료율	75.0%	50.0%	66.6%	68.6%

○ 우수 수료자 표창

- 우수 수료자 선발 기준 : 종합 평가 점수 88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당대표 표창(최우수상) : 2명(이지윤, 서다운)
- 민주연구원장 표창(우수상) : 4명(김시현, 문수기, 고병준, 장민수)

※ 우수 수료자에 대해 특별포상 최고위원회의(2021.12.13.) 시행 의결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2021.11.16.~12.16.)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 발간일 2022년 1월 12일
 - 발행인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 편 집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고영국 박정식 이용진)
 정책연구실(강병익 송원섭 여차민 이경아 정상희)
 - 발행처 민주연구원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7 민주당사 10층
-

